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김수암 · 김화순 · 민태은 · 박주화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김수암·김희순·민태은·박주화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신통일대계 (3/4년차))

KINU 연구총서 16-18

인 쇄 2016년 12월

발 행 2016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통일정책연구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02-2023-8000

(팩시밀리) 02-2023-8297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세일포커스(02-2275-6894)

인 쇄 처 두일디자인(02-2285-0936)

ISBN 978-89-8479-859-5 93340

탈북자, 민주주의, 시장경제

340.911-KDC6 / 320.9519-DDC23 CIP2016032385

가 격 15,000원

© 통일연구원, 2016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차

요약	xxi
I. 서론	1
1. 연구목적	3
2. 조사방법	6
II. 기초통계(1): 통합에 대한 탈북민 및 남한주민과의 인식 비교	13
1. 통합에 대한 탈북민 인식	15
2. 남한주민과 탈북민의 비교	39
III. 기초통계(2):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	71
1. 탈북민의 민주주의 제도 수용	73
2. 자본주의 제도 인식과 한국 불평등 인식	88
3. 탈북민의 문화적응 유형, 삶의 만족도	124
4. 탈북민의 권위주의 의식	150
IV. 심층분석(1): 탈북민의 민주주의 제도 수용 - 정당일체감을 중심으로	165
1. 남북한 정치통합 과정에서 정당일체감의 의의	167
2. 탈북민의 정당일체감의 특징과 형성요인	174
3. 남북 정치통합 과정에서 정책적 함의	192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V. 심층분석(2): 탈북민의 자본주의 제도 수용	195
1. 분석의 의의 및 연구자료	197
2. 입국 세대별 자본주의 제도 인식	207
3.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탈남현상	219
VI. 심층분석(3): 탈북민의 문화적응 유형, 삶의 만족도	243
1. Berry의 4군집 모형	248
2. 문화적응 유형 분석	254
3. 정책적 시사점	306
VII. 결론	311
〈별첨〉 탈북민 종합의식조사 설문지	325
참고문헌	341
최근 발간자료 안내	351

표·그림목차

표 I-1	조사의 표집	8
표 I-2	2000년~2015년 입국자 집단의 분류(A,B,C 집단)	9
표 I-3	조사대상 지역 책임자	10
표 I-4	지역별 거주현황(2016년 8월말 현재 거주자 기준)	10
표 I-5	연령별 분포(2016년 8월말 현재)	10
표 I-6	탈북민 인구학적 특징	11
표 II-1	통일국가 체제 선호	34
표 II-2	성별, 연령별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 수	39
표 II-3	성별, 연령별 삶과 이상의 일치도 평균과 표준오차	40
표 II-4	성별, 연령별 본인 인생의 여건의 평균과 표준오차	41
표 II-5	성별, 연령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전반적 견해	42
표 II-6	성별, 연령별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냈는지의 평균과 표준오차	43
표 II-7	성별, 연령별 다시 태어난다면 현재처럼 살 것인가의 평균과 표준오차	44
표 II-8	성별, 연령별 삶의 만족도의 평균과 표준오차	45
표 II-9	성별, 연령별 통일의 필요성의 평균과 표준오차	47
표 II-10	성별, 연령별 평화적 분단고착의 평균과 표준오차	48
표 II-11	성별, 연령별 통일을 위한 노력의 평균과 표준오차	50
표 II-12	성별, 연령별 통일이 우리 사회의 당면 목표인지의 평균과 표준오차	51
표 II-13	성별, 연령별 통일이 자신의 진정한 소망인지에 대한 평균과 표준오차	52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표 II-14	성별, 연령별 통일에 대한 긍정적 정서의 평균과 표준오차	53
표 II-15	성별, 연령별 통일관련 세금인상 동의의 평균과 표준오차	55
표 II-16	성별, 연령별 통일 이후 부정적 상황발생에 대한 평균과 표준오차	56
표 II-17	성별, 연령별 탈북민의 삶이 북한주민에게 미칠 영향력의 평균과 표준오차	57
표 II-18	성별, 연령별 통일의 이유	60
표 II-19	성별, 연령별 통일 편익의 평균과 표준오차	63
표 II-20	성별, 연령별 통일의 시기	65
표 II-21	성별, 연령별 통일의 방식	66
표 II-22	성별, 연령별 통일을 위한 여건	69
표 III-1	남북한에서 생각한 자본주의 이미지 1	89
표 III-2	보상과 경쟁	91
표 III-3	소득 결정요인	95
표 III-4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96
표 III-5	소득격차 인식	105
표 III-6	각 분야별 기회의 불평등	109
표 III-7	노동차별	113
표 III-8	사회적 이동성	118
표 III-9	남한사회의 편견과 탈남의사	121

표·그림목차

표 IV-1	정당일체감: 성별	174
표 IV-2	정당일체감: 연령	175
표 IV-3	정당일체감: 탈북민의 남한 거주기간	176
표 IV-4	정당일체감: 당원	177
표 IV-5	정치지식	180
표 IV-6	정치지식 수준: 성별	181
표 IV-7	정치지식	182
표 IV-8	정책선호	184
표 IV-9	정당일체감과 대북정책	185
표 IV-10	정당일체감과 탈북민 지원정책	185
표 IV-11	정당일체감 형성요인	189
표 IV-12	정당일체감과 투표참여	191
표 V-1	주요변수의 기초통계량	204
표 V-2	자본주의 제도인식 설문 문항	205
표 V-3	한국사회 불평등인식 설문 문항	206
표 V-4	입국 세대별 남북한 요인의 특성	209
표 V-5	각 입국 세대별 자본주의 제도 인식	210
표 V-6	각 입국 세대별 자본주의 원리에 대한 태도 평균점수 및 F 검증결과	212
표 V-7	자본주의 제도 인식에 관한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213
표 V-8	경쟁효과에 대한 사후검정	214
표 V-9	불평등관련 주요변수 설명 및 평균	222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표 V-10 모형 1: 이주요인 및 남북요인	226
표 V-11 모형 2: 사회적 인정	228
표 V-12 모형 3: 기회 불평등	229
표 V-13 모형 4: 소득 불평등	231
표 V-14 불평등 모형비교	238
표 VI-1 Berry의 문화적응 유형	250
표 VI-2 심리적 문화적응 전략 척도 문항	255
표 VI-3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북한문화 유지전략 평균과 표준오차	256
표 VI-4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남한문화 수용전략 평균과 표준오차	257
표 VI-5 탈북민의 유형별 문화적응 유형	262
표 VI-6 변수별 삶의 만족도 평균과 표준오차	274
표 VI-7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 일원변량분석 결과	275
표 VI-8 변수별 경제적 만족도 평균과 표준오차	277
표 VI-9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 일원변량분석 결과	277
표 VI-10 권위주의를 측정한 11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및 내적 신뢰도 분석결과	279
표 VI-11 변수별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 평균과 표준오차	280
표 VI-12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 일원변량분석 결과	281
표 VI-13 변수별 권위주의적 복종 평균과 표준오차	282

표·그림목차

표 VI-14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권위주의적 복종 일원변량분석 결과	283
표 VI-15 변수별 인습주의 평균과 표준오차	284
표 VI-16 변수별 냉소주의 평균과 표준오차	284
표 VI-17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인습주의 그리고 냉소주의 일원변량분석 결과	285
표 VI-18 능력위주사회 측정한 3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및 내적 신뢰도 분석결과	286
표 VI-19 변수별 능력위주에 대한 믿음 평균과 표준오차	287
표 VI-20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능력위주사회 일원변량분석 결과	287
표 VI-21 남한사회 이미지를 측정한 3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및 내적 신뢰도 분석결과	289
표 VI-22 변수별 남한사회 이미지 사회평균과 표준오차	290
표 VI-23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남한사회 이미지 일원변량분석 결과	290
표 VI-24 남한사회의 불평등을 측정한 6문항 요인분석 및 내적 신뢰도 분석결과	291
표 VI-25 변수별 남한사회의 지각된 불평등 평균과 표준오차	292
표 VI-26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남한사회의 불평등 일원변량분석 결과	292
표 VI-27 변수별 탈북민의 국외이주 의사 평균과 표준오차	293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표 VI-28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외국이주 의도 일원변량분석 결과	294
표 VI-29 변수별 정착지원 만족도 평균과 표준오차	295
표 VI-30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정착지원 만족도 일원변량분석 결과	295
표 VI-31 변수별 직접적 차별 경험 평균과 표준오차	296
표 VI-32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직접적 차별 경험 일원변량분석 결과	296
표 VI-33 변수별 탈북민에 대한 불평등 평균과 표준오차	298
표 VI-34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출신 차별 경험 일원변량분석 결과	299
표 VI-35 변수별 보수에 대한 견해 평균과 표준오차	300
표 VI-36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능력위주사회 일원변량분석 결과	301
표 VI-37 변수별 지각된 차별감 평균과 표준오차	303
표 VI-38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능력위주사회 일원변량분석 결과	303
그림 II-1 통일의 필요성	16
그림 II-2 평화적 분단고착에 대한 견해	17
그림 II-3 통일을 위한 노력에 대한 견해	19
그림 II-4 통일이 우리 사회의 당면 목표인지에 대한 견해	20

표·그림목차

그림 II-5 남북통일이 자신의 진정한 소망인지에 대한 견해	21
그림 II-6 통일과 관련된 정서적 반응	22
그림 II-7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세금 인상에 대한 견해	23
그림 II-8 통일 이후 상황에 대한 견해	24
그림 II-9 탈북민의 삶에 대한 북한주민의 생각 예상	25
그림 II-10 통일의 이유	26
그림 II-11 통일이 국가에 미치는 편익에 대한 견해	28
그림 II-12 통일이 본인에 미치는 편익에 대한 견해	29
그림 II-13 통일이 북한주민에게 미치는 편익에 대한 견해	30
그림 II-14 통일시기에 대한 견해	31
그림 II-15 통일방식 예상	32
그림 II-16 통일 이후 체제	33
그림 II-17 통일을 위한 조건(1순위)	35
그림 II-18 통일을 위한 조건(1순위 + 2순위)	36
그림 II-19 자신의 삶이 이상에 일치하는 정도에 대한 견해	40
그림 II-20 본인 인생의 여건에 대한 견해	41
그림 II-21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전반적 견해	42
그림 II-22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냈는지에 대한 견해	43
그림 II-23 다시 태어난다면 현재처럼 살 것인가에 대한 견해	44
그림 II-24 남한주민과 탈북민의 삶의 만족도	45
그림 II-25 통일의 필요성	47
그림 II-26 평화적 분단고착	48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그림 II-27 통일을 위한 노력	50
그림 II-28 통일이 당면 목표인지에 대한 견해	51
그림 II-29 통일이 자신의 진정한 소망인지에 대한 견해	52
그림 II-30 통일에 대한 긍정적 정서	53
그림 II-31 통일관련 세금인상 동의에 대한 견해	55
그림 II-32 통일 이후 상황에 대한 견해	56
그림 II-33 탈북민의 삶이 북한주민에게 미칠 영향력에 대한 평가	57
그림 II-34 통일의 이유	60
그림 II-35 통일의 편익	61
그림 II-36 통일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응답별 분포	63
그림 II-37 통일의 시기	64
그림 II-38 통일의 방식	66
그림 II-39 통일을 위한 여건	68
그림 III-1 정당일체감 분포	73
그림 III-2 지지정당별 분포	74
그림 III-3 정당 편향성	75
그림 III-4 정당지지 이유	76
그림 III-5 정치지식: 국회의원 선출방식	77
그림 III-6 정치지식: 국회의원 수	78
그림 III-7 정치지식: 대통령 임기	79
그림 III-8 정치지식: 통일부 장관 이름	80
그림 III-9 정치지식: 사법기관	81

표·그림목차

그림 III-10 정치지식: 투표연령	82
그림 III-11 인도적 지원	83
그림 III-12 대북정책 기초	84
그림 III-13 탈북민 지원	85
그림 III-14 투표참여: 지역구후보 선택	86
그림 III-15 비례대표후보 선택	87
그림 III-16 남북한에서 생각한 자본주의 이미지	88
그림 III-17 북한에서 떠올린 자본주의 이미지 1	89
그림 III-18 남한에 온 이후 떠오른 자본주의 이미지 1	90
그림 III-19 보상과 경쟁	92
그림 III-20 노동보상의 기준: 성과냐 필요냐	92
그림 III-21 경제적 평등: 최고경영자에 대한 보상	93
그림 III-22 경쟁에 대한 태도	94
그림 III-23 소득 결정요인: 능력과 노력	95
그림 III-24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빈곤 원인과 공익을 위한 개인자유 제한	96
그림 III-25 생계의 책임: 개인 vs 국가	97
그림 III-26 공공이익을 위해 개인自由的 제한: 개인 vs 사회	98
그림 III-27 다섯 가지 사회유형	99
그림 III-28 북한, 남한, 통일한국의 계층구조	100
그림 III-29 탈북민이 인지하는 북한사회 유형	101
그림 III-30 탈북민이 인지하는 남한사회 유형	101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그림 III-31	향후 통일한국의 사회유형	103
그림 III-32	소득격차 인식 차이	105
그림 III-33	남한사회는 소득격차가 크다	106
그림 III-34	소득차이를 줄이는 것은 정부 책임이다	107
그림 III-35	가난한 자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108
그림 III-36	각 분야별 기회 불평등 인식	110
그림 III-37	취업기회의 불평등성	111
그림 III-38	남북한 출신 여부에 따른 기회 불평등성	112
그림 III-39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 (보수, 일터 괴롭힘, 근로자 대우)	113
그림 III-40	노동차별의 여러 상황	114
그림 III-41	한국은 근로자들을 부당하게/정당하게 대우하는 사회이다	115
그림 III-42	보수의 적정성	116
그림 III-43	일터 괴롭힘	117
그림 III-44	사회적 이동성 1: 개인능력 vs 부모의 배경	119
그림 III-45	상승이동 가능성	120
그림 III-46	남한사회의 편견과 탈남의사	121
그림 III-47	탈북민은 이등국민이다	122
그림 III-48	나는 남한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고 싶다	123
그림 III-49	정신적 뿌리에 대한 견해	125
그림 III-50	북한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의 가치	126

표·그림목차

그림 III-51 북한문화 전수에 대한 견해	127
그림 III-52 탈북민 간 관계에 대한 견해	128
그림 III-53 북한의 미풍양속 계승 및 발전에 대한 견해	129
그림 III-54 북한에서의 삶이 그리운지에 대한 견해	130
그림 III-55 북한출신 사람들의 모임에서 북한식 말투를 쓰는 것에 대한 견해	131
그림 III-56 북한출신 사람들의 모임에서의 심리적 편안함에 대한 견해	132
그림 III-57 진정한 남한사람이 되려는 노력에 대한 견해	133
그림 III-58 남한생활의 유익함과 즐거움에 대한 견해	134
그림 III-59 남한사회의 발전된 생활양식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견해	135
그림 III-60 일상생활에서 남한식 말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	136
그림 III-61 남한생활의 의지 대한 견해	137
그림 III-62 자녀들의 남한문화 수용에 대한 견해	138
그림 III-63 남한사회 지식 습득의 즐거움에 대한 견해	139
그림 III-64 남한출신 사람을 사귀는 것에 대한 견해	140
그림 III-65 북한문화 유지전략 종합	141
그림 III-66 남한문화 수용전략 종합	141
그림 III-67 자신의 삶이 이상에 일치하는 정도에 대한 견해	144
그림 III-68 본인 인생의 여건에 대한 견해	145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그림 III-69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전반적 견해	146
그림 III-70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냈는지에 대한 견해	147
그림 III-71 다시 태어난다면 현재처럼 살 것인가에 대한 견해	148
그림 III-72 삶의 만족도 평균	149
그림 III-73 젊은이의 덕목에 대한 견해	151
그림 III-74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조치에 대한 견해	152
그림 III-75 엄격한 통제 및 질서와 효율성에 대한 견해	153
그림 III-76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견해	154
그림 III-77 좋은 사원에 대한 견해	155
그림 III-78 국민의 권리와 강력한 법질서 간 균형에 대한 견해	156
그림 III-79 여성의 흡연과 음주에 대한 견해	157
그림 III-80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견해	158
그림 III-81 개인의 성공 배경에 대한 견해	159
그림 III-82 지도자와 국민의 관계에 대한 견해	160
그림 III-83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한 견해	161
그림 III-84 권위주의 종합 1	162
그림 III-85 권위주의 종합 2	162
그림 V-1 탈남의사 결정요인 모형	221
그림 VI-1 성별에 따른 문화적응 전략	258
그림 VI-2 연령에 따른 문화적응 전략	259
그림 VI-3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문화적응 전략	260
그림 VI-4 북한에서의 직업 유형에 따른 문화적응 전략	260

표·그림목차

그림 VI-5	거주기간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	263
그림 VI-6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	263
그림 VI-7	남한 거주기간과 성별에 따른 문화적응 전략	264
그림 VI-8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	265
그림 VI-9	연령과 성별에 따른 문화적응 전략	266
그림 VI-10	학력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	267
그림 VI-11	당월 여부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	268
그림 VI-12	북한에서의 직업 유형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	269
그림 VI-13	북한에서의 직업 유형에 따른 문화적응 전략	270
그림 VI-14	성별과 북한에서의 직업유형에 따른 문화적응 전략	271
그림 VI-15	남한 거주기간과 북한에서의 직업 유형에 따른 문화적응 전략	272
그림 VI-16	문화적응 전략에 따른 삶의 만족도	276
그림 VI-17	문화적응 전략에 따른 경제적 만족도	278
그림 VI-18	문화적응 전략에 따른 권력에 대한 믿음	281
그림 VI-19	문화적응 전략에 따른 복종	283
그림 VI-20	문화적응 전략에 따른 인습주의	285
그림 VI-21	문화적응 전략에 따른 냉소주의	285
그림 VI-22	문화적응 전략에 따른 자본주의 인식	288
그림 VI-23	문화적응 전략에 따른 남한사회 이미지	290
그림 VI-24	문화적응 전략에 따른 남한사회 이미지: 전반적 불평등	293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그림 VI-25 문화적응 전략에 따른 해외이주 의도	294
그림 VI-26 문화적응 전략에 따른 부당한 대우 경험	297
그림 VI-27 문화적응 전략에 따른 출신 차별 경험	299
그림 VI-28 문화적응 전략에 따른 보수 수준	301
그림 VI-29 문화적응 전략에 따른 편견 지각	304

남북한 제도통합은 남한의 정치·경제제도를 북한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제도통합을 단순히 조직과 기구의 기계적 통합으로만 이해해서는 남북 간 통합을 원만하게 추진해나가기 어려운 것이다. 남북한 제도통합은 조직과 기구의 기계적 통합의 측면과 함께 이러한 제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북한주민들이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할 것인가라는 인식의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도통합에 대한 북한주민의 예상 반응, 부작용 및 갈등요소, 그에 대한 대응책도 동시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남한사회 정착과정에서 탈북민들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효율적인 남북한 제도통합의 자산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통일연구원에서는 「신통일대계 연구」의 일환으로 2015년도에 1차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제도에 대한 탈북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한 바 있다. 2차 년도인 2016년에는 2015년도 전반적인 인식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의 인식조사를 심층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와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상호 인식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힘들었다. 2016년도에는 남한주민과 탈북민의 남북한 통합에 대한 인식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본 과제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기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통일의식의 경우 남한주민들과의 인식을 상호 비교하기 위해 통일연구원의 다른 과제인

「남북한 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와 협업으로 조사를 수행하고자 한다. 설문 문항은 사회의식 22문항, 경제의식 14문항, 불평등의식 20문항, 정치의식 24문항, 통일의식 31문항 등 1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외에 인구학적 변인(성, 연령, 지역, 학력, 지역)과 계층변인(정치신분, 경제계층), 직업변수, 이주변인(탈북동기, 이주유형 등), 한국에서의 소득 및 직업 등 인적사항은 총 19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입국 연도에 따른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 및 그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입국 연도(정착기간)를 중심으로 표집틀을 작성하였다. 탈북민 입국 연도에 따라 300명의 탈북민을 대상으로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시간적 변화(입국 연도, 2000년~2015년)에 따른 의식변화 양상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그 동안 우리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당위적 측면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런데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표현은 다분히 현실이해적 관점이 강하다. 현실적 관점에서 통일준비가 구체화되면서 현실이해 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인식이 복잡하게 분기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현실이해적 관점에서 통일에 대한 인식의 분화를 보다 면밀하게 지속적으로 추적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의 편익에 대해서도 국가(남한사회), 남한주민, 북한주민 등 수혜의 주체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산출해야 한다. 국가뿐만 아니라 남북한주민이 통일로부터 어떠한 수혜를 받게 될 것인지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인식조사에서 탈북민들은 우리 사회의 통일준비 역량의 강화가 통일을 준비하는 주요 요건이라는 인식을 표출하였다. 이러한 탈북민

들의 인식과 관련하여 남한주민들도 우리의 통일준비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통일을 순조롭게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배가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통일준비 역량 강화 과정에서 탈북민들의 인식은 중요한 정책적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탈북민 인식조사를 통해 통일을 위한 긍정적 환경으로 탈북민은 북한 경제건설과 민주화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탈북민의 인식조사 결과는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를 통일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대북정책과 통일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북한경제 건설과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인식조사를 통하여 자본주의 제도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탈북민, 나아가 북한주민의 수용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그리고 통일 이후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제도통합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 제도에서 보완할 점은 없는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통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북한주민을 민주시민으로 적응하도록 할 정책이 통일준비 과정에서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이 민주시민이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금년도에는 이러한 인식의 일환으로 탈북민의 정당일체감에 대한 조사를 전문적으로 실시하였다. 탈북민의 정당일체감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

어떻게 적응하고 어떠한 정치적 선택을 하는지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또한 탈북민의 정당일체감에 대한 이해는 통일 이후 안정적 민주사회를 구현할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나이가 많아진다고 해서 남한에 대한 정치지식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남한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다고 해서 정치지식 수준이 더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탈북민의 정책선호는 정당일체감을 발전시키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남한에서의 교육여부가 투표참여에 긍정적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남한에서 공부한 탈북민이 투표에 더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민이 남한사회에서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적응하는데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탈북민의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이 향후 시장경제로 제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책적 자산이 될 것이다. 특히 북한 내부의 시장화 확산이라는 변화를 고려할 때 북한 내 변화된 상황이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면밀하게 추적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번 인식조사에서는 탈북 시점을 기준으로 세 집단으로 나누어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유일하게 '경쟁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입국 세대가 세 집단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세대부터 그 이전 세대와 차별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김정은 세대 탈북민들이 2000년 초반에 입국해서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온 시장화 이전 입국자들에 비해 자본주의 지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번 인식조사에서 지난해 조사와 마찬가지로 탈북민은 강한 '평등주의 정서지향성'을 보였다. 2016년도의 조사에서 자본주의 제도 원리인 성과 지향적 보상이나 경쟁에 대해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평등주의 지향성'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경쟁'과 '성과'를 중심으로 시장 경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나원 교육내용을 일부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일 후의 심리적 갈등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로 대변되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리 온 통일'로서의 탈북민 문제에 대해 단순히 성공적인 정착을 넘어 이러한 정착 과정에서의 경험과 탈북민의 인식을 통일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정책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첫째, 남북통일에 대한 의지는 탈북민이 남한주민에 비해 높다. 이번 조사의 모든 문항에서 탈북민은 남한주민에 비해 통일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탈북민의 통일에 대한 높은 의지는 우리 사회의 통일 논의 촉진과 통일준비 과정에서 유용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번 조사에서 탈북민들은 남북한 출신에 따른 불평등(2.49) 승진기회(2.76) 취업기회(2.82)의 순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노동차별 문항 즉, 근로자 대우, 보수, 일터의 괴롭힘 문항에서 차별 경험을 한 경우가 모두가 30.0% 안팎의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앞으로 남한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남한사회에 대한 탈북민의 불평등 및 기회인식을 보다 전문적인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추적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향후 제도통합을 넘어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자산이 될 것이다.

셋째, 통일 후 사회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베리의 4군집 모형에서 보듯이 다양한 유형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베리의 4군집 모형은

이민자들의 문화적응 전략연구에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해 왔다. 본 연구 결과는 베리의 4군집 모형이 탈북민의 문화적응 전략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넷째, 문화적응 유형이 성별, 남한 거주기간,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지 아니면 큰 변화가 없는지 보다 정교하고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삶의 만족도, 경제적 만족도와 같은 남한생활의 만족도와 더불어 남한사회의 이미지, 권위주의 의식, 차별에 대한 탈북민의 인식 등 사회 심리적 변수가 탈북민의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난해에 이어 권위주의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탈북민은 권위주의 요인 중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이 가장 높았으며 냉소주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통일부가 탈북민 정착경험을 통합의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탈북민 인식조사도 이러한 방향으로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 하나재단에서 실시하는 전수조사에서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의 인식을 전문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제도통합, 탈북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식

A Study on North Korean Escapees' Perception of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Kim, Soo-Am et al.

Inter-Korean institutional integration should be approached from a conceptually comprehensive manner, encompassing not only organizational and structural integration, but also how the North Korean population will understand and accept new institutions under which they will lead their lives. Overlooking North Korean reaction to new institutions will inevitably lead to substantial trials and errors. Institutional integration that incorporates the perception of North Koreans will minimize social conflicts and costs. Therefore, we need to prepare for unification along with surveys and measures for the status quo of North Korean residents, anticipated reactions towards institutional integration, and factors of conflict and side-effects. North Korean escapees starting a new life in South Korea will bear the true meaning of the integration process as a 'precursor of unification' only when we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social integration using our experience of having them settled down in South Korean society. This study seeks to continuously accumulate data on North Korean escapees' changing of understanding and perception of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as they settle down in South Korea, and later utilize it for efficient institutional integration.

Keywords: Institutional Integration, North Korean Escapees, Liberal Democracy, Market Economy, Perception

I. 서론



1. 연구목적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 및 제4조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따라 '자유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이질적인 체제를 가진 분단국가가 통일을 추진할 경우 제도통합은 '이식'의 유형과 '절충'의 유형으로 대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북한에 '이식'하는 형태로 제도통합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통일 이후 남북한 통합, 특히 제도통합은 한국의 정치·경제제도에 입각하여 추진될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 제도통합은 남한의 정치·경제제도를 북한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제도통합을 단순히 조직과 기구의 기계적 통합으로만 이해해서는 남북 간 통합을 원만하게 추진해나가는 어려울 것이다.

남북한 제도통합은 조직과 기구의 기계적 통합의 측면과 함께 이러한 제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북한주민들이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할 것인가라는 인식의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3대 세습의 유일지배체제와 기형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는 상이한 정치·경제체제 아래 정치·경제적 삶을 살아온 북한주민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과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이식'의 방식으로 제도통합이 추진되더라도 새로운 제도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식의 측면을 간과할 경우 제도통합은 상당한 진통과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북한 제도통합은 북한주민의 인식이 반영되는 상호작용의 방식으로 추진될 때 사회적 갈등 및 비용이 최소화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주민의 상황, 제도통합에 대한 북한주민의 예상 반응, 부작용 및 갈등 요소,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책도 동시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I

II

III

IV

V

VI

VII

탈북민들은 ‘먼저 온 통일’로 인식되고 있다.¹⁾ 그런데 ‘먼저 온 통일’과 관련하여 탈북민에 대해 ‘통일대비 역군’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통일 과정에서 이들의 직접적인 역할론을 넘어서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 동안 탈북민에 대한 정책의 목표는 ‘정착’ 그 자체에 집중되었다. 탈북민의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과 경험을 통일추진 단계에서 통합계획 수립의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인식은 거의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탈북민의 남한사회 정착 과정의 경험을 통해 남북한 전체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나갈 때 ‘먼저 온 통일’로서 탈북민의 남한사회 정착이 남북한 통합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앞으로 통일대비 역군이라는 탈북민의 직접적인 역할의 측면보다 탈북민 정착지원 과정에서 축적되는 경험을 통해 통합에 대비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도출된 정책자산을 남북한 제도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탈북민의 정치·경제 제도에 대한 의식은 통일 이후 제도, 문화, 심리적 통합 과정에서 북한주민의 의식을 간접적으로 반영한다는 면에서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통일수용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 그 동안 탈북민에 대해서는 고용, 경제적 생활수준 중심으로 접근하여 적응관점에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와 같이 탈북민에 대한 선행 의식조사는 한국사회 적응도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의 성격이 강하였기 때문에 제도와 사회 문화적 체계에 대한 기본 인식, 그리고 거주기간에 따른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었다. 새로운 정치제도와 경제제도 아래 삶을 영위하는 주체로서의 탈북민이

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듯이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이 공식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본 과제에서는 ‘탈북민’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정도 이해하며, 어느 정도 수용하는지에 대해 전문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한 사회 정착 과정에서 탈북민들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효율적인 남북한 제도통합의 자산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통일연구원에서는 「통일대계 연구」라는 연속과제를 수행하였다. 통일연구원의 「통일대계 연구」는 2단계에 걸쳐 수행되고 있다. 먼저 통일연구원은 1차 4개년 「통일대계 연구」를 통하여 통일환경 평가, 통일비전의 개발, 통일대비 북한변화 및 한중협력, 남북 친화력 확대방안, 통일대비 국내과제, 통일대비 대북정책 모색,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 북한의 민주화 및 시장화 등 세부 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²⁾ 그리고 2014년부터 2차 4개년 「신통일대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통일연구원에서는 「신통일대계 연구」의 일환으로 2015년도에 1차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제도에 대한 탈북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탈북민들은 정착기간이 경과해도 경쟁에 대한 인식과 권위주의에 대한 인식은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탈북 과정의 곤궁을 이유로 권리만 내세우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는 이해도와 수용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탈북민들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각과 의무에 대한 인식이 낮다. 따라서 앞으로 탈북민에 대한 지속적 인식조사를 통해 북한주민들이 남북한 통합 과정에서 제도통합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에 대해 간접적인 경험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해나갈 필요가 있다. 2차 년도인 2016년

²⁾ 김수암 외,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 3.

에는 2015년도 전반적인 인식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인식에 대해 보다 심화된 조사를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와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상호 인식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힘들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탈북민이 남한의 제도, 사회문화적 체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식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남한주민들의 의식과의 비교를 통해 종합적으로 통일준비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역량 강화 정책에 반영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2016년도에는 남한주민과 탈북민의 남북한 통합에 대한 인식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본 과제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기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통일의식의 경우 남한주민들과의 인식을 상호 비교하기 위해 통일연구원의 다른 과제인 「남북한 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와 협업으로 조사를 수행하고자 한다. 즉, 통일의식 관련 동일 항목에 대해 탈북민에 대한 조사는 본 과제에서 수행하고, 남한주민에 대한 조사는 다른 과제인 「남북한 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본 과제에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2. 조사방법

가. 조사내용

본 과제에서는 정치·경제 제도에 대한 설문 문항을 구성하기 위하여 우선 2015년도 연구결과를 반영하였다. 그리고 후술하는 4가지 영역의 세부 문항은 통일준비 역량과 관련한 문헌조사를 통해 선정하였다.

그리고 2014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수행 중인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 연구진과 협의하여 통일역량과 관련한 문항을 공유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첫째, 2105년에 이어 정치·경제제도 통합 과정에서 북한주민의 이해와 수용을 예측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탈북민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항목을 구성하였다.

둘째, 정치, 경제,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심층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항목을 구성하였다. 2016년도에는 사회의식, 경제의식, 불평등 의식, 정치의식에 대한 기본통계를 바탕으로 3가지 관점에서 심층분석을 추가로 수행하고자 한다.

- 탈북민의 민주주의 제도 수용: 정당일체감을 중심으로
- 탈북민의 자본주의 제도 수용
- 탈북민의 문화적응 유형, 삶의 만족도

셋째, 정치·경제제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인식과 남북한주민의 인식의 비교를 위하여 통일의식을 주요 설문항목에 포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통합에 대한 탈북민과 남한주민의 인식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상의 세 가지 요소를 반영하여 설문 문항은 부록에서 보듯이 사회의식 22문항, 경제의식 14문항, 불평등 의식 20문항, 정치의식 24문항, 통일의식 31문항 등 1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외에 인구학적 변인(성, 연령, 지역, 학력, 지역)과 계층변인(정치신분, 경제계층), 직업변수, 이주변인(탈북동기, 이주유형 등), 한국에서의 소득 및 직업 등 인적사항은 총 19문항이다.

나. 조사의 기본 설계

(1) 표집안

본 연구에서는 입국 연도에 따른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 및 그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입국 연도(정착기간)를 중심으로 표집틀을 작성하였다. 탈북민 입국 연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시간적 변화(입국 연도, 2000년~2015년)에 따른 의식변화 양상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첫째, A집단(2004년 이전 입국자): 10년 이상 그룹

둘째, B집단(2005년~2010년도 입국자): 보호기간(5년) 경과 집단

셋째, C집단(2011년~2015년도 입국자): 보호기간 중인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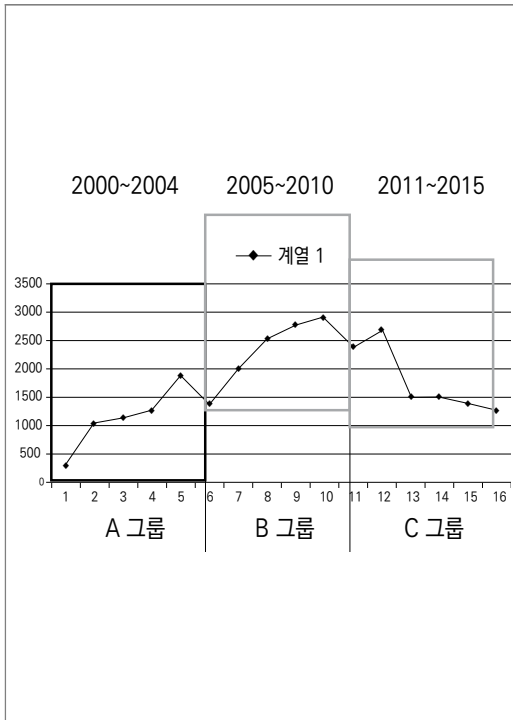
표 I-1 >> 조사의 표집

입국 연도	이름	모집단 인원수	본 조사표집 인원
1) 2004년 이전 입국자	10년 이상 집단	5,668	100명
2) 2005년~2010년	보호기간 경과 집단	14,083	100명
3) 2011년~2015년	보호집단	8,395	100명

출처: 필자 작성

표 I-2 2000년~2015년 입국자 집단의 분류(A,B,C 집단)

항목 입국	계	성별	
		남	여
2000	312	179	133(43)
2001	1,043	563	480(46)
2002	1,138	506	632(55)
2003	1,281	469	812(63)
2004	1,894	626	1268(67)
2005	1,383	423	960(69)
2006	2,018	509	1509(75)
2007	2,544	570	1974(78)
2008	2,809	612	2197(78)
2009	2,927	667	2260(77)
2010	2,402	591	1,811(75)
2011	2,706	795	1,911(71)
2012	1,502	404	1,098(73)
2013	1,514	369	1,145(76)
2014	1,397	305	1,092(78)
2015	1,276	251	1,025(80)
계			



출처: 필자 작성

(2) 조사방법

전문조사원을 채용하여 두 시간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면접 중 예상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대처법 등을 포함한 설문 실시의 과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였다. 설문조사는 1:1 개별 면접조사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탈북민들이 설문 문항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탈북민 5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 문항 검토를 거쳤다. 그리고 거주지역의 경우 서울지역 및 수도권, 부산지역, 인천지역 등 세 지역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I

II

III

IV

V

VI

VII

표 I-3 조사대상 지역 책임자

지역	책임자
서울지역 및 수도권	현인애
부산지역	김화순
인천지역	

출처: 필자 작성

표 I-4 지역별 거주현황(2016년 9월말 현재 거주자 기준)

(단위: 명)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북	경남	대구	충북	충남·세종
남	2,312	2,107	735	290	237	249	155	209	279
여	4,588	6,078	1,849	721	809	782	537	867	978
합계	6,900	8,185	2,584	1,011	1,046	1,031	692	1,076	1,257
지역	광주	강원	대전	전남	전북	울산	제주	계	
남	143	173	143	152	115	162	59	7,520	
여	451	520	422	448	406	375	191	20,022	
합계	594	693	565	600	521	537	250	27,542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표 I-5 연령별 분포(2016년 9월말 현재)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남	622	1,558	2,378	2,017	1,269	476	323	8,643
여	619	1,901	5,972	6,585	3,701	1,127	916	20,821
합계	1,241	3,459	8,350	8,602	4,970	1,603	1,239	29,464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2016년 탈북민 의식조사는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탈북민의 인구학적 특징은 <표 I-6>과 같다.

표 I-6 ▶ 탈북민 인구학적 특징

	전체	사례수	%
		300	100
성별	남성	150	50
	여성	150	50
연령대	20대	44	14.7
	30대	64	21.4
	40대	98	32.8
	50대	61	20.4
	60대 이상	32	10.7
남한체류 기간	5년 이하	91	30.3
	6~10년 이하	80	26.7
	11년 이상	129	43
탈북 후 해외체류 기간	1년 이하	155	52
	2년	33	11.1
	3년	23	7.7
	4년 이상	87	29.2
북한 거주지역	국경지역	240	80
	내륙지역	60	20
학력	인민학교 이하	11	3.7
	고졸	178	59.3
	전문학교 졸	53	17.7
	대재 이상	58	19.3
당원 여부	당원이다	79	26.3
	당원이 아니다	221	73.7
탈북 이유	신변의 위협	88	30.2
	경제적 이유	108	37.1
	가족 상봉	22	7.6
	삶의 기회 추구	73	25.1

I
II
III
IV
V
VI
VII

전체		사례수	%
		300	100
직장	공식일	114	43.7
	이중일	66	25.3
	비공식일	81	31
남한연계 여부	친척과 교류	79	26.7
	친척과 비교류	22	7.4
	무연고	195	65.9
북한정치 계층	상층	22	7.4
	중층	147	49.7
	하층	127	42.9
북한경제 계층	상층	17	5.7
	중층	169	57.1
	하층	110	37.2
남한계층	상층	2	0.7
	중층	111	37.5
	하층	183	61.8
정치성향	진보	86	28.9
	중도	116	38.9
	보수	96	32.2
경제적 만족도	불만족	119	39.7
	만족	181	60.3

출처: 필자 작성

II. 기초통계(1): 통합에 대한 탈북민 및 남한주민과의 인식 비교



1. 통합에 대한 탈북민 인식

「2016 남북통합의식조사」에서 통합 의지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문항 중 17개 문항을 사용하여 남북통합 의지에 대한 탈북민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통합측정 의지에 관한 항목은 통일의 당위적 가치를 묻는 1개 문항, 통일의 현실적 가치를 묻는 8개 문항, 통일의 이유를 묻는 1개 문항, 통일의 편익에 대한 3개 문항, 통일시기와 방식을 묻는 3개 문항, 통일 여건을 묻는 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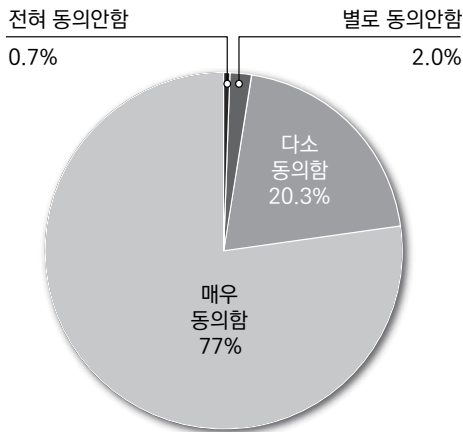
VI

VII

가. 통일의 당위적 가치

탈북민의 97.3%(매우 동의: 77.0% + 다소 동의: 20.3%)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2.7%(전혀 동의안함: 0.7% + 다소 동의안함: 2.0%)는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평균점은 4점 기준으로 3.7점이었다. 북한에서의 직업이 공식일이었던 응답자(3.8 점)가 느끼는 통일의 필요성이 북한에서의 직업이 이종일이었던 응답자(3.6점)가 느끼는 통일의 필요성보다 높은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성별, 연령대, 남한 체류기간, 북한에서의 학력, 북한에서의 당원 여부, 정치적 성향,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II-1 ▶ 통일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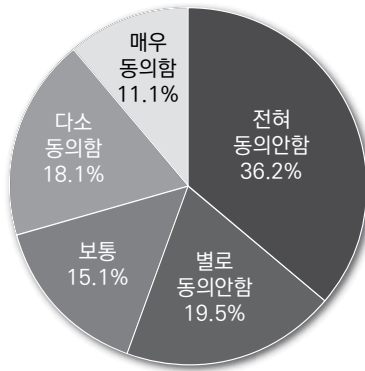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나. 통일의 현실적 가치

통일은 민족의 의무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강하며, 결과적으로 통일을 원한다는 응답을 강제하는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이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회적 바람직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화적 분단고착에 대해 물어보았다. 문항은 “남한과 북한이 전쟁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이다. 평화적 분단고착에 동의하는 비율은 29.2%(매우 동의: 11.1% + 다소 동의: 18.1%)였으며 평화적 분단고착에 반대하는 비율은 55.7%(전혀 동의안함: 36.2% + 별로 동의안함: 19.5%)였다. 응답자의 15.1%는 보통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II-2 ▶ 평화적 분단고착에 대한 견해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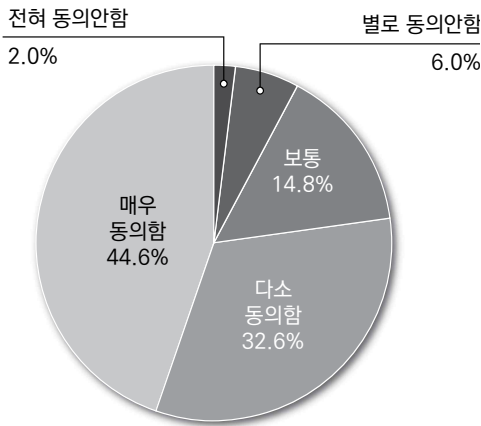
I
II
III
IV
V
VI
VII

남성에 비해 여성이 평화적 분단고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6~10년 거주자와 11년 이상 거주자의 평화적 분단고착에 대한 지지가 5년 이하 거주자의 지지보다 높았다. 그 외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수준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97.3%가 동의한 상황에서 평화적 분단고착에 29.2%가 동의하는 것에 대해 어떤 해석이 가능할 것인가?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앞서 언급한 사회적 바람직성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질문, 평화적 분단고착을 통해 드러난 통일의 필요성이 보다 정확한 여론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능한 해석은 통일이라는 개념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1민족 1국가 차원의 통일이 아닌 1민족 2국가 단계를 거친 1민족 1국가 상태를 통일로 볼 수 있으며 현재 필요한 것은 평화적 1민족 2국가 체제라는 것이다. 즉 1민족 1국가라는 사건으로서의 통일이 아닌 1민족 2국가를 거친 1민족 1국가라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결과는 당위적 통일의 필요성과 현실적 통일의 필요성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본인이 통일을 목도할 수 없더라도 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에 응답자의 77.2%(매우 동의: 44.6% + 다소 동의: 32.6%)가 동의하였으며 응답자의 14.8%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8.0%(전혀 동의안함: 2.0% + 별로 동의안함: 6.0%)는 동의하지 않았으며 5점 기준으로 평균은 4.1점이었다.

그림 II-3 ▶ 통일을 위한 노력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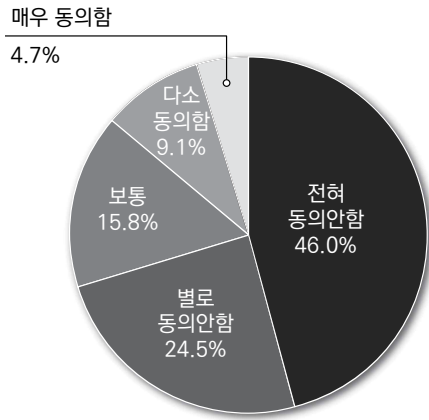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 중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만 관찰되었다. 5년 이하 거주자의 동의 정도는 4.4점, 6~10년 거주자의 동의 정도는 4.1점, 11년 이상 거주자의 동의 정도는 4.0점이었으며 5년 이하 거주자와 11년 이상 거주자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성별, 연령대, 북한에서의 학력, 북한에서의 당원 여부, 북한에서의 직업 유형, 본인의 정치성향,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 I
- II
- III
- IV
- V
- VI
- VII

통일이 현재 우리 사회의 당면 목표라고 응답한 비율은 13.8%(매우 동의: 4.7% + 다소 동의: 9.1%)이었다. 탈북민의 70.5%(전혀 동의안함: 46.0% + 별로 동의안함: 24.5%)는 통일이 우리 사회의 당면 목표가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15.8%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5점 기준의 평균은 2.0이었다. 정치적으로 진보인 응답자(1.8점)의 동의 정도가 정치적으로 자신을 중도라고 생각하는 응답자(2.2점)의 동의 정도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자신을 보수라고 여기는 응답자의 동의 정도는 2.0점이었으며 진보집단 및 중도집단과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 외 인구 통계학적 변수의 수준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II-4 >> 통일이 우리 사회의 당면 목표인지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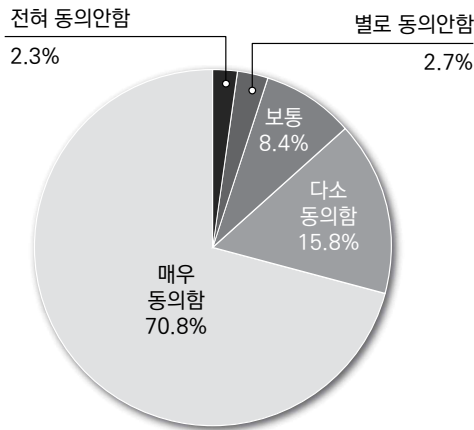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통일이 본인의 진정한 소망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6.6%(매우 동의: 70.8% + 다소 동의: 15.8%)가 통일이 자신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5%(전혀 동의안함: 2.3% + 별로 동의안함: 2.7%)는 통일이 자신의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8.4%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5점 기준 평균점은 4.5점이었다.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남한 체류기간에 따른 차이만 관찰되었다. 11년 이상 거주자(4.3점)가 5년 이하 거주자(4.8점)보다 통일이 본인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느끼는 정도가 약했다. 6~10년 거주자의 평균은 4.5점이었다. 그 외 변수의 수준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5 ▶ 남북통일이 자신의 진정한 소망인지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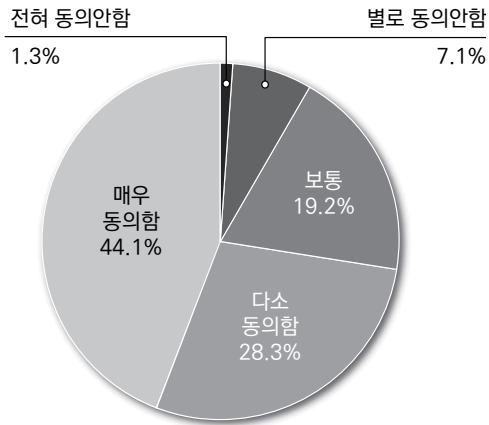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 I
- II
- III
- IV
- V
- VI
- VII

통일과 관련한 정서적 경험을 측정하였다. “좌우시간 통일에 관계되는 일을 떠올리면 나의 기분은 편안하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72.4%(매우 동의: 44.1% + 다소 동의: 28.3%)가 동의하였으며 응답자의 8.4%(전혀 동의안함: 1.3% + 별로 동의안함: 7.1%)가 동의하지 않았다.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은 19.2%였다(평균: 4.1점/5점).

그림 II-6 통일과 관련된 정서적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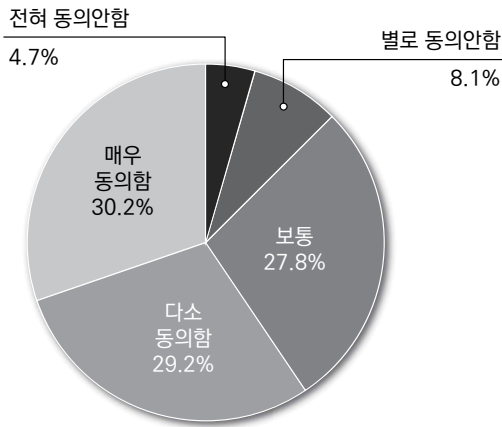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통일이 진정한 소망인지에 관한 문항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남한 거주기간의 차이만 유의하였다. 5년 이하 거주자(4.3점)가 11년 이상 거주자(3.39)보다 통일에 대해 더 긍정적인 정서를 지니고 있었다. 6~10년 거주자의 평균은 4.0점이었다. 그 외 변수의 수준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통일에 관한 행동적 요소를 측정하기 위해 통일과 관련한 세금 인상에 대해 물어보았다. 탈북민 응답자의 59.4%(매우 동의: 30.2% + 다소 동의: 29.2%)는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세금 인상에 찬성하였다. 반면 응답자의 12.8%(전혀 동의안함: 4.7% + 별로 동의안함: 8.1%)는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세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았다. 응답자의 27.8%는 보통으로 응답하였다. 5점 기준 평균은 2.7점이었다.

그림 II-7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세금 인상에 대한 견해



출처: 필자 작성

성별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남성(3.9점)이 여성(3.6점)에 비해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세금 인상에 찬성하는 정도가 높았다. 또한 5년 이하 거주자(4.5점)의 세금 인상에 찬성하는 정도가 6~10년 거주자(3.5점)가 찬성하는 정도보다 높았다. 정치성향 및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에 따른 차이 역시 관찰되었다. 정치적으로 자신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4.0점)가 본인을 중도라고 생각하는 응답자(3.5점)보다 세금 인상에 찬성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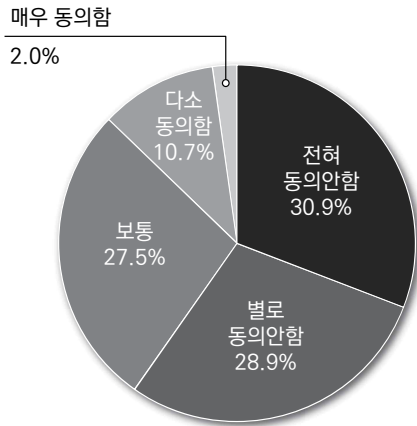
I
II
III
IV
V
VI
VII

만족하는 응답자(3.8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3.6점)보다 세금 인상에 찬성하는 정도가 높았다. 연령대, 북한에서의 학력, 북한에서의 당원 여부, 북한에서의 직장 유형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통일 이후의 상황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았다. 통일 이후 상황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주장에 12.7%(매우 동의: 2.0% + 다소 동의: 10.7%)만이 동의하였다. 응답자의 59.8%(전혀 동의안함: 30.9% + 별로 동의안함: 28.9%)는 통일 이후 상황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응답자의 27.5%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5점 기준 평균점은 2.2점이었다.

여성(2.4점)이 남성(2.1점)에 비해 통일 이후 상황에 더 부정적이었으며 정치적으로 중도인 응답자(2.4점)가 정치적으로 진보인 응답자(2.2점)에 비해 통일 이후 상황에 더 부정적이었다. 그 외에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수준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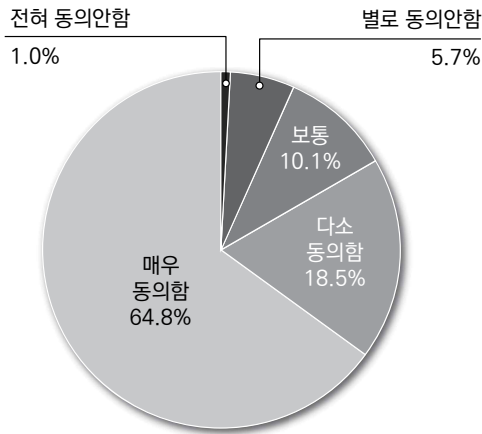
그림 II-8 통일 이후 상황에 대한 견해



출처: 필자 작성

“남한에서 생활하는 탈북민의 삶을 보면, 북한주민들은 통일을 원할 것이다”라는 주장에 탈북민의 83.3%(매우 동의: 64.8% + 다소 동의: 18.5%)가 동의하였다. 응답자의 6.7%(전혀 동의안함: 1.0% + 별로 동의안함: 5.7%)만이 동의하지 않았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0.1%였으며 5점기준 평균은 4.4점이었다.

그림 II-9 ▶ 탈북민의 삶에 대한 북한주민의 생각 예상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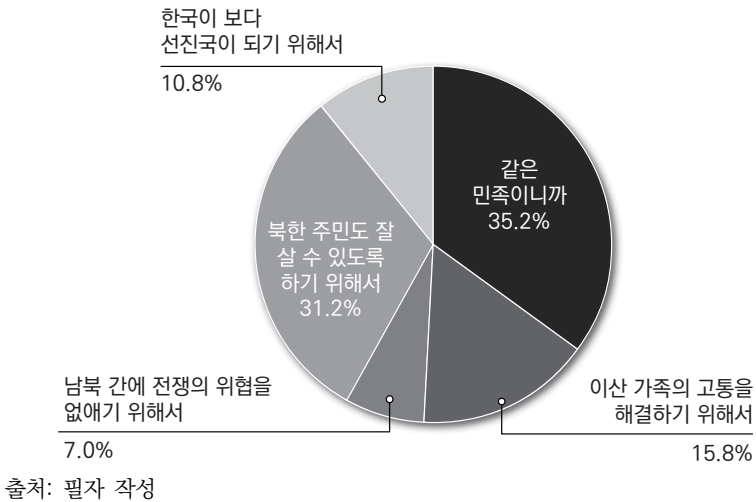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만 관찰되었다. 11년 이상 거주자(4.3점)들의 동의 정도가 5년 이하 거주자(4.6점)의 동의 정도보다 낮았다. 그 외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수준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 I
- II
- III
- IV
- V
- VI
- VII

다. 통일의 이유

탈북민은 ‘같은 민족이니까’를 남북 통일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35.2%). 그 뒤를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31.2%)’,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15.8%)’,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10.8%)’, ‘남북 간에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7.0%)’ 순으로 통일의 이유를 선택하였다.

그림 II-10 >> 통일의 이유



남성의 경우 민족 동질성을 통일의 이유로 꼽은 비율이 40.3%로 가장 높았지만 여성의 경우는 북한주민의 생활 향상을 꼽은 비율이 38.9%로 가장 높았다. 민족 동질성을 통일의 이유로 꼽은 비율에서 연령의 효과 그리고 남한 체류기간의 효과가 관찰되었다. 연령이 감소할수록 민족 동질성을 통일의 이유로 선택한 비율이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20대는 29.5%, 30대는 31.3%, 40대는 37.1%, 50대는 37.7%, 60대 이상은 41.9%가 민족 동질성을 통일의 이유로 선택하였다.

민족 동질성 회복,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를 당위적 차원의 통일 이유, 남북 간 전쟁 위협의 제거, 그리고 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도구적 차원의 통일 이유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당위적 차원의 통일 이유는 51.0%, 도구적 차원의 통일 이유는 49.0%로 두 차원의 통일 이유를 선택한 비율이 비슷했다.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도구적 차원의 통일을 선택한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5년 이하는 42.3%가, 5~10년 거주자는 46.3%가, 11년 이상 거주자는 55.4%가 도구적 차원의 통일을 선호하였다. 또한 북한에서의 학력이 높을수록 도구적 차원의 통일 이유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고졸 응답자의 46%가 도구적 통일을 선호한 반면 대학재학 이상 응답자의 60.3%가 도구적 통일 이유를 선택하였다.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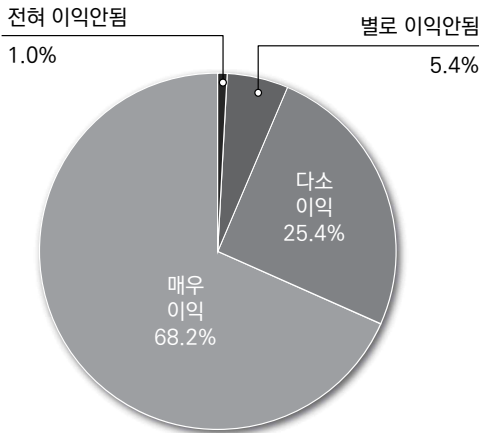
VI

VII

라. 통일의 편익

응답자의 93.6%(매우 이익: 68.2% + 다소 이익: 25.4%)가 통일이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6.4%(전혀 이익이 안됨: 1.0% + 별로 이익이 안됨: 5.4%)가 통일은 국가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4점 기준 평균은 3.6점이었다.

그림 II-11 ▶ 통일이 국가에 미치는 편익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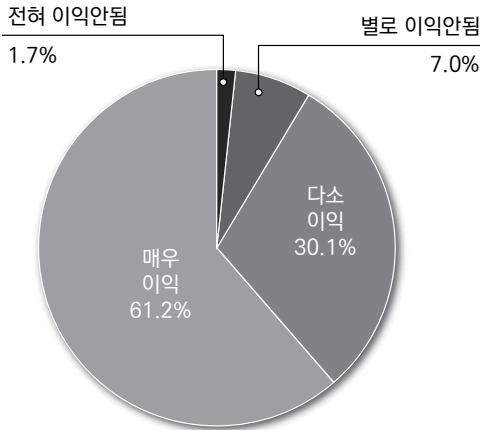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남성(3.8점)이 여성(3.4점)에 비해 통일이 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믿음의 정도가 강하였으며, 5년 이하 거주자(3.7점)의 통일에 대한 국가 편익 믿음이 6~10년 거주자(3.5점)의 믿음보다 강했다. 북한에서 당원이었던 응답자(3.7점)가 북한에서 당원이 아니었던 응답자(3.6점)보다 통일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정치적으로 자신을 보수라고 생각하는 응답자(3.7점)의 통일의 국가 편익 믿음이 중도인 응답자(3.5점)에 비해 강했다. 연령대, 북한에서의 학력, 북한에서의 직업

유형,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통일이 자신에게 미치는 편익에 대해 물어보았다. 탈북민 응답자의 91.3%(매우 이익: 61.2% + 다소 이익: 30.1%)가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8.7%(전혀 이익이 안됨: 1.7% + 별로 이익이 안됨: 7.0%)가 통일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4점 기준 평균은 3.5점이었다.

그림 II-12 통일이 본인에 미치는 편익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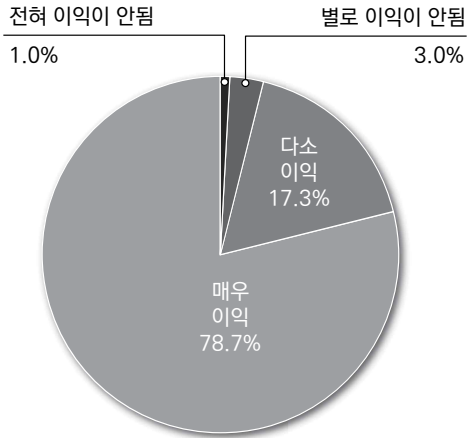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남성(3.6점)이 여성(3.4점)에 비해 통일이 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믿음의 정도가 강하였으며, 정치적으로 자신을 보수라고 생각하는 응답자(3.6점)의 통일의 국가 편익 믿음이 중도인 응답자(3.4점)에 비해 강했다. 연령대, 남한 거주기간, 북한에서의 학력, 북한에서의 당원 여부, 북한에서의 직업 유형,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 I
- II
- III
- IV
- V
- VI
- VII

통일이 북한주민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96.0%(매우 이익: 78.7% + 다소 이익: 17.3%)가 '통일이 북한주민에 이익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4.0%(전혀 이익이 안됨: 1.0% + 별로 이익이 안됨: 3.0%)만이 '통일이 북한주민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4점 기준 평균은 3.7점이였다. 남성(3.8점)이 여성(3.47)에 비해 통일이 북한주민에 이익이 된다는 믿음의 정도가 강하였다. 그 외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수준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II-13 통일이 북한주민에게 미치는 편익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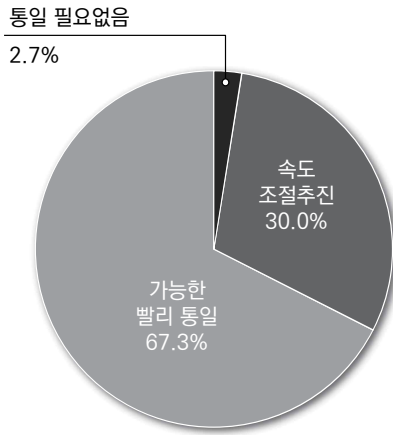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마. 통일의 시기와 방식

통일의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7.3%가 '가능한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0.0%는 '속도조절하며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2.7%만이 '통일은 필요없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II-14 ▶ 통일시기에 대한 견해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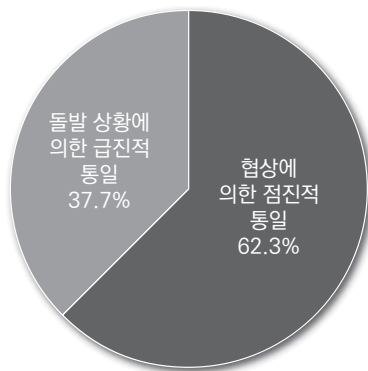
VI

VII

가능한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속도조절을 원하는 응답보다 크게 앞서는 패턴은 거의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수에서 관찰되었다. 하지만 연령과 거주기간에 따라 두 응답의 크기는 변화가 있었다. 20대(36.4%)와 30대(40.6%)는 40대(25.5%), 50대(27.9%), 60대(18.8%)에 비해 속도조절을 원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미묘한 변화 역시 관찰되었다. 남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속도조절을 하면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의 비중이 높아졌다. 5년 이하 응답자의 경우 12.1%만이 속도조절을 선택하였지만 6~10년 거주자는 26.3%, 11년 이상 거주자는 절반에 가까운 45.0%가 속도조절을 하면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협상에 의한 점진적 통일과 돌발 상황에 의한 급진적 통일 중 어떤 형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2.3%는 협상에 의한 점진적 통일을, 37.7%는 돌발 상황에 의한 급진적 통일을 예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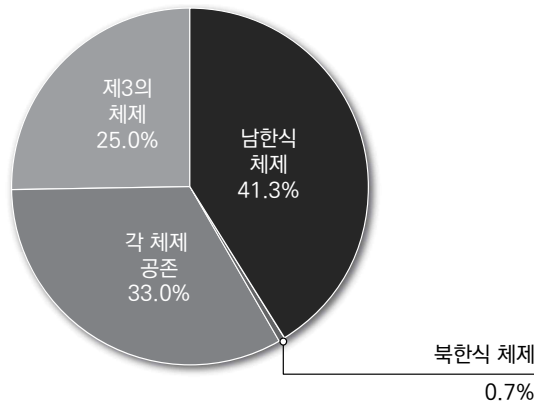
그림 II-15 > 통일방식 예상



출처: 필자 작성

점진적 통일을 예상하는 응답의 비중이 급진적 통일을 예상하는 응답보다 많은 패턴은 모든 인구통계학 변수에서 관찰되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40대의 경우 급진적 통일을 예상한 비율이 43.8%로 가장 높았으며 30대는 25.8%로 가장 낮았다. 5년 이하 거주자는 44.7%가 급진적 통일을 예상하여 6~10년 거주자의 28.4%와 차이를 보였다. 11년 이상 거주자는 38.5%가 급진적 통일을 예상하였다. 북한에서 당원이었던 응답자의 경우 급진적 통일을 예상한 비율과 점진적 통일을 예상한 비율이 같았다.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 역시 관찰되었다. 보수 응답자의 45.1%가 급진적 통일을 예상하여 33.8%가 급진적 통일을 예상한 진보 응답자와 차이를 보였다.

그림 II-16 >> 통일 이후 체제



출처: 필자 작성

통일 한반도 국가는 어떤 체제로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41.3%는 남한식 체제를 선호하였으며 33.0%는 남북체제의 공존을, 25.0%는 제3의 체제를 선호하였다. 성별과 연령,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으며 <표 II-1>에 구체적 비율을 제시하였다.

- I
- II
- III
- IV
- V
- VI
- VII

표 II-1 >> 통일국가 체제 선호

(단위: %)

		남한식 체제	북한식 체제	체제 공존	제3의 체제
성별	남	47.3	0.7	27.3	24.7
	여	35.3	0.7	38.7	25.3
연령대	20대	40.9	2.3	27.3	29.5
	30대	45.3	0.0	25.0	29.7
	40대	41.8	1.0	33.7	23.5
	50대	37.7	0.0	39.3	23.0
	60대	40.6	0.0	40.6	18.8
거주기간	5년 이하	53.8	0.0	30.8	15.4
	6~10년	40.0	1.3	27.5	31.3
	11년 이상	33.3	0.8	38.0	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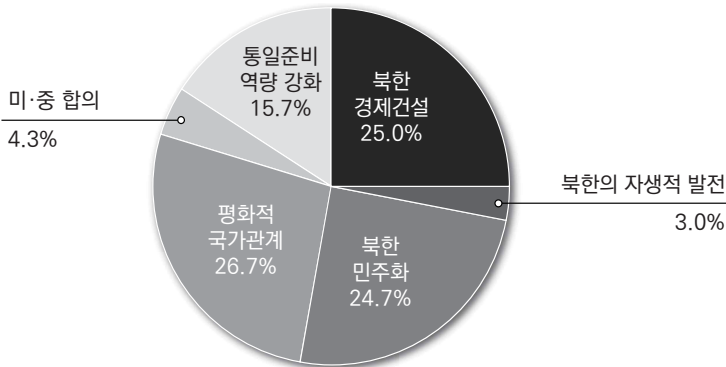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남성의 경우 남한식 체제를 체제 공존이나 제3의 체제보다 선호하지만 여성의 경우 체제공존에 대한 선호가 남한식 체제의 선호보다 높다. 20대와 30대의 경우 남한식 체제에 대한 선호가 뚜렷한 반면 40대 이상 세대는 남한식 체제에 대한 선호가 체제 공존에 대한 선호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한에 10년 이하 거주한 응답자는 남한식 체제를 선호하지만 11년 이상 거주한 응답자는 체제 공존을 더 선호하였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거주기간이 길어졌을 가능성을 고려해 본다면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긴 남한사회의 단점과 모순에 대한 자각이 남한체제 보다는 체제 공존 또는 제3의 체제를 선호하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다 면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지점이다.

바. 통일의 여건

통일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으며 응답자는 1순위 선택 후 2순위를 선택하였다. 먼저 1순위만 살펴본다면 평화적 국가관계(26.7%), 북한 경제건설(25.0%), 북한 민주화(24.7%)가 가장 많았다. 북한의 경제발전과 민주화 등 북한의 변화를 통일의 변화로 선택한 비율이 50% 정도를 차지하며 남한의 통일준비 역량 강화를 선택한 비율이 15.7%였다.

그림 II-17 >> 통일을 위한 조건(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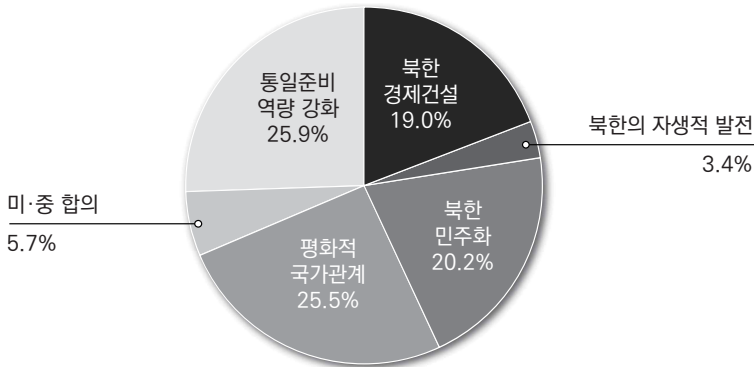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20대의 경우 북한의 민주화가 북한의 경제발전보다 통일을 위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대의 경우 북한 민주화를 선택한 비율이 45.5%로 30대 이상 세대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상대적으로 북한의 경제발전을 선택한 비율은 11.4%로 다른 세대에 비해 두 배 이상 낮았다. 평화적 국가관계에 대한 연령별 선호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비슷한 패턴이 남한 체류기간에서도 관찰되었다. 5년 이하 거주자의 경우 통일을 위해 북한의 민주화가 경제발전에 우선한다는 선택을 하였다. 6년 이상 거주한 응답자 중 북한 경제발전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평화적 국가관계, 북한의 민주화 순으로 선택하였다.

1순위와 2순위를 합친 응답을 보면 상대적으로 통일역량 강화의 비중이 커졌다. 탈북민은 통일을 위해 북한의 변화를 가장 필요한 조건으로 보고 있지만 남한의 통일준비 역량 강화, 그리고 남북관계의 평화적 관리 역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II-18 ▶ 통일을 위한 조건(1순위 + 2순위)



출처: 필자 작성

사. 요약

탈북민의 절대 다수는 통일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통일의 필요성에 압도적인 비율로 찬성하며, 통일에 대해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며, 통일이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고, 통일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지 않았다. 또한 통일과 관련된 적극적 행동에 나설 의도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통일이 국가와 본인, 그리고 북한주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성별과 연령 등 주요 인구통계학적 지표에 따른 차이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은 통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탈북민 전반에 걸친 태도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압도적 지지에 비추어본다면 평화적 분단고착을 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이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287명 중 28.6%가 분단고착에 대한 지지(매우 동의함 + 다소 동의함)를 표출하였다. 분단고착에 대해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까지 더한다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탈북민의 42.5%는 분단고착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다소 이율배반적인 결과는 통일에 대한 당위적 측면과 현실적 측면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남한주민이 아닌 탈북민에게서도 통일에 대한 개념 분화가 관찰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현실적 통일개념에 대한 보다 정교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탈북민이 꼽은 통일의 이유 역시 흥미로운 결과이다. 민족 정체성에 기반한 이유를 제외한다면 북한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탈북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결과이다.

I

II

III

IV

V

VI

VII

탈북민은 급진적 통일보다는 속도조절을 통한 점진적 통일을 원하고 있다. 통일 이후의 정치체제에 대해 남한식 체제를 선호하는 비율보다 체제공존, 제3의 체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남한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목도한 탈북민은 남한체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일을 위한 긍정적 환경으로 탈북민은 북한 경제건설과 민주화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탈북민은 북한의 정치 경제적 변화를 통일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북한의 자생적 발전을 선택한 비율은 매우 낮았다. 북한의 변화가 필수적이지만 북한 자체의 동력으로 변화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남한주민과 탈북민의 비교

본 절에서는 「2016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³⁾와 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비교하였다. 두 조사의 공통 문항은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5개 문항, 통일의 의지를 측정하는 9개 문항, 통일의 이유를 묻는 1개 문항, 통일의 편익을 묻는 3개 문항, 통일의 시기와 방식에 대한 2개 문항, 그리고 통일의 여건을 묻는 1개 문항이다. 분석의 방법은 각 문항에 대해 남한주민과 탈북민의 응답을 성별, 연령별로 비교하였다. 성별, 연령별로 구분된 응답자의 수는 <표 II-2>에 제시하였다.

표 II-2 >> 성별, 연령별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 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성별		연령대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한주민	1,000	493	507	178	187	207	198	230
탈북민	300	150	150	44	64	98	61	32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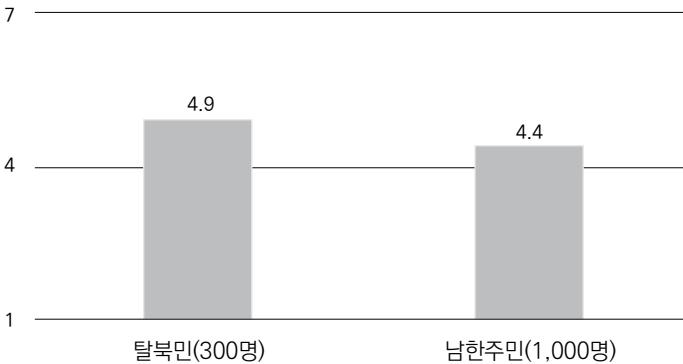
VII

³⁾ 박주화 외, 『2016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출판예정).

가.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7점 척도(1점: 매우 동의하지 않음, 7점: 매우 동의함)로 측정하였다. 본인의 삶이 자신의 이상과 일치하는지를 측정한 문항인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에 남한주민의 평균은 4.4점, 탈북민의 평균은 4.9점으로 탈북민의 삶과 이상의 일치도가 남한주민의 삶과 이상의 일치도보다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남성과 여성, 그리고 모든 연령대에서 관찰되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삶과 이상의 일치도 역시 높아지는 경향은 남한주민과 탈북민 응답 모두에서 관찰되었다.

그림 II-19 자신의 삶이 이상에 일치하는 정도에 대한 견해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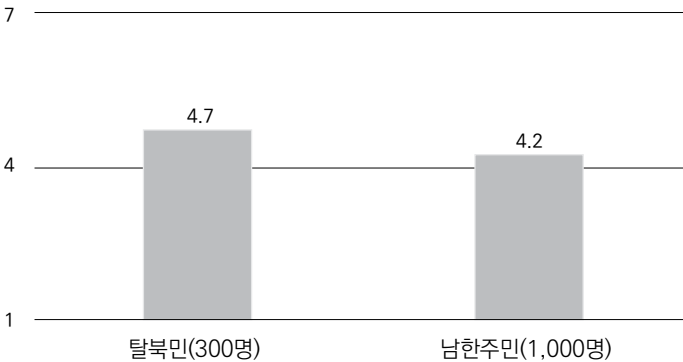
표 II-3 성별, 연령별 삶과 이상의 일치도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전체	성별		연령대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한주민	4.4(.04)	4.4(.06)	4.4(.05)	4.3(.10)	4.3(.09)	4.3(.09)	4.3(.09)	4.7(.07)
탈북민	4.9(.08)	4.9(.11)	4.8(.11)	4.6(.23)	4.8(.16)	4.8(.13)	5.1(.17)	5.0(.22)

출처: 필자 작성

두 번째 질문인 “내 인생의 여건은 아주 좋은 편이다”에 대해 남한주민(4.2점)의 동의 정도가 탈북민(4.7점)의 동의 정도보다 유의하게 낮았다(〈그림 II-20〉 참조). 남성과 여성, 그리고 모든 연령대에서 남한주민의 느끼는 삶의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탈북민이 느끼는 삶의 여건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낮았다(〈표 II-4〉 참조).

그림 II-20 ▶ 본인 인생의 여건에 대한 견해



출처: 필자 작성

표 II-4 ▶ 성별, 연령별 본인 인생의 여건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전체	성별		연령대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한주민	4.2(.04)	4.2(.05)	4.2(.05)	4.2(.09)	4.2(.09)	4.1(.09)	4.1(.08)	4.4(.07)
탈북민	4.7(.08)	4.8(.12)	4.7(.10)	5.0(.22)	4.6(.17)	4.6(.14)	4.7(.18)	5.0(.27)

출처: 필자 작성

남한주민의 경우 20대(4.2점)가 느끼는 삶의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반면 60대(4.4점)가 느끼는 삶의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탈북민의 경우 20대(5.0점)와 60대(5.0)가 가장 높았다. 하지만 남한주민과 탈북민 모두 연령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는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는 문항에 대한 남한주민의 동의 정도는 4.3점, 탈북민의 경우 5.2점이었다(〈그림 II-21〉 참조). 두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든 성별, 연령대에서 탈북민의 평균이 남한주민의 평균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성별의 차이, 연령대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은 두 집단의 공통점이다(〈표 II-5〉 참조).

그림 II-21 ▶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전반적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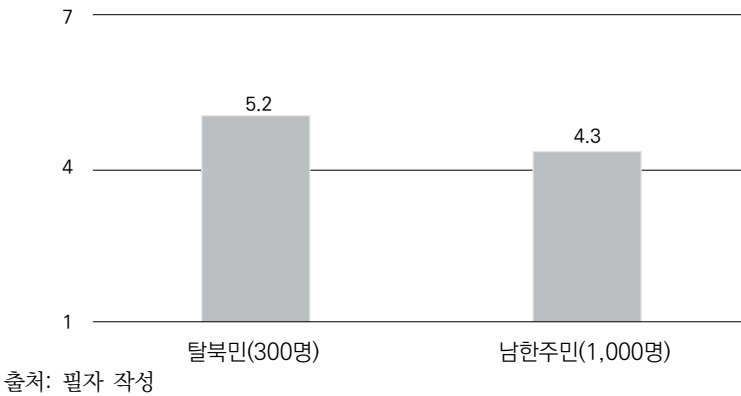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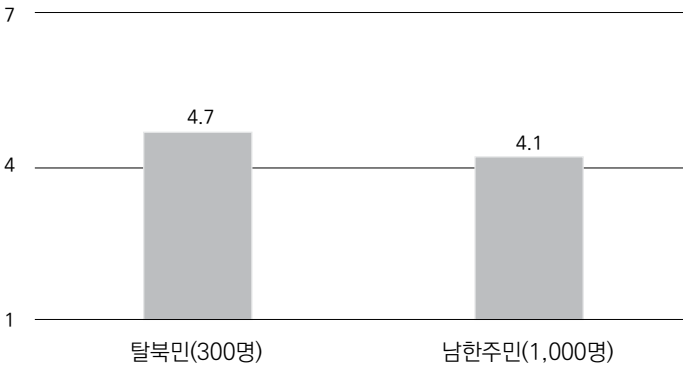
표 II-5 ▶ 성별, 연령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전반적 견해

구분	전체	성별		연령대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한주민	4.3(.04)	4.2(.05)	4.3(.05)	4.2(.10)	4.2(.09)	4.2(.09)	4.3(.08)	4.5(.07)
탈북민	5.2(.08)	5.2(.12)	5.1(.12)	5.3(.22)	5.2(.18)	5.1(.14)	5.1(.20)	5.4(.25)

출처: 필자 작성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을 이루었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냈다”는 문항을 통해 살펴보았다. 남한주민의 평균은 4.1점, 탈북민의 평균은 4.7점으로 탈북민의 평균이 남한주민의 평균에 비해 높았다(〈그림 II-22〉 참조). 다른 문항과 마찬가지로 성별과 연령대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표 II-6〉 참조).

그림 II-22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냈는지에 대한 견해



출처: 필자 작성

표 II-6 성별, 연령별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냈는지의 평균과 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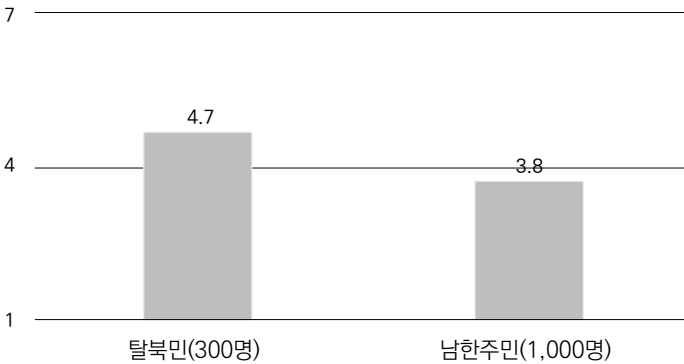
구분	전체	성별		연령대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한주민	4.1(.04)	4.1(.05)	4.1(.05)	4.1(.09)	4.1(.08)	4.0(.08)	4.2(.08)	4.3(.08)
탈북민	4.7(.08)	4.7(.13)	4.6(.11)	4.7(.22)	4.8(.18)	4.6(.15)	4.5(.18)	4.8(.27)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VI
VII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마지막 문항은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지금처럼 살아갈 것이다”였다. 탈북민(4.7점)의 동의 정도가 남한주민(3.8점)의 동의 정도보다 높았으며 두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모든 성별과 연령대에서 탈북민의 평균이 남한주민의 평균보다 높았다.

그림 II-23 다시 태어난다면 현재처럼 살 것인가에 대한 견해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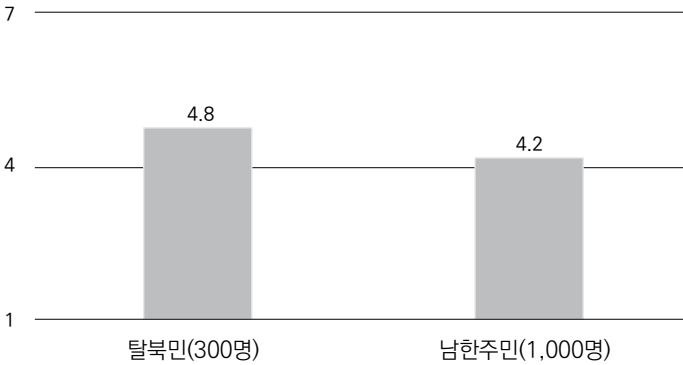
표 II-7 성별, 연령별 다시 태어난다면 현재처럼 살 것인가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전체	성별		연령대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한주민	3.8(.04)	3.9(.06)	3.8(.06)	3.9(.10)	3.8(.10)	3.7(.10)	3.8(.10)	4.0(.09)
탈북민	4.7(.11)	4.9(.16)	4.5(.16)	4.4(.31)	4.4(.23)	4.6(.20)	5.1(.25)	5.2(.33)

출처: 필자 작성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5개 문항의 평균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계산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5개 문항은 남한주민과 탈북민 집단에서 하나의 요인으로 묶을 수 있었다. 남한주민의 삶의 만족도는 4.2점, 탈북민의 삶의 만족도는 4.8점으로 탈북민의 삶의 만족도가 남한주민의 삶의 만족도보다 높았다(〈그림 II-24〉 참조). 두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 연령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표 II-8〉 참조).

그림 II-24 남한주민과 탈북민의 삶의 만족도



출처: 필자 작성

표 II-8 성별, 연령별 삶의 만족도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전체	성별		연령대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한주민	4.2(.03)	4.2(.05)	4.2(.05)	4.1(.08)	4.1(.07)	4.0(.08)	4.1(.07)	4.4(.06)
탈북민	4.8(.07)	4.9(.09)	4.8(.09)	4.8(.17)	4.8(.14)	4.7(.12)	4.9(.14)	5.1(.21)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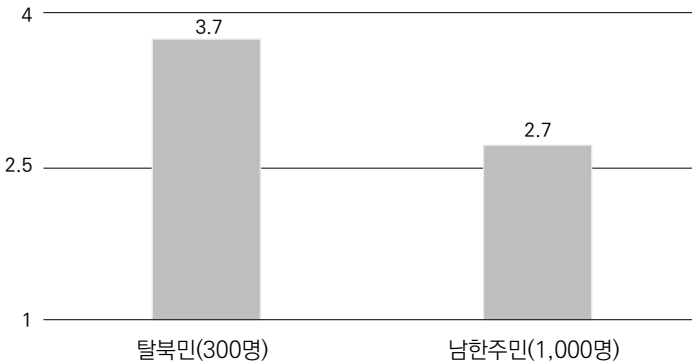
- I
- II
- III
- IV
- V
- VI
- VII

탈북민의 삶의 만족도가 남한주민의 삶의 만족도보다 높으며, 성별, 연령별 편차가 크지 않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적어도 탈북민은 남한에서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탈북민의 높은 삶의 만족도는 과거 북한에서 생활할 때의 경험, 또는 현재 북한 상황과 비교를 통해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자신보다 처지가 못한 대상과의 비교, 즉 하향 비교를 통한 삶의 만족도는 정서적인 만족감을 주지만 자신의 상황 변화에 소극적일 수 있다. 탈북민의 객관적 생활수준은 낮은 편에 속하며, 탈북민 역시 이를 지각하고 있다.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기 보다는 북한에서의 삶과 비교를 통해 현실에 안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탈북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특히 사회비교 과정과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와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나. 통일에 대한 의지

남한주민과 탈북민이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먼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4점 척도(1점: 매우 필요하지 않음, 4점: 매우 필요함)로 질문하였다. 탈북민의 경우 3.7점으로 남한주민의 2.7점에 비해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도가 매우 높았다(〈그림 II-25〉 참조). 남한주민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반면 탈북민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표 II-9〉 참조).

그림 II-25 ▶ 통일의 필요성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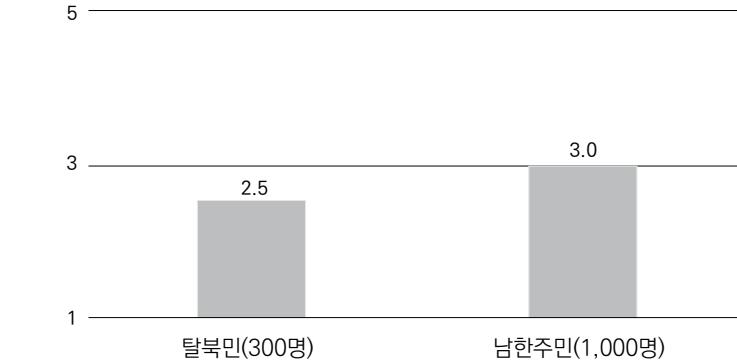
표 II-9 ▶ 성별, 연령별 통일의 필요성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전체	성별		연령대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한주민	2.7(.02)	2.8(.04)	2.7(.03)	2.4(.06)	2.6(.05)	2.7(.06)	2.9(.05)	3.0(.05)
탈북민	3.7(.03)	3.8(.04)	3.7(.04)	3.7(.08)	3.6(.08)	3.8(.05)	3.8(.06)	3.8(.11)

출처: 필자 작성

통일의 필요성과 더불어 평화적 분단고착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5점 척도, 1점: 매우 동의안함, 5점: 매우 동의함). “남한과 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는 질문에 대해 남한주민은 3.0점의 평균을 보였으며 탈북민의 평균은 2.5점이다(〈그림 II-26〉 참조). 남한주민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평화적 분단고착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반면, 탈북민의 경우 30대~50대의 평화적 분단고착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II-10〉 참조).

그림 II-26 평화적 분단고착



출처: 필자 작성

표 II-10 성별, 연령별 평화적 분단고착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전체	성별		연령대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한주민	3.0(.04)	3.0(.05)	3.1(.05)	3.4(.08)	3.2(.08)	3.0(.08)	2.9(.08)	2.8(.07)
탈북민	2.5(.08)	2.2(.11)	2.7(.12)	2.2(.18)	2.7(.19)	2.5(.14)	2.6(.19)	2.2(.25)

출처: 필자 작성

비록 탈북민의 평화적 분단고착에 대한 지지는 낮은 편이지만 탈북민의 압도적 통일 필요성에 대한 공감에 비추어본다면 평화적 분단고착에 대한 지지는 의외의 결과로 받아들여질만하다. 남한주민의 경우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621명(매우 필요함 + 다소 필요함)명 중 26.6%, 탈북민의 경우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287명 중 28.6%가 분단고착에 대한 지지(매우 동의함 + 다소 동의함)를 표명하였다. 분단고착에 대해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까지 더한다면 남한주민의 경우 47.10%, 탈북민의 경우 42.5%였다. 다시 말해서 남한주민 및 탈북민 모두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분단고착에 대한 명확한 반대를 표명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의 필요성’이라는 인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며, 남한주민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탈북민에게서도 관찰된다는 면에서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반의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보다 정밀한 후속 연구가 시급하다.

I

II

III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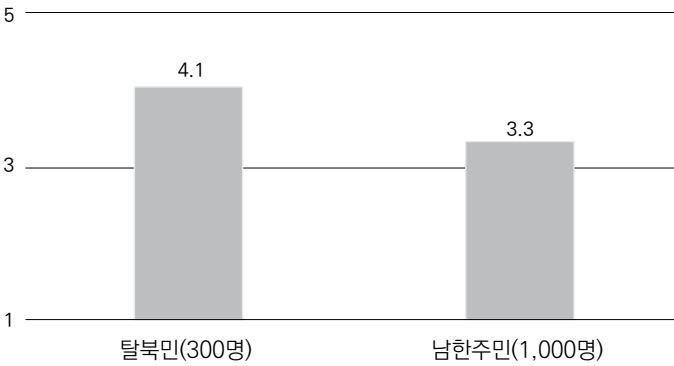
V

VI

VII

“통일을 목도할 수 없더라도 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문항에 탈북민(4.1점)의 동의 정도가 남한주민(3.3점)의 동의 정도보다 높았다(〈그림 II-27〉 참조). 모든 성별과 연령대에서 탈북민의 동의 정도가 남한주민의 동의 정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남한주민 간, 탈북민 간 유의미한 평균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표 II-11〉 참조).

그림 II-27 ▶ 통일을 위한 노력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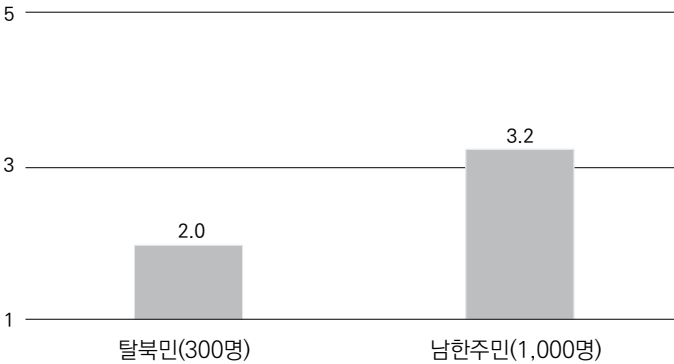
표 II-11 ▶ 성별, 연령별 통일을 위한 노력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전체	성별		연령대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한주민	3.3(.03)	3.4(.04)	3.2(.04)	3.1(.07)	3.2(.07)	3.4(.06)	3.3(.06)	3.4(.05)
탈북민	4.1(.06)	4.1(.09)	4.1(.08)	3.9(.14)	4.0(.14)	4.2(.09)	4.2(.13)	4.3(.19)

출처: 필자 작성

“통일은 우리의 당면목표가 아니다”라는 문항에 탈북민의 동의가 남한주민의 동의보다 낮았다. 탈북민의 평균은 2.0이었으며 남한주민의 평균은 3.2였다(〈그림 II-28〉 참조). 남성과 여성, 그리고 모든 연령대에서 탈북민의 평균이 남한주민의 평균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남한주민의 경우 연령대가 낮을수록 통일이 우리의 당면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강했지만 탈북민의 경우 연령대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표 II-12〉 참조).

그림 II-28 통일이 당면 목표인지에 대한 견해



출처: 필자 작성

표 II-12 성별, 연령별 통일이 우리 사회의 당면 목표인지의 평균과 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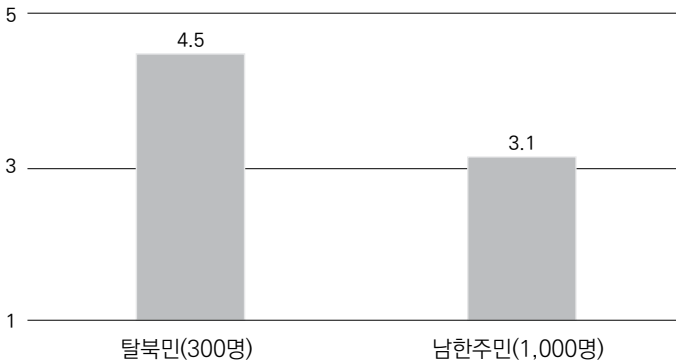
구분	전체	성별		연령대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한주민	3.2(.03)	3.1(.05)	3.2(.04)	3.4(.07)	3.2(.07)	3.2(.07)	3.1(.07)	2.9(.07)
탈북민	2.0(.07)	2.0(.10)	2.0(.10)	2.1(.13)	1.9(.14)	1.9(.12)	2.2(.17)	2.1(.26)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VI
VII

탈북민(4.5점)은 통일이 자신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응답한 반면 남한주민(3.1점)은 보통 수준으로 동의하였다(〈그림 II-29〉 참조). 남한주민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통일이 자신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강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통일이 자신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믿음의 정도는 약했다. 반면 탈북민의 경우 성별, 연령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표 II-13〉 참조). 선행 문항과 동일하게 탈북민은 통일에 대한 매우 높은 수준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림 II-29 통일이 자신의 진정한 소망인지에 대한 견해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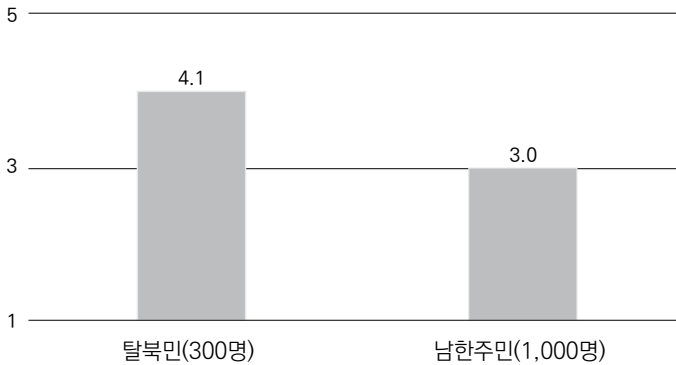
표 II-13 성별, 연령별 통일이 자신의 진정한 소망인지에 대한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전체	성별		연령대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한주민	3.1(.03)	3.1(.05)	3.0(.04)	2.7(.08)	3.0(.07)	3.0(.07)	3.3(.07)	3.3(.06)
탈북민	4.5(.05)	4.5(.08)	4.5(.07)	4.4(.13)	4.3(.15)	4.6(.09)	4.6(.11)	4.7(.13)

출처: 필자 작성

“좌우지간 통일에 관계되는 일을 떠올리면 나의 기분은 편안하다”는 문항에 대해 탈북민은 4.1점의 동의를 보인 반면 남한주민의 평균은 3.0점이었다(〈그림 II-30〉 참조). 통일과 관련된 정서적 경험 역시 탈북민이 남한주민에 비해 긍정적이었다. 남한주민의 경우 남성의 긍정적 정서가 여성의 긍정적 정서보다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긍정적 정서의 강도가 높아졌다(〈표 II-14〉 참조). 하지만 탈북민의 경우 성별, 연령별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II-30 통일에 대한 긍정적 정서



출처: 필자 작성

표 II-14 성별, 연령별 통일에 대한 긍정적 정서의 평균과 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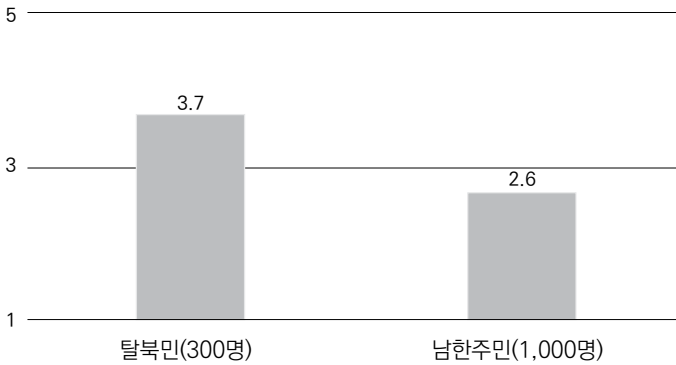
구분	전체	성별		연령대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한주민	3.0(.03)	3.1(.04)	2.9(.04)	2.8(.07)	2.9(.06)	3.1(.07)	3.1(.06)	3.2(.06)
탈북민	4.1(.06)	4.1(.08)	4.0(.09)	4.0(.15)	3.9(.15)	4.1(.10)	4.2(.12)	4.2(.16)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VI
VII

통일에 대한 태도 중 행동적 요소를 측정하기 위해 통일과 관련된 세금 인상에 찬성하는지 물어보았다. 탈북민의 경우 5점 척도 기준으로 3.7점으로 중앙치인 3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반면 남한주민의 경우 2.6점으로 중앙치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그림 II-31〉 참조). 탈북민의 경우 세금 인상에 찬성하는 태도가 우세한 반면 남한주민의 경우 세금인상에 반대하는 태도가 우세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남한과 탈북민 모두 남성의 통일관련 세금 인상에 동의하는 정도가 여성이 동의하는 정도보다 높았다. 남한주민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통일관련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경향이 강해지지만, 탈북민의 경우 연령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표 II-15〉 참조). 탈북민과 남한주민 모두 통일의 행동적 요소, 특히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통일의 필요성, 통일과 관련된 긍정 정서 경험에 비해서 낮은 수준의 동의를 보여준다는 면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림 II-31 통일관련 세금인상 동의에 대한 견해



출처: 필자 작성

표 II-15 성별, 연령별 통일관련 세금인상 동의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전체	성별		연령대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한주민	2.6(.03)	2.7(.05)	2.5(.04)	2.3(.07)	2.6(.07)	2.6(.07)	2.6(.07)	2.7(.06)
탈북민	3.7(.06)	3.9(.09)	3.6(.09)	3.6(.17)	3.6(.16)	3.7(.11)	3.9(.13)	3.9(.18)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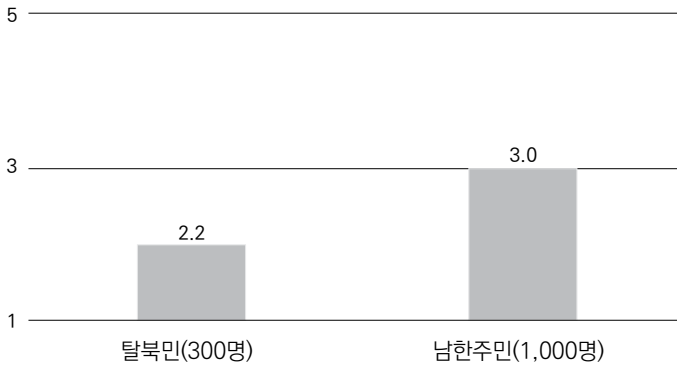
V

VI

VII

통일 이후 상황이 얼마나 부정적인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탈북민의 경우 부정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2.2점)가 우세한 반면 남한주민은 보통(3.0점)으로 응답하였다(〈그림 II-32〉 참조). 두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남한주민의 경우 성차는 관찰되지 않았고 20대가 통일 이후 상황에 대해 가장 부정적이었으며 60대 이상이 가장 긍정적이었다. 탈북민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긍정적이었으며 연령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표 II-16〉 참조).

그림 II-32 통일 이후 상황에 대한 견해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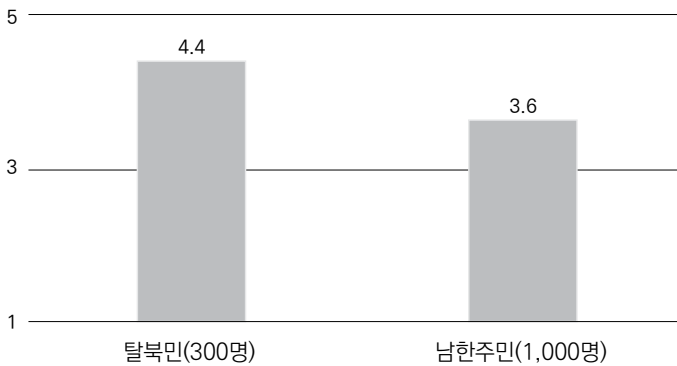
표 II-16 성별, 연령별 통일 이후 부정적 상황발생에 대한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전체	성별		연령대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한주민	3.0(.03)	3.0(.04)	3.0(.04)	3.2(.07)	3.1(.06)	3.0(.06)	3.1(.06)	2.9(.06)
탈북민	2.2(.06)	2.1(.09)	2.4(.09)	2.4(.16)	2.1(.14)	2.1(.11)	2.4(.14)	2.5(.20)

출처: 필자 작성

탈북민의 삶이 북한주민에게 어떻게 보일지, “남한에서 생활하는 탈북민의 삶을 보면, 북한주민들은 통일을 원할 것이다”는 문항을 사용하여 질문하였다. 탈북민(4.4점)의 동의 정도가 남한주민의 동의 정도(3.6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그림 II-33〉 참조). 두 집단 모두에서 성별, 연령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표 II-17〉 참조).

그림 II-33 ▶ 탈북민의 삶이 북한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평가



출처: 필자 작성

표 II-17 ▶ 성별, 연령별 탈북민의 삶이 북한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전체	성별		연령대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한주민	3.6(.03)	3.6(.05)	3.6(.05)	3.6(.08)	3.5(.08)	3.6(.08)	3.6(.08)	3.6(.07)
탈북민	4.4(.06)	4.4(.11)	4.4(.12)	4.2(.18)	4.3(.19)	4.5(.14)	4.5(.19)	4.5(.25)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VI
VII

남북통일에 대한 의지는 탈북민이 남한주민에 비해 높다. 탈북민은 통일의 필요성, 평화적 분단고착에 대한 반대, 통일에 대한 열망과 행동, 통일 이후의 상황에 대한 평가, 자신의 삶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평가 예상 등 모든 문항에서 남한주민에 비해 통일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탈북민의 통일에 대한 높은 의지는 우리 사회의 통일 논의 촉진과 통일 준비 과정에서 탈북민이 유용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남한주민에게 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직접적, 역사적, 즉각적 사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은 탈북민이 왜 통일을 원하는지, 즉 통일의 이유가 남한주민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 문제는 다음 절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통일의지에 대한 남한주민과 탈북민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통일의 필요성'이라는 개념에 분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남한주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통일의지를 가지고 있는 탈북민조차도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평화적 분단고착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중복되고 있으며 중복의 비율 역시 유사하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단일체제 통일과 평화적 분단고착이 동일시되고 있는 것인지, 단일체제 통일을 위한 중간 과정으로 평화적 분단관리를 생각하는 것인지,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사회적 바람직성이 작동한 것인지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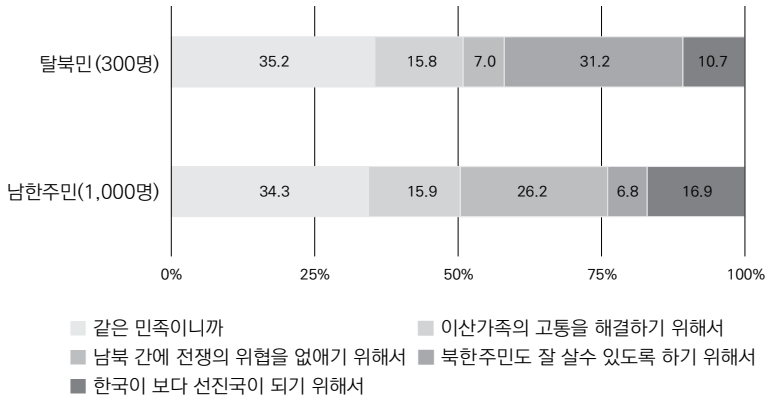
다. 통일의 이유

남한주민의 경우 응답자의 34.3%가, 탈북민의 경우 응답자의 35.2%가 통일의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까’를 선택하였으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그림 II-34〉 참조).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를 선택한 비율 역시 두 집단이 비슷하였다. 즉 통일에 대한 당위적 접근(민족+이산가족)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세부 이유의 비율은 남한주민과 탈북민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반면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는 통일에 대한 도구적 접근⁴⁾(전쟁위협 감소+북한주민 생활 향상+선진국 진입)의 세부 비율은 남한주민과 탈북민 간에 차이가 관찰되었다. 탈북민의 경우, 도구적 접근을 구성하는 이유 중 ‘북한주민의 생활 향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남한주민은 ‘전쟁위협 제거’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탈북민에게 전쟁위협 제거는 최후 순위였으며, 남한주민에게 북한주민 생활 향상은 최후 순위였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성별과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즉 당위적 이유를 제외한 도구적, 현실적 이유에 있어 남한주민과 탈북민의 간극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서 탈북민의 통일논의와 통일준비 과정에서의 역할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만일 탈북민의 통일이유, 즉 북한주민의 생활 향상이 통일의 근거로 제시된다면 남한주민에게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탈북민과 남한주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두 집단의 간극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⁴⁾ 박종철 외,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서울: 통일연구원, 2014), pp. 52~53. 통일에 대한 당위적 접근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남한의 경우 40대(45.4%), 탈북민의 경우 20대(45.4%)였다.

그림 II-34 통일 이유



출처: 필자 작성

표 II-18 성별, 연령별 통일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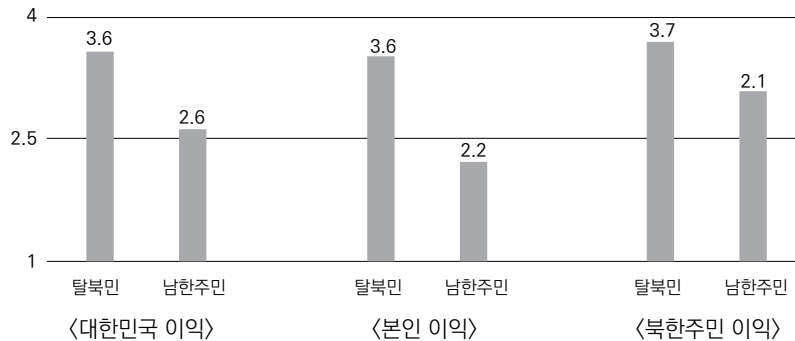
		같은 민족	이산가족 고통해결	전쟁위협 해소	북한주민 생활향상	선진국 진입	
전체	남한	34.3	15.9	26.1	6.8	16.9	
	북한	35.2	15.8	7.0	31.2	10.7	
성별	남성	남한	32.7	16.1	27.1	6.7	17.3
		북한	40.3	12.1	8.1	23.5	16.1
	여성	남한	36.0	15.6	25.1	6.9	16.4
		북한	30.2	19.5	6.0	38.9	5.4
연령대	20대	남한	33.5	15.3	27.3	8.5	15.3
		북한	29.5	15.9	11.4	25.0	18.2
	30대	남한	34.8	16.0	25.1	9.1	15.0
		북한	31.3	23.4	7.8	28.1	9.4
	40대	남한	30.4	15.0	27.5	5.3	21.7
		북한	37.1	16.5	7.2	30.9	8.2
	50대	남한	35.7	15.3	25.0	6.6	17.3
		북한	37.7	8.2	4.9	39.3	9.8
	60대 이상	남한	37.0	17.4	25.7	5.2	14.8
		북한	41.9	9.7	3.2	32.3	12.9

출처: 필자 작성

라. 통일의 편익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차원, 응답자 본인의 차원, 북한주민의 차원에서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질문하였다. 응답은 4점 척도(1점: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다, 4점: 매우 이득이 된다) 상에서 이루어졌다. 모든 차원에서 탈북민이 느끼는 통일의 편익이 남한주민이 느끼는 통일의 편익보다 컸다. 대한민국 수준에서 살펴보면 탈북민의 평균은 3.6점, 남한주민의 평균은 2.6점이었으며 응답자 본인의 차원에서는 탈북민은 3.5점, 남한주민은 2.2점, 마지막으로 북한주민의 차원에서는 탈북민의 평균은 3.7점, 남한주민의 평균은 3.1점이었다(〈그림 II-35〉 참조). 성별, 연령별 분석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은 큰 변화가 없었다(〈표 II-19〉 참조).

그림 II-35 통일의 편익



출처: 필자 작성

- I
- II
- III
- IV
- V
- VI
- VII

주목할 부분은 본인의 이익에 대해 탈북민은 통일이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남한주민의 경우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이다. 탈북민의 평균은 중앙치인 2.5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반면 남한주민의 평균인 2.2점은 중앙치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응답별 분포에서 더욱 확실해 진다(〈그림 II-36〉 참조). 탈북민의 경우 61.2%가 매우 이익이 된다, 30.1%가 다소 이익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남한주민의 경우 70.6%(전혀 이익이 되지 않음: 13.1% + 다소 이익이 되지 않음: 57.5%)가 통일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통일이 북한주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부분에서는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탈북민과 남한주민 모두 동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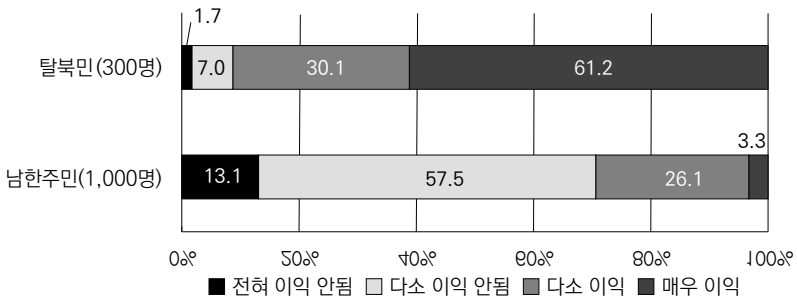
통일이 자신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지만 북한주민에게는 이익이 된다는 국민의 의식이 통일추진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부정적으로 작용할지 예단하기는 힘들다. 비록 자신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으며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경제 상황에 대한 개인과 사회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개인의 가계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통일을 지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민족담론을 제외한 통일담론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 편익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새로운 통일담론의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국가와 개인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통일담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 II-19 성별, 연령별 통일 편익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전체	성별		연령대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대한민국	남한주민	2.6(.02)	2.7(.04)	2.6(.03)	2.5(.06)	2.6(.05)	2.7(.05)	2.7(.05)	2.7(.05)
	탈북민	3.6(.04)	3.8(.04)	3.4(.06)	3.5(.09)	3.5(.09)	3.7(.06)	3.6(.10)	3.8(.09)
본인	남한주민	2.2(.02)	2.3(.03)	2.1(.03)	2.1(.05)	2.2(.05)	2.3(.05)	2.2(.05)	2.2(.04)
	탈북민	3.5(.04)	3.6(.05)	3.4(.06)	3.5(.11)	3.4(.10)	3.5(.06)	3.6(.09)	3.5(.11)
북한주민	남한주민	3.1(.02)	3.1(.03)	3.1(.03)	3.1(.06)	3.1(.05)	3.1(.05)	3.2(.05)	3.1(.05)
	탈북민	3.7(.03)	3.8(.04)	3.7(.05)	3.7(.09)	3.6(.09)	3.8(.05)	3.8(.06)	3.9(.06)

출처: 필자 작성

그림 II-36 통일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응답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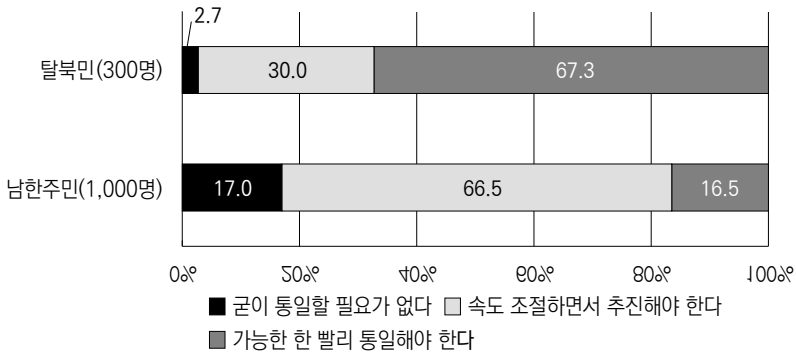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 I
- II
- III
- IV
- V
- VI
- VII

마. 통일의 시기와 방식

탈북민의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통일하자는 의견(67.3%)이 가장 우세하였으며 남한주민의 경우 속도조절론(66.5%)이 가장 우세하였다(〈그림 II-37〉 참조). 남한주민의 경우 성별, 연령별 차이가 관찰되었다. 남성, 여성 모두 속도조절론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남성의 경우 빠른 통일을 선호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통일이 필요없다는 응답이 우세하였다. 그리고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통일이 필요없다는 응답이 증가하였다. 탈북민의 경우 ‘빠른 통일’이 우세한 가운데 속도조절론이 그 뒤를 따르는 경향이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관찰되었다(〈표 II-20〉 참조).

그림 II-37 통일 시기



출처: 필자 작성

표 II-20 > 성별, 연령별 통일의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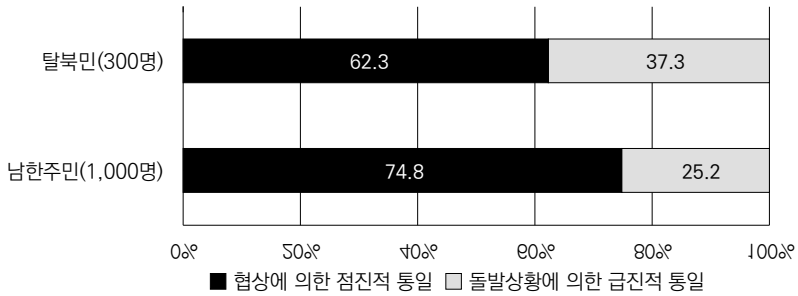
구분		통일 필요없음	속도조절 추진	빠른 통일	
전체	남한	17.0	66.5	16.5	
	북한	2.7	30.0	67.3	
성별	남성	남한	14.6	66.3	19.1
		북한	3.3	31.3	65.3
	여성	남한	19.3	66.7	14.0
		북한	2.0	28.7	69.3
연령대	20대	남한	29.2	59.6	11.2
		북한	2.3	36.4	61.4
	30대	남한	17.1	67.4	15.5
		북한	6.3	40.6	53.1
	40대	남한	18.8	64.7	16.4
		북한	0.0	25.5	74.5
	50대	남한	11.6	70.2	18.2
		북한	3.3	27.9	68.9
	60대 이상	남한	10.4	69.6	20.0
		북한	3.1	18.8	78.1

출처: 필자 작성

통일의 방식은 탈북민과 남한주민 모두 점진적 통일을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급진적 통일을 예상한 비중은 탈북민이 더 컸다. 남한주민의 성별, 연령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탈북민의 경우 성별, 연령별 차이가 관찰되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급진적 통일을 예상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30대의 경우 급진적 통일을 예상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았다.

- I
- II
- III
- IV
- V
- VI
- VII

그림 II-38 통일 방식



출처: 필자 작성

표 II-21 성별, 연령별 통일 방식

구분		점진적 통일	급진적 통일	
전체	남한	74.8	25.2	
	북한	62.3	37.7	
성별	남성	남한	74.3	25.7
		북한	56.1	43.9
	여성	남한	75.3	24.7
		북한	68.3	31.7
연령대	20대	남한	71.8	28.2
		북한	61.0	39.0
	30대	남한	74.2	25.8
		북한	74.2	25.8
	40대	남한	76.3	23.7
		북한	56.2	43.8
	50대	남한	75.3	24.7
		북한	60.0	40.0
60대 이상	남한	76.0	24.0	
	북한	60.7	39.3	

출처: 필자 작성

바. 통일의 여건

통일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1순위와 2순위로 응답하였지만 중요도가 반영된 1순위만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탈북민의 경우 북한의 민주화(26.8%), 북한의 경제건설(25.2%), 평화적 국가관계(24.8%)의 요인이 전체 76.8%를 차지한 반면 남한주민의 경우 북한의 자생적 발전(30.3%), 평화적 국가관계(27.8%), 북한 민주화(14.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연령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남한주민은 통일을 위한 여건으로 북한의 자생적 발전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지만 탈북민은 3.0%만이 북한의 자생적 발전을 선택하였다. 두 가지 정도의 시사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탈북민은 북한의 자생적, 즉 외부의 도움이 없는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남한주민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달가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즉, 외부의 도움, 남한의 도움이 없는 북한의 발전을 원한다는 것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남한주민의 경우 미중합의를 선택한 비율이 통일준비 역량 강화를 선택한 비율보다 높지만 탈북민의 경우 통일준비 역량을 선택한 비율이 미중합의를 선택한 비율보다 높았다. 남한주민의 경우 남북문제가 남북 당사자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탈북민의 경우 그들의 시각에서 남한의 통일준비가 부족하다는 인식의 단면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I

II

III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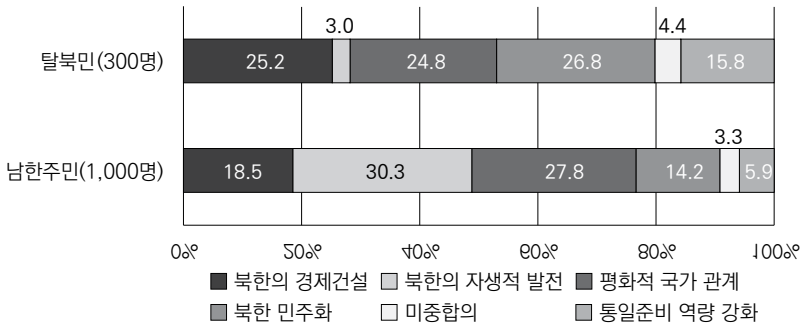
V

VI

VII

통일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사건이 되겠지만 통일이라는 사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이 필요하다.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은 통일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남한주민과 탈북민이 생각하는 통일 우호 환경에는 뚜렷한 차이가 관찰된다. 남한주민의 경우 북한의 자생적 발전을, 탈북민의 경우 북한의 민주화와 경제건설을 꼽고 있다. 이러한 태도의 차이는 남한이 북한에 대해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 차이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통일준비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그림 II-39 통일을 위한 여건



출처: 필자 작성

표 II-22 >> 성별, 연령별 통일을 위한 여건

(단위: %)

		북한경제 건설	북한 자생적 발전	평화적 국가관계	북한 민주화	미중합의	통일여량 강화	
전체	남한	18.5	30.3	27.8	14.2	3.3	5.9	
	북한	25.2	3.0	24.8	26.8	4.4	15.8	
성별	남성	남한	18.1	29.2	29.2	14.2	2.8	6.5
		북한	23.5	2.7	19.5	32.2	4.0	18.1
	여성	남한	18.9	31.4	26.4	14.2	3.7	5.3
		북한	26.8	3.4	30.2	21.5	4.7	13.4
연령대	20대	남한	17.4	30.3	24.7	20.8	1.7	5.1
		북한	11.4	2.3	45.5	29.5	4.5	6.8
	30대	남한	12.8	32.6	29.4	15.5	2.7	7.0
		북한	25.4	7.9	22.2	23.8	4.8	15.9
	40대	남한	18.8	33.3	28.0	11.1	3.4	5.3
		북한	25.5	2.0	21.4	31.6	3.1	16.3
	50대	남한	25.8	26.8	28.3	8.6	5.1	5.6
		북한	31.7	0.0	23.3	21.7	5.0	18.3
	60대 이상	남한	17.4	28.7	28.3	15.7	3.5	6.5
		북한	31.3	3.1	15.6	21.9	6.3	21.9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VI

VII

Ⅲ. 기초통계(2):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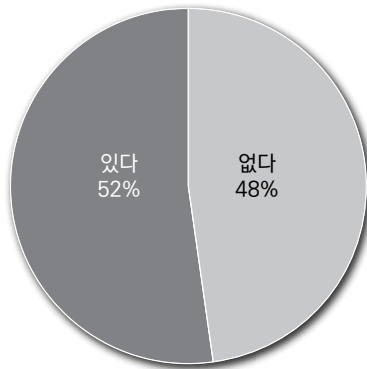


1. 탈북민의 민주주의 제도 수용

탈북민의 정당일체감을 형성하는 요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정당일체감의 분포 양상을 살펴본다. 어린 시절부터의 정치 사회화(political socialization) 과정과 더불어 정치지식과 정책태도는 개인의 정당일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탈북민의 정당일체감을 형성하는 요인으로서 정치지식과 정책태도의 특징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20대 대선에서의 탈북민 투표참여 현황을 살펴본다.

가. 탈북민의 정당일체감

그림 III-1 ▶ 정당일체감 분포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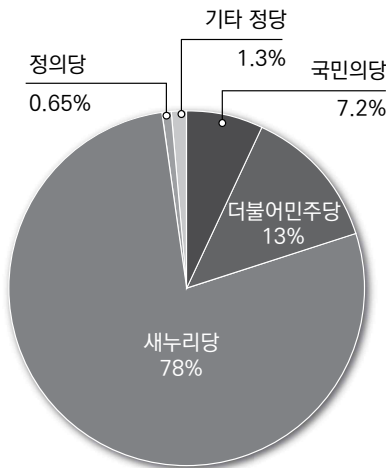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약 47.0%, 「2014년 한국선거학회의」의 조사에 따르면 약 46.0%의 유권자가 정당일체감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최근 다수의 조사 역시 약 50.0% 미만의 유권자가

I
II
III
IV
V
VI
VII

정당일체감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다고 대답한 탈북민은 총 응답자 299명 중 1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52.0%에 해당한다. 반면 정당일체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145명인 48.0%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탈북민의 경우는 남한의 전체 유권자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로 정당일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당일체감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한 154명의 응답자 중 지지하는 정당을 밝힌 153명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탈북민이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19명(78.0%)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I-2〉 참조). 나머지 응답자 34명 중 20명(13%)은 더불어민주당, 11명(7.2%)은 국민의당, 2명(1.3%)은 기타 정당 그리고 나머지 1명(0.65%)은 정의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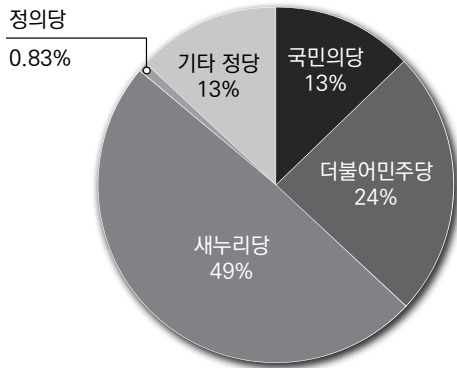
그림 III-2 지지정당별 분포



출처: 필자 작성

정당일체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145명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편향적(leaning) 선호를 조사하였다. <그림 III-3>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정당 편향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120명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다. 구체적으로 “그렇다고 해도 조금이라도 더 선호하는 정당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59명(49.0%)이 새누리당을 선호한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정당일체감을 가진 사람 중 80.0%에 가까운 응답자가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한편 24.0%에 해당하는 29명이 더불어민주당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정의당을 제외한 기타 정당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3.0%(16명)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본 문항에 무응답자 25명과 더불어 사실상 주요 정당 중에 선호하는 정당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III-3 정당 편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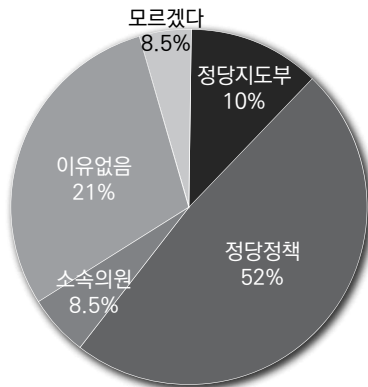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VI
VII

정당일체감(정당편향성 있는 응답자 제외)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 154명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이유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그 정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문항에 대답한 153명을 살펴보면 79명, 즉 52.0%가 그 정당의 정책을 지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I-4〉 참조). 즉 과반수 이상의 탈북민이 정책을 바탕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지정당의 지도부나 의원의 긍정적 평가가 정당지지로 이어진 비율은 각각 10.0%(16명)와 8.5%(13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21.0%(3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유를 ‘모르겠다’로 대답한 응답자도 8.5%(13명)로 집계되었다. 즉 정당일체감이 있는 탈북민 중 자신이 왜 특정 정당에 심리적 애착을 느끼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이 약 30%에 달한다.

그림 III-4 ▶ 정당지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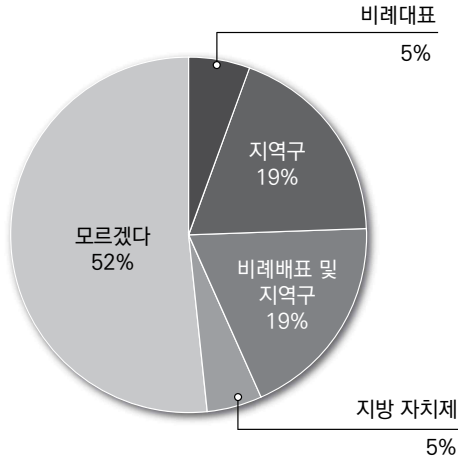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나. 탈북민의 정치지식

본 조사 자료는 총 6개의 문항을 통해 탈북민의 정치지식 수준을 측정하였다. 조사에 포함된 문항은 전통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정치지식을 측정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조직과 인물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정치지식을 묻는 모든 문항에 걸쳐 '모르겠다'라는 응답과 무응답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입법부와 관련한 탈북민의 지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현재 남한의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묻는 질문하였다.

그림 III-5 >> 정치지식: 국회의원 선출방식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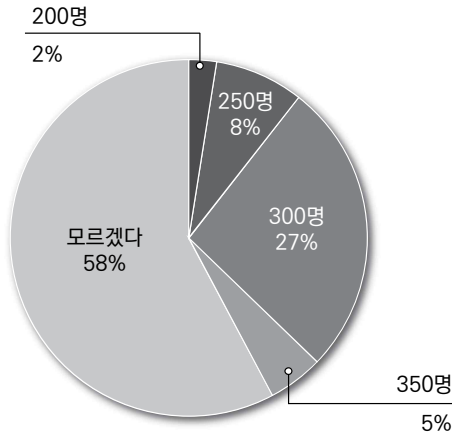
〈그림 III-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한의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묻는 문항에 300명의 응답자 중 156명에 해당하는 52%의 응답자가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반면 300명 중 정답(비례대표 및 지역구)을 말한 사람은 총 56명(19.0%)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즉 오답을 한 비율은

I
II
III
IV
V
VI
VII

전체 응답자 300명의 29.0%인 88명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이 문항에 답을 제시한 144명만을 대상으로 정답자와 오답자 비율을 살펴보면 정답자 비율은 39.0%(56명)로 오답 비율 61.0%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입법부와 관련한 정치지식을 측정하는 또 다른 질문으로 남한의 국회의원 총수를 묻는 문항에 정답을 제시한 비율은 총 응답자 300명 중 80명 즉 27.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의원 선출방식에 대한 질문의 정답자보다 약 8.0%p정도 높은 수치이다. 한편 응답자의 15.0%는 오답을, 58.0%는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였다. 이 문항에 대답을 한 127명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63.0%(80명)가 정답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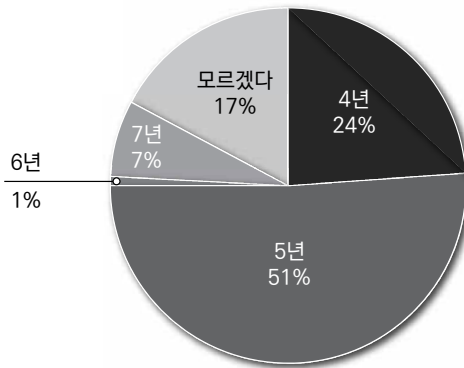
그림 III-6 정치지식: 국회의원 수



출처: 필자 작성

탈북민의 행정부에 대한 지식은 행정부 수반과 주요 정부부처 수장에 대한 질문으로 측정되었다. 먼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임기를 질문하였다. <그림 III-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 질문에 대답한 전체 응답자 30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51%에 해당하는 154명의 응답자가 정답을 표시하였다. 이는 이번 조사에서 정치지식과 관련한 문항 중 가장 높은 정답률이다. 또한 대통령의 임기를 묻는 문항에 대해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7.0%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앞선 국회의원 선출 방식에 대한 문항에 대해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58%와 비교하면 41%p 정도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이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가시성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II-7 > 정치지식: 대통령 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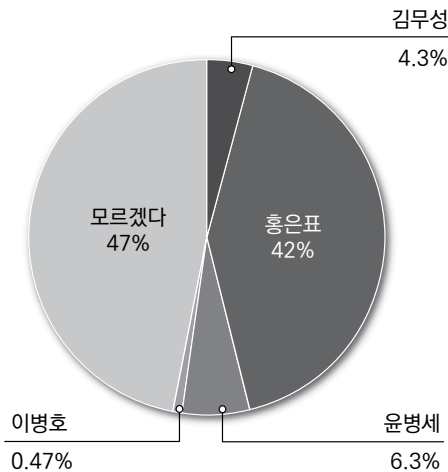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 I
- II
- III
- IV
- V
- VI
- VII

탈북민의 행정부 관련 정치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또 다른 문항은 북한과 관련하여 비교적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일부 장관의 이름을 물었다. “통일부 장관의 이름을 알고 있느냐”는 문항에 응답자 300명의 42.0%에 해당하는 126명이 정답을 제시하였다. 반면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7.0%(140명)로 조사되어 정답자 비율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답을 제시한 응답자 약 11.0%(34명)을 포함하면 58.0%(174명)의 탈북민이 현직 통일부 장관의 이름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47.0%라는 정답률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시민들의 정치지식 문항에서 정답을 말하는 비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통령 임기를 묻는 문항의 결과와 더불어 상당수의 탈북민이 행정부에 대한 정치지식이 높은 편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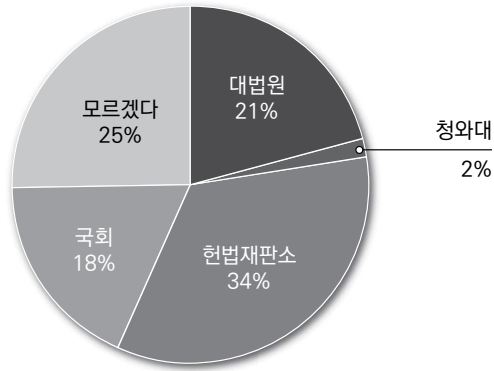
그림 Ⅲ-8 >> 정치지식: 통일부 장관 이름



출처: 필자 작성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비교적 낮은 사법기관에 대한 질문에 탈북민 응답자의 34.0%가 정답을 제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남한의 특정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곳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라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 300명의 34.0%에 해당하는 104명이 정답인 ‘헌법재판소’를 제시하였다. 한편 41%(121명)가 오답을 제시하였고, 25.0%(75명)의 응답자가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III-9 정치지식: 사법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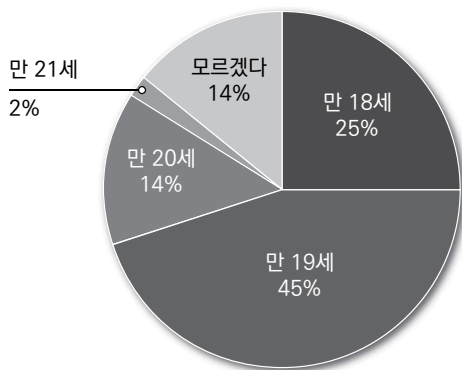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 I
- II
- III
- IV
- V
- VI
- VII

남한의 선거연령에 대한 질문에는 상당히 낮은 비율의 응답자가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문항 전체 응답자 298명 중 14.0%(43명)의 응답자가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정치지식을 묻는 6개의 문항 중 가장 낮은 비율이다. 한편 전체 응답자 298명의 45%인 133명이 선택 문항 중 정답인 ‘만 19세’를 골랐다. 이는 이 문항에 답을 제시한 응답자 중 ‘모르겠다’라고 답한 사람을 제외한 255명의 52.0%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255명의 48.0%에 해당하는 122명이 오답을 제시하였다.

그림 III-10 정치지식: 투표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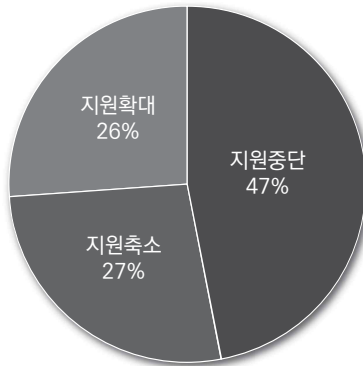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요약하면 탈북민은 행정부에 대한 지식이 비교적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입법부에 대한 지식은 다른 국가기관과 조직에 대한 지식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입법부와 관련한 정치지식을 묻는 문항들에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입법부 관련 문항들의 경우 정답을 역시 다른 문항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탈북민의 대북정책 및 탈북민 정책에 대한 태도

〈그림 Ⅲ-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탈북민의 상당수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인도적 지원이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이 문항 응답자 295명 가운데 과반에 가까운 47.0%(138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27.0%(79명)의 응답자도 인도적 지원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인도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78명인 26.0%로 조사되었다.

그림 Ⅲ-11 ▶ 인도적 지원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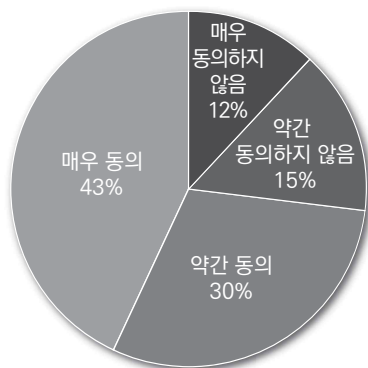
V

VI

VII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림 III-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강경한 기조에 대한 지지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지금보다 더욱 강경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 295명의 43.0%(128명)가 ‘매우 동의한다’, 30.0%(88명)가 ‘약간 동의한다’라고 답하였다. 요약하면 응답자의 70.0% 이상이 강경한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경한 대북정책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12.0%)와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15.0%)라고 대답한 사람은 응답자의 30.0%(79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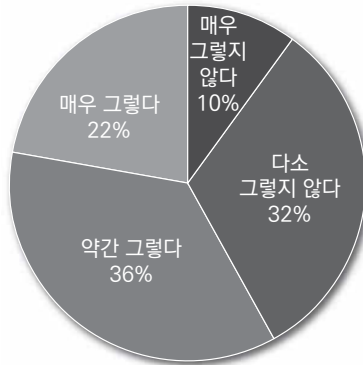
그림 III-12 대북정책 기조



출처: 필자 작성

한편 탈북민들이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남한정착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의 남한정착을 위한 현재의 각종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291명의 60.0%에 가까운 170명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구체적으로 105명(36.0%)이 ‘약간 그렇다’, 65명(22.0%)이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하였다. 한편 ‘매우 그렇지 않다’와 ‘다소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사람이 각각 29명(10.0%)과 92명(32.0%)로 조사되었다.

그림 III-13 ▶ 탈북민 지원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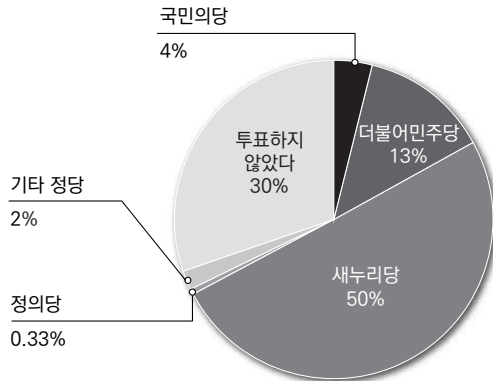
VII

라. 탈북민의 정치참여

본 연구를 위한 조사 자료는 탈북민들의 투표참여 행태를 조사하기 위해 두 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 문항은 탈북민들의 지역구 후보 선택에 대한 내용이고, 다른 한 문항은 비례대표 후보 선택에 대한 것이다.

투표참여와 관련한 문항에 응답한 296명 중 70.0%(206명)가 지난 20대 국회의원 지역구선거에서 투표했다고 응답하였다. 즉 30.0%(90명)만이 투표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는 20대 총선 평균 투표율 58.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론조사에서 투표율이 높이 보고되는 과대응답(over-reporting) 현상이 탈북민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투표에 참여한 206명을 대상으로 탈북민이 선택한 후보를 정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50%(14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는 38명인 약 1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의당 후보에 투표한 탈북민은 13명(4%)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사람의 3분의 1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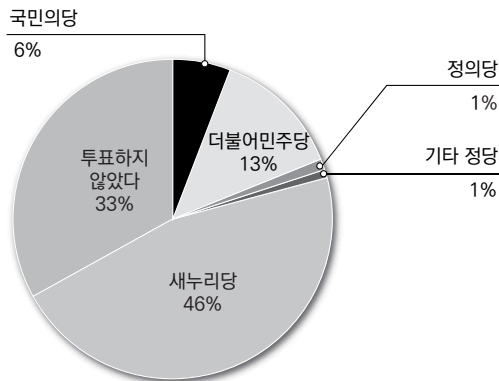
그림 III-14 >> 투표참여: 지역구후보 선택



출처 : 필자 작성

한편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에는 전체 응답자 296명 중 199명 즉 67.0%가 투표에 참여하였다. 즉 비례대표 선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97명으로 33.0%이다. 이는 지역구 후보를 위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 30.0%보다 3.0%p가 높은 수치이다. 비례대표 선출에서 탈북민들이 선택한 정당을 살펴보면 지역구 후보 선택에서와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을 선택한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투표한 사람의 46%인 135명이 새누리당을 선택하였다. 한편 투표한 199명의 13%인 38명이 더불어민주당을, 19명(6%)이 국민의당을 선택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비례대표 투표에서 지역구 후보 투표에서보다 국민의당 후보를 선택한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즉 비례대표 투표에서 국민의당을 선택한 탈북민이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한 사람의 절반 수준까지 높아진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 전체 투표율에서는 국민의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26.7%, 더불어민주당이 25.3%를 획득하였다. 이러한 국민 전체 투표율 양상과 비교하면 탈북민의 국민의당 지지가 낮지만, 지역구보다 비례대표 선출에서 국민의당이 지지가 높아진 현상은 유사하게 관찰되고 있다.

그림 III-15 비례대표후보 선택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VI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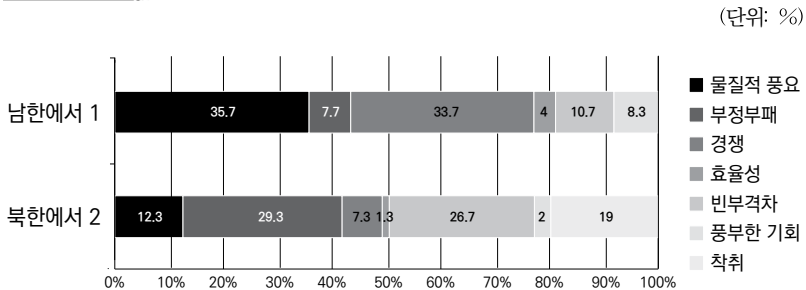
2. 자본주의 제도 인식과 한국 불평등 인식

가. 자본주의 제도 인식

(1) 자본주의 이미지

탈북민 응답자들이 남북한에 있을 당시 자본주의에 대해 가졌던 이미지 1, 2는 아래 <그림 III-16>과 같다. 질문은 “선생님은 ‘자본주의’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라고 묻고, 자본주의 이미지 보기로 제시된 물질적 풍요, 부정부패, 경쟁, 효율성, 빈부격차, 풍부한 기회, 착취의 긍정적/부정적인 7가지 이미지가 제시되었다. 응답자들에게는 북한에 있을 당시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이미지와 두 번째로 떠오르는 것, 남한에 온 이후 당시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이미지와 두 번째로 떠오르는 것에 답하도록 하였다. 결과는 아래 <표 III-1>과 같다.

그림 III-16 남북한에서 생각한 자본주의 이미지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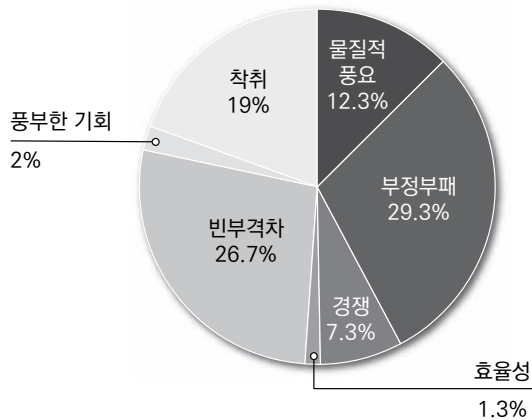
표 III-1 ▶ 남북한에서 생각한 자본주의 이미지 1

	사례수	물질적 풍요	부정 부패	경쟁	효율성	빈부 격차	풍부한 기회	착취	모르겠다	계
북한에서 1	300	12.3	29.3	7.3	1.3	26.7	2.0	19.0	2.0	100
남한에서 1	300	35.7	7.7	33.7	4.0	10.7	8.3	-	-	100

출처: 필자 작성

북한에 있을 당시 탈북민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이미지로 먼저 ‘부정부패’와 ‘빈부격차’를 가장 먼저 떠올렸다. 탈북민의 29.3%는 ‘부정부패’를 자본주의 이미지라고 응답하였다. 빈부격차가 26.7%로 2위였고, 착취는 19.0%로 그 다음을 이었다. 이처럼 북한에 있을 당시 탈북민의 자본주의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물질적 풍요, 경쟁, 효율성, 풍부한 기회와 같은 긍정적 이미지는 12.3%, 7.3%, 1.3%, 2.0%에 불과했다.

그림 III-17 ▶ 북한에서 떠올린 자본주의 이미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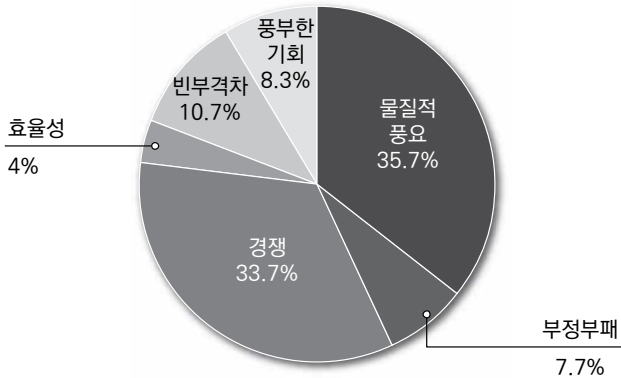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 I
- II
- III
- IV
- V
- VI
- VII

그러나 한국에 와서 자본주의를 경험한 이후 탈북민 응답자들은 아래 <그림 III-18> 같이 '경쟁'과 '물질적 풍요'를 떠올리게 되었다. 남한에 온 이후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떠올린 자본주의 이미지는 물질적 풍요가 35.7%이고, 경쟁이 33.7% 였으며, 부정적인 이미지인 빈부격차는 10.7%, 부정부패는 7.7%로 감소하였다.

그림 III-18 남한에 온 이후 떠오른 자본주의 이미지 1



출처: 필자 작성

(2) 보상과 경쟁

탈북민 응답자들에게 보상과 경쟁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질문은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첫째, 사람들에게 성과/필요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문 6-3). 둘째, 기업 최고경영자들에게는 최고의/노동자들과 동등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문 6-4). 셋째, 경쟁은 사람들과 세상을 살기 좋은/살기 어려운 세상으로 만든다(문 6-5)이다. 앞의 두 가지 질문은 KGSS 문항에서 가져온 것이며, 세 번째는 자체로 작성한 것이다. 이 질문들은 자본주의 제도의 기본 원리인 보상이나

경쟁에 대해 사회주의 국가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은 탈북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위해 제시되었다.

표 III-2 ▶ 보상과 경쟁

	사례수 (명)	긍정	보통이다	부정적	차이	평균
보상의 원칙	300	71.9	10.4	17.7	54.2	3.36
최고경영자 보상	300	36.7	22.7	40.7	-4	5.66
경쟁의 효과	300	74.0	11.3	14.7	59.3	3.32

* 1~4: 일의 성과에 따라 보상, 5: 중립, 6~10: 사람들의 필요에 따른 보상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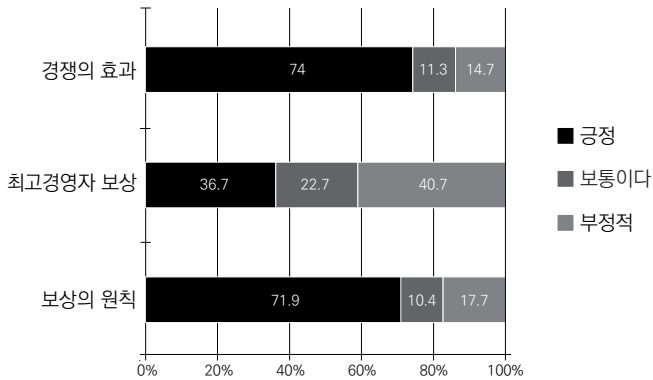
조사결과는 엇갈린다. 우선 보상의 원칙에서 탈북민 응답자들은 ‘사람들의 필요’가 아니라 ‘일의 성과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대해 압도적인 찬성을 표하였다(71.9%). 이는 성과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빚나가는 결과이다.

그러나, 다음 문항인 ‘최고 경영자에 대한 보상’에 들어가면, 달라진다. 탈북민 응답자들의 40.7%는 최고경영자에게도 노동자와 동등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이는 성과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자본주의 원칙에 찬성하면서도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평등주의 정서가 남아 경영자에게 노동자보다 많은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현실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워하며 경제적 평등주의 지향성이 두드러진다.

본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 온 이후 경쟁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통념과는 달리 본 조사에서는 74.0%의 응답자들은 경쟁이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점이다.

I
II
III
IV
V
VI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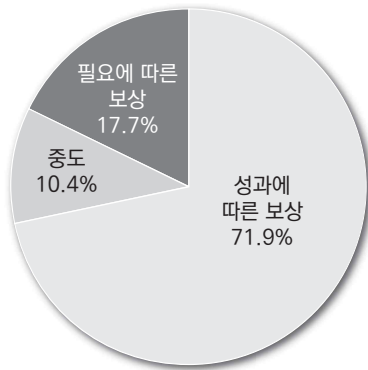
그림 Ⅲ-19 보상과 경쟁



출처: 필자 작성

먼저 보상이 일의 성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 혹은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물었다(문항 6-3).

그림 Ⅲ-20 노동보상의 기준: 성과냐 필요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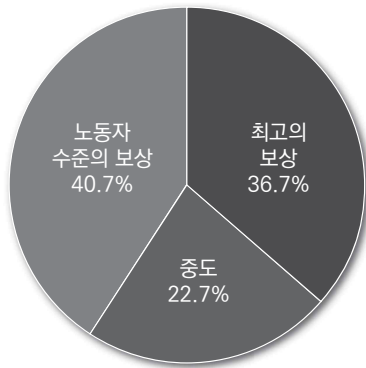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이 질문은 양극을 지닌 10점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1~10점 척도에서 1~4점은 '일이 성과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5~6점은 '중립'을, 7~10점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노동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쪽을 지지한다. 탈북민 응답자들의 평균 점수는 3.3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탈북민 응답자들이 "일의 성과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탈북민 응답자들에게 "기업 최고경영자들에게 어떤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10점 만점의 양극척도로 물어본 결과 평균 5.66점/10점으로서 대체로 중립적이지만, 노동자와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40.7%는 최고경영자에게 노동자와 동등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22.7%는 중도이지만 36.7%는 최고의 수준을 경영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노동자와 동등한 수준의 보상을 최고경영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소 많다.

그림 III-21 경제적 평등: 최고경영자에 대한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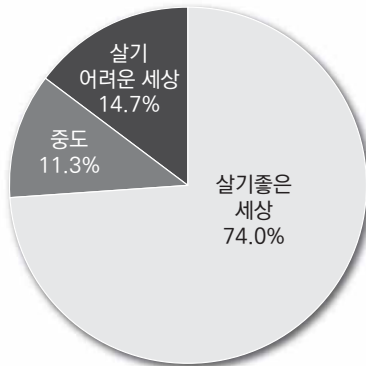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VI
VII

탈북민 응답자들에게 “경쟁은 사람들과 세상을 효율적으로(일하게 해/ 이기적으로 만들어), (살기 좋은/살기 어려운) 세상으로 만든다”는 대립적 주장에 대한 의견을 10점 만점의 양극적으로 물어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평균 3.32점/10점으로서 경쟁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주장을 지지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74.0%는 경쟁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응답했으며, 11.3%는 중도였으며, 14.7%만이 경쟁은 사람들을 이기적으로 만들어 결과적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을 만든다는 주장에 동의하였다. 이것은 탈북민이 경쟁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통념과 다른 결과로서 주목된다.

그림 Ⅲ-22 >> 경쟁에 대한 태도



출처: 필자 작성

(3) 소득 결정요인: 능력과 노력

그 외에도 문항 7-1, 문항 7-2에서 탈북민 응답자들에게 소득 결정 시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평균 1.89점으로 소득 결정시 일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 소득을 결정하는데 있어 노력 역시 1.86점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즉 탈북민은 소득이 결정되는 데 있어 능력이나 노력 모두가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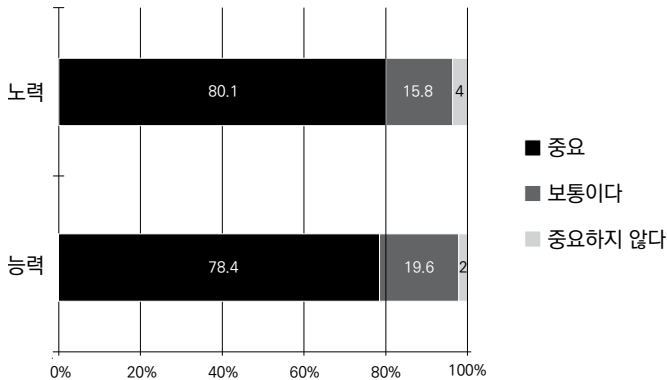
표 III-3 소득 결정요인

구분	사례수 (명)	중요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차이	평균
능력	300	78.4	19.6	2.0	76.4	1.89
노력	300	80.1	15.8	4.0	76.1	1.86

출처: 필자 작성

그림 III-23 소득 결정요인: 능력과 노력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 I
- II
- III
- IV
- V
- VI
- VII

‘소득이 결정되는데 있어서 능력이 중요하다’는 탈북민 응답자는 78.4%, ‘노력이 중요하다’는 탈북민 응답자 수는 80.1%였으며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2.0%,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자 수는 4.0%에 머물렀다. 이처럼 탈북민 응답자들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이 소득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4)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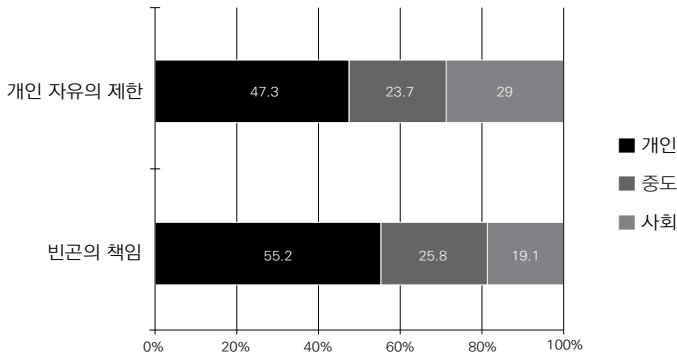
탈북민들이 빈곤 책임의 소재나 개인 자유의 제한에 관해 어떤 의견을 갖는지 알아보았다. 탈북민 응답자들의 평균점수는 4.2점/10점로서 개인주의에 대한 선호를 보였다.

표 III-4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구분	사례수 (명)	개인	중도	사회	차이	평균
빈곤의 책임	300	55.2	25.8	19.1	36.1	4.2
개인 자유의 제한	300	47.3	23.7	29.0	18.3	6.0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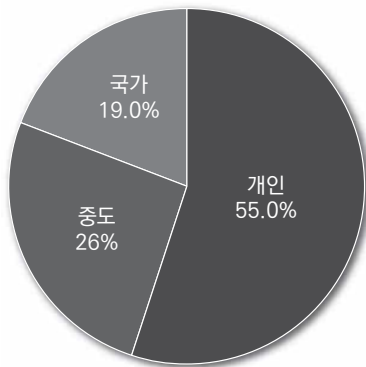
그림 III-24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빈곤 원인과 공익을 위한 개인자유 제한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누군가 생계의 어려움이 있다면 개인적인 노력이나 능력의 문제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면, 빈곤의 책임분항에서는 빈곤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의견이 55.2%이다.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나 행복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47.3%로서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에 대한 강한 선호를 보였는데, 집단주의 선호 의견과는 각 36.1%, 18.3%의 차이를 보였다. 정치사회적 제도로 인한 문제인가에 관해 탈북민에게 의견을 물어본 결과, 예상 외로 탈북민 응답자들은 평균점수 4.2점/10점으로 빈곤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고 보았다.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 55.0%,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 19.0%, 중간이 26%로서 생계에 대한 책임은 주로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그림 III-25 생계의 책임: 개인 vs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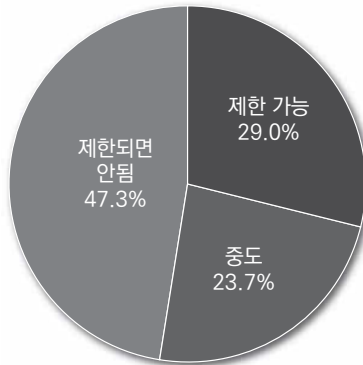


* 1~4: 개인책임, 5~6: 중도, 7~10: 국가 책임
출처: 필자 작성

탈북민에게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나 행복이 제한될 수 있는지 제한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물어보았다.

I
II
III
IV
V
VI
VII

그림 III-26 > 공공이익을 위해 개인자유를 제한: 개인 vs 사회



* 1~4: 제한될 수 있다, 5~6: 중도, 7~10: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출처: 필자 작성

응답자들의 평균 점수는 6점/10점 만점으로 응답자들은 개인의 자유나 행복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쪽에 기울어져 있어 탈북민들은 집단주의 정신 혹은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것이라는 기존의 통념과 다른 태도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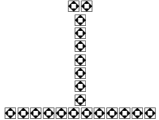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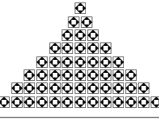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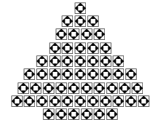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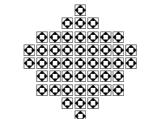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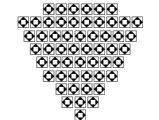
(5) 계층구조

전 세계적으로 1990년대 이후 불어닥친 불평등의 심화는 남북한은 물론 동아시아를 비롯한 각국에서 심화되어가고 있다. 이는 남북한도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많은 식량난민들이 발생하였다. 탈북민은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한국사회 한 가운데로 유입되었다. 그렇다면, 이들 탈북민 집단은 남북한사회의 계층구조를 어떻게 평가하며 앞으로 통일 이후에는 어떤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을까? 본 조사에서는 「2009년도 세계불평등 조사」에서 사용된 다섯 가지 유형의 사회유형을 제시한 이후에 탈북민에게 남북한 사회

유형 및 통일한국의 사회유형이 어떤 유형에 속할 것으로 전망하는지 물어보았다.

먼저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사회유형이 제시되었다. 즉, 첫 번째 유형은 소수의 부자와 많은 가난한 사람이 있고 중간층은 거의 없는 기동형 사회이다. 두 번째 유형은 부자가 극소수인 피라미드형 사회형이다. 셋째 유형은 가난한 사람이 중간층보다 적고 부자가 극소수인 탑형 사회이다. 넷째 유형은 중간층이 대다수인 다이아몬드형 사회이다. 다섯째 유형은 부자가 많고 갈수록 인구가 줄면서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가 되는 역삼각형 사회유형이다. 다섯 가지 사회유형의 그림은 <그림 III-27>과 같다.

그림 III-27 다섯 가지 사회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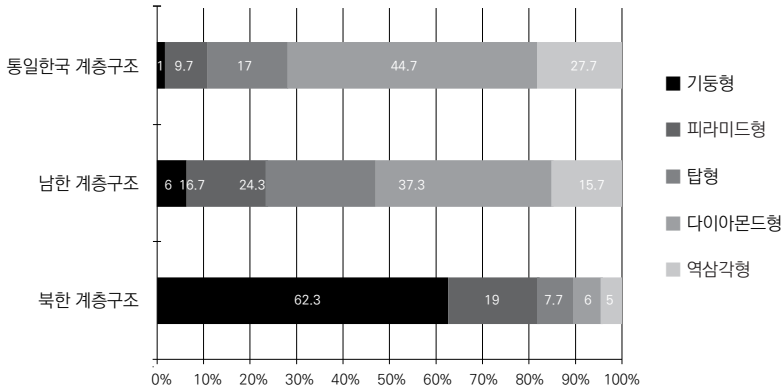
A		소수의 부자, 많은 가난한 사람이 있고 중간층은 없는 사회	기동형 사회
B		부자가 극소수인 사회	피라미드형 사회
C		가난한 사람이 중간층보다 적고, 부자가 극소수인 사회	탑형 사회
D		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	다이아몬드형 사회
E		부자가 많고 하층으로 갈수록 인구가 줄어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	역삼각형 사회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VI
VII

그림 III-28 >> 북한, 남한, 통일한국의 계층구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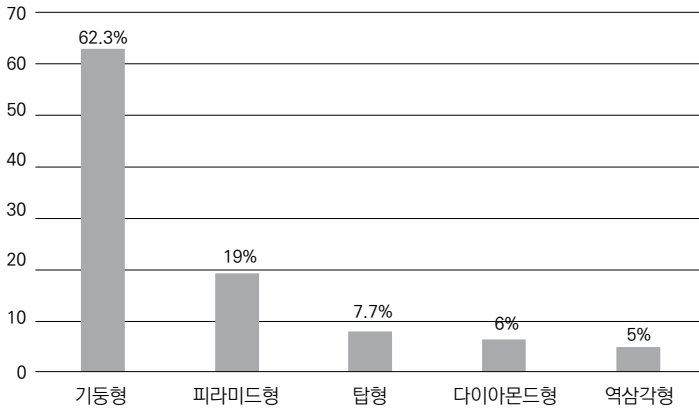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탈북민 응답자들의 62.3%는 소수의 부자와 중간층은 거의 없고 가난한 사람이 대다수인 A형 ‘기동형 사회’를 북한사회와 가장 가깝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19%는 가난한 사람들이 중간층보다 많고 부자는 극소수인 B형 ‘피라미드형 사회’를 북한사회와 가깝다고 응답하여, 대체로 부자는 극소수이며 가난한 사람들이 대다수인 사회유형을 현재 북한사회와 가깝다고 인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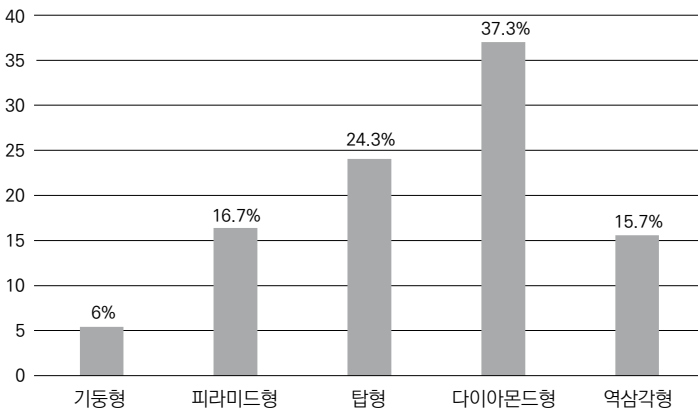
그 다음으로 탈북민에게 남한사회를 어떤 유형의 사회로 인식하는지 물어보았다. 탈북민 응답자들의 37.3%는 남한사회를 중산층 중심의 사회 유형으로 상대적으로 바람직한 유형인 D유형 다이아몬드형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24.3%는 남한을 가난한 사람이 중간층보다 적고 부자가 극소수인 C형 탑형사회라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이 남한사회를 중산층 중심의 사회로 인식하고 있었다(〈그림 III-30〉 참조). 이 같은 응답경향을 살펴볼 때 탈북민은 북한사회를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로 인식하는 반면, 남한사회 유형은 중산층 중심의 바람직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III-29 ▶ 탈북민이 인지하는 북한사회 유형



출처: 필자 작성

그림 III-30 ▶ 탈북민이 인지하는 남한사회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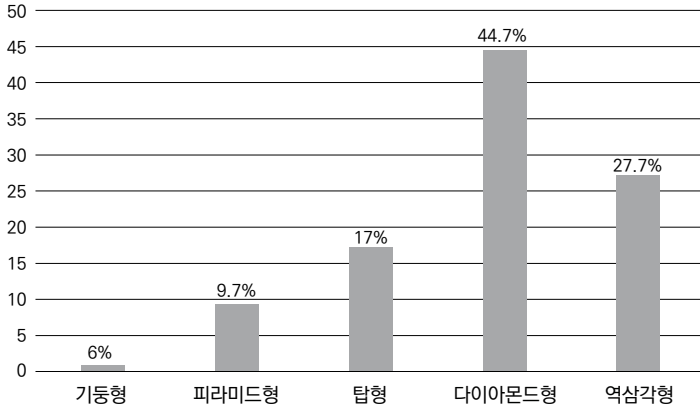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 I
- II
- III
- IV
- V
- VI
- VII

탈북민 응답자들에게 향후 “통일한국은 어떤 사회유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가?”라고 물어보았다. 탈북민 응답자들은 통일한국 사회유형 1순위는 중간층이 대다수이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극소수가 되는 ‘다이아몬드형 사회(44.7%)’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 같은 전망은 한국이나 중국, 일본과 같이 중산층이 중심이 되는 사회유형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탈북민은 통일한국의 2순위로는 하층으로 갈수록 인구가 줄면서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가 되는 ‘역삼각형 사회(27.7%)’가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같은 응답 경향을 살펴보면, 탈북민 응답자들은 대체로 통일한국이 남한사회와 유사한 유형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그림 III-31〉 참조), 탈북민 중 거의 과반수에 이르는 44.7%의 응답자들이 통일한국은 D유형의 ‘다이아몬드형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탈북민 응답자들은 통일한국의 사회유형으로 중간층이 대다수이며 부자 및 가난한 사람은 극소수이며 중간층이 대다수를 구성하는 다이아몬드형 사회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로 미루어 탈북민들은 앞으로 통일이 되면 남한사회와 비슷한 유형이 되리라고 전망하며 통일 이후 현재의 남한사회보다 더욱 중간층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그림 III-31〉 참조).

그림 Ⅲ-31 ▶ 향후 통일한국의 사회유형



출처: 필자 작성

나. 한국사회의 불평등성 인식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 약 20여 년 간 한국사회에서 불평등 문제가 크게 대두하고 있으며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등 양극화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사회의 신빈곤층이자 동시에 적극적 조치의 수혜집단으로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탈북민의 한국사회에 대한 불평등성 인식은 어떠한지 살펴보는 일은 의미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새로 제기하는 문제는 탈북민들의 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그들이 인지하는 한국사회의 불평등성 역시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탈북민이 연 1,000명 이상 들어온 시기와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변화는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다. 우리 사회에서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확대되고 전반적인 불평등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사회의 새로운 일원으로 진입한 탈북민들은 여러 종류의 불평등을 경험하고, 이것이 북한출신 주민들의 인식, 즉 자본주의 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 I
- II
- III
- IV
- V
- VI
- VII

여기서는 탈북민들이 한국사회를 어떤 사회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들이 경험한 불평등과 어떤 상황에서 불평등을 경험해왔는지 탈북민의 한국사회 불평등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사회의 불평등성에 대한 탈북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사회의 소득격차, 각 분야별 불평등, 사회적 이동성, 보상의 적정성, 차별양상, 편견과 차별, 탈남의사 등을 물어보았다.

(1) 소득 불평등

불평등의 핵심적 지표는 소득이다. 이 조사에서는 남한사회의 소득격차가 큰지, 그리고 그러한 소득격차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는지, 가난한 자에게 주는 수혜는 줄여야 하는지 세 가지 문항을 탈북민 응답자들에게 물어보았다. 소득격차가 크냐는 질문에 대해서 소득격차가 작다고 보는 사람은 11.7%, 소득격차가 크다고 보는 사람은 74.7%로서 소득격차가 크다는 응답자들이 작다는 응답자보다 무려 63.0%p나 많다.

다음 문항에서도 소득격차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61.0%로서 정부 책임이 아니라는 응답 14.0%보다 47%p나 높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수혜를 줄여야 한다는 질문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응답자의 수가 80.0%로서 줄여야한다는 응답자 8.0%에 비해 72.0%p나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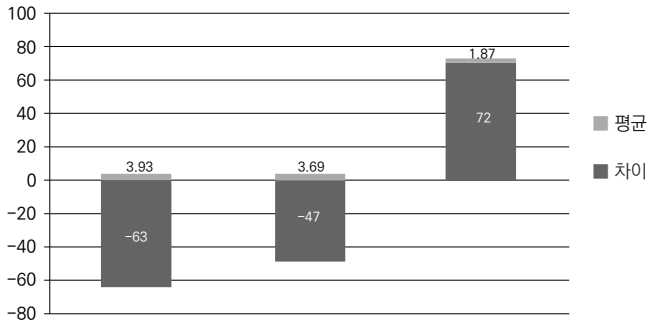
탈북민 응답자들의 평균점수는 3.93점으로서 응답자들이 소득격차가 크다고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2009년도 세계 불평등 조사시 한·중·일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일반 한국인 평균 4.32점, 일본 4.11점, 중국 4.27점에 비해서 오히려 소득격차 인식은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I-5 > 소득격차 인식

	반대	중립	찬성	차이	평균
소득격차 크다	11.7	13.7	74.7	-63.0	3.93
정부책임이다	14.0	25.0	61.0	-47.0	3.69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수혜 줄여야	80.0	12.0	8.0	72.0	1.87

출처: 필자 작성

그림 III-32 > 소득격차 인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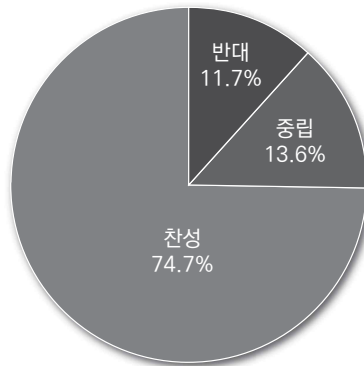
* 1: 매우 그렇지 않다, 2: 다소 그렇지 않다, 3: 찬성도 반대도 아님,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VI
VII

남한사회의 소득차이가 크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의 74.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A, B, C 집단에서 그렇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76%, 76%, 72%로 전 집단들은 소득격차가 크다는 인식을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33 ▶ 남한사회는 소득격차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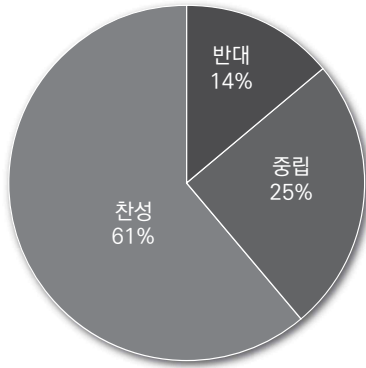


* 1: 매우 그렇지 않다, 2: 다소 그렇지 않다, 3: 찬성도 반대도 아님,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출처: 필자 작성

그 다음으로 “소득차이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탈북민 응답자들의 평균점수는 3.69점으로서 정부책임이라는 데에 대해서 강하게 긍정하였다. 응답자들의 61.0%는 소득차이를 줄이는 것이 정부책임이라고 보고 있었으며, 14.0%만이 반대했다.

그림 III-34 소득차이를 줄이는 것은 정부 책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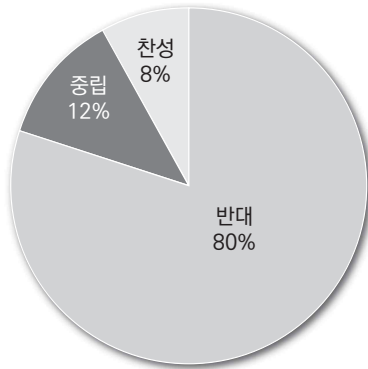


* 1~2: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3: 중립, 4~5: 정부의 책임이다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VI
VII

그 다음으로 “가난한 자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문항에 탈북민 응답자들의 응답은 평균점수 1.87점/5점을 기록해 응답자들의 대다수인 80.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5 ▶ 가난한 자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 1: 매우 그렇지 않다, 2: 다소 그렇지 않다, 3: 찬성반대도 아님,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출처: 필자 작성

(2) 기회의 불평등

남한사회의 불평등을 각 분야별로 알아보았다. 교육기회, 취업기회, 승진·승급 기회, 법의 집행, 여성의 대우, 소득과 재산, 남한출신인가 북한출신인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질문은 5점 척도로 물어보았는데, 1점 매우 불평등, 2점 다소 불평등, 3점 보통, 4점 약간 평등, 5점 매우 평등이다. 차이는 평등하다는 응답에서 불평등하다는 응답을 뺀 수치이다.

표 III-6 ▶ 각 분야별 기회의 불평등

	불평등하다	보통이다	평등하다	차이	평균
교육기회	21.7	32.0	45.0	23.3	3.35
취업기회	41.0	30.3	27.3	-13.7	2.82
승진기회	39.3	37.7	21.3	-18.0	2.76
법의 집행	32.0	30.0	37.0	5.0	3.07
여성대우	19.7	30.3	49.3	29.6	3.43
소득	32.7	42.3	24.0	-8.7	2.86
남북차별	54.7	19.0	21.3	-33.4	2.49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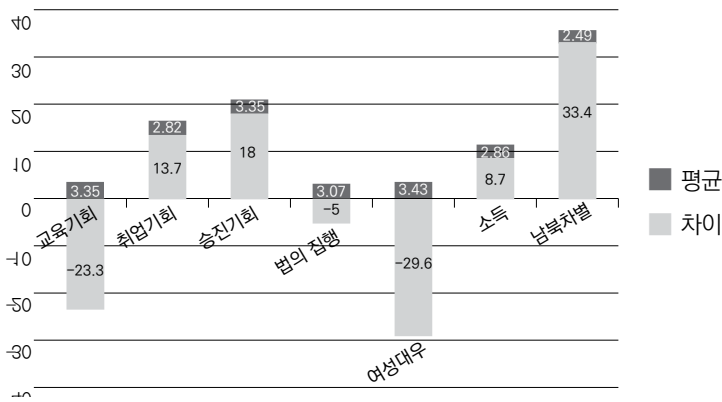
VI

VII

조사결과 가장 평등성 인식이 높은 항목은 ‘여성에 대한 대우’로서 평균이 3.43으로 불평등하다는 인식보다 29.6%p가 높았고, 그 다음 항목은 교육기회로서 평균 3.35으로 불평등하다는 응답과 평등하다는 응답 간에는 23.3%p의 차이가 났다. 그러나 남북한 출신에 대한 차별 인식은 매우 높아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평등하다는 응답에 비해 33.4%p 높았다. 아래 <그림 III-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야 간에 불평등성 인식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이는 북한사회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기회의 경우, 응답자의 41.0%가 불평등하다고 답하였으며, 27.3%만이 평등하다고 답하였다. 승진기회의 평균점수는 2.76으로 취업기회의 불평등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승진기회가 불평등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41%였고, 평등하다고 응답자들은 27.3%로 승진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여기는 응답자들이 13.7%p 높았다.

그림 III-36 각 분야별 기회 불평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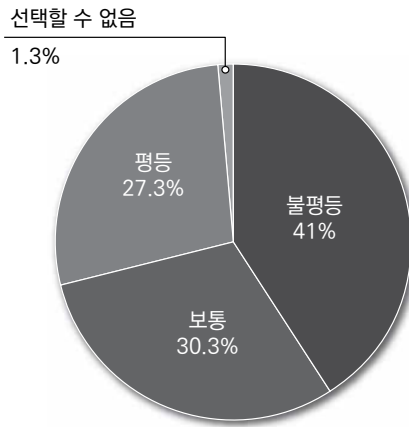
(단위: %)



* 1: 매우 불평등, 2: 다소 불평등, 3: 보통이다, 4: 약간 평등, 5: 매우 평등
출처: 필자 작성

강력한 가부장제인 북한사회에서 살다 온 탈북민들은 남한에 온 이후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평등권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기회의 평등성 인식이 3.35로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그동안 탈북민의 경우에 무상교육과 대학 특례입학이라는 특별한 정책을 실시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그림 III-37 ▶ 취업기회의 불평등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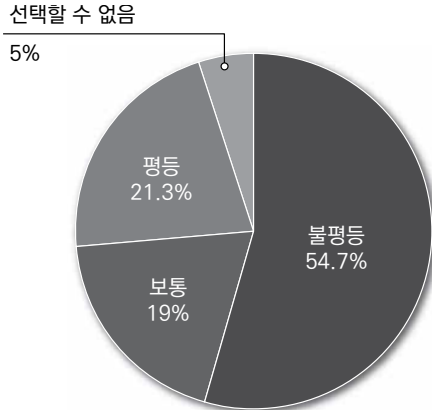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VI
VII

반면에 응답자들이 불평등성을 높게 인지한 영역은 남북한 출신에 대한 불평등성(2.49)이었다. 응답자들은 남북한 출신에 따른 불평등(2.49) > 승진기회(2.76) > 취업기회(2.82)의 순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탈북민 응답자들은 남한출신인가 북한출신인가에 따른 불평등성을 다른 영역에 비해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54.7%는 출신에 따라 불평등하다고 응답했으며 평등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21.3%에 불과했다.

그림 III-38 남북한 출신 여부에 따른 기회 불평등성



출처: 필자 작성

(3) 노동차별: 차별상황, 근로자 대우, 보수의 적절성, 일터 괴롭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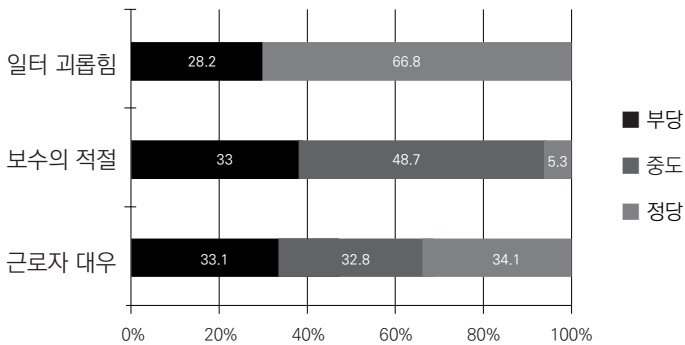
이제까지 선행연구에서 탈북민에 대한 차별이 가장 많이 행해진다고 알려진 영역은 노동시장 즉 직장이었다.⁵⁾ 그래서 본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직접 경험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보수의 적절성, 일터 괴롭힘의 세 가지를 물어보았다. 3점 척도로 통일한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III-7 노동차별

항목	부당함	중립	정당	차이
근로자 대우 부당/정당	33.1	32.8	34.1	-1.1
보수의 적절성	33.0	48.7	5.3	-27.7
일터 괴롭힘	28.2	-	66.8	38.6

출처: 필자 작성

그림 III-39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보수, 일터 괴롭힘, 근로자 대우)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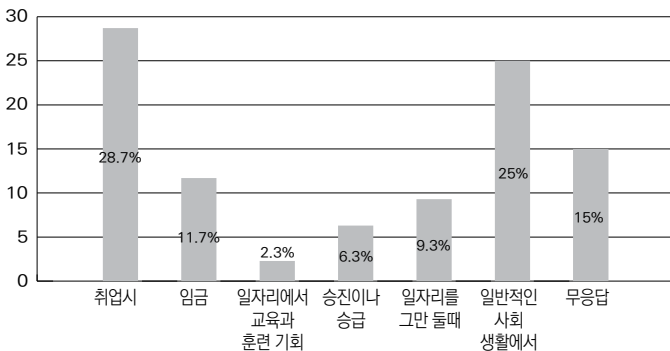
⁵⁾ 선한승 외,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5), pp. 49~51; 윤인진 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 및 차별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4), pp. 113~115.

포괄적인 의미의 부당한 경험을 제외하고는 노동 차별 문항 즉, 근로자대우, 보수, 일터의 괴롭힘 문항에서 차별 경험을 한 경우 모두가 30.0% 안팎의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응답자에 고령자나 학생, 주부와 같은 비경제활동 인구가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실제로 일하고 있는 탈북민 근로자의 경우에 다수가 노동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일자리 영역에서 차별문제는 계속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어서 노동연구원의 2007년 노동자차별 문항을 사용하여 탈북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차별을 겪는지를 일곱 가지 상황 즉 취업 시, 임금·일자리 교육과 훈련기회, 승진이나 승급, 일자리를 그만둘 때, 가정생활, 일반 사회생활 영역을 제시하고 물어보았다.

그 결과 취업시(28.7%)와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경험하는 부당한 대우(25%)가 가장 많았다. 무응답은 15.0%였으며, 일자리를 그만 둘 때 9.3%, 승진승급 6.3%, 일자리에서 교육과 훈련 기회 2.3% 순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탈북민들은 노동시장 진입시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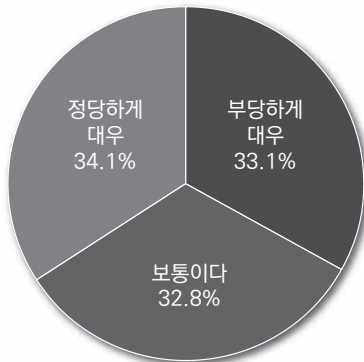
그림 III-40 노동차별의 여러 상황



출처: 필자 작성

“남한사회는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우(보상, 차별, 해고)/정당하게 대우하는 사회이다”라는 문항에서는 양극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탈북민 응답자들은 평균점수 5.5점/10점을 기록했다. <그림 III-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들의 반응은 삼분화되었다. 응답자들의 34.1%만이 근로자들을 정당하게 대우한다고 보고 있었으며, 응답자들의 33.1%는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보고 있었고, 32.8%는 중립적 태도를 취하였다.

그림 III-41 한국은 근로자들을 부당하게/정당하게 대우하는 사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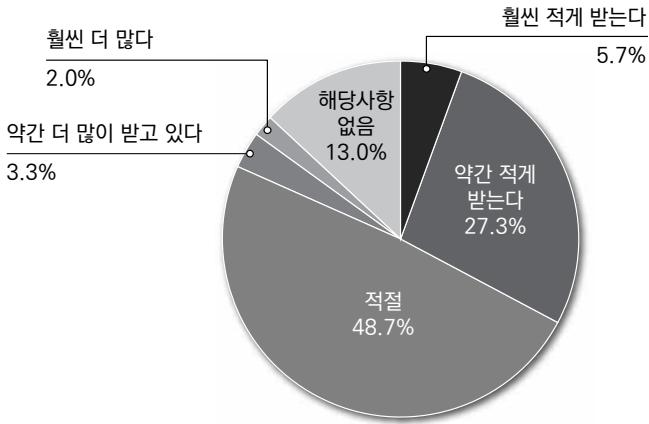


* 1~4: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회, 5~6: 중립, 7~10: 정당하게 대우하는 사회
출처: 필자 작성

- I
- II
- III
- IV
- V
- VI
- VII

탈북민 응답자들에게 남한사회에서 받아야할 보수보다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보수의 적정성에 대해 물어 보았다. 전체 응답자의 48.7%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7.3%는 받아야 하는 것보다 약간 적게, 5.7%는 훨씬 적게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약간 많다는 응답이 3.3%, 훨씬 더 많다는 응답이 2.0%였다. 13.0%는 해당사항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아직 남한사회에서 일한 경험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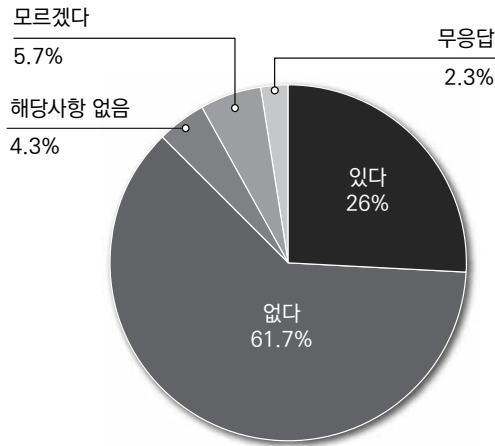
그림 III-42 보수의 적정성



출처: 필자 작성

일터 괴롭힘(workplace harassment)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 혹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관심이 증대해왔으며, 1990년대에 와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연구와 대중적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⁶⁾ 국내에서도 최근 수년 사이에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되고 있지 않다.⁷⁾

그림 III-43 일터 괴롭힘



출처: 필자 작성

본 조사에서 “선생님은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3점 척도(있다, 없다, 해당사항 없음)로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26.0%, ‘없다’는 응답이 61.7%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에서 2010년도에 실시된 ‘유럽 근로조건 조사’에서 EU 회원국가의 4.1%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⁸⁾ 특히 이 설문결과에서는 특이할 정도로 무응답자(2.7%),

⁶⁾ 마릿 바리타, “EU의 직장내 괴롭힘,” 『국제노동브리프』, 제12권 9호 (2014), p. 4.

⁷⁾ 이 조사에서 일터 괴롭힘 문항을 넣은 이유는 그 동안 필자가 탈북민과 실시한 인터뷰에서 일터에서의 갈등, 일터 괴롭힘에 대한 보고가 꾸준히 있어왔기 때문이다.

모르겠다(5.7%), 해당사항 없음(4.3%)이 많은데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후속 조사가 필요하다.

(4) 사회적 이동성

불평등문제 해결의 핵심은 그 사회가 지닌 사회적 이동 가능성에 있다. 만약 지금 낮은 자리에 있거나 부가 적다고 할지라도 노력에 의해 상승 가능하다면 사회 구성원들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이다.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탈북민의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질문을 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먼저, 개인의 능력에 따라 부를 얻는 사회인지 부모의 배경에 따라 부를 얻는 사회인지에 대해 10점 양극 척도로 질문하였다.

표 III-8 사회적 이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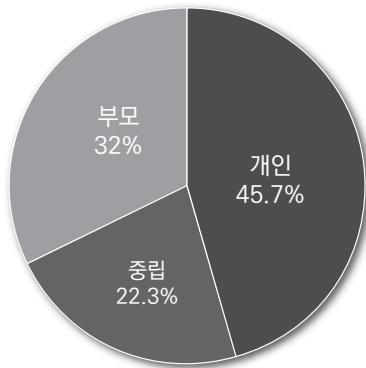
	개인	중립	부모	차이	평균
개인능력 vs 부모배경	45.7	22.3	32.0	13.7	4.74
	상승가능	중립	불가능	차이	평균
상승이동 가능 vs 안됨	60.0	23.3	16.7	43.3	3.92

출처: 필자 작성

^{*)} 위의 글, p. 6.

탈북민 응답자들은 평균 4.74점/10점으로 남한사회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부를 얻는 사회라는 인식에 보다 많은 지지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응답자의 45.7%는 '남한사회는 개인능력에 따라 부를 얻는다'고 응답하였으며, 32.0%는 '부모의 배경에 따라 부를 얻는 사회'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III-44 ▶ 사회적 이동성 1: 개인능력 vs 부모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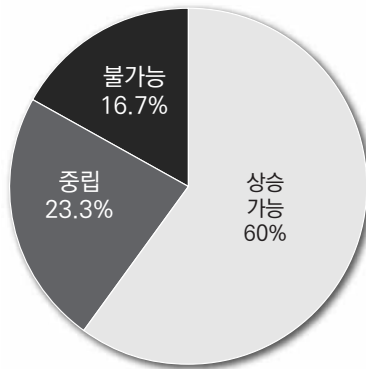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VI
VII

“고등교육을 통한 사회적 상승 이동이 가능한가”의 질문에 대해 탈북민 응답자들은 이동 가능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평균 점수 3.92점/10점).⁹⁾ 응답자의 60.0%는 ‘교육을 통한 상승이동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6.7%만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다. 23.3%는 ‘중도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림 III-45 > 상승이동 가능성



출처: 필자 작성

⁹⁾ 1~4: 대학 교육을 통해 올라갈 수 있는 사회, 5~6: 중립, 7~10: 올라갈 수 없는 사회.

(5) 남한사회의 편견과 이등국민 그리고 탈남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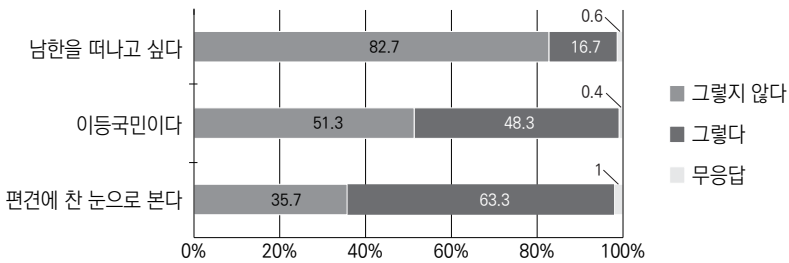
“남한사회가 탈북민을 편견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냐”는 질문을 4점 척도로 물어보았는데, 탈북민 응답자들의 63.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35.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대체로 편견에 찬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III-9 남한사회의 편견과 탈남의사

항목	그렇지 않다	그렇다	무응답	차이	평균
편견에 찬 눈으로 본다	35.7	63.3	1	-29.4	2.7
이등국민이다	51.3	48.3	0.3	3.0	2.43
남한을 떠나고 싶다.	82.7	16.7	0.7	66.0	1.69

* 1: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대체로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그림 III-46 남한사회의 편견과 탈남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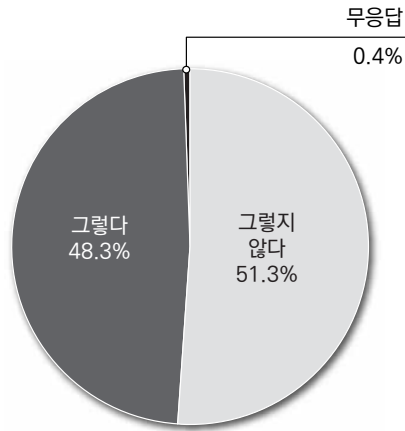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 I
- II
- III
- IV
- V
- VI
- VII

“탈북민은 이등국민이다”라는 질문을 4점 척도로 물어보았는데, 탈북민 응답자들의 48.3%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그보다 많은 51.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48.3% 중의 14.0%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심각하게 차별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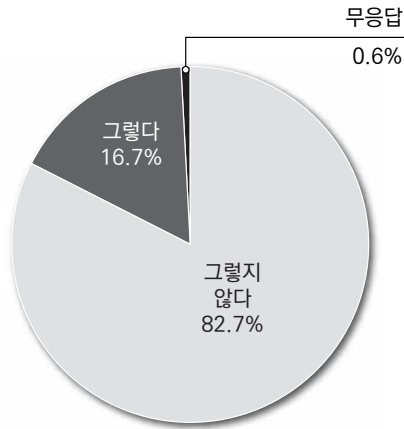
그림 III-47 >> 탈북민은 이등국민이다



출처: 필자 작성

그러면 탈북민들 중에 남한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이 55.0%,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가 27.7%로서 압도적인 82.7%의 사람들은 ‘남한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떠나고 싶다’는 응답자들은 9.3%, ‘매우 그렇다’는 응답자는 7.3%로서 총 16.7%의 응답자들이 다른 나라로 가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탈북자 사회에서 해외로 나가자는 붐이 불었고, 현재는 이 같은 움직임이 둔화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열명 중의 한두 명 정도는 해외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48 ▶ 나는 남한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고 싶다



출처: 필자 작성

- I
- II
- III
- IV
- V
- VI
- VII

3. 탈북민의 문화적응 유형, 삶의 만족도

가. 문화적응 전략

베리(Berry) 등¹⁰⁾이 제시한 심리적 문화적응 모델을 바탕으로 탈북민의 문화적응 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채정민¹¹⁾이 개발한 탈북민 문화적응 전략 척도 1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탈북민 문화적응 전략 척도는 북한문화 유지전략을 측정하는 8개 문항, 남한문화 수용전략을 측정하는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는 각 문항을 5점 척도(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점: 보통, 5점: 매우 동의한다) 상에서 응답하였다. 전체 문항은 부록에 제시된 설문지 문1의 16개 문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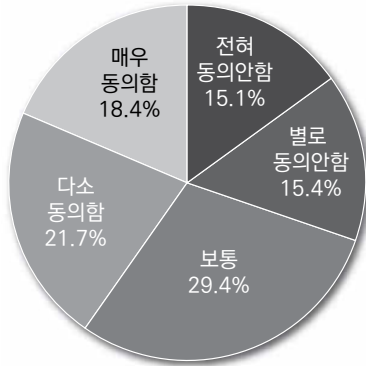
¹⁰⁾ John, Berry W.,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vol. 46, no. 1 (1997), pp. 5~34.; John, Berry W. and Uichol Kim,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in *Health and Cross-cultural Psychology: Toward Applications*, ed. Pierre Dasen R., Berry John W., and Sartorius Norman (London: Sage, 1998), pp. 207~236.

¹¹⁾ 채정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형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p. 137.

(1) 북한문화 유지전략

탈북민의 정신적 뿌리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남한에서 살고 있지만 나의 정신적 뿌리는 북한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 보았다. 응답자의 40.1% (매우 동의: 18.4% + 다소 동의: 21.7%)가 북한을 자신의 정신적 뿌리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3.1점/5점). 북한을 자신의 정신적 뿌리가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은 30.5%(전혀 동의안함: 15.1% + 별로 동의하지 않음: 15.4%)였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4%였다. 성별, 연령, 북한에서의 학력, 남한 체류기간, 북한에서의 직업 유형, 정치적 성향,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등 주요변수의 수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49 > 정신적 뿌리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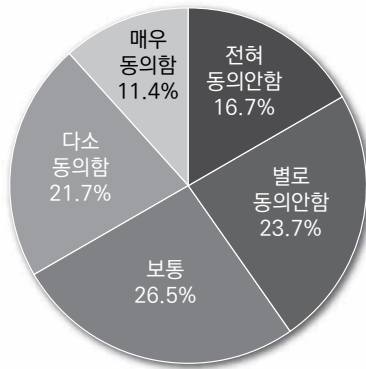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VI
VII

북한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의 가치에 대해 물어보았다. 북한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이 가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치 없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낮았다(2.9점/5점). 응답자의 33.1%는 북한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이 가치 있다고 응답(매우 동의: 11.4% + 다소 동의: 21.7%)한 반면 40.4%(전혀 동의안함: 16.7% + 다소 동의안함: 23.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III-50 ▶ 북한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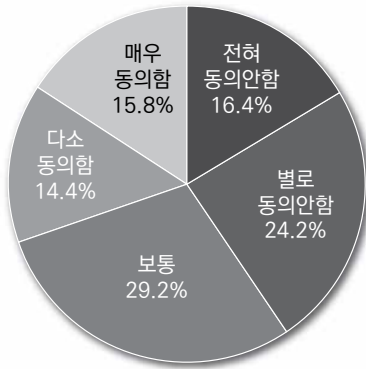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남성(3.1점)이 여성(2.7점)보다 북한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북한에서의 직장이 공식일(3.0점)이거나 이중일(3.0점)이었던 응답자가 북한에서의 직장이 비공식일(2.5)이었던 응답자보다 북한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학력, 남한 거주기간, 정치적 성향,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북한의 문화전수에 대한 생각을 “나는 자식들이 (여기에서 같이 산다면) 북한의 풍습을 잊지 않도록 가르치겠다”의 질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응답자의 30.2%(매우 동의: 15.8% + 다소 동의: 14.4%)는 후손에게 북한의 문화를 가르치겠다고 응답하였다(2.9점/5점). 반면 응답자의 40.6%(전혀 동의안함: 16.4% + 별로 동의안함: 24.2%)는 자녀에게 북한의 문화를 가르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III-51 ▶ 북한문화 전수에 대한 견해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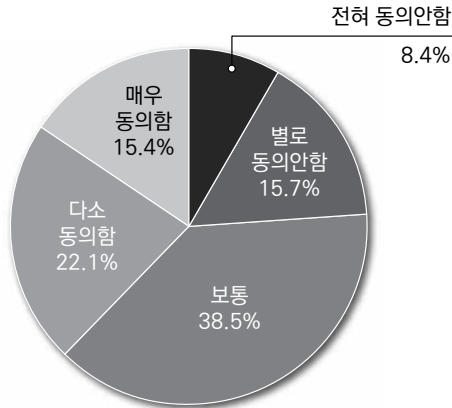
남성(3.0점)이 여성(2.8점)에 비해 북한문화 전수에 긍정적인 경향성¹²⁾이 관찰되었다. 연령에 따른 북한문화 전수에 대한 태도 차이가 관찰되었다. 20대(2.6점)와 60대 이상(3.3점)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지만 다른 연령대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남한 거주기간, 북한에서의 직장 유형, 당원 여부, 정치적 성향,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¹²⁾ 0.05 < p-value < .10.

- I
- II
- III
- IV
- V
- VI
- VII

탈북민 간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였다. “나는 북한출신 사람들과 계속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에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38.5%)이 가장 높았다. 응답자의 37.5%(매우 동의: 15.4% + 다소 동의: 22.1%)가 북한출신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24.1%(전혀 동의안함: 8.4% + 별로 동의안함: 15.7%)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5점 기준 평균점은 3.2점이었다.

그림 III-52 >> 탈북민 간 관계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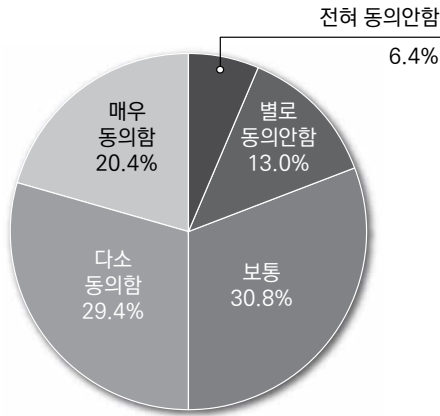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성별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남성(3.4점)이 여성(3.0점)에 비해 탈북민 간 관계 유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응답하였다. 남한 체류기간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다. 5년 이하(2.9점) 거주자들이 6~10년 이하 거주자(3.34점), 그리고 11년 이상 거주자(3.33점)에 비해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덜 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6~10년 이하 거주자와 11년 이상 거주자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인을 보수적

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3.40점)가 본인을 진보적이라고 생각한 응답자보다 탈북민 간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북한에서의 학력, 당원 여부, 북한에서의 직업 유형,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북한의 미풍양속을 계승 및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북한에 남아 있는 전통적인 미풍양속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의 문항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49.8%, 매우 동의: 20.4% + 다소 동의: 29.4%)가 북한의 미풍양속 계승 및 발전에 동의하였다. 응답자의 19.4%(전혀 동의안함: 6.4% + 별로 동의안함: 13.0%)는 동의하지 않았다. 응답자의 30.8%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5점 만점에 대한 평균점은 3.4점이었다.

그림 III-53 ▶ 북한의 미풍양속 계승 및 발전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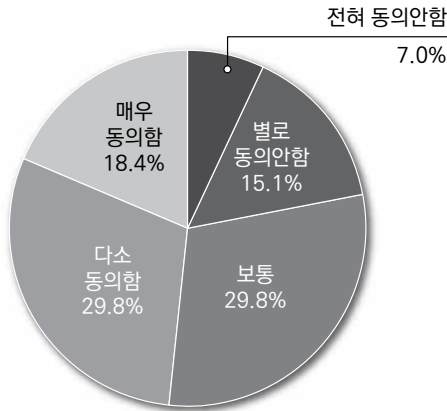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VI
VII

주요변수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체류기간의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5년 이하 거주자(3.14점)들이 6~10년 거주자(3.55점), 11년 이상 거주자(3.59점)에 비해 미풍양속 계승발전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성별, 연령, 학력, 당원 여부, 북한에서의 직업 유형,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정치적 성향 등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북한에서의 삶이 그리운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48.2%(매우 동의: 18.4% + 다소 동의: 29.8%)가 북한에서의 삶을 종종 떠올리며 그리워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응답자의 22.1%는 북한에서의 삶이 그리워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29.8%의 응답자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5점 기준의 평균은 3.4점이었다. 성별, 연령, 남한 거주기간 등 주요변수들의 수준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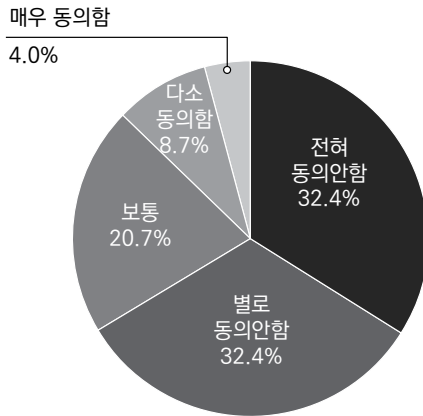
그림 III-54 ▶ 북한에서의 삶이 그리운지에 대한 견해



출처: 필자 작성

“북한출신 사람들의 모임에서 북한식 말투를 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응답자의 66.5%(전혀 동의안함: 34.1% + 별로 동의안함: 32.4%)가 동의하지 않았다. 응답자의 20.7%는 보통으로 응답하였으며, 12.7%(매우 동의: 4.0% + 다소 동의: 8.7%)가 북한출신 사람들의 모임에서 북한식 말투를 써야한다고 동의하였다(2.2점/5점).

그림 III-55 ▶ 북한출신 사람들의 모임에서 북한식 말투를 쓰는 것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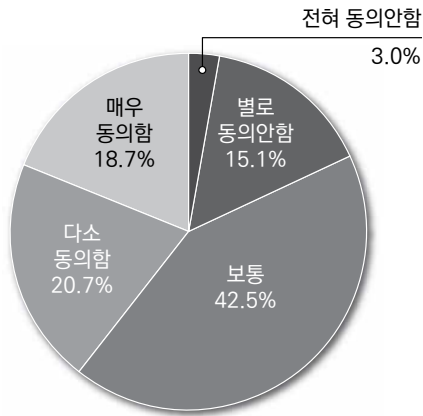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남성(2.3점)이 여성(2.0점)에 비해 북한식 말투를 고수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며, 20대(2.0점)와 30대(2.0점)가 60대(2.68점)에 비해 북한출신 사람들의 모임에서 북한식 말투를 쓰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다. 학력, 남한 거주기간, 당원 여부, 북한에서의 직업 유형, 정치적 성향,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등에서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I
II
III
IV
V
VI
VII

북한출신 사람들의 모임에 가면 마음이 편한지에 대한 질문에 39.4%(매우 동의: 18.7% + 다소 동의: 20.7%)가 동의하였으며 18.1%(전혀 동의안함: 3.0%, 별로 동의안함: 15.1%)가 동의하지 않았다. 42.5%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주요변수의 각 수준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III-56 ▶ 북한출신 사람들의 모임에서의 심리적 편안함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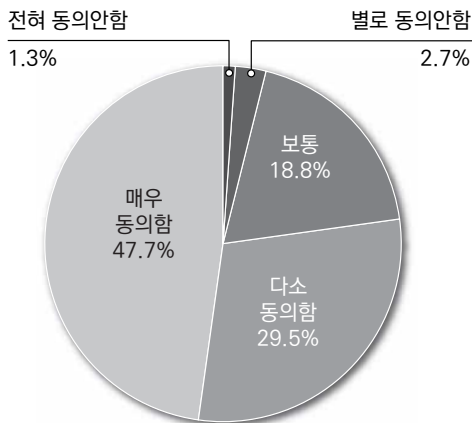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2) 남한문화 수용전략

“탈북민에게 진정한 남한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응답자의 77.2%(매우동의: 47.7% + 다소 동의: 29.5%)가 동의하였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8.8%였으며 진정한 남한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4%(전혀 동의안함: 1.3% + 별로 동의안함: 2.7%)에 불과했다. 5점 기준 평균점은 4.2점이었다.

그림 III-57 > 진정한 남한사람이 되려는 노력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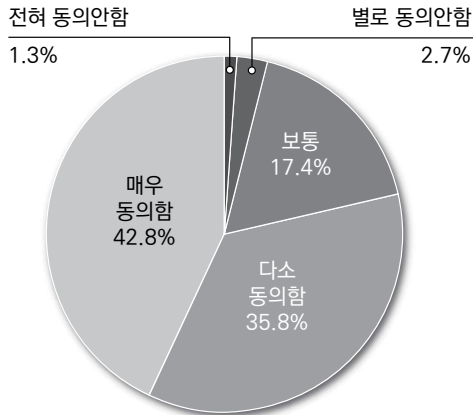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20대가 가장 낮은 점수(3.9점), 50대가 가장 높은 점수(4.4점)을 보였으며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나머지 집단 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 외 성별, 남한 체류기간, 북한에서의 학력, 당원 여부, 북한에서의 직업 유형, 정치적 성향,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I
II
III
IV
V
VI
VII

“나는 남한에서 경험한 새로운 생활이 매우 유익하고 재미있다고(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내려고 한다”라는 명제에 동의하는 비율 역시 높았다. 매우 동의한 비율은 42.8%, 다소 동의한 비율은 35.8%로 78.6%가 남한생활이 유익하고 재미있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남한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비율은 4.0%(전혀 동의하지 않음: 1.3% + 별로 동의하지 않음: 2.7%)였다. 보통이라고 평가한 비율은 17.4%였다(4.2점/5점). 주요변수들의 수준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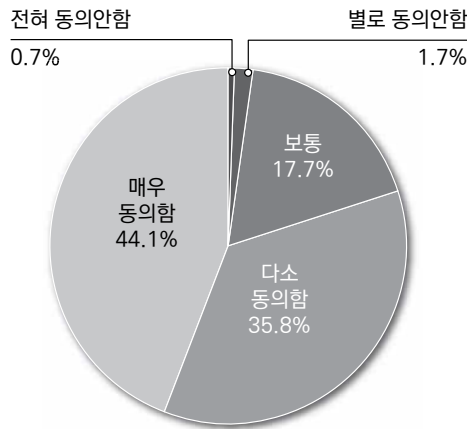
그림 III-58 남한생활의 유익함과 즐거움에 대한 견해



출처: 필자 작성

약 80%(매우 동의: 44.1% + 다소 동의: 35.8%)에 가까운 응답자들은 남한사회의 생활양식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남한사회의 발전된 생활양식을 받아들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4%(전혀 동의안함: 0.7% + 별로 동의안함: 1.7%)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17.7%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5점 기준 평균점은 4.2점이었다.

그림 III-59 ▶ 남한사회의 발전된 생활양식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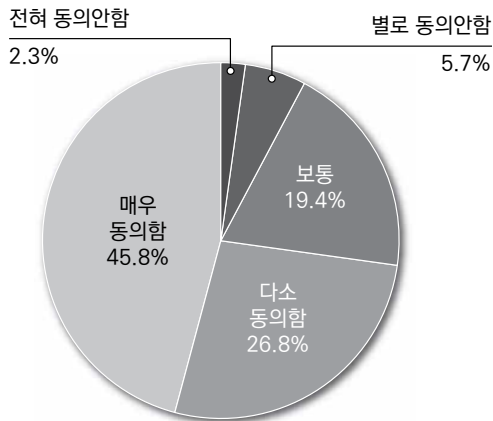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다. 20대가 가장 낮은 점수(4.0점), 50대가 가장 높은 점수(4.5점)를 보였으며,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나머지 연령대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경제적 만족도가 높은 집단(4.3점)이 만족도가 낮은 집단(4.1점)에 비해 남한의 생활양식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

I
II
III
IV
V
VI
VII

일상생활에서 남한식 말투를 쓰는 것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72.6%(매우 동의: 45.8% + 다소 동의: 26.8%)가 남한식 말투를 쓰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 남한식 말투를 쓰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비율은 8.0%(전혀 동의안함: 2.3% + 별로 동의안함: 5.7%)였다. 응답자의 19.4%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III-60 일상생활에서 남한식 말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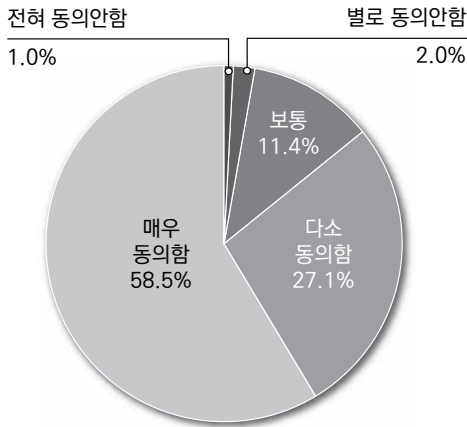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여성(4.3점)이 남성(3.9점)보다 남한식 말투를 쓰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60대(3.5점)이 다른 연령대(20대: 4.1점, 30대: 4.1점, 40대: 4.2점, 50대: 4.1점)에 비해 동의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2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연령대 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도 관찰되었다. 5년 이하 거주자(4.3점)들은 6~10년 거주자(4.0점), 11년 이상 거주자(4.0점)에 비해 남한식 말투를 쓰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북한에서 당원이었던 응답자(3.8점), 본인을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3.9점)가 북한에서

당원이 아니었던 응답자(4.2점), 본인을 진보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4.3점)에 비해 남한식 말투를 쓰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북한에서의 학력, 북한에서의 직업 유형,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남한에서 잘 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보겠다”는 문항에는 85.6%(매우 동의: 58.5% + 다소 동의: 27.1%)의 응답자가 동의하였다(4.4점/5점). 응답자 중 3.0%(전혀 동의안함: 1.0% + 별로 동의안함: 2.0%)만이 동의하지 않았으며 11.4%의 응답자는 보통으로 응답하였다. 주요변수들의 수준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III-61 남한생활의 의지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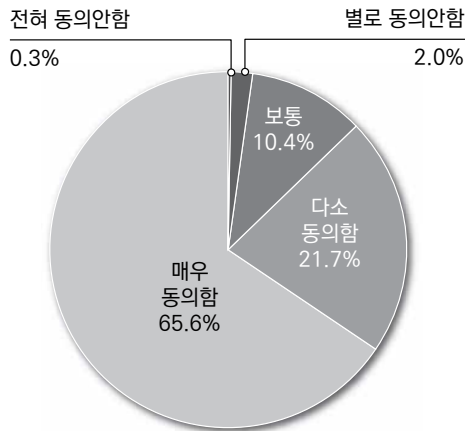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 I
- II
- III
- IV
- V
- VI
- VII

자녀들에게 남한의 문화를 받아들이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87.3%(매우 동의: 65.6% + 다소 동의: 21.7%)가 동의하였다. 5점 기준으로 4.5점의 평균점을 나타냈었다. 응답자의 2.3%(전혀 동의안함: 0.3% + 별로 동의안함: 2.0%)가 동의하지 않았으며, 10.4%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북한에서 당원이었던 응답자(4.4점)는 당원이 아니었던 응답자(4.6점)에 비해 자녀들이 남한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성별, 연령대, 남한 체류기간, 북한에서의 학력, 북한에서의 직업 유형, 정치적 성향,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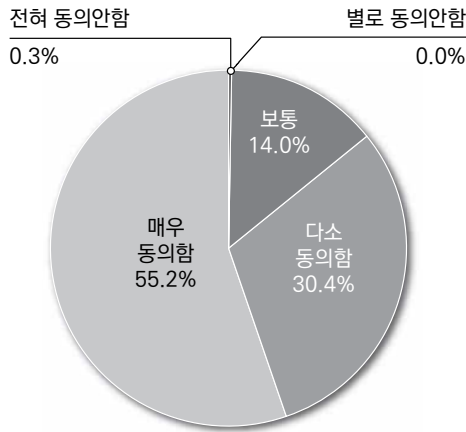
그림 III-62 ▶ 자녀들의 남한문화 수용에 대한 견해



출처: 필자 작성

남한사회의 지식 습득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측정하였다. “나는 남한사회에의 대한 지식들을 즐거운 기분으로 배우려고 한다”는 문항에 85.6%(매우동의: 55.2% + 다소 동의: 30.4%)의 응답자가 동의하였다. 0.3%의 응답자만이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14.0%는 보통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III-63 남한사회 지식 습득의 즐거움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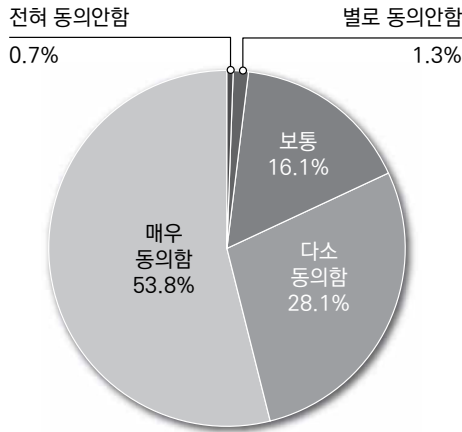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60대 응답자(4.1점)가 동의 정도가 가장 낮았으며 20대(4.5점), 30대(4.5점), 50대(4.5점)보다 동의 정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북한에서 당원이었던 응답자(4.3점)의 동의 정도가 북한에서 당원이 아니었던 응답자(4.4점)의 동의 정도보다 낮은 경향성이 있다. 그 외 변수들의 수준 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 I
- II
- III
- IV
- V
- VI
- VII

남한에서 새롭게 사귀는 남한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였다. “나는 새롭게 사귀는 남한사람들과 허물없이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한다”는 질문에 81.9%의 응답자(매우 동의: 53.8% + 다소 동의: 28.1%)가 동의하였다. 응답자의 2.0%(전혀 동의안함: 0.7% + 별로 동의안함: 1.3%)가 동의하지 않았다. 5점 기준 평균점은 4.4점이었다. 경제적 만족도가 높은 응답자(4.5점)의 동의 정도가 경제적 만족도가 낮은 응답자(4.3점)의 동의 정도보다 낮았다. 그 외 성별, 연령대, 남한 체류기간, 북한에서의 학력, 북한에서의 당원 여부, 북한에서의 직업 유형, 정치적 성향 등은 동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림 III-64 ▶ 남한출신 사람을 사귀는 것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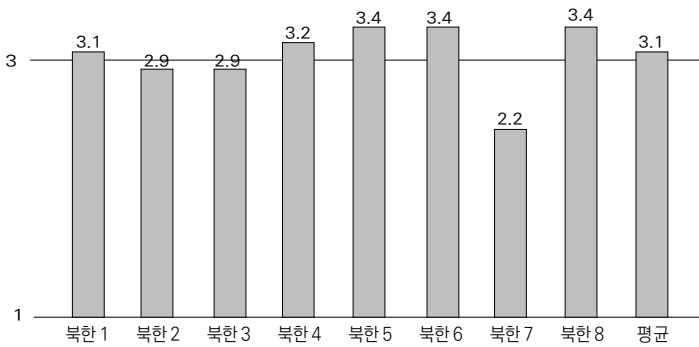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3)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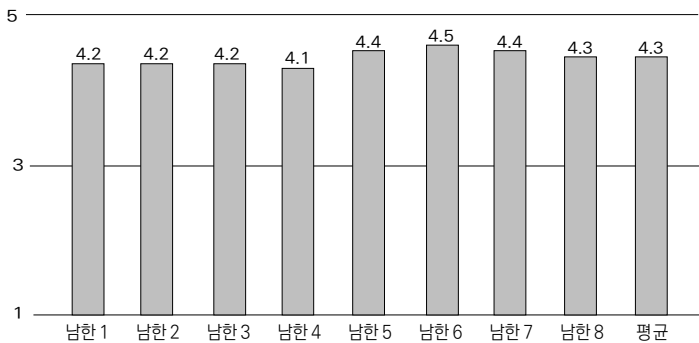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문화를 유지, 더 나아가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태도 및 남한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하는 태도를 각 8개 문항, 총 16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림 III-65>는 북한문화 유지에 대한 8개 문항의 결과를, <그림 III-66>은 남한문화 수용에 대한 8개 문항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그림 III-65 ▶ 북한문화 유지전략 종합



출처: 필자 작성

그림 III-66 ▶ 남한문화 수용전략 종합



출처: 필자 작성

- I
- II
- III
- IV
- V
- VI
- VII

탈북민은 북한문화 유지보다 남한문화 수용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문화 유지에 관한 8개 문항의 평균은 3.1점인 반면 남한문화 수용에 관한 8개 문항의 평균은 4.3점이었다. 구체적으로 북한문화 유지에 대한 8개 문항 중 가장 부정적인 문항은 북한식 말투의 사용이었다. 다시 말해서 탈북민은 북한식 어투를 유지하려하기 보다는 남한식 어투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탈북민의 절반 정도는 북한의 삶이 그림다고 말하고 있지만 북한의 문화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통일 이후 사회·문화의 통합을 고려한다면 20대가 북한문화를 후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 거주기간 5년 이하의 응답자들이 북한의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에 소극적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통일 이후 바람직한 문화통합은 북한문화의 남한화가 아니다. 북한문화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의 일부로서 계승·발전되어야 하며 통일국가를 구성하는 다양성으로 존중받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탈북민이 북한문화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며, 북한문화 전승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탈북민이 남한문화 수용에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거의 모든 탈북민이 남한문화 수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남한문화 수용에 적극적이었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소극적인 측면은 남한식 언어 사용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60대 이상 탈북민이 남한식 언어 사용에 매우 부정적(3.5점)이기 때문이다.

나. 삶의 만족도

탈북민이 남한에서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디너(Diener) 등의 삶의 만족도 척도(SWLS: 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¹³⁾의 5개 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응답은 7점 척도(1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7점: 매우 동의함) 상에서 이루어졌다.

I

II

III

IV

V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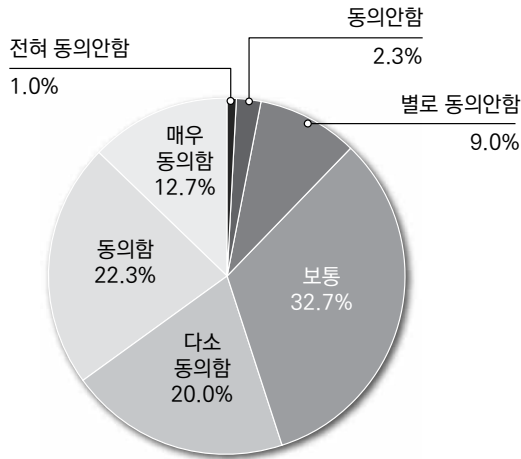
VII

¹³⁾ E. Diener et al,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49, no. 1 (1985), pp. 71~75.

(1) 문항별 주요 특징

먼저 본인의 삶이 자신의 이상과 일치하는지를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에 동의하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응답자의 55.0%(매우 동의: 12.7% + 동의: 22.3% + 다소 동의: 20.0%, 4.9점/7점)가 동의하였으며, 12.3%(전혀 동의안함: 1.0% + 동의 안함: 2.3% + 별로 동의안함: 9.0%)가 자신의 삶은 이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32.7%의 응답자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III-67 ▶ 자신의 삶이 이상에 일치하는 정도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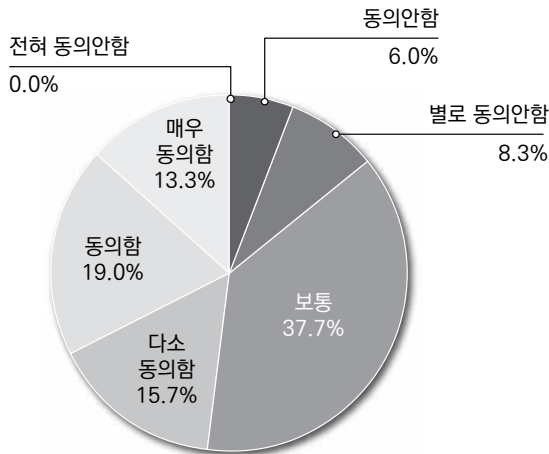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에 따라 자신의 삶이 이상과 일치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달랐다. 경제적 상황에 대해 만족하는 응답자(5.0점)의 동의 정도가 경제적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 응답자(4.6점)의 동의 정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성별, 연령대, 남한 체류기간, 북한에서의 학력, 북한에서의 당원 여부, 북한에서의 직업 유형,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두 번째 문항은 “내 인생의 여건은 아주 좋은 편이다” 였다. 응답자의 48.0% (매우 동의: 13.3% + 동의: 19.0% + 다소 동의: 15.7%)가 동의한 반면 응답자의 14.3%(전혀 동의안함: 0.0% + 동의 안함: 6.0% + 별로 동의안함: 8.3%)가 동의하지 않았다. 7점 기준 평균점은 4.7점이었다.

남한 거주기간에 따라 동의 정도가 유의하게 달랐다.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본인 인생의 여건이 좋다고 동의하는 정도가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었다. 사후 검증 결과 집단 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 역시 관찰되었다. 본인을 진보로 규정한 응답자의 동의 정도(5.0점)가 본인을 중도로 규정한 응답자의 동의 정도(4.5점)에 비해 높았다. 자신의 삶이 이상에 가까운지 물어본 첫 번째 문항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만족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만족하는 집단의 동의 정도(5.1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집단의 동의 정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그 외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수준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III-68 ▶ 본인 인생의 여건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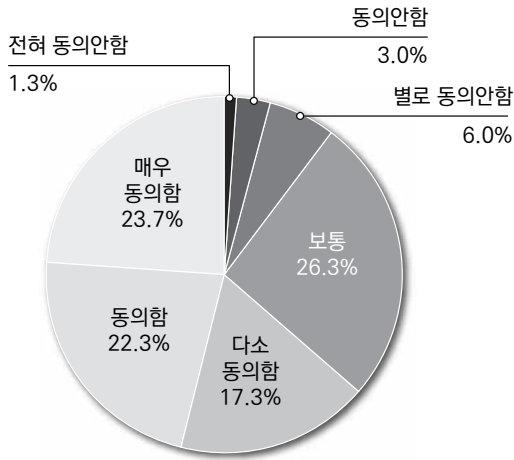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VI
VII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63.3%(매우 동의: 23.7% + 동의: 22.3% + 다소 동의: 17.3%)가 동의한 반면 응답자의 10.3%(전혀 동의안함: 1.3% + 동의 안함: 3.0% + 별로 동의안함: 6.0%)가 동의하지 않았다. 응답자의 26.3%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7점 기준 평균점은 5.2점이었다.

그림 III-69 ▶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전반적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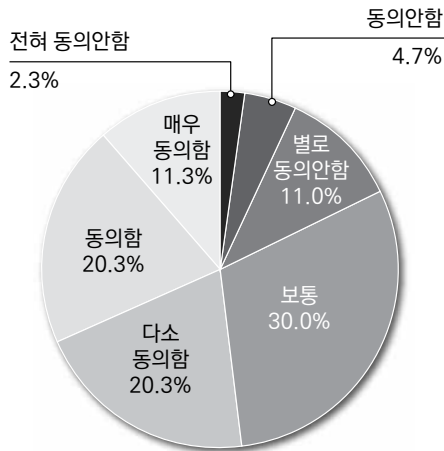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첫 번째 질문과 마찬가지로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에 따른 차이만 유의하였다. 경제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동의 정도(5.6점)가 경제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동의 정도(4.5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51.9% (매우 동의: 11.3% + 동의: 20.3% + 다소 동의: 20.3%)가 동의하였다. 응답자의 18.0%(전혀 동의안함: 2.3% + 동의 안함: 4.7% + 별로 동의 안함: 11.0%)가 동의하지 않았으며 응답자의 30.0%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7점 기준 평균점은 4.7점이었다.

그림 III-70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냈는지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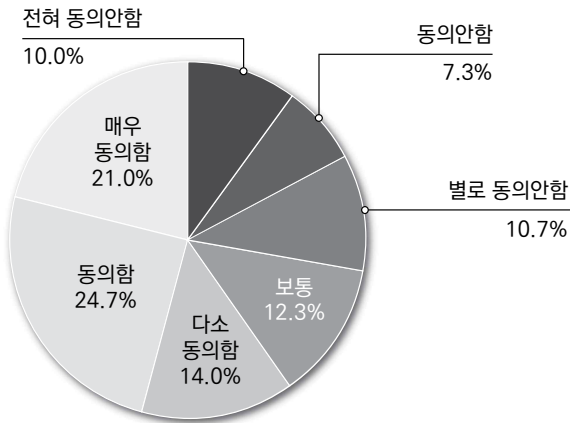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본인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동의 정도(5.0점)가 본인을 중도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동의 정도(4.3점)보다 높았다. 앞선 세 질문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따른 차이 역시 관찰되었다(만족집단: 5.0점 vs. 불만족 집단: 4.2점). 성별, 연령대, 남한 체류기간, 북한에서의 학력, 북한에서의 당원 여부, 북한에서의 직업 유형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I
II
III
IV
V
VI
VII

마지막으로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지금처럼 살아갈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59.7%(매우 동의: 21.0% + 동의: 24.7% + 다소 동의: 14.0%)가 동의하였다. 응답자의 28.0%(전혀 동의안함: 10.0% + 동의안함: 7.3% + 별로 동의안함: 10.7%)가 동의하지 않았으며 응답자의 12.3%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7점 기준 평균점은 4.7점이었다.

그림 III-71 다시 태어난다면 현재처럼 살 것인가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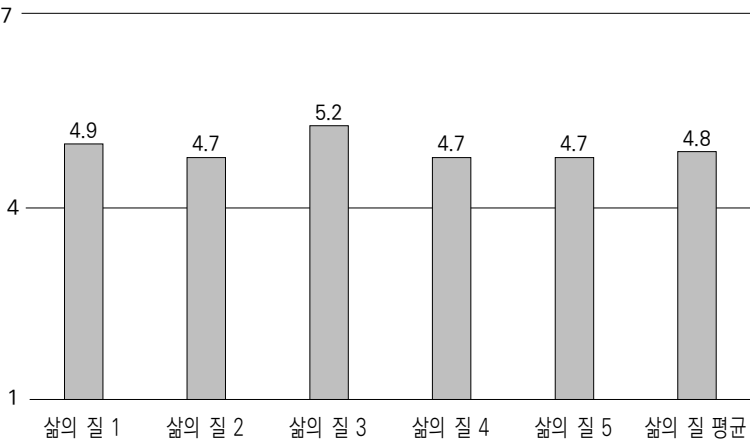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질문에 동의하는 정도가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었지만 사후 검증 결과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북한에서 당원이었던 응답자(5.2점)가 당원이 아니었던 응답자(4.5점)에 비해 “다시 태어나도 지금처럼 살고 싶다”에 동의한 정도가 높았다. 자신을 보수라고 판단한 응답자의 동의 정도(5.1점)가 자신을 중도라고 판단한 응답자의 동의 정도(4.4점)보다 높았으며, 다른 문항과 같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수준에 따른 차이도 관찰되었다(만족: 5.0점 vs. 불만족: 4.2점).

(2) 요약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5개 문항별 평균과 5개 문항의 평균을 제시하였다. 5개 문항의 평균은 4.8점이었다. 문항별로 평균을 보면 나의 삶에 만족한다는 세 번째 문항의 평균점이 5.2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신의 인생이 이상적인지 질문한 첫 번째 문항의 평균점이 4.9점으로 그 뒤를 따랐다. 인생의 여건에 대한 두 번째 문항,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네 번째 문항,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 지금처럼 살 것인지에 대한 다섯 번째 문항의 평균은 4.7점이었다.

그림 III-72 ▶ 삶의 만족도 평균



출처: 필자 작성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5개 문항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았다. 성별, 연령, 남한 체류기간, 북한에서의 학력, 북한에서의 당원 여부, 북한에서의 직장 유형별 삶의 만족도 차이는 없었다. 정치성향이 중도(4.6점)인 응답자의 삶의 만족도가 진보인 응답자(5.0점), 그리고 보수

- I
- II
- III
- IV
- V
- VI
- VII

인 응답자(5.0점)의 삶의 만족도보다 낮았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 역시 유의하였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만족하는 응답자의 삶의 만족도는 5.2점,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 응답자의 삶의 만족도는 4.3점이었다.

4. 탈북민의 권위주의 의식

탈북민의 권위주의 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우파 권위주의 척도¹⁴⁾와 한국판 권위주의 척도¹⁵⁾ 중 11개 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권위주의 의식은 5점 척도(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점: 매우 동의한다) 상에서 측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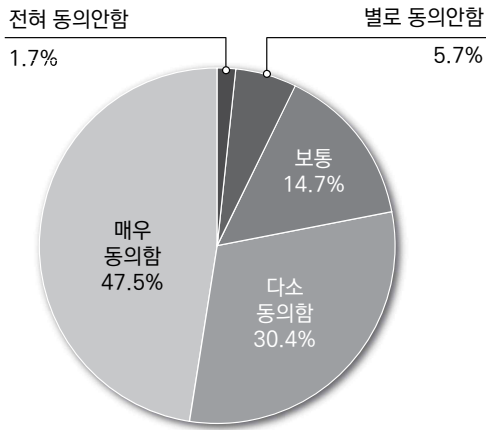
가. 문항별 주요 특징

먼저 “젊은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엄격한 교육과 강인한 결단력, 그리고 가족과 나라를 위한 의지력이다”라는 문항에 응답자의 77.9%가 동의(매우 동의: 47.5% + 다소 동의: 30.4%)하였으며 7.4%(전혀 동의안함: 1.7% + 별로 동의안함: 5.7%)는 동의하지 않았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7%였으며, 5점 기준으로 4.2점의 평균점을 보였다.

¹⁴⁾ Rattazzi, Manganelli et al, “A Short Version of the Right-Wing Authoritarianism(RWA)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43, no. 5 (2007), pp. 1223~1234.

¹⁵⁾ 민경환,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제4권 2호 (1989), p. 151.

그림 III-73 ▶ 젊은이의 덕목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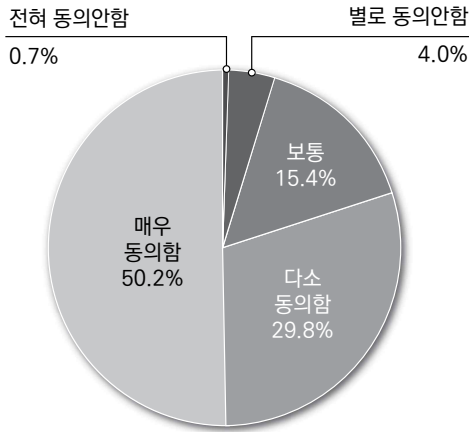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성별, 연령대, 남한 체류기간, 북한에서의 당원 여부, 그리고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다. 먼저 남자(4.4점)가 여자(4.0)보다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대가 가장 낮았으며, 40대(4.2점), 50대(4.4점), 60대(4.6점)의 동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달랐다. 남한 체류기간이 길수록 동의하는 정도가 낮았으며 11년 이상 거주자(4.0점)의 동의 정도가 5년 이하 거주자(4.3점)와 6~10년 거주자(4.2점)의 동의 정도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북한에서 당원이었던 응답자(4.4점)의 동의 정도가 당원이 아니었던 응답자(4.1점)의 동의 정도보다 높았으며,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만족하는 사람(4.2점)의 동의 정도가 불만족하는 사람(4.1점)의 동의 정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경향을 보였다.

I
II
III
IV
V
VI
VII

“사회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법이 충분치 못하다면 비상조치라도 사용하여야 한다”의 질문에 응답자의 80%가 동의(매우 동의: 50.2% + 다소 동의: 29.8%)하였으며 4.7%(전혀 동의안함: 0.7% + 별로 동의안함: 4.0%)는 동의하지 않았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5.4%였으며, 5점 기준으로 4.2점의 평균점을 보였다.

그림 III-74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조치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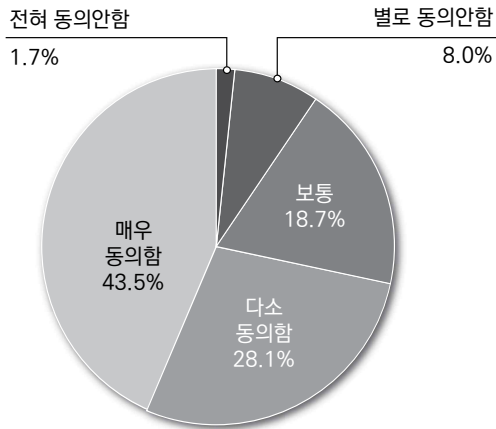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 중 북한에서의 당원이었던 경험, 그리고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에 따라 비상조치 사용에 동의하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달랐다. 북한에서 당원이었던 응답자는 5점 만점에 4.4점의 동의를 보였지만 북한에서 당원이 아니었던 응답자는 5점 만점에 4.2점의 동의 정도를 보였다. 그리고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만족하는 응답자(4.3점)의 동의 정도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 응답자(4.1점)의 동의 정도보다 높았다. 성별, 연령대, 남한 체류기간, 북한에서의 학력, 정치적 성향, 북한에서의 직업 유형

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엄격한 통제와 질서가 필요한지 물어보았다. 응답자의 71.6%(매우 동의: 43.5% + 다소 동의: 28.1%)가 효율성을 위해 엄격한 통제와 질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9.7%(전혀 동의안함: 1.7% + 별로 동의안함: 8.0%)는 동의하지 않았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18.7%였다. 평균은 4.2점이었다.

그림 III-75 ▶ 엄격한 통제 및 질서와 효율성에 대한 견해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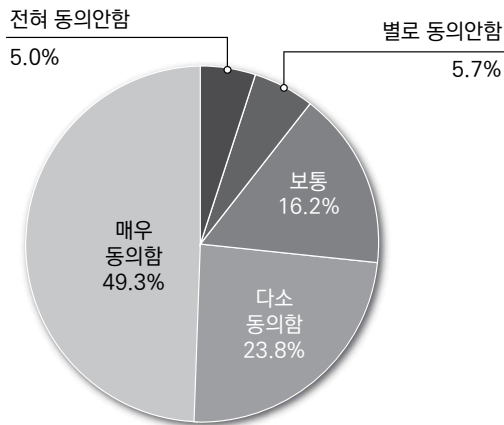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성별의 효과가 유의하였다. 남성은 4.2점, 여성은 3.9점으로 두 집단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령의 효과 역시 관찰되었다. 20대(3.5점)의 동의 정도가 40대(4.1점), 50대(4.3점), 60대(4.5점)의 동의 정도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40대, 50대, 60대의 동의 정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30대(3.9점)의 동의 정도는 60대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남한 거주기

- I
- II
- III
- IV
- V
- VI
- VII

간에 따른 효과도 관찰되었다. 11년 이상 거주한 응답자의 평균은 3.9 점, 6~10년 이상 거주한 응답자의 평균은 4.3점으로 두 집단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당원이었던 응답자(4.5점), 그리고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만족하는 응답자(4.2점)가 당원이 아니었던 응답자(3.8점), 그리고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만족하지 않는 응답자(3.8점)에 비해 동의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북한에서의 학력, 북한에서의 직업 유형, 정치적 성향의 각 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권위인식을 측정하는 4번째 문항은 “위대한 지도자가 시대를 만든다”였다. 본 문항에 동의한 비율은 73.1%(매우 동의: 49.3% + 다소 동의: 23.8%)였으며 동의하지 않은 비율은 10.7%(전혀 동의안함: 5.0% + 별로 동의안함: 5.7%)이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6.2%였으며 평균은 4.1점(5점 기준)이었다.

그림 III-76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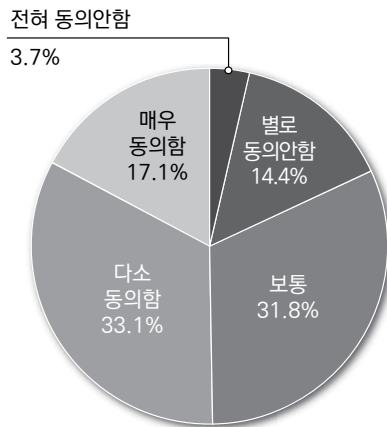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성별, 연령대(30대=40대 < 60대), 북한에서의 당원 여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다. 남성의 응답(4.2점)이 여성의 응답(3.9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30대(3.8점)와 40대(3.9점)의 응답이 60대(4.5점)의 응답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북한에서 당원이었던 응답자의 평균은 4.3점, 당원이 아니었던 응답자의 평균은 4.0점으로 북한에서 당원이었던 응답자가 위대한 지도자가 시대를 만든다고 믿는 정도가 강했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만족하는 응답자(4.2점)의 동의 정도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 응답자(3.9점)의 동의 정도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그 외 남한 체류기간, 북한에서의 학력, 북한에서의 직업 유형,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상사의 말에 잘 따르는 사원이 좋은 사원이다”의 질문에 50.2%(매우 동의: 17.1% + 다소 동의: 33.1%)가 동의한 반면 동의하지 않은 비율은 18.1%(전혀 동의안함: 3.7% + 별로 동의안함: 14.4%),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은 31.7%였다. 평균점은 3.5점(5점 기준)이었다.

그림 III-77 >> 좋은 사원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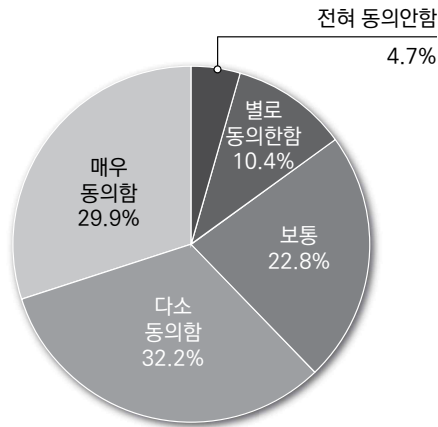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VI
VII

연령대의 차이와 체류기간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40대의 응답(3.3점)이 가장 낮았으며 60대의 응답(3.9점)이 가장 높았다. 두 집단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였다. 체류기간의 차이는 전반적 변량분석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왔지만 쌍별 사후 검증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5년 이하 응답자의 평균과 6~10년 거주자의 평균은 3.6점이었으며 11년 이상 거주자의 평균은 3.3점이었다. 따라서 11년 이후부터 동의 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수준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국민의 권리가 아닌 강력한 법질서가 남한 사회에 필요하다는 주장에 응답자의 62.1%(매우 동의: 29.9% + 다소 동의: 32.2%)가 동의하였다. 응답자의 15.1%(전혀 동의안함: 4.7% + 별로 동의안함: 10.4%)는 동의하지 않았으며, 응답자의 22.8%는 보통으로 응답하였다. 5점 기준으로 평균점은 3.7점이었다.

그림 III-78 ▶ 국민의 권리와 강력한 법질서 간 균형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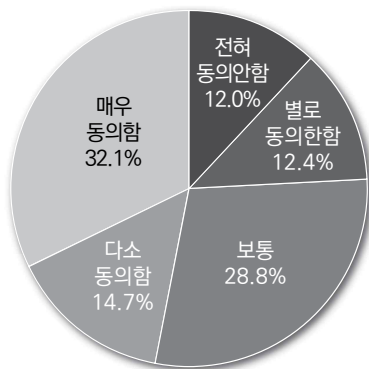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20대(3.1점)보다 40대(3.9점), 50대(4.1점), 60대(4.3점)의 동의 정도가 높았으며, 30대(3.5점)보다 50대, 60대의 동의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북한에서 당원이었던 응답자(4.0점)의 동의 정도가 당원이 아니었던 응답자(3.6점)의 동의 정도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본인을 보수라고 생각하는 응답자(4.0점)의 동의 정도가 본인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3.5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차이 역시 관찰되었다(불만족 응답자: 3.5점 vs. 만족 응답자: 3.8점). 그 외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수준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여성의 음주와 흡연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측정하였다. 응답자의 46.8%(매우 동의: 32.1% + 다소 동의: 14.7%)는 여성의 음주와 흡연이 꼴사납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28.8%는 보통으로, 24.4%(전혀 동의안함: 12.0% + 별로 동의안함: 12.4%)는 여성의 음주와 흡연이 꼴사납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III-79 ▶ 여성의 흡연과 음주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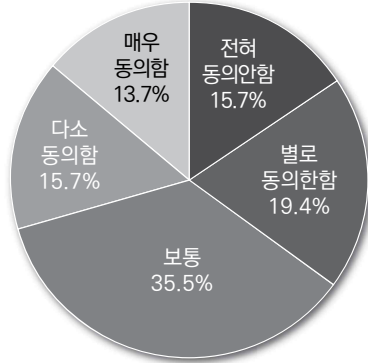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VI
VII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의 수준에 따른 차이만 관찰되었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만족하는 응답자(3.5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 응답자(3.2점)에 비해 여성의 흡연과 음주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높았다.

남아선호사상에 대해 “아이가 몇 명이 되더라도 남자 아이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의 문항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남아를 선호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비율보다 높지 않았다. 응답자의 29.4%(매우 동의: 13.7% + 다소 동의: 15.7%)가 반드시 남아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35.1%(전혀 동의안함: 15.7% + 별로 동의안함: 19.4%)는 동의하지 않았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 역시 35.5%였다. 5점기준의 평균은 3.2점이었다.

그림 III-80 ▶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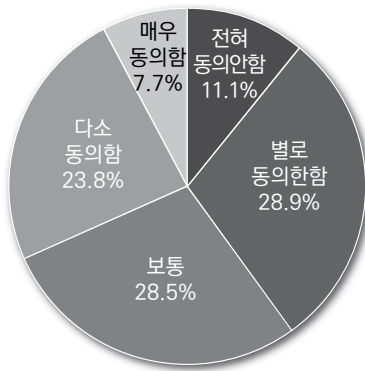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남성(3.2점)의 남아선호가 여성(2.7점)의 남아선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60대(3.4점)의 남아선호가 가장 높았으며, 60대의 남아선호는 20대(2.9점)와 30대(2.7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북한에서 당원이

있던 응답자(3.1점)의 남아선호가 당원이 아니었던 응답자(2.8점)의 남아선호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그 외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수준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그가 노력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배경이 좋았기 때문이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31.5%(매우 동의: 7.7% + 다소 동의: 23.8%)가 동의한 반면 응답자의 40.0%(전혀 동의안함: 11.1% + 별로 동의안함: 28.9%)는 동의하지 않았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8.5%이며 5점 기준 평균점은 2.9점이었다.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수준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Ⅲ-81 개인의 성공 배경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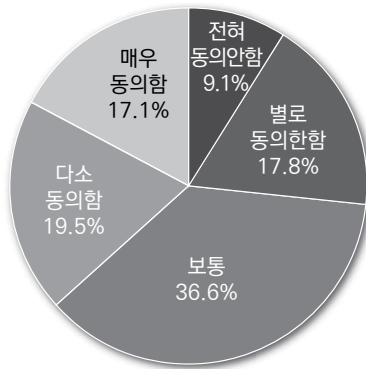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VI
VII

열 번째 문항으로 “남한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 지도자를 잘 따르는 국민들이다”를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36.6%(매우 동의: 17.1% + 다소 동의: 19.5%)가 동의하였으며 26.9%(전혀 동의안함: 9.1% + 별로 동의안함: 17.8%)는 동의하지 않았다. 응답자의 36.6%가 보통으로 응답하였으며 평균점은 3.2점이었다.

그림 III-82 >> 지도자와 국민의 관계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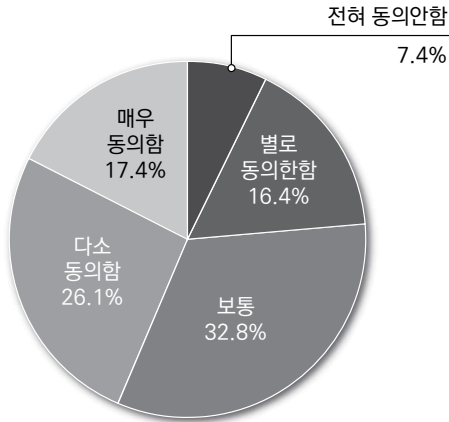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연령, 북한에서의 당원이었던 경험, 주관적 경제 만족도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다. 60대(4.1점)의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30대(2.7점)의 동의 정도가 가장 낮았다. 30대의 동의 정도는 50대(3.4점)의 동의 정도보다 낮았으며, 60대의 동의 정도는 50대의 동의 정도보다 높았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의 수준에 따른 차이만 관찰되었다. 북한에서 당원이었던 응답자(3.5점)의 동의 정도가 당원이 아니었던 응답자(3.1점)의 동의 정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만족하는 응답자(3.3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 응답자(3.0점)에 비해 지도자를 잘 따르는 국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더 높은 공감도를 보였다.

마지막 문항은 “정부 권력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국민들을 쓸데없이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였다. 마지막 문항에 동의한 비율(43.5%)이 동의하지 않은 비율(23.8%)보다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동의한 비율은 17.4%, 다소 동의한 비율은 26.1%, 별로 동의하지 않은 비율은 16.4%, 전혀 동의하지 않은 비율은 7.4%,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은 32.8%였다. 5점기준 평균점은 3.3점이었다.

그림 III-83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한 견해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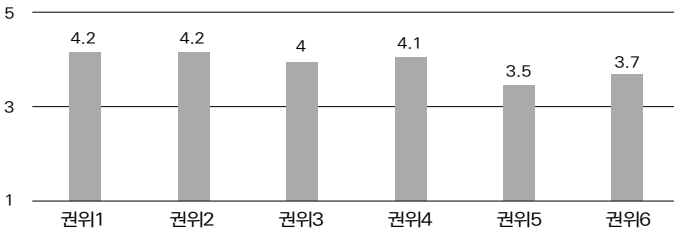
20대의 평균은 2.8점, 30대는 3.0점, 40대는 3.5점, 50대는 3.4점, 60대는 3.9점의 평균을 보였다. 60대의 동의 정도는 40대와 50대의 동의 정도보다 유의하게 높으며, 40대와 50대의 동의 정도는 20대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60대의 동의 정도는 30대의 동의 정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북한에서 당원이었던 응답자(3.5점)의 동의 정도가 당원이 아니었던 응답자(3.2점)의 동의 정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I
II
III
IV
V
VI
VII

나.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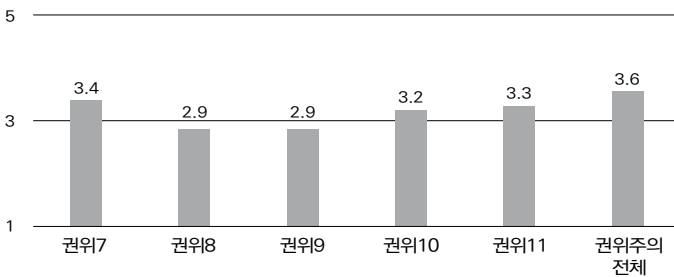
권위주의를 측정한 11개 문항이 단일한 개념으로 묶일 수 있는지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일한 구성개념으로 묶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¹⁶⁾ 따라서 11개 문항을 하나의 평균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요인이 권위주의의 다양한 요소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평균으로 표상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11개 문항의 개별 평균과 11개 문항 전체 평균을 <그림 III-84>과 <그림 III-85>에 제시하였다.

그림 III-84 권위주의 종합 1



출처: 필자 작성

그림 III-85 권위주의 종합 2



출처: 필자 작성

¹⁶⁾ 요인분석 결과 권위주의는 4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요인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심층분석에 제시하였다.

개별 문항별로 살펴보면 인습적 권위인 남아선호 사상(권위 8번 문항), 그리고 성공 배경의 역할(권위 9번 문항)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은 2.9점을 보였다. 지도자를 잘 따르는 국민의 필요성(권위 10번 문항, 3.2점)과 정부권력에 비판적인 사람에 대한 부정적 견해(권위 11번 문항, 3.3점)가 그 뒤를 따랐다. 4점 이상을 기록한 문항은 4개의 문항이었다. 젊은이에게 결단력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주장(권위 1번 문항, 4.2점),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비상조치도 가능하다는 주장(권위 2번 문항, 4.2점), 엄격한 통제와 질서가 필요하다는 주장(권위 3번 문항, 4.0점),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가 시대를 만든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권위 4번 문항, 4.1점)가 높은 수준을 나타냈었다.

11개 문항 전체 평균에 대해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다. 남성(3.7점)의 권위주의 의식이 여성(3.5점)의 권위주의 의식보다 높았으며, 연령의 효과 역시 유의하였다. 20대는 3.3점, 30대는 3.4점, 40대는 3.6점, 50대는 3.7점, 60대는 4.0점의 권위주의를 보였다. 20대와 30대, 40대의 권위주의 점수 차이는 없었다. 20대와 30대의 권위주의 의식은 50대와 60대에 비해 낮았으며, 40대의 권위주의 의식은 60대에 비해 낮았다. 40대와 50대의 권위주의 의식, 50대와 60대의 권위주의 의식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남한 체류기간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전반적 검증은 유의하였지만 사후 검증에서는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당원이었던 응답자(3.8점)의 권위주의 의식이 당원이 아니었던 응답자(3.5점)의 권위주의 의식보다 높았으며,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응답자(3.7점)가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응답자(3.5점)보다 권위주의 의식이 높았다.

I

II

III

IV

V

VI

VII

Ⅳ. 심층분석(1): 탈북민의 민주주의 제도 수용 - 정당일체감을 중심으로



1. 남북한 정치통합 과정에서 정당일체감의 의의

가. 연구 의의

본 장은 민주주의 체제의 수용과 적응의 한 양상으로서 탈북민의 정당일체감 특징과 형성 요인을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면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탈북민의 정당일체감의 다양한 분포상의 특징과 정당일체감의 형성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특정 정당에 대한 애착심’으로 정의되는 정당일체감은 정당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의 정책 선호와 투표 같은 다양한 정치적 행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¹⁷⁾ 따라서 탈북민의 정당일체감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 어떻게 적응하고 어떠한 정치적 선택을 하는지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통일 시대에 북한주민들이 통일한국에 다양한 정치행위를 예상하고 관련 준비를 하는데 필수적이다.

민주주의는 현존하는 가장 바람직한 정치체제이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참여함으로써 운영되는 정치체제이다. 따라서 정치참여는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권리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시민이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선거 참여나 다양한 정치·사회 단체 참여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

¹⁷⁾ Angus Campbell et al, *The American Vot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Philips E. Converse and Greg B. Markus, “Plus? a Change... The New CPS Election Study Panel,”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3 (1979), pp. 32~49; Morris P. Fiorina,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81); Michael S. Lewis-Beck et al, *The American Voter Revisited*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8); Richard G. Niemi and Kent M. Jennings, “Issues and Inheritance in the Formation of Party Identific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4 (1991), pp. 970~988.

I
II
III
IV
V
VI
VII

하여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간접민주주의가 보편적 형태이다. 즉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정치참여란 다양한 정치·사회 단체참여 및 선거참여를 통해 정책적 요구를 전달하고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선거참여는 시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정책 의사와 선호를 정치과정에 전달한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즉 선거 참여는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핵심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국민들의 선거참여는 민주주의에서 정부 정당성의 기반이 된다.¹⁸⁾

이렇듯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시민들의 선거참여를 유도하는 데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다. 그 중에서 정당일체감은 민주사회에서 선거를 포함한 다양한 정치참여를 유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정당일체감은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관심을 유도한다. 그리고 복잡한 정치적 사실과 정책의 내용들을 정당의 메시지에 따라 단순하게 이해하도록 도와 정책과 정치후보를 선택하는 것을 돕는다. 그 결과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높이게 된다.¹⁹⁾

본 장은 이렇듯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당일체감을 탈북민을 대상으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탈북민들이 정당일체감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 그들의 정당일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정치지식이 탈북민들의

¹⁸⁾ Sidney Verba and Norman H. Nie, *Participation America* (New York: Academic Press, 1972), p. 2; Sidney Verba, Kay L. Schlozman, and Henry E. Brady,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pp. 362~368.

¹⁹⁾ Steven Rosenstone and John M. Hansen, *Mobilization,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Macmillan, 1993), pp. 10~37; Theda Skocpol and Morris P. Fiorina, *Civic Engagement in American Democrac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9); 박찬욱, “한국인 정치참여의 특징과 결정요인: 2004년 조사결과 분석,” 『한국정치연구』, 제14집 1호 (2005), pp. 147~193; 강원택, “투표 참여,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의 기권자 분석,” 『현대정치연구』, 제1권 제2호 (2008), pp. 75~102.

정당일체감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이들의 정당일체감이 정치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한다. 이를 통해 탈북민과 통일시대에 북한주민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할 정책 마련에 함의를 얻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세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탈북민의 정당일체감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이 진정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하도록 할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한다. 정당일체감은 사회정치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따라서 탈북민들의 정당일체감의 양상과 형성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 적응해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을 도와준다. 또한 정당일체감은 정치적 믿음 체계(political belief system)의 주요한 부분으로 사람들의 정치 전반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자율적 선택으로 정당일체감을 가져본 적이 없는 탈북민의 정당일체감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 것은 이들의 전반적인 정치에 대한 인식 및 정치 행위를 가늠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통해 탈북민들이 진정한 우리 사회의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탈북민들이 민주시민으로 남한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통일의 한 과정이다. 더욱이 통일준비 과정과 통일 후 탈북민들이 민주시민으로 우리와 북한주민과의 사이에서 주요한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정치화 과정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둘째, 탈북민의 정당일체감에 대한 이해는 통일 이후 안정적 민주사회를 구현할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미래의 통일시대에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통일한국에서 북한주민이 민주시민으로 적응하고 성장하는 일이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대표적이며 중요한 시민의 역할은 선거를 비롯한 다양한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I
II
III
IV
V
VI
VII

자유로운 정치참여의 경험이 없는 북한주민에게 민주사회의 이러한 시민의 역할은 새로이 학습되고 체화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우리보다 통일을 먼저 이룬 독일의 경우, 통일 후 동독시민들은 민주주의에 적응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다수의 동독인들이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일부는 민주주의에 회의적이였다. 이러한 민주주의 부적응으로 인해 동독인들은 스스로를 통일독일과 민주사회의 이등시민으로 인식하고 서독인들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북한주민이 민주시민으로 적응하도록 할 정책이 통일준비 과정에서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이 민주시민이 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의 민주시민으로 정착해 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공산체제에서 온 탈북민들이 민주주의에 적응해 가는 양상과 특징은 통일시대 북한주민이 거치게 될 과정에 대한 예상과 계획을 가능하게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일시대 북한주민의 민주주의 사회적응 과정을 예상하고 대비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지금까지 탈북민들의 정당일체감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책적으로 뿐만 아니라 학술적으로 기존의 탈북자 연구의 영역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정당일체감 이론

정당일체감의 형성 원인과 과정에 관련한 연구는 미시간 학파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²⁰⁾ 이들에 따르면 정당일체감은 어린 시절부터의 정치 사회화(political socialization)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즉 정당일체감은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 한 사회의 정치 및 사회 구조에 적응해 사는데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사회화 과정이 일어나는 곳은 가정, 학교, 각종 정치·사회 및 종교단체, 미디어 등이다. 특히 정당일체감은 어린 시절 가정에서 부모의 영향을 받아 가장 먼저 형성되기 시작된다. 그 이후 학교, 직장 및 사회단체 활동 등에 참여하면서 교육, 친구 및 동료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특정 정당에 대한 애착심을 보다 발전시키게 된다. 전통주의는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정당일체감이 한 번 형성되면 잘 변하지 않는다고 본다.²¹⁾ 따라서 정치 및 사회의 가치와 태도가 처음 형성되는 가정이 가장 중요한 정치사회화 장소이다. 특히 다수의 연구가 부모의 영향력은 다른 정치사회화 과정에 비해 매우 강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²²⁾ 최근 남한 유권자에 대한 연구들도 우리 국민들의 정당일체감이 상당히 안

²⁰⁾ Campbell, *The American Voter*.

²¹⁾ Jennings M. Kent and Gregory B. Markus, "Partisan Orientation over the Long Haul: Results from the Three Wave Political Socialization Stud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8 (1984), pp. 1000~1018; David O. Sears and Carolyn L. Funk, "Evidence of the Long-Term Persistence of Adults Political Predispositions," *The Journal of Politics*, vol. 61, no. 1 (1995), pp. 1~28.

²²⁾ Kent M. Jennings and Richard G. Niemi, *The Political Character of Adolescence: The Influence of Families and School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4); Kent M. Jennings and Richard G. Niemi, *Generations and Politics: A Panel Study of Young Adults and their Parent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²³⁾

그런데 이러한 전통주의 입장은 탈북민의 정당일체감 형성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많은 탈북민의 경우 남한사회에서의 정당일체감이 부모의 영향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탈북민의 정당일체감의 습득과 형성 과정은 부모로부터 시작하는 어린 시절부터의 정치사회화의 결과라고 설명하기 어렵다. 물론 아주 어린시절 부모와 함께 탈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부모들 역시 남한사회의 정당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일 것이다. 그들의 부모들 역시 정당일체감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어린시절 남한에 왔다 하더라도, 남한의 정당과 관련한 정치적 태도와 가치를 부모로부터 배울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 즉 전통주의 입장은 탈북민과 같이 새로 정당일체감을 형성하는 사람들의 정당일체감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전통주의 입장의 한계에 주목하며 수정주의 입장은 정당일체감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²⁴⁾ 이들 수정주의자들은 정당일체감은 다양한 정치와 관련한 다양한 현상에 대한 평가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한다.²⁵⁾ 다시 말해 정당일체감은 인지적 평가에 기반을 두고

²³⁾ 박원호·신화용, “정당선호의 감정적 기반: 세월호 사건과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8집 제5호 (2015), pp. 119~142.

²⁴⁾ Christopher H. Achen, “Social Psychology, Demographic Variables and Linear Regression: Breaking the Iron Triangle in Voting Research,” *Political Behavior*, vol. 14, no. 3 (1992), pp. 195~211; Robert S. Erikson, Michael B. Mackuen, and James A. Stimson, *The Macro Pol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Morris,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 pp. 1~28, 193~236.

²⁵⁾ Richard Johnston, “Party Identification: Unmoved Mover or Sum of Preferenc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9, no. 1 (2006), pp. 329~351.

있는 애착심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적 평가의 결과로서 정당일체감은 정치지식, 그리고 정책 및 정치적 사건 그리고 정치인 등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적 평가는 자신의 이익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정당일체감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정치적 태도이다. 이러한 수정주의 입장은 정당일체감이 바뀐 사람이나 이민자, 그리고 탈북민들과 같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사람들의 정당일체감 형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한편 또 다른 수정주의적 입장인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적 설명은 이민자와 같이 새 삶의 터전을 위해 국경을 건너온 사람들은 이전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상징적 유대 관계를 단번에 버리거나 바꾸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²⁶⁾ 즉 이민자들의 정당일체감을 포함한 정치태도는 고국의 다양한 특질, 이주 후 고국과의 접촉 빈도 및 양상, 고국 언론보도에 대한 관심, 그리고 고국과의 정치적 유대감 등에 영향을 받는다.

본 장은 이러한 정당일체감 형성과 관련한 다양한 이론 중 수정주의자 입장에서 탈북민의 정당일체감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정치지식과 정책 입장이 탈북민의 정당일체감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다.

²⁶⁾ Glick Schiller Nina, Linda Basch, and Cristina Szanton Blanc, "From Immigrant to Transmigrant: Theorizing Transnational Migration," *Anthropological Quarterly*, vol. 8 (1995), pp.48~63; Lisa Lowe, *Immigration Acts: On Asian American Cultural Politics* (Durham, N.C.:Duke University Press, 1996); Pei-te Lien, Margaret Conway, and Janell Wong, *The Politics of Asian Americans: Diversity and Community* (New York: Routledge, 2004), pp. 21~23.

I
II
III
IV
V
VI
VII

2. 탈북민의 정당일체감의 특징과 형성요인

가. 탈북민의 정당일체감

탈북민의 정당일체감의 분포를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정당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정당일체감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 응답한 299명 가운데 52%인 154명이 긍정적으로 응하였다. 이들을 성별, 나이, 북한에서 당원 경험 유무 및 남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가 <표 IV-1>, <표 IV-2>, <표 IV-3>, 그리고 <표 IV-4>에 제시되어있다. 먼저 이들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IV-1>과 같다. <표 IV-1>에 보이는 바와 같이 남성 탈북민이 여성 탈북민보다 정당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10% 높은 비율로 정당일체감을 가지고 있다.

표 IV-1 > 정당일체감: 성별

(단위: 명(%))

정당일체감	남성	여성
없다	64(43)	81(54)
있다	86(57)	68(46)
합계	150(100)	149(100)

출처: 필자 작성

연령별 정당일체감의 분포를 살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정당일체감을 갖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에 제시된 바와 같이 70대를 제외하고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정당일체감을 갖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정치에 대한 지식, 경험, 신뢰 혹은 정치에 대한 관심 등이 많아지면서 정당일체감을 갖는 비율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탈북민의 경우도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2 ▶ 정당일체감: 연령

(단위: 명(%))

정당일체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합계
없다	1(100)	32 (76)	33 (52)	50 (51)	19 (31)	3 (16)	6 (46)	144 (48)
있다	0 (0)	10 (24)	31 (48)	48 (49)	42 (69)	16 (84)	7 (54)	154 (52)
합계	1(100)	42(100)	64(100)	98(100)	61(100)	19(100)	13(100)	298(100)

출처: 필자 작성

정당일체감에 대한 전통주의적 입장뿐만 아니라 수정주의 입장도 정당일체감의 형성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특히 기존의 정당일체감이 없고 인지적 평가 기반으로 사용되어야 할 정치지식과 정책판단 경험 등이 없을 때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남한사회의 정치제도와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탈북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은 탈북민의 남한 거주기간과 정당일체감 간의 단순한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다.

I
II
III
IV
V
VI
VII

표 IV-3 정당일체감: 탈북민의 남한 거주기간

(단위: 명(%))

정당일체감	5년 이하	6년~10년	11년~15년	15년~20년	20년 이상	합계
없다	45 (57)	37 (46)	54 (47)	9 (41)	0 (0)	145 (48)
있다	34 (43)	43 (54)	60 (53)	13 (59)	4(100)	154 (52)
합계	79(100)	80(100)	114(100)	22(100)	4(100)	299(100)

* 5년 이하: 2012.1월~2016.현재/6년~10년: 2007.1월~2011.12월/11년~15년: 2002.1월~2006.12월/15년~20년: 1997.1월~2001.12월/20년 이상: 1997년 이전.
출처: 필자 작성

남한에서의 거주기간과 정당일체감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 IV-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한에서의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정당일체감을 갖는 탈북민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체류기간이 6년 이상 10년 이하인 집단과 11년 이상 15년 이하인 집단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양상은 남한에서 체류기간이 늘어날수록 정당일체감을 갖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한국사회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정치사회화 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초국가적 이론에 의하면 이민자와 같이 삶의 터전을 바꾼 사람들에게 고국과의 상호작용과 고국에서의 경험은 새로운 사회에서의 정당일체감과 같은 정치태도에 영향을 준다. 탈북민의 정당일체감 형성과 관련하여서는 북한에서의 정당, 즉 공산당에 참여한 정치적 경험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사회 자본론에 의하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혹은 사적이든 공적이든 어떠한 조직에 동원되거나 참여한 경험은 다양한 형태의 정치관심과 정치참여를 높이는데 기여한다.²⁷⁾ 이러한 맥

²⁷⁾ Robert Putnam, Robert Leonardi, and Raffaella Y. Nanetti,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Robert Putnam,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2000).

락에서 명목상 당원이라도 북한에서 정당 활동에 참여한 경험은 남한에서도 정당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 자료에는 탈북민의 북한에서의 정당 활동과 관련하여 북한에서 당원 여부를 묻는 문항이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원 여부를 묻은 문항에 답한 응답자 300명 중 1/4에 해당하는 79명(26%)이 당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3/4정도인 220명(74%)이 당원이 아니었다. 당원 여부를 성별로 보면 79명의 당원 중 69명이 남자이고 10명이 여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남성 탈북민이 전체 당원 경력자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조사 대상이었던 150명의 남성 탈북민의 46%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이다. 반면 여성의 경우 전체 여성 응답자의 약 7% 미만이 당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탈북민의 정당일체감을 북한에서 당원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당원이었던 사람이 남한에서도 정당일체감을 갖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북한에서 당원이었던 79명의 탈북민 중 67%인 53명이 정당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정당일체감과 당원 경험과의 상관 관계만 볼 때는 북한의 정치적 경험이 남한에서의 정치적 경험으로 이전(transfer)된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

표 IV-4 > 정당일체감: 당원

(단위: 명(%))

정당일체감	비당원	당원	합계
없다	119 (54)	26 (33)	145 (48)
있다	101 (46)	53 (67)	154 (52)
합계	220(100)	79(100)	299(100)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VI
VII

요약하면 남한에서 거주기간이 길고 북한에서 당원으로서의 경험이 있을 때 정당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당일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이 함께 고려되었을 때도 한국의 거주기간과 북한의 정치적 경험이 여전히 유효한지는 경험적 분석을 통해 보다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당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탈북민의 지지정당을 살펴보면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지정당이 있다고 응답한 153명 중 119명, 즉 78%의 응답자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22%에 해당하는 34명만이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책면에서 어떠한 이유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지 살펴보면 보수정당 지지자와 진보정당 지지자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 자료는 특정 정당지지의 이유로 ①대북지원정책, ②통일정책, ③탈북자 정착지원정책, ④대북정책 등 4가지 북한 및 탈북자 정책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119명 중 50%에 해당하는 59명이 새누리당이 다른 당에 비해 통일정책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29%인 34명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이유로 탈북민 지원정책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일반적으로 보수정당이 진보정당에 비해 대북정책에 강경한 입장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탈북민 119명 중 3명만이 강경한 대북정책을 이유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흥미롭게도 새누리당을 제외한 진보정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탈북민들 역시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특정 정당지지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13명, 38%). 그 다음으로 24%에 해당하는 8명이 적극적인 대북지원 정책을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이유로 꼽았다.

지지정당의 이념적 성향과 관계없이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특정 정당의 지지이유라고 밝힌 점은 매우 흥미롭다. 이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탈북민의 경우 적극적인 통일정책이 북한 관련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당선택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다른 남한국민들과 마찬가지로 탈북민도 어떤 통일정책을 ‘적극적인’ 통일 정책으로 보느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정당지지 이유로 두 번째로 많이 선택된 응답을 살펴보면 진보 정당과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탈북민들 간 ‘대북지원정책’에 있어 다른 입장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보정당 지지자가 보다 높은 비율로 적극적인 대북지원정책을 진보정당의 지지이유로 설명했다. 본 연구 자료의 결과는 조사대상자 수와 응답자 수가 많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는 탈북민들이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남한정당 간의 정책차이를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 탈북민의 정당일체감과 정치지식

정치지식은 정치구조와 현상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정치지식은 정치에 대한 관심과 상호작용하여 특정 정당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책에 대한 판단을 도와 정당일체감 형성과 정치참여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조사자료는

²⁸⁾ Jeremy Albright, “Does Political Knowledge Erode Party Attachments?: A Review of the Cognitive Mobilization Thesis,” *Electoral Studies*, vol. 28, no. 2 (2008), pp. 248~260; Delli M., Carpini and Scott Keeter, *What Americans Know about Politics and Why it Matter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96); Delli M., Carpini and Scott Keeter, “The Internet and an Informed Citizenry,” in *The Civic Web: Online Politics and Democratic Values*, eds. D. M. Anderson and M. Cornfield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03), pp. 129~153.

I
II
III
IV
V
VI
VII

정치지식을 묻는 문항 6개를 포함하고 있다. 문항 내용은 여론조사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조직과 인물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남한의 국회의원 선출방법, 국회의원 총수, 남한의 대통령 임기, 통일부 장관 이름, 헌법 재판소, 투표 연령에 대한 사실적 정보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였다.²⁹⁾

정치지식을 묻는 6개의 문항에 모두 응답한 298명을 대상으로 탈북민의 정치지식 수준을 살펴보면 다수의 탈북민의 정치지식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V-5〉 참조). 보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14%에 해당하는 42명이 6개 모든 문항에 오답이나 ‘모르겠다’라는 대답을 하였다. 즉 한 문항도 정답을 제시하지 못한 응답자가 14%이다. 반면 여섯 문항 모두에 정답을 말한 응답자는 9명 즉 3%인 것으로 나타났다. 6개의 문항 중 2문항의 정답을 말한 사람의 비율이 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5 >> 정치지식

(단위: 명(%))

정치지식 수준	정답자
0개	42 (14)
1개	68 (23)
2개	74 (25)
3개	57 (19)
4개	32 (11)
5개	16 (5)
6개	9 (3)
합계	298(100)

출처: 필자 작성

²⁹⁾ 구체적인 문항내용은 본 보고서 앞의 기초통계자료 부분을 참고.

정치지식 수준에 성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지식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표 IV-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식수준의 성별 양상을 보면 한 문제도 정답을 맞히지 못한 비율은 남녀가 같다. 그러나 지식수준이 높ی 올라갈수록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 탈북민이 여성보다 당원으로서의 정치적 경험이 더 많고 정치에 대한 관심 그리고 교육 수준이 더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역시 두 변수 간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정치지식 수준: 성별

(단위: 명(%))

성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합계
여성	21 (50)	42 (62)	39 (53)	32 (56)	6 (18)	5 (31)	3 (33)	148 (50)
남성	21 (50)	26 (38)	35 (47)	25 (44)	26 (82)	11 (69)	6 (67)	150 (50)
합계	42(100)	68(100)	74(100)	57(100)	32(100)	16(100)	9(100)	298(100)

출처: 필자 작성

반면 정치지식과 나이 및 거주기간 사이에는 일정한 양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나이가 많아진다고 해서 남한에 대한 정치지식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남한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다고 해서 정치지식 수준이 더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남한에서 보낸 기간이 길다고 해서 정치정보를 더 많이 습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I
II
III
IV
V
VI
VII

탈북민의 정치지식과 정당일체감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정당일체감을 가진 탈북민이 더 높은 정치지식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표 IV-7>에 보이는 바와 같이, 한 문제도 정답을 제시하지 못한 응답자의 경우 정당일체감이 없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1개 이상의 문제를 맞힌 경우 정당일체감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개 이상의 문제를 맞힌 경우 정당일체감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70% 이상으로 매우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민의 경우 정치지식이 많을수록 정당일체감을 가질 확률이 높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관 관계가 정당일체감 형성과 관련된 다른 변수들이 통제되었을 때도 유지되는지는 경험적 분석을 통해 보다 엄밀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표 IV-7 > 정치지식

(단위: 명(%))

정당일체감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합계
없다	29 (69)	39 (58)	33 (45)	27 (47)	9 (28)	4 (25)	2 (22)	143 (48)
있다	13 (31)	28 (42)	41 (55)	30 (53)	23 (72)	12 (75)	7 (78)	154 (52)
합계	42(100)	67(100)	74(100)	57(100)	32(100)	16(100)	9(100)	297(100)

출처: 필자 작성

다. 탈북민의 정당일체감과 정책 선호

정당일체감 형성의 가변성을 주장하는 이론에 따르면 정책에 대한 선호(지지)가 정당일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즉 정당일체감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정당일체감이 정책의 선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주민이나 탈북민의 경우 부모나 동료로부터 정당에 대한 애착심을

발전시키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정당에 대한 애착심이나 지지는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정당이 이들의 정책 입장을 잘 수용하고 있다면 정당일체감을 발전시키기 더욱 용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수록 정당일체감을 가질 확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탈북민들은 남한의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정책분야에 관심과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들의 대북정책 및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이 두 정책은 구체적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들이 삶의 터전이었던 북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두 가지 정책 중 대북정책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탈북민 지원정책의 내용은 다른 이주민정책과 더불어 남한사회의 정착과 관련된 기본적인 보장과 관련되어 정당 간 입장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³⁰⁾ 이는 정당 입장에서 현재의 탈북민 관련 정책이 복지나 사회보장의 성격보다는 기본적인 정착에 대한 내용으로 큰 이견을 보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모두 ‘대체로’ 탈북민을 지원하는 정책의 내용에 의견을 같이 한다. 그 결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동인으로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반면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같은 대북정책은 정당 간 입장차이가 분명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의견 역시 비교적 분명하다.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조사 자료는 대북정책과 탈북민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3개의 문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 3개의 문항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대북정책 전반 그리고 탈북민의 남한정착을

³⁰⁾ 설동훈·전진영, “한국의 다문화 정치와 정당,” (2013년 한국정당학회 연례학술회의 자료집, 2013.11.22.); 민태은·오혜진, “한국의 다문화 정치와 전망: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를 중심으로,” (2015년 한국정당학회 연례학술회의 자료집, 2015.06.12.).

위한 지원제도에 대한 탈북민의 태도를 조사한다. 이들 세 개의 문항 중 태도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은 대북정책 일반과 탈북민의 남한 정착지원에 대한 문항이다. 이 두 문항의 응답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등 4점 척도로 측정되어 있다.

분석을 위해서는 이들 4점 척도 응답 중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와 ‘매우 동의한다’를 강경한 입장으로 묶고 나머지 두 개의 응답을 온건한 입장으로 묶어 정당일체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대북정책과 탈북민 지원정책에 대한 탈북민의 입장은 <표 IV-8>에 정리되어 있다. <표 IV-8>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대북정책의 경우 강경한 입장이 10%p 정도 많다. 그러나 탈북민 지원정책의 온건한 입장이 훨씬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68%의 응답자가 온건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V-10>).

표 IV-8 정책선호

(단위: 명(%))

정책선호	대북정책	탈북민 지원정책
온건한 입장	163(45)	197(68)
강경한 입장	132(55)	94(32)
합계	295(100)	291(100)

출처: 필자 작성

정당일체감과 대북정책 입장과의 관계를 살펴 보면 강경한 입장을 가지는 사람일수록 정당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강경한 입장인 162명 중 57%인 93명이 정당일체감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정당일체감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153명 중 61%에 해당한다.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통계치 역시 유의미한 관계임을 보인다. 그러나 예상대로 탈북민 지원정책의 입장과 정당일체감과의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탈북민 지원정책에 대한 선호도와 정당일체감 여부 간에는 눈에 띄는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았다(<표 IV-10> 참조).

표 IV-9 ▶ 정당일체감과 대북정책

(단위: 명(%))

정당일체감	온건한 입장	강경한 입장	합계
없다	72(55)	69(43)	141(48)
있다	60(45)	93(57)	153(52)
합계	132(100)	162(100)	294(100)

출처: 필자 작성

표 IV-10 ▶ 정당일체감과 탈북민 지원정책

(단위: 명(%))

정당일체감	온건한 입장	강경한 입장	합계
없다	91(46)	49(52)	140(48)
있다	105(54)	45(48)	150(52)
합계	196(100)	94(100)	290(100)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VI
VII

라. 탈북민의 정당일체감 형성요인: 실증분석

본 절은 관심변수인 정치지식과 정책선호가 탈북민의 정당일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실증분석한다. 주요변수는 다음과 같이 조작하였다.

(1) 변수

(가) 종속변수

정당일체감

종속변수인 정당일체감을 가변수(dummy variable)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정당일체감이 있는 경우 1을, 없는 경우에 0을 부여하였다. 종속변수가 가변수임으로 이항로짓분석(logit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나) 독립변수

정치지식

탈북민의 정당일체감 형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가 주목하는 정치지식은 0점에서 6점까지의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정치지식을 묻는 6개의 모든 문항에 정답을 말한 경우 6점을, 정답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경우 0점을 부여하였다.

정책선호

정책선호와 관련하여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을 가변수로 조작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지금보다 더욱 강경한 대북정책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조작화하였다. 강경한 입장인 ‘매우 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에 1을 부여하였다. 반면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와 ‘약간 동의한다’로 응답한 경우 0을 부여하였다. 탈북민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조작화하였다.

이 밖에 정치태도 및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이념, 수입, 성, 교육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교육의 경우 두 개의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북한에서의 교육 수준과 남한에서의 교육 수준을 모두 각각 분석에 포함하였다. 교육은 정치태도 전반에 영향을 주는 주요 사회경제(socioeconomic) 변수 중의 하나이다. 특히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로 이주한 후 그 사회에서의 교육 여부 혹은 교육 기간이 이민자의 정치태도 형성에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학교는 개인의 정치적 경험을 쌓고 정치지식과 태도를 세련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치사회화 장(場)이다. 즉 학교 교육과정은 정치지식을 얻고 정치문화를 습득하는데 중요한 원천이다. 따라서 남한에서의 교육 수준은 탈북민이 정당일체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3명을 제외한 모든 응답자가 북한에서 정규교육을 받았다. 반면 남한에서의 정규교육 수준을 묻는 문항의 응답자 297명 중 186명(62%)만이 정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다수의 탈북민이 북한에서의 정규교육 이수로 인해 남한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실증분석에는 남한에서의 최종학력 수준과 관계없이 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로 나누어 가변수로 포함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탈북민과 관련하여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는 남한의 거주기간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남한에서 거주기간은 년 단위로 연속 변수(continuous variable)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I
II
III
IV
V
VI
VII

(2) 실증분석 결과

〈표 IV-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치지식은 탈북민의 정당일체감을 형성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남한정치에 대한 지식이 많은 탈북민일수록 정당일체감을 갖는 것이다. 이밖에 이념적으로 보수적이고 나이가 많을수록 정당일체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치태도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교육 수준은 탈북민의 정당일체감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지식 수준이 탈북민의 정당일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수정주의 입장을 뒷받침한다. 즉 탈북민은 인지적 평가를 통해 정당일체감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탈북민의 대북정책과 탈북민 지원정책에 대한 선호는 정당일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정주의 입장에 의하면 정치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다양한 선호에 부합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을 도와 정당일체감을 갖는데 기여한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에 대한 판단은 정당일체감과 정당일체감의 강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³¹⁾ 그러나 탈북민의 정책선호는 정당일체감을 발전시키는 데 의미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민의 경우 정책의 직접적인 입장보다 정치지식이 보다 중요한 정당일체감 형성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³¹⁾ Christopher H. Achen, "Social Psychology, Demographic Variables and Linear Regression: Breaking the Iron Triangle in Voting Research," pp. 195~211; Jeremy Albright, "Does Political Knowledge Erode Party Attachments?: A Review of the Cognitive Mobilization Thesis," pp. 248~260; Fiorina,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

표 IV-11 > 정당일체감 형성요인

독립변수	정당일체감
정치지식	0.285** (2.61)
대북정책	0.474 (1.57)
탈북민 지원정책	-0.291 (-0.89)
당원 경험	0.00337 (0.01)
남한 거주기간(해)	-0.0158 (-0.40)
이념(진보=0,보수(10))	0.124* (1.96)
나이	0.0391* (2.39)
성별(여자=1)	-0.0764 (-0.22)
교육1(북한)	-0.0424 (-0.28)
교육2(남한)	-0.259 (-0.79)
수입	0.0255 (0.30)
N	229
R ² _McFadden	0.122
BIC	341.1

*t statistics in parentheses

*p<0.05, **p<0.01,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VI

VII

이러한 결과는 민주주의제도 운용에서 주요 행위자인 정당에 대한 탈북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제도와 운영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물론 최근 선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지식의 세련화가 정치와 정당에 대한 냉소주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그 결과 오히려 시민들의 정당일체감이 약해지고 있다.³²⁾ 그러나 이러한 냉소주의는 민주주의에서 정치와 정당에 대한 기대에 대한 실망이다. 즉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그리고 정치와 정당에 대한 관심이 그 바탕에 있다. 그러나 민주사회 시민으로 새로이 정착해야 하는 탈북민의 경우 정당일체감의 형성은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에 대한 신념과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또한 정당일체감이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시민의 정치참여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마. 정당일체감의 결과: 투표참여

정당일체감은 정치참여에 중요한 자원으로 알려져 왔다. 정당일체감이 있을 때, 혹은 정당일체감의 강도가 높을 때 투표를 비롯한 각종 정치참여에 적극적이라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왔다. 이러한 관계가 탈북민들의 정당일체감과 정치참여에도 성립하는지 경험적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참여에 정당일체감이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 IV-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당일체감은 투표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정당일체감이 있는 탈북민이 투표에 더 참여한다는 것이다.

³²⁾ Russell Dalton and Martin Wattenberg, *Parties without Partisa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표 IV-12 > 정당일체감과 투표참여

독립변수	투표참여
정당일체감	1.170** (3.28)
정치지식	-0.00369 (-0.03)
대북정책	-0.502 (-1.42)
탈북민 지원정책	-0.136 (-0.37)
당원 경험(유=1)	-0.0601 (-0.13)
남한 거주기간(년)	0.0160 (0.34)
이념(진보=0, 보수=10)	0.0462 (0.62)
나이	0.0485* (2.34)
성별	-0.319 (-0.81)
교육(북한)	-0.123 (-0.72)
남한(교육. 있다=1)	1.009* (2.52)
수입	-0.00889 (-0.09)
N	226
R ² _McFadden	0.141
BIC	293.5

*t statistics in parentheses

*p<0.05, **p<0.01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VI
VII

이러한 결과는 탈북민이 정치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돕는데 정당일체감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에 정당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 가지 주목할 결과는 남한에서의 교육 여부가 투표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남한에서 공부한 탈북민이 투표에 더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민이 남한사회에서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적응하는데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3. 남북 정치통합 과정에서 정책적 합의

정치참여는 국민이 국가를 다스린다는 민주주의 가치의 실현이다. 따라서 남한사회에서 진정한 시민이 된다는 것은 정치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와 원칙을 존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탈북민의 경우 자유로운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부족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탈북민의 정당일체감 형성에 정치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는 정책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탈북민의 정당일체감 형성을 위해 이들의 남한정치 전반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통일 후 북한주민을 민주사회 시민으로 배양하는데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향상시키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일체감과 남한에서의 교육이 탈북민의 정치참여를 높인다는 결과는 이러한 정치지식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시킨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남한에서 교육을 받은 탈북민의 경우 투표에 더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주시민으로서의 태도를 키우는데 남한에서의 제도

권 교육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특정 정책에 대한 선호나 지지가 탈북민의 정당일체감 형성과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결과는 정당을 포함한 다양한 정치사회 조직의 역할에 대한 재고를 요구한다. 즉 탈북민을 우리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조직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흑인을 포함한 인종 소수자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소극적 정치참여의 한 이유는 주요 정당을 포함한 정치·사회단체가 이들에 대해 적극적 동원을 하지않기 때문이다.³³⁾ 즉 이들이 특정 정책적 입장이 있더라도 정치 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외는 다른 인종 간 사회적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탈북민이 정책적 선호를 정당일체감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치정보를 제공하고 정치참여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많은 정치·사회단체가 탈북민에 소홀한 것이 한 원인이라 판단된다. 탈북민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남한주민들과 조화롭게 어울려 사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위해 필수적이다. 또한 통일 후 북한주민과 남한주민 사이에서 탈북민이 교량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다양한 정치·사회 조직들이 적극적으로 북한주민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³³⁾ Steven Rosenstone and John M. Hansen, *Mobilization,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Macmillan, 1993); Theda Skocpol and Morris P. Fiorina, *Civic Engagement in American Democracy* (Washington D.C.: Brooking Institution Press, 1999).

I
II
III
IV
V
VI
VII

V. 심층분석(2): 탈북민의 자본주의 제도 수용



1. 분석의 의의 및 연구자료

가. 한국 불평등 상황과 탈북민의 인식의 의의

통일 이후 과연 북한주민들은 자본주의 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 이래 한국의 불평등과 소득 격차는 계속 확대되어 오고 있다. 이 같은 불평등성의 급속한 증가는 국내의 취약계층이나 소수자 뿐 아니라 청년 등 새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신입자에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인 2000 년대에 한국사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탈북민들 역시 한국의 무한경쟁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북한 시장화 이전 및 이후에 한국에 입국한 세대들의 자본주의 제도 인식의 차이를 밝히고, 탈북민의 자본주의 제도에 대한 수용력을 높이기 위한 조건을 한국의 불평등 상황, 즉 기회의 불평등, 소득의 불평등 그리고 사회적 인정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여 년 간 탈북민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가지 부적응 현상은 통일 이후에도 한국사회가 주도하는 통일과 자본주의 경제로의 전환을 북한주민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2015년도 「신통일대계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탈북민 조사결과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탈북민은 자본주의 가치 중 ‘노동의 가치와 경쟁을 통한 발전’, ‘능력 중심 사회’, 그리고 ‘사유재산제도의 효율성’에 상대적으로 높은 공감을 나타내었지만 ‘능력에 기반한 분배 정의’에는 큰 반감을 나타냈다. 더욱이 ‘남한 거주기간(residence period of South Korea)’이 오래된 탈북민에게서 ‘능력 중심 사회’, 그리고 ‘사유재산제도의 효율성’, ‘능력에 기반한 분배 정의’에 대한 낮은 공감도가 발견되었다. 2016년 조사에서는 이러한 점

I
II
III
IV
V
VI
VII

에 착안하여 자본주의의 분배와 성과에 기반한 보상의 문제 및 경쟁과 같은 자본주의 제도에 대한 탈북민의 인식과 태도를 심층적으로 밝히는 것을 연구 목표로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부적응의 대표적 현상이라고 일컬어온 탈남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불평등 요인은 무엇 인지를 규명함으로써 통일 이후 북한주민의 자본주의 제도의 수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 시장화 이전에 입국한 세대와 시장화 이후에 입국한 세대들의 자본주의 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는 어떠하며, 한국의 불평등 상황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회화된 탈북민들이 한국 자본주의 무한경쟁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경험적 시사를 제공하는 선행 논의는 독일의 통일 이후 일어난 ‘동독의 귀환현상’(Wiederkehr des Ostdeutschen)을 둘러싼 논쟁이다. 이른바 ‘동독의 귀환’ 현상이란 독일이 통일된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동독주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형성되기 시작한 반항적 정체성을 의미한다. 즉, 통일을 열렬하게 기구해온 동독주민들이 자신을 희생자와 패배자로 한탄하고 생활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인정하지도 수용하지도 않는 현상은 독일 학계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³⁴⁾ 과거 통일독일에서 발생한 ‘동독의 귀환’ 현상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회화론’과 ‘불평등론’ 사이의 논쟁은 오늘날 한국 상황이나 나아가 앞으로 남북통일 이후 북한주민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사회화가설은 동독주민들이 자본주의가 아니라 평등주의적 재화배분의 원리를 지향하는 사회주의 모델을 선호함을 가정한다. ‘사

³⁴⁾ 전태국, 『사회통합과 한국 통일의 길 내적 장벽을 넘어서』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3), p. 93.

회화론'은 체제의 각인이 깊이 내면화되어서 통일이 되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함축을 지지한다.³⁵⁾ 사회화론에 따르면, 북한주민은 북한사회에서 태어나고 사회화되면서 이 같은 심성이 만들어졌기에 비록 탈북하여 한국에 왔다 할지라도 북한에서 겪은 규범적 표준들이 신속하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북한주민은 과거 사회주의에서 학습화되면서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독일과 다르다. 독일과 같이 급속한 통일이 아니라, 북한사회에서 대기아를 겪은 이래 이미 20여 년 동안이나 시장화가 서서히 진행되어 왔기에, 북한의 체제는 균열하며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장마당에서 사회화된 북한주민들 그 중에서도 특히 시장활동을 주도해온 북한주민들은 통일 이후에 자본주의 경제로의 전환에 대해 오히려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런 전제 하에 북한주민들은 내면적으로는 균질하지 않지만 이미 자본주의 가치관을 상당부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즉, 북한주민은 북한사회에서 사회화되며 북한 시장화의 진전이 북한주민의 자본주의 제도 수용력을 높일 것인가? 그러나 설사 북한 시장화의 진전을 높인다고 할지라도 곧 '북한의 시장화=자본주의화'는 아니므로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북한적 특수성이 나타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시장화 이후 북한주민들의 자본주의 수용 가능성과 그 양상에 대해 탈북민 인식조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탐색한다.

이 연구에서 기존연구와 차별화하여 새로이 제기하고자 하는 주장은 '한국 불평등 상황의 영향'이다. 독일통일 이후 사회화 가설의 반대 축을 이루었던 '상황론'의 통찰을 빌린 것이기도 하다. 핀(Hans-Joachim

³⁵⁾ 공산독일(DDR)에서 겪은 사회화 경험이 이러한 심성을 만들어냈으며, 아무리 통일 이후 서독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경제에 재편되었지만, 공산독일에서 겪은 규범적 표준들이 신속하게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의 책, p. 95.

I
II
III
IV
V
VI
VII

Veen)과 리터(Claudia Ritter)에 의해 대표되는 ‘상황론’은 체제의 각 인이 사회적 조건의 변화와 함께 급속하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을 함축한다.³⁶⁾ 상황론의 관점에서 문제시하는 것은 북한주민의 사회주의적 심성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사회의 불평등구조이다. 소수자나 약자, 노동자에게 불리하고 북한사람과 남한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고 불평등하게 대한다면, 이 같은 여건은 그들의 적대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저항적 정체성을 형성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탈북민 혹은 북한주민이 자본주의 제도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려는 전향적 태도를 지녔다고 할지라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불평등한 한국사회의 위계적 구조 속에 들어간 탈북민들은 이를 내면화하면서 스스로를 ‘이등국민’으로 의식하게 될 것이고, 소수자인 그들은 적극적인 저항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voice)를 내거나 인정투쟁³⁷⁾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불평등한 공간을 떠나는 ‘탈출(exit)’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가설은 현재 탈북민 사회에 만연해 있는 탈남현상과 이등국민 의식을 사회주의적 심성의 결과가 아니라 한국사회 불평등의 결과로 보는 관점을 취한다. 합법적 이민이든 불법적인 난민을 가장한 탈남이든 간에 ‘탈남’(escape from South Korea)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저항의 한 방식이다.

한국의 불평등 상황은 북한주민의 자본주의 수용성에 부정적인 힘으

³⁶⁾ 위의 책, p. 34.

³⁷⁾ 인정(Anerkennung)은 헤겔의 인정투쟁 개념에서 출발하여 미드의 사회심리학을 거쳐 호네프에 이르러 현대적 종합이 이루어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다. 인정의 유형은 사랑(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인정), 권리(자주적이고 도덕적 판단능력이 있는 존재로 인정), 연대(개성을 지닌 특수한 존재로서의 개인에 대한 인정)로 구별된다. 인간은 세 가지 차원에서 자기정체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자기 정체성 형성의 과정은 ‘타자를 통한 인정의 경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인정은 상호주관적(intersubjektiv)이다. Axel Honneth, *Cultural-Political Interventions in the Unfinished Project of Enlightenment* (Cambridge: MIT Press, 1992), pp. 148~211.

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주민의 자본주의 수용성이 증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한국의 불평등 상황이 개선되고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계층 간 갈등이 줄어들며 분배의 공정성과 사회적 인정이 보편화되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역으로 북한주민의 자본주의 수용성이 감소되는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북한의 시장화가 후퇴하고, 한국의 불평등성이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연구순서는 제1절 서론에서 문제 의식을 밝히고, 제2절에서 연구방법, 표본의 특성 및 기초통계를 제시한다. 이어 제3절 '입국 세대별 자본주의 제도 인식'에서 입국 세대별로 자본주의 인식이 어떤 차이 혹은 동질성을 보이는지 비교한다. 이어서 제V장 제4절 '한국사회 불평등과 탈남 결정요인'에서는 한국의 불평등 상황이 이들의 탈남의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나. 연구자료

(1) 연구모형

제V장의 연구내용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는 탈북민 중에서도 식량난민 세대와 시장화 세대, 그 중에서도 최근 김정은 세대의 자본주의 제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전제는 탈북민의 인식 또한 입국시기에 따라 세대별 특징을 보이며, 이는 북한주민의 자본주의에 대한 의식변화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각 입국 세대 즉, 시장화 이전과 이후, 그리고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 세대들의 자본주의 제도 인식은 어떠한지를 연구한다. 만약 2010년 이래 들어온 시장화 이후 입국 세대와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십 수년 간 살아오면서 적응하고자 노력해 온 식량난민 세대 간에 자본주의 제도 지향성이 거의 차이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라면, 북한에서 진행되는 시장화는 북한주민의 자본주의 수용력

I

II

III

IV

V

VI

VII

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북한 시장화가 자본주의화는 아니다. 더욱이 북한사회는 계획경제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양문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주민의 다수가 현재 장마당에 기반하여 생활하고 있다 할지라도 “북한주민들이 현상적으로는 자본주의 세계관을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거나 상당한 혼란을 겪는 공산이 크다.”³⁸⁾ 따라서 북한주민들이 시장 친화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지라도 삶의 양식으로서 자본주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보다 치밀한 파악이 필요해진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식량난민 시대에 들어온 탈북민 집단과 시장화 이후 들어온 집단, 그 중에서도 최근 김정은 정권 이후에 들어온 탈북민 집단을 구분한 후 집단평균분석인 일원변량분석(one-way variable analysis)을 통해 ‘입국 세대별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다. 여기서 알아보려는 초점은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경쟁이나 성과에 따른 보상, 경영자나 노동자 보상의 차등성 등에 대해 탈북민이 입국 세대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라는 문제이다. 이들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만약 존재한다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 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1990년대 중반에서 2016년 현재까지 한국에 입국한 입국 세대들을 식량난민 집단과 시장화 이후에 입국한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할당표집 조사를 실시하였다.³⁹⁾

둘째,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 즉 소득의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 각종 노동차별 그리고 탈북민이 경험하는 차별 등이 현재 탈북민의 탈남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불평

³⁸⁾ 양문수, “북한주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 성향에 대한 정량적 연구,” (2015년 북한대학원대학교 SSK 남북한 마음통합연구단 학술회의 자료집, 2015.8.19), p. 77.

³⁹⁾ 그간 조사 여건상 확률표집이나 할당표집을 실시한 사례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탈북민의 표집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조사의 난점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

등 상황에서 남한 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탈남의사는 더욱 커질 것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한국의 불평등’이란 탈북민에게만 가해지는 불평등을 포함하여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 등을 가리키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며, 기회의 불평등과 소득의 격차, 사회적 인정을 포함하는 복합적 상위개념이다.

(2) 표본의 특성

이 조사연구에서는 탈북민이 이해하고 있는 자본주의 제도원리와 입국한 이래 그들이 경험한 한국사회의 불평등 상황에 대해 기술통계를 제시한다. 그리고, 2016년도 조사시 나타났던 자본주의 경제제도 적응 인식변화 지체현상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세 집단(A, B, C)의 인식편차를 관찰한다. A, B, C 각 집단들이 각기 자본주의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탈북민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이후 자본주의의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각 입국 세대는 빈곤책임, 보상, 경쟁, 분배 측면에서 어떤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논의한다.

(3) 주요변수 및 설문 자료

여기서 북한 시장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최근에 탈북한 C 집단은 A 집단이나 B 집단에 비해 자본주의 제도에 대해 더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는지, 아니면 최소 12년 이상 남한사회에 거주하면서 정착해온 A 집단이 B 집단이나 C 집단에 비해 자본주의 제도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는지 탐색해본다.

I

II

III

IV

V

VI

VII

표 V-1 주요변수의 기초통계량

주요변수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자본주의 제도이해	자본주의 이미지	재북당시 자본주의1	300	1	7	3.8	2.1
		남한에서 자본주의1	300	1	6	2.7	1.6
	보상	성과/필요	299	1	10	3.7	2.8
		최고경영자 보상수준	299	1	10	5.6	2.8
	경쟁	선호여부	300	1	10	5.6	2.7
	소득결정 요인	능력	300	1	10	2.0	1.1
		노력	300	1	9	1.9	1.1
	개인 vs 집단	빈곤 원인	299	1	10	4.2	2.6
		개인자유 제한	300	1	10	6.0	2.6
	계층구조	통일한국	300	1	5	3.8	0.9
한국의 불평등인식	소득격차	격차	300	1	5	3.9	1.1
		정부 책임	300	1	6	3.7	1.0
		빈곤층 수혜	300	1	5	1.9	1.0
	분야별 불평등	교육기회	300	1	9	3.4	1.3
		취업기회	300	1	9	2.9	1.3
		승진, 승급기회	300	1	9	2.9	1.3
		법의 집행	300	1	9	3.1	1.3
		여성 대우	300	1	9	3.8	1.2
		소득과 재산	300	1	9	2.9	1.2
	계층구조	남한/북한 출신	300	1	9	2.8	1.9
		북한 계층구조	300	1	5	1.7	1.1
	남한 계층구조	남한 계층구조	300	1	5	3.4	1.1
		부당한 대우	근로자 부당/정당	299	1	10	5.5
	부당한 대우경험		285	1	10	4.6	2.8
	차별 양상		300	1	9	4.8	3.2
	일터 괴롭힘		300	1	9	2.3	1.8
	임금 적정성		261	1	5	2.6	0.7
사회적 이동성	개인 vs 부모배경	300	1	10	4.7	2.8	
	상승이동	300	1	10	3.9	2.4	
탈북민 차별 의식	편견	300	1	4	2.7	0.7	
	이등국민	300	1	4	2.4	0.9	
	탈남의사	300	1	4	1.7	0.9	

출처: 필자 작성

본 설문조사에서 경제의식 문항은 <부록>에서 보듯이 문 4번~7번까지 총 13문항으로 구성된다. 4번 문항(4-1, 4-2, 4-3, 4-4)과 6번 문항(6-1, 6-2, 6-2, 6-2, 6-5)과 7번 문항(7-1, 7-2)은 탈북민들이 입국집단별로 자본주의적 사고방식과 사회주의적 사고방식 중 어떤 지향성을 보이는지 비교한다. 원래 이 문항들 중 문 4번, 문 5번, 문 6번, 문 7번은 2009년도 세계 불평등조사(ISSP)와 2009년, 2014년도 KGSS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일부 수정하거나 본 연구자가 새로이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V-2 자본주의 제도인식 설문 문항

		보기	설문 문항	비고
자본주의 개념	4-1. 북한에서 자본주의 이미지1	<보기> ①물질적 풍요 ② 부정부패 ③경쟁 ④효율성 ⑤빈부격차 ⑥ 풍부한 기회 ⑦착취	문 4	KGSS 문항 수정
	4-2. 북한에서 자본주의 이미지2			
	4-3. 남한에서 자본주의 이미지1			
	4-4. 남한에서 자본주의 이미지2			
계층구조	5-1. 북한사회 유형	<보기> ①기동형 ②피라미드형 ③탑형 ④다이아몬드형 ⑤역삼각형	문 5	KGSS 문항 수정
	5-2. 남한사회 유형			
	5-3. 통일한국 유형			
개인주의 vs 집합주의	6-1. 누군가 생계의 어려움이 있다면 (개인/사회)의 책임이다.	10점 양극 척도 1-4. 개인, 5-6. 중립, 7-10. 사회	문 6-1	KGSS 문항
	6-3.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행복은 제한될 수 (있다/없다)	10점 양극 척도 1~4. 제한될 수 있다, 5~6. 중립, 7~10. 제한될 수 없다	문 6	
경쟁과 보상	경쟁은 사람들과 세상을 (살기 좋게/어렵게) 만든다	10점 양극 척도 1~4. 살기 좋은, 5~6. 중립, 7~10. 살기 어려운	문 6	자체 문항 개발
	(일의 성과/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10점 양극 척도 1~4. 일의 성과, 5~6. 중립, 7~10. 사람들의 필요		
경제적 평등	기업 최고경영자들에게 (최고의/동등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10점 양극 척도 1~4. 최고의, 5~6. 중립, 7~10. 동등한	문 6	

I
II
III
IV
V
VI
VII

		보기	설문 문항	비고
소득결정 요인	7-1. 소득이 결정되는 데는 능력이 중요하다 7-2. 소득이 결정되는 데는 노력이 중요하다.	5점 척도	문 7	KGSS 문항 수정

출처: 필자 작성

표 V-3 한국사회 불평등인식 설문 문항

번호		보기	설문	비고
소득 불평등 (4)	8-1. 소득격차가 크다	5점 척도	문 8번	KGSS 문항 수정
	8-2.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책임			
	8-3. 빈곤층 혜택을 줄여야한다			
	11. 보상의 적정성	5점 척도	문 11번	
기회 불평등 (7)	9-1. 교육기회	5점 척도	문 9번	
	9-2. 취업기회			
	9-3. 승진, 승급기회			
	9-4. 법의 집행			
	9-5. 여성의 대우			
	9-6. 소득과 재산			
	9-7. 남한출신/북한출신			
사회적 이동성 (3)	10-1. 개인능력 vs 부모배경	10점 양극척도	문 10번	
	10-2. 교육을 통한 상승이동			
	10-3. 근로자에 대한 대우			
노동 차별 (3)	12-1. 부당한 대우경험 유무	10점 척도	문 12번	자체 문항 개발
	12-2. 부당한 대우 상황	취업시, 임금, 교육 훈련, 승진과 승급, 퇴직, 진학, 가정, 사회생활		
	12-3. 일터 괴롭힘 경험여부	3점 척도 있다. 없다. 해당사항 없음		
차별 경험 (3)	13-1. 편견	4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13번	
	13-2. 이등국민			
	13-3. 탈남의사			

출처: 필자 작성

2. 입국 세대별 자본주의 제도 인식

가. 자료의 특성

이 연구에서는 탈북민의 자본주의 제도 인식을 입국 세대별로 파악하기 위해 먼저 시장화 이전에 입국한 세대를 가리켜 ‘식량난민 세대’, 북한 시장화 이후에 한국에 온 세대를 ‘시장화 이후 세대’로 명명하고, 특히 김정은 정권 이후 2011년부터 입국한 탈북민 세대를 ‘김정은 세대’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며, 각 세대 집단이 공유하는 공통점과 세대 간 차이점을 탐색한다. 입국 세대 구분의 기준점을 보면, 식량난민 세대는 고난의 행군시 탈북하여 한국에 2004년 이전에 입국한 세대이다. 또, 시장화 세대는 2005년~2010년 사이에 들어온 세대를 가리킨다. 또, 김정은 입국 세대는 김정은 통치의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탈북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가 행해진 2011년부터 입국한 세대를 가리킨다. 특히 여기에서 자본주의 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과 보상원리(성과냐 필요냐), 경영자와 노동자의 임금수준 간 보상의 격차, 빈곤의 원인 등에 대한 시장화 세대와 식량난민 세대들의 생각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주로 1990년대에 탈북한 후에 2004년 이전 시기까지 입국한 식량난민 세대들은 십 수년 동안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반면, 최근에 탈북한 입국 세대 역시 북한의 시장화와 혼합경제 하에서 사회화되는 가운데 북한 내부에서 많은 의식변화를 겪어왔다. 최근에 입국한 세대들과 식량난민으로서 한국의 자본주의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던 초기 입국 세대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의 어떤 지점에서 공통되며 혹은 다른지 비교해보고자 한다.

먼저 자료의 특성을 입국 세대별로 인구학적, 인적자본, 계층적 특성

I
II
III
IV
V
VI
VII

에 관해 살펴보았다. 연령대, 출신지역, 경제적 계층, 남한 학력, 현재 소득, 남한의 정치성향(진보, 중도, 보수)면에서 입국 세대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지역, 연령대, 북한의 일 유형, 남한의 학력과 남한 소득에 있어 입국 세대별 차이가 카이 검증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특성에 대해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출신지역에 있어서는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79.7%로 높았지만, 최근에 입국한 세대일수록 더욱 국경지역 쏠림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이것은 김정은 시기 들어와서 탈북에 대한 강한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현실적으로 내륙지방에 사는 주민들은 탈북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여겨진다. 연령대를 보면, 김정은 세대는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8.0%로 가장 높고, 식량난민 세대는 40대와 50대가, 시장화 세대는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 입국 세대별 연령별 차이가 뚜렷한데($\chi^2=30.022$, $p=.000^{***}$) 이는 탈북의 위험도가 크므로, 체력이 강한 젊은 층들이 주로 탈북을 하는 현실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응답자의 일 유형(work type)을 살펴보면 최근에 올수록 비공식일 유형이 늘어나고 공식일 유형이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하다($\chi^2=11.376$, $p=.079<.1$). 북한 경제적 계층을 보면, 최근에 올수록 중층이 늘어나고 하층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난다. 식량난민 세대들은 중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49.5%로 절반을 밀돌았으나 김정은 세대에 들어와서는 중층이 57.1%로 증가하였다. 남한에서 취득한 학력 상황을 살펴보면, 대학을 졸업한 경우 식량난민 세대는 남한에 와서 대학을 마친 비중이 27.3%였으나, 김정은 세대에 와서는 17.2%이다.($\chi^2=13.848$, $p=.008$) .005**) 응답자의 현재 남한에서의 소득수준을 보면, 탈북민 중 최고 소득군이라고 할 수 있는 350만원 이상은 식량난민 세대 중 7.0%였으나, 김정은 세대는 0.0%였다.($\chi^2=23.814$, $p=.008$) .005**)

표 V-4 >> 입국 세대별 남북한 요인의 특성

	성	항목	입국세대			전체	x ²	유의도
			식량난민세대	시장화세대	김정은세대			
인구학적 요인	성	남성	50.0	50.0	50.0%	50.0%	.000	1.000
		여성	50.0	50.0	50.0%	50.0%		
	연령대	20대	4.0	12.1	28.0%	14.7%	30.022	.000***
		30대	20.0	20.2	24.0%	21.4%		
		40대	35.0	39.4%	24.0%	32.8%		
		50대	28.0	17.2%	16.0%	20.4%		
	지역	국경	69.0	81.0%	89.0%	79.7%	12.511	.002**
		내륙	31.0	19.0%	11.0%	20.3%		
북한 요인	북한 학력	고등중 이하	57.0	63.0%	66.0%	62.0%	8.046	.235
		전문학교	24.0	21.0%	23.0%	22.7%		
		대졸 이상	16.0	16.0%	11.0%	14.3%		
		해당 없음	3.0	0.0%	0.0%	1.0%		
	일 유형	공식일	42.0	44.0%	28.0%	38.0%	11.376	.079 ⁺
		이종일	24.0	18.0%	24.0%	22.0%		
		비공식일	21.0	23.0%	37.0%	27.0%		
		기타	13.0	15.0%	11.0%	13.0%		
	정치 신분	상층	8.1	5.1%	9.2%	7.4%	3.285	.511
		중층	51.5	45.5%	52.0%	49.7%		
		하층	40.4	49.5%	38.8%	42.9%		
	경제 계층	상층	10.1	4.0%	3.1%	5.7%	7.774	.100
중층		49.5	55.6%	66.3%	57.1%			
하층		40.4	40.4%	30.6%	37.2%			
남한 요인	남한 학력	전문졸 이하	20.2	20.4%	20.0%	20.2%	13.848	.008**
		대졸	27.3	16.3%	8.0%	17.2%		
		정규학력 무	52.5	63.3%	72.0%	62.6%		
	남한 계층	상층	1.0	0.0%	1.0%	.7%	7.774	.100
		중층	46.5	37.4%	28.6%	37.5%		
		하층	52.5	62.6%	70.4%	61.8%		
	현재 소득	50만 미만	15.0	23.0%	19.0%	19.0%	23.814	.008**
		51~150	35.0	32.0%	30.0%	32.3%		
		151~250	23.0	18.0%	20.0%	20.3%		
		251-350	9.0	10.0%	3.0%	7.3%		
		350만 이상	7.0	5.0%	0.0%	4.0%		
		소득 없음	11.0	12.0%	28.0%	17.0%		
	남한 정치성향	진보	20.0	24.0%	42.9%	28.9%	23.211	.000***
		중도	34.0	44.0%	38.8%	38.9%		
		보수	46.0	32.0%	18.4%	32.2%		

⁺p>.1, *p>.01 **p>.005 ***p>.001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VI
VII

북한이 시장화되면서 북한주민들은 시장화 이후에는 자본주의 제도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식량난 시대에 탈북하여 중국과 한국에서 생활해온 탈북민들의 자본주의 제도에 대한 태도와 시장화가 진전된 최근에 탈북한 북한주민들은 자본주의 제도에 대한 인식이 있어 어떤 차이를 보일 것인가? 입국 세대별로 자본주의 제도에 대한 인식을 대변하는 변수들 즉, 생계 어려움의 원인(빈곤책임이 개인이냐 국가냐), 공익을 이유로 개인 자유의 제한, 성과냐 필요냐(노동보상의 원리), 기업 최고경영자 보상수준(경제적 평등주의), 경쟁에 대한 태도, 소득 결정요인(능력 vs 노력)을 측정한다. 각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아래 <표 V-5>와 같다.

표 V-5 >> 각 입국 세대별 자본주의 제도 인식

		N	평균	표준편차	χ^2	유의도
문6-1. 빈곤 원인	식량난민 세대	100	4.49	2.376	31.846	.045*
	시장화 세대	100	5.33	9.832		
	김정은 세대	100	3.73	2.759		
	합계	300	4.52	6.068		
문6-2. 개인자유 제한	식량난민 세대	100	6.01	2.423	17.13	.514
	시장화 세대	100	6.12	2.614		
	김정은 세대	100	5.87	2.901		
	합계	300	6.00	2.646		
문6-3. 보상원리 (성과 vs 필요)	식량난민 세대	100	4.78	9.928	20.516	.426
	시장화 세대	100	3.39	2.919		
	김정은 세대	100	2.87	2.650		
	합계	300	3.68	6.199		
문6-4. 기업 최고경영자 보상 최고 vs 노동자	식량난민 세대	100	5.66	2.690	22.451	.213
	시장화 세대	100	5.78	2.744		
	김정은 세대	100	5.55	2.893		
	합계	300	5.66	2.769		

		N	평균	표준편차	χ^2	유의도
문6-5. 경쟁결과 좋은 세상 vs 어려운 세상	식량난민 세대	100	3.50	2.568	25.398	.114
	시장화 세대	100	3.71	2.508		
	김정은 세대	100	2.75	2.439		
	합계	300	3.32	2.531		
문7-1. 소득결정 요인: 능력	식량난민 세대	100	1.99	.798	17.878	.057+
	시장화 세대	100	2.24	1.634		
	김정은 세대	100	1.73	.723		
	합계	300	1.99	1.145		
문7-2. 소득결정 요인: 노력	식량난민 세대	100	1.96	.931	12.212	.271
	시장화 세대	100	2.10	1.514		
	김정은 세대	100	1.72	.726		
	합계	300	1.93	1.116		

⁺p>.1, *p>.01 **p>.005 ***p>.001

출처: 필자 작성

나. 각 입국 세대별 자본주의 인식의 차이

앞에서 입국 세대별로 자본주의 이미지나 계층구조 인식을 교차분석하여 카이검정한 결과, 식량난민과 시장화 이후 세대의 자본주의 인식이나 사회계층구조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보이지 않았음은 직전에 본 바와 같다. 각 입국 세대별 자본주의 원리에 대한 다섯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는 <표 V-6>과 같다.

I

II

III

IV

V

VI

VII

표 V-6 > 각 입국 세대별 자본주의 원리에 대한 태도 평균점수 및 F 검증결과

	항목	식량난 세대(A)	과도기 세대(B)	김정은정권 세대(C)	f	유의도
경쟁과 보상	경쟁	3.50	3.71	2.75	4.058	.018*
	성과/필요에 따른 보상	4.78	3.39	2.87	2.56	.079
	최고경영자 보상	5.66	5.78	5.55	.172	.842
개인 vs 집단	빈곤의 원인 (개인 vs 사회)	4.49	5.33	3.73	1.748	.176
	공익을 위한 개인자유 제한 ○,X	6.01	6.12	5.87	.223	.800

출처: 필자 작성

(다)항에서는 세 개의 가설 경쟁과 보상, 개인주의에 있어서 식량난민 세대와 시장화 이후 세대는 인식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 1, 가설 2, 가설 3을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통해 검증한다.

- 가설 1. <경쟁> 식량난민 세대와 시장화 이후 세대는 경쟁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없을 것이다
- 가설 2. <보상> 식량난민 세대와 시장화 이후 세대는 보상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없을 것이다.
 - 성과 vs 필요, 최고경영자에 대한 보상수준
- 가설 3. <개인주의> 식량난민 세대와 시장화 이후 세대는 '개인주의 vs 집단주의 지향성'에서 차이가 없을 것이다.
 - 빈곤의 원인, 개인의 자유 제한

위에서 제시한 다섯 문항을 종속변수로 해서 입국 세대별 집단의 평균을 분산분석하였다. Levene의 동질성 검정을 하였는데, 공공성을 위해 개인자유를 포기, 소득결정 요인 두 문항(노력, 능력) 총 세 문항은 동질성 가정 결과 동질적이지 않음이 밝혀져, 나머지 네 문항 즉 '빈곤의 원인, 경쟁의 결과, 최고경영자 보상수준, 성과/필요에 따른 보상'만

을 일원배치분산분석하였다. 입국 세대를 독립변수로 하고, ‘빈곤의 원인, 경쟁의 결과, 최고경영자 보상수준, 성과/필요에 따른 보상’만을 종속변수로 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수행한 결과는 아래 <표 V-7>과 같다.

표 V-7 자본주의 제도 인식에 관한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문6-1. 빈곤원인 누군가 생계의 어려움이 있다면에 대한 견해	집단-간	128.107	2	64.053	1.748	.176
	집단-내	10882.810	297	36.642		
	합계	11010.917	299			
문6-3. 보상 성과와 필요에 따른 보상	집단-간	195.020	2	97.510	2.564	.079*
	집단-내	11296.260	297	38.035		
	합계	11491.280	299			
문6-4. 기업 최고경영자 보상수준	집단-간	2.647	2	1.323	.172	.842
	집단-내	2290.350	297	7.712		
	합계	2292.997	299			
문6-5. 경쟁의 효과	집단-간	50.940	2	25.470	4.058	.018*
	집단-내	1864.340	297	6.277		
	합계	1915.280	299			

*p>.1, *p>.01 **p>.005 ***p>.001

출처: 필자 작성

‘경쟁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쟁이 좋은 세상을 만드는지, 혹은 살기 어려운 세상을 만드는지에 대해 김정은 정권 이후 입국 세대들과 나머지 과도기, 식량난민 세대 집단들 사이에는 유의할만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다($p=.018<.05$).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입국 세대가 세 집단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세대부터 그 이전 세대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나타난 점이다. 나머지 세 문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집단 차이는

I
II
III
IV
V
VI
VII

나타나지 않았다. 즉 성과에 따른 보상이나 최고경영자에 대한 보상, 빈곤의 원인을 보는 시각에서는 입국 세대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다중비교 결과에서도 입국 세대별 경쟁효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경쟁효과에 대한 생각이 김정은 세대, 과도기 세대, 식량난민 세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오차도표로도 확인되며 신뢰도 구간에 있어 모집단의 차이가 관측된다. Duncan 사후 검정결과도 경쟁에 대한 태도에서 김정은 세대 집단과 나머지 식량난민 세대 및 과도기 세대 간의 이질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V-8 ▶ 경쟁효과에 대한 사후검정

입국세대		N	유의수준 = 0.05에 대한 부집단	
			1	2
Duncan	김정은 세대	100	2.75	
	식량난민 세대	100		3.50
	과도기 세대	100		3.71
	유의확률		1.000	.554

출처: 필자 작성

다. 분석결과

결론적으로 세 개의 가설 중에서 <경쟁가설 1>은 입국 세대 간 차이를 보여 입증되지 않았지만, 뒤의 두 가지 가설 즉 <보상에 대한 가설>과 <개인주의 가설>은 입국 세대 간 차이가 없어 가설이 입증되었다.

가설 1. <경쟁> 식량난민 세대와 시장화 이후 세대는 경쟁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검증 결과, 식량난민 세대와 과도기 세대 간의 차이가 나타나 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렇다면 그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앞의 기술통계에서 보여주듯이(〈그림 III-19〉 참조) 경쟁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모든 세대들이 다 긍정적이지만, 김정은 세대는 특히 그러하다. 김정은 세대는 무려 82%가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식량난민 세대 72%, 시장화세대 68%).

가설 2. 〈보상〉 식량난민 세대와 시장화 이후 세대는 보상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은 입증되었다. 성과 vs 필요, 최고경영자에 대한 보상수준에서 전 세대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앞의 기술통계 결과에서 보이듯이(〈표 V-6〉 참조), 한국 자본주의 세계에 가장 먼저 들어온 식량난민 세대들은 성과주의에 대한 지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편으로 나타났다(김정은 세대 80%, 과도기 세대 72%, 식량난민 세대 63%).

가설 3. 〈개인주의〉 식량난민 세대와 시장화 이후 세대는 ‘개인주의 vs 집단주의 지향성’에서 전 세대들은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은 입증되었다. 모든 세대들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놀라운 수준의 동질성을 보였다. 앞의 기술통계 결과에 의하면(〈표 V-6〉 참조), 일반 노동자와 동등한 수준의 보상을 최고경영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데 김정은 세대 41%, 과도기 세대 42%, 식량난민 세대 41%가 동의한 것이다.

분석결과, 2004년 이전에 입국하여 한국사회에서 수년 간 거주해 온 식량난민 세대와 2011년 김정은 정권 이후 탈북한 입국 세대들 모두는 자본주의 제도의 원리인 보상이나 빈곤원인에 대해 뚜렷한 의식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빈곤의 원인이나 성과에 따른 보상, 공익을 위한 개인자유의 제한 등 일부 항목에서는 최근에 북한에서 온 김정은 세대 탈북민들이 2000년 초반에 입국해서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온 식량난민 세대 입국자들에 비해 더욱 자본주의 지향적이다. 또한 경쟁에 대한 선호도에서 입국 세대 간의 차이가 다소 나타났는데, 이 또한 최근에 북한에서 온 입국 세대들이 오히려 심

I
II
III
IV
V
VI
VII

수년 간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온 입국 세대보다 경쟁에 대해 강한 선호를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경향은 북한 시장화의 진행이 초래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사회에 들어온지 십년이 넘는 식량난민 입국 세대들이 성과에 따른 보상의식이 분명해지고, 빈곤원인에 대해서 사회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현상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온지 5년 내인 김정은 세대들이 먼저 온 식량난민 세대와 남한거주 10년 이상의 격차를 넘어서 동일한 수준의 자본주의 지향성을 드러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아마도 이는 북한 시장화의 영향력 때문일 것이라 여겨진다. 주목할 점은 탈북민의 경쟁에 대한 태도이다. 최근에 온 김정은 세대들은 한국사회에서 십 수년 간 살아온 식량난민 세대들보다 경쟁에 대해 강한 선호를 보였다. 이는 시장화 이후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점차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의식도 이에 조응하여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분석결과가 함의하는 가장 중요한 발견은 탈북민이 보여주는 강한 ‘평등주의 정서 지향성’으로 북한주민 고유한 특성이 아닌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입국 세대와 상관없이 전 세대들이 ‘최고경영자에게도 노동자와 동등한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강한 지지를 보이는 경향이 공통적으로 노정된다. 이처럼 2016년도의 조사에서 자본주의 제도 원리인 성과 지향적 보상이나 경쟁에 대해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평등주의 지향성’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라. 각 입국 세대들의 자본주의 제도 인식

(1) 김정은 입국 세대(C집단)의 인식

C집단은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2011년 이후부터 2016년 현재까지 한국에 입국한 사람들로서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북한 화폐개혁 후에 많은 손해를 보고 탈북하여 바로 한국행을 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중국에 체류해왔던 여성들이 뒤섞인 혼합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김정은 입국 세대(C집단)가 북한에 있을 당시 가진 자본주의 인식은 ‘부정부패’였다. 남한에 온 이후에는 ‘경쟁’으로 바뀌게 된다.

이들의 경쟁에 대한 태도는 세 집단 중에서도 두드러질 정도로 긍정적이다(2.75점/10점, $p > .05$). 이들은 성과주의적 보상이나 경영자에게 최고수준의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강한 지지를 보낸다(2.87점/10점). 생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 이전에 온 세대에 비해 개인적인 노력이나 능력의 문제라고 보는 관점이 뚜렷하다(3.73점/10점).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에 입국한 이들 김정은 세대는 북한사회를 극소수 부자들과 대부분은 가난한 자들로 구성된 ‘기동형 사회’로 인식하고 있으며, 남한은 중간층이 많은 사회이며 앞으로 통일한국에서는 더욱 중간층이 많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2) 식량난 입국 세대(A집단)의 인식

이들 식량난 세대들은 주로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탈북하고 중국에 살다가 2004년도 이전에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식량난 세대(A집단)가 북한에 있을 당시 가진 자본주의 인식은 ‘빈부격차’와 ‘부정부패’였다. 남한에 온 이후에는 다시 ‘경쟁’으로 바뀌게 된다. 즉, 자본주

I

II

III

IV

V

VI

VII

의 사회를 경험하게 되면서 ‘경쟁의 중요성’에 대해 눈뜨게 된 셈이다. 이들은 김정은 입국 세대만큼은 아니지만 경쟁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한다(3.50점/10점). 반면, 성과주의적 보상에 대해 최근 입국한 김정은 시대의 입국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를 보내며(4.78점/10점), 더욱이 경영자에게 최고수준의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지하지 않는다(5.66점/10점). 이들은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능력 문제로 보지만(4.49점/10점) 김정은 세대처럼 빈곤의 원인을 개인 문제로 보지는 않는다. 이들 식량난 세대들은 북한사회를 극소수 부자들과 대부분의 가난한 자들로 구성된 기동형 사회라고 보지만, 남한은 중간층이 많은 사회라고 인식하며 통일 이후에는 현재 남한사회보다 중간층이 더욱 많은 사회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3) 시장화 세대(B집단)의 인식

이들 시장화 이후 입국 세대들은 북한의 시장화를 경험한 이후 탈북한 사람들이다. 시장화 세대(B집단, 2005~2010년 입국 세대)는 북한에 있을 당시부터 자본주의 이미지를 ‘빈부격차’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그러나 남한에 온 이후에는 ‘물질적 풍요’로 바뀌게 된다. 이들은 경쟁이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 것이라고 보지만(3.71점/10점), 최근 입국한 김정은 세대(2.75점/10점) 만큼은 아니다. 성과주의적 보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며 식량난 세대와 김정은 세대의 중간에 위치한다(C(2.87점) > B(3.39점) > A(4.78점)). 그렇지만 경영자에게 최고 수준의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들 A, B, C 세 집단 모두가 부정적이다(A집단: 5.66점, B집단: 5.78점, C집단: 5.55점). 시장화 세대(B)는 생계의 어려움을 사회적인 제도의 문제로 보지도 않지만 개인적인 노력이나 능력의 문제로도 보지 않는다(평균점수 4.49점/10점).

이들 시장화 이후 세대 역시 북한사회를 극소수 부자들과 대부분은 가난한 자들로 구성된 '기동형 사회'라고 보고 있다. 반면, 남한은 중간층이 많은 사회이며 앞으로 통일한국은 더욱 중간층이 많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3.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탈남현상

북한주민의 일부인 탈북민들은 2001년부터 연 1,000명 이상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광범위한 탈남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많은 우려를 낳았다. 탈남자의 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정착현장에서는 약 10% 정도가 탈남을 했다고 보기도 한다.⁴⁰⁾ 탈북민이 왜 이렇게 한국을 많이 떠나는지, 탈남의 사가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얼마나 되며 원인은 무엇인지, 이 같은 탈남현상의 원인은 규명이 되지 못하고 있다.

탈남현상에 대해 가장 널리 통용되는 견해는 탈북민을 사회 부적응의 지표 혹은 일종의 '복지쇼핑'이나 '모럴헤저드 현상'으로 보는 입장이다. 정착현장에서는 탈남의 동기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적을 받고 정착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금을 다 받은 이후에 정착이 순조롭지 못하자 다시 난민을 가장해서 서방 선진국가에 난민신청을 새로이 하여 난민들에게 주는 수혜를 다시 받으려 한다고 보기도 하였다. 이와 달리 탈북민 당사자는 탈남의 이유를 한국사회의 차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시각은 세계적으로 초국가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초국가 이

⁴⁰⁾ 자유시민대학 실무자인 Y는 2001~2010년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굿피플대학'을 통해 500명 가량의 탈북민 정착교육을 해왔다. 그는 졸업생 중 약 10% 정도가 한국을 떠났으며 그들 중 다시 돌아오는 수도 꽤 많다고 필자에게 2010년에 이야기한 바 있다.

I
II
III
IV
V
VI
VII

주자(transmigrants)’란 새로운 유형의 이주자들이 등장하고 이주자가 이주를 거듭하는 재이주현상은 매우 보편적이라는 설명이다. 탈북민의 탈남현상 역시 이 같은 ‘이주자의 재이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탈남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책현장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지만 학술적 논의로 진전되지 못하였다. 다큐멘터리 작가인 오원환의 박사학위논문 ‘탈북 청년의 정체성 연구: 탈북에서 탈남까지’는 탈북자의 탈남현상을 다룬 거의 유일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⁴¹⁾ 그는 “탈북자의 탈남동기를 한국사회의 부적응에 따른 현상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가치관을 수용하고 적응하기 위한 선택”이자 “동시에 탈북자의 디아스포라적 특징이 결합된 결과”라고 주장한다.⁴²⁾

본 연구자의 관점은 ‘탈남현상’을 탈북민 자신에게 원인을 찾는 시각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탈북민의 적응의 한 방식 혹은 선택이지만, 한국사회의 불평등 상황이 초래한 결과라는 견해에 선다. 제4절에서는 한국 불평등 상황의 여러 측면들(즉 기회의 공정성, 소득의 불평등, 사회적 인정의 문제) 중 어떤 변수들이 북한 탈남의사에 보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인과적 관계를 분석하여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탈북민이 어떤 불평등 상황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지 밝힐 수 있다면, 탈북민의 대표적인 부적응 현상이라고 일컬어온 탈남현상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진전시킬 뿐 아니라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에도 기여할 것이다.

41) 그는 “남한 거주 탈북자의 약 10% 정도가 한국에 정착하기 보다는 ‘살아 남을 기회’를 찾아 떠났는데도 그에 대한 문제 인식과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언론에서 보여준 그 간의 태도는 탈남 현상의 이유를 탈북자의 문제로만 단정 짓는 매우 편협하고 일방적인 것이었다”고 논문 작성의 동기를 밝히고 있다. 오원환, “탈북 청년의 정체성 연구: 탈북에서 탈남까지,”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p.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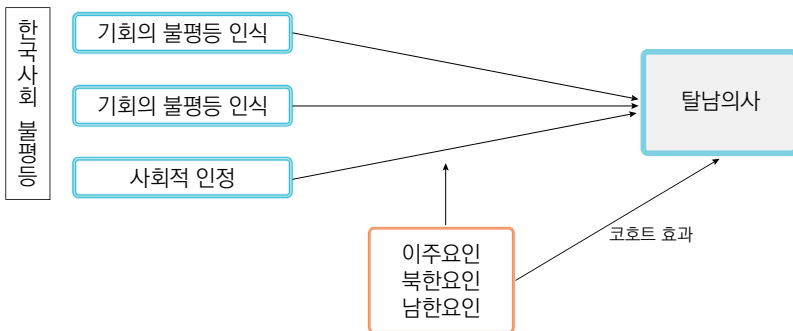
42) 위의 글, p. 193.

가. 연구모형 및 자료

제4절에서 탈북민이 한국사회가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탈북민의 탈남의사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여기서 ‘불평등 인식’이란 선행 연구에서 한국인에게 요하게 알려진 소득의 불평등과 기회의 불평등, 사회적 인정을 가리키는데, 연구모형 및 가설은 아래와 같다.

- 가설 1. <코호트 효과> ‘입국 세대’, ‘남한 거주기간’ 등의 이주 요인은 소득 불평등, 기회 불평등, 사회적 인정을 매개하며, 입국 세대는 탈남의사에 정적(+) 혹은 부적(-) 영향을 미친다.
- 가설 2. <사회적 인정> 한국사회에서 탈북민에 대한 불인정이 증가하면 탈북민이 탈남의사를 가질 승산이 증가한다.
- 가설 3. <기회 불평등> 한국사회에서 ‘기회가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증가할수록 탈북민이 탈남의사를 가질 승산이 증가한다.
- 가설 4. <소득 불평등> ‘한국사회가 소득이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증가할수록 탈북민이 탈남의사를 가질 승산이 증가한다.

그림 V-1 ▶ 탈남의사 결정요인 모형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VI
VII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변수인 탈북민의 '탈남의사'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군으로 각종 불평등 변수군(소득 불평등, 사회적 인정, 기회 불평등)에 속하는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통제변수군은 이주요인(입국 세대, 남한 거주기간, 제3국 체류기간)과 인구학적 요인(성, 연령, 출신지역/국경, 내륙) 및 남한요인(계층, 소득, 학력), 북한요인(정치신분, 학력, 경제계층, 당원)을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주요변수는 <표 V-9>와 같다.

표 V-9 ▶ 불평등관련 주요변수 설명 및 평균

		변수명	변수설명(변수값)	평균	표준편차
		탈남의사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다 (4점 척도)	1.69	0.921
통제 변수	인 적 특 성	성	남성(1), 여성(2)	1.5	0.501
		연령(세)	만 나이	44.19	12.596
		출신지역	국경연선(1), 내륙(2)	1.2	0.403
	북 한 요 인	정치신분	최상, 상, 중상, 중하, 하, 최하 (6점 척도)	4.2	1.379
		경제계층	최상, 상, 중상, 중하, 하, 최하 (6점 척도)	4.15	1.291
		일 유형	공식일1, 공식일2, ... 장사, 기타 (6점 척도)	3.16	1.716
		당원 여부	당원(1),비당원(2)	1.74	0.441
	남 한 요 인	북한학력	인민졸...대중퇴, 대졸 이상, 해당사항 없음 (6점 척도)	2.72	1.157
		남한학력	중졸, 고졸, 전문졸, 대졸, 정규교육 안받음 (5점 척도)	4.28	1.121
		경제계층	최상, 상, 중상, 중하, 하, 최하(6점 척도)	4.75	1.041
소득수준		50만원 간격(8점 척도)	2.96	1.69	
	본인 경제수준 만족도	4점 척도(1점: 매우불만족... 4점: 매우만족)	2.63	0.763	

		변수명	변수설명(변수값)	평균	표준편차
독립변수	이주요인	제3국 체류기간	월	27.06	33.568
		거주기간	월	101.18	58.700
		탈북시기	년	2005.38	6.159
		입국세대	식량난민세대(2004년이전) 시장화세대(2005~2010) 김정은 세대(2011년이후)	2	0.818
	소득불평등	소득격차	5점 척도(1점: 매우반대...5점: 매우찬성)	3.93	1.067
		소득격차 정부책임		3.69	1.011
		가난한자 수혜 줄여야		1.87	.988
		보수의 적정성		5점 척도(1점: 훨씬적다...5점: 훨씬많다)	2.64
	기회불평등	교육기회	5점 척도(1점: 매우불평등...5점: 매우평등)	3.43	1.264
		취업기회		2.91	1.315
		승진승급 기회		2.86	1.270
		법의 집행		3.13	1.300
		여성의 대우		3.47	1.214
		소득과 재산		2.92	1.181
		출신지역(남북한)		2.82	1.881
	사회적인정	일터 괴롭힘	2점 척도(1점: 있다...2점: 없다)더미	1.76	0.525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10점 척도(1점: 없다...10점: 있다)	5.52	2.368
		부당한 대우	10점 척도(1점: 없다...10점: 있다.)	4.56	2.807
		편견	4점 척도(1점: 전혀그렇지않다...4점: 매우그렇다)	2.7	0.797
		이등국민	4점 척도(1점: 전혀그렇지않다...4점: 매우그렇다)	2.43	.968

출처: 필자 작성

나. 분석결과: 탈남의사 결정요인

본 절에서는 여러 독립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황에서 이들 변수들이 탈남의사에 미치는 가능성을 다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을 통해 분석한다.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불인정과 차별관련 선행연

I
II
III
IV
V
VI
VII

구들⁴³⁾에 근거하여 차별이 가장 심하다고 알려진 노동시장 영역에서의 일터 괴롭힘이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이등국민 의식 및 편견에 대한 독립변수를 만들었다. 최근 한국 불평등 상황에 대한 연구의 쟁점은 ‘소득 불평등 vs 기회 불평등’이다.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소득 불평등보다 기회 불평등이라는 선행연구 결과⁴⁴⁾를 참고하여, 소득 불평등과 기회 불평등의 영향력을 비교 추정하였다. 탈남 의사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항로짓분석을 하였다.

모형의 구성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의 주요 이슈인 탈남의사에 미치는 제요인들을 밝히기 위해 소득 불평등, 기회 불평등에 속한 변수군을 독립변수로 하고 이주요인, 남북한 요인, 인구학적 요인을 매개변수로 한 네 개의 분석 모형을 구성하였다.

먼저, 〈모형 1: 인적요인〉에서는 불평등관련 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요인과 인적요인, 남북한 요인을 투입하여 이들 변수들만으로 탈남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추정하였다. 〈모형 2: 사회적 인정 모형(recognition model)〉에서는 부당한 대우와 편견, 일터 괴롭힘, 이등국민 의식을 변수로 모형을 구성하였다. 〈모형 3: 기회 불평등 모형〉은 ‘기회 불평등이 탈남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모형을 구성하였다. KGSS의 기회 평등성 변수인 교육기회, 취업기회, 소득기회, 남북한 출신 불평등, 법 집행시의 평등한 기회 등 6개의 기회 불평등 변수에 남북한 출신에 대한 평등성 변수를 추가하여 독립

43) 이희영,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구성에 대한 구술 사례연구,” 『한국사회학』, 제44권 1호 (2010), pp. 207~241; 김화순, “고학력 북한이탈주민이 인지하는 차별과 직업계층 변화의 인식,” 『통일과 평화』, 제2권 2호 (2010), pp. 76~110; 김화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에 미치는 요인 연구: 인적자본 및 노동시장구조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력개발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pp. 161~162; 윤인진 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 및 차별실태조사,” pp. 113~115

44) 이양호 외, “불평등과 행복,” 『한국정치학회보』, 제47권 3호 (2013), pp. 25~43.

변수군으로 하였으며, 이에 거주기간과 남북한 요인군을 통제하여 탈남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모형4: 소득 불평등 모형>에서는 소득 불평등의 영향력을 탐색하였다. 소득 불평등군에 속하는 경제적 만족도, 보수의 적정성, 소득격차,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책임, 가난한 사람에 대한 정부지원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소득 불평등을 대리하는 변수는 '소득격차'와 '보수의 적정성'이다. 분석결과, 소득 불평등 인식이 가장 크게 탈남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 모형 1: 이주요인 및 남북요인 분석결과

성, 연령, 출신지역(국경연선/내륙)과 같은 인구학적 요인, 북한의 당원, 일 유형이나 계층, 학력과 같은 북한요인, 남한 대학학력이나 소득수준, 계층과 같은 남한요인 그리고 제3국 체류기간과 거주기간 입국 세대와 같은 이주요인을 변수로 투입하여 이들이 탈남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보았다. 이 때 남북한 학력과 당원 출신지역(국경/내륙)은 더미변수로 만들어 투입하였다.

이들 통제변수가 탈남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우선 인적요인 중에서 연령이 한 살 증가할 때 탈남의사를 가질 승산은 4.4% 감소하였으며 출신지역이 국경지역에 속할 경우 탈남의사를 가질 승산이 2.661배 증가하였다($p=.083+$).

남북한 요인을 비교해보면, 남한요인인 대학 학력, 계층, 현재 소득 변수를 투입한 결과, 탈남의사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었다. 그러나 북한 요인군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당원일 경우와 북한의 정치신분, 북한 경제적 계층의 영향력이 유의미했다. 당원변수를 더미변수로 만들어 투입한 결과 당원이 아닐 경우에 비해 탈남의사를 가질 승산이 3.165배 증가하였다($p=.019^*$).

I
II
III
IV
V
VI
VII

또, 북한의 정치신분이 하층일수록, 탈남의사를 가질 승산은 1.336배 증가하였으며($p=.083+$), 역으로 북한의 경제적 계층이 하층일수록 탈남의사를 가질 승산은 40.5% 감소하였다($p=.005^{**}$). 이처럼 북한의 정치신분과 경제계층은 탈남의사에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요인을 보면, 남한 거주기간이나 제3국 체류기간은 모두 탈남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단, 입국 세대를 더미변수로 만들어 투입한 결과 식량난 세대에 속한 경우 기준 세대인 시장화 세대(2005~2010년 입국 세대)에 비해 탈남할 승산이 4.863배나 높게 나타났다($p=.028^*$). 이는 북한 시장화 이전에 북한사회에서 온 난민세대들은 자본주의 적응력이 더 낮기 때문에 탈남할 승산이 높다고 해석된다. 김정은 세대는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탈남의사를 가질 승산이 낮게 나타났다($\text{Exp}(B)=.616$).

표 V-10 모형 1: 이주요인 및 남북요인

	B	S.E.	유의확률	Exp(B)
성	.506	.434	.244	1.658
연령	-.045	.023	.047*	.956
지역	.979	.564	.083 ⁺	2.661
공식일	-.421	.662	.525	.656
이중일	.506	.668	.449	1.658
비공식일	.077	.647	.906	1.080
당원	1.152	.552	.037*	3.165
정치신분	.290	.167	.083 ⁺	1.336
경제계층	-.520	.186	.005 ^{**}	.595
학력	.133	.194	.494	1.142
남한계층	.117	.216	.589	1.124
대졸	-.226	.639	.724	.798

	B	S.E.	유의확률	Exp(B)
정규교육 무	-.158	.507	.754	.853
소득수준	-.169	.106	.110	.844
거주기간	.002	.010	.809	1.002
체류기간	.004	.006	.520	1.004
식량난 세대	1.582	.719	.028*	4.863
김정은 세대	-.485	.869	.577	.616
부당대우				
일터 괴롭힘				
편견				
이등국민				
상수항	-1.753	2.226	.431	.173

* -2 Log 우도 202.070, Cox와 Snell의 R-제곱 .135, Nagelkerke R-제곱은 .231.
출처: 필자 작성

(2) 모형 2: 사회적 인정 분석결과

사회적 인정(recognition)이 탈북민의 탈남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이다. <모형 1>에 투입한 남북한 인적요인 및 이주요인 외에 사회적 인정을 대표하는 변수로 ‘부당한 대우를 겪은 경험이 있다’ 변수와 ‘일터에서 괴롭힘’, ‘남한사람들이 편견에 찬 시선으로 본다는 편견의식’, ‘이등국민 의식’의 네 가지 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이들이 탈남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예상과는 달리 이등국민 변수 외에 다른 세 개의 사회적 인정 변수는 탈남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른 변인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등국민 의식의 크기가 한 단위 증가하면, 탈남의사를 가질 승산비는 2.3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77 < .1+$).

I
II
III
IV
V
VI
VII

표 V-11 모형 2: 사회적 인정

	B	S.E.	유의확률	Exp(B)
성	.392	.473	.408	1.480
연령	-.054	.026	.035*	.947
지역	.540	.621	.385	1.716
공식일	-1.063	.720	.140	.345
이종일	.275	.717	.702	1.316
비공식일	-.445	.715	.534	.641
당원	1.117	.619	.071 ⁺	3.057
정치신분	.234	.191	.220	1.264
경제계층	-.516	.210	.014*	.597
학력	.203	.218	.353	1.225
남한계층	-.057	.259	.827	.945
대졸	-.450	.738	.542	.637
정규교육 무	.128	.585	.826	1.137
소득수준	-.160	.120	.182	.852
거주기간	-.008	.012	.472	.992
체류기간	.003	.007	.655	1.003
식량난 세대	2.249	.851	.008**	9.478
김정은 세대	-.845	.994	.395	.430
부당대우	.113	.082	.169	1.120
일터 괴롭힘	-.126	.105	.230	.882
편견	.825	.590	.162	2.282
이등국민	.867	.489	.077 ⁺	2.380
상수항	.141	2.644	.957	1.152

* -2 Log 우도 164.492, Cox와 Snell의 R-제곱 .192, Nagelkerke R-제곱은 .336.
출처: 필자 작성

(3) 모형 3: 기회 불평등 분석결과

〈표 V-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회 불평등군에 속한 6개의 변수를 투입하여 〈모형 3: 기회 불평등 모형〉을 구성하여 ‘기회 불평등’ 즉 기회의 공정성이 응답자의 탈남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하였다.

기회 불평등 군에 속한 여섯 개의 변수 즉, 교육의 평등한 기회, 취업의 평등한 기회, 승진의 평등한 기회, 소득의 평등한 기회, 남북한 출신의 평등한 기회, 법 집행의 평등한 기회 변수들을 투입한 결과, 탈남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의외로 ‘승진기회’와 ‘법 집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승진기회가 보다 평등(공정)하다고 인식될수록 또, 법 집행이 공정하다고 인식될수록 탈남의사를 가질 승산이 감소한 것이다. 승진기회에 대한 평등성 인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탈남의사를 가질 승산이 43.2% 감소하였으며, 법 집행의 공정성 인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탈남의사를 가질 승산이 30.0% 감소하였다. 북한의 경제적 계층(최상, 상, 중상, 중하, 하, 최하층의 6개 층)은 하층일수록 탈남의사는 45.1% 감소하였으며, 북한 정치신분이 하층으로 갈수록 탈남의사를 가질 승산이 36.1배 증가하였다. 탈남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남한 요인은 없었다.

표 V-12 > 모형 3: 기회 불평등

	B	S.E.	유의확률	Exp(B)
성	.250	.479	.602	1.284
연령	-.053	.024	.030*	.949
지역	1.010	.615	.100	2.745
공식일	-.685	.693	.323	.504
이종일	.375	.691	.587	1.455
비공식일	.183	.663	.783	1.201

I
II
III
IV
V
VI
VII

	B	S.E.	유의확률	Exp(B)
당원	1.055	.584	.071 ⁺	2.871
정치신분	.308	.180	.088 ⁺	1.361
경제계층	-.600	.207	.004**	.549
학력	.134	.205	.513	1.143
남한계층	.027	.238	.911	1.027
대졸더미	-.246	.679	.717	.782
정규교육 무	-.071	.549	.897	.932
소득수준	-.255	.118	.031*	.775
거주기간	.006	.011	.614	1.006
제3국 체류기간	.000	.007	.963	1.000
식량난 세대	1.707	.777	.028*	5.513
김정은 세대	-.420	.906	.643	.657
부당대우				
일터 괴롭힘				
편견				
이등국민				
교육기회	.056	.190	.768	1.058
취업기회	-.142	.225	.529	.868
승진기회	-.565	.264	.032*	.568
법기회	-.356	.175	.042*	.700
여성	.230	.201	.252	1.259
소득	-.085	.228	.711	.919
남북출신	-.045	.121	.708	.956
경제 만족도				
보수 적정성				
소득격차				
정부책임				
빈자지원				
상수항	1.980	2.769	.475	7.239

* -2 Log 우도184.106, Cox와 Snell의 R-제곱 .157, Nagelkerke R-제곱은 .268.
출처: 필자 작성

(4) 모형 4: 소득 불평등 분석결과

소득 불평등군에 속한 다섯 개의 변수 즉, '경제적 만족도', '자신이 받는 보수의 적정성', '소득격차가 크다',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등 다섯 개의 변수들을 투입한 결과, 앞의 세 개의 변수들이 탈남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자신의 보수가 적정하다는 인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탈남의사를 74%나 낮추었다($p=.000^{***}$). 소득격차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여길수록 탈남의사를 가질 승산이 1.708배 증가하였으며 ($p=.086+$) 경제적 만족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탈남의사를 가질 승산은 55.2% 감소하였다($p=.018^*$).

표 V-13 모형 4: 소득 불평등

	B	S.E.	유의확률	Exp(B)
성	1.210	.607	.046*	3.354
연령	-.063	.032	.054 ⁺	.939
지역	.844	.793	.287	2.325
공식일	.719	.997	.470	2.053
이종일	2.194	1.026	.033*	8.970
비공식일	1.365	.969	.159	3.917
당원	1.675	.717	.019*	5.339
정치신분	.538	.226	.017*	1.713
경제계층	-.830	.250	.001**	.436
학력	.207	.252	.411	1.230
남한계층	.235	.323	.466	1.265
대졸더미	-1.058	.934	.257	.347
정규교육 무	.004	.674	.995	1.004
소득수준	-.213	.147	.148	.808

I
II
III
IV
V
VI
VII

	B	S.E.	유의확률	Exp(B)
거주기간	-.004	.013	.761	.996
제3국 체류기간	.013	.008	.075 ⁺	1.014
식량난 세대	2.772	.932	.003 ^{**}	15.986
김정은 세대	-1.306	1.164	.262	.271
부당대우				
일터 괴롭힘				
편견				
이등국민				
교육기회				
취업기회				
승진기회				
법기회				
여성				
소득				
남북출신				
경제 만족도	-.804	.338	.018 [*]	.448
보수 적정성	-1.347	.383	.000 ^{***}	.260
소득격차	-.382	.222	.086 ⁺	.682
정부책임	.535	.273	.050 [*]	1.708
빈자지원	-.081	.262	.758	.922
상수항	1.078	3.888	.782	2.938

* -2 Log 우도 126.998, Cox와 Snell의 R-제곱 .271, Nagelkerke R-제곱은 .473.
출처: 필자 작성

다. 분석결과 및 새로운 발견

본 논문의 앞에서 다섯개의 가설을 제시하고, 탈남의사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불평등 요인이 무엇인지 판명하기 위해 각 요인들을 순차적으로 모형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네 개의 불평등 모형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여섯가지 발견을 하였다.

첫째, 〈시간의 효과, 코호트 효과〉의 문제이다. 식량난민 세대는 탈남의사를 가질 승산을 높였으며 이는 시간의 효과보다 코호트 효과가 작용함을 의미한다. ‘남한 거주기간’은 소득 불평등, 기회 불평등, 노동시장 차별 경험을 매개하며, 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탈북민이 탈남의사를 가질 승산이 증가한다.

제3국 체류기간과 남한 거주기간 변수 둘 다 탈남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입국 세대 중 식량난민 세대는 탈남의사를 가질 승산을 높였다. 이는 탈북민 사회에 단지 거주기간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독특한 세대 효과(cohort effect)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한 시장화 세대들이 과거 식량난민 세대들과 탈남을 비롯한 자본주의 제도에 대한 적응태도에서 달라진 행태를 보일 가능성을 함의하며 추후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다.

둘째, 예상과는 달리 사회적 인정은 탈남의사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인정〉 ‘한국사회에서 탈북민에 대한 불인정이 증가하면 탈북민이 탈남의사를 가질 승산이 증가한다’는 가설은 입증되지 않았다. 이등국민 변수 외에 나머지 세 개의 사회적 인정 변수는 탈남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 동안 노동현장에서 빈번하게 거론되어온 북한출신에 대한 ‘일터에서의 괴롭힘’ 변수나 탈북민에 대한 일반국민의 ‘편견’이나 ‘부당한 대우’는 탈남의

I

II

III

IV

V

VI

VII

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정착현장에서 혹은 탈북민 당사자들은 탈남현상의 원인을 한국사회의 편견이나 부당한 차별대우라고 설명해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⁴⁵⁾ 이 같은 분석결과는 일터 괴롭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변수가 탈남의사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이유와 거리가 있다. 이처럼 분석결과와 현장의 체감이 다소 거리가 있는 이유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문항이 만들어진 반면에, 이 표본의 경제활동 상태가 통제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된다.⁴⁶⁾

셋째, 소득 불평등군에 속한 다섯 개의 변수 중 세 개의 변수들이 탈남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한국사회가 소득이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증가할수록 탈북민이 탈남의사를 가질 승산은 증가한다는 가설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이는 한국 소득 불평등 상황이나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보다 본인의 경제적 만족도나 소득을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주의적 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 즉, 자신의 보수가 적정하고 경제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탈남의사가 낮고, 반면에 소득격차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여길수

45) “그러나 치열한 자본주의 무한 경쟁사회인 남한사회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만 살아왔던 탈북자들에게는 넘기 어려운 장벽이 아닐 수 없으며 거기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은 그들을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찾아왔던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점차 소외되고 상대적인 열등감을 느끼게 되면서 탈북자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국사회의 주류계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오죽했으면 목숨 걸고 찾아온 땅에 와서 자살하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겠는가? 거기에 한국보다는 훨씬 복지정책이 잘 되어있고 이민자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정보는 한국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 받는 탈북자들의 입장에서 쉽게 유혹 되는 것은 별로 이상한 일도 아니다.” 새터민들의 쉼터, <<http://blog.ohmynews.com/csc7134/485752>>. (검색일: 2016.10.13.). 탈남 이유에 대한 전형적인 설명으로 대표적인 탈북민 온라인 커뮤니티인 새터민들의 쉼터에서 검색한 것이다.

46) 이 연구의 필자는 조사 책임자로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총괄했다.

록 탈남의사를 가질 승산이 높았으나 정작 한국사회의 소득격차 인식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탈남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취업기회가 아니라 의외로 '승진기회'와 '법 집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사회에서 '기회가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증가할수록 탈북민이 탈남의사를 가질 승산은 증가한다는 가설은 입증되었다. 기회 불평등군에 속한 여섯 개의 변수 즉, 교육의 평등한 기회, 취업의 평등한 기회, 승진의 평등한 기회, 소득의 평등한 기회, 남북한 출신의 평등한 기회, 법 집행의 평등한 기회 변수들을 투입한 결과, 승진기회가 보다 평등(공정)하다고 인식될수록 또, 법 집행이 공정하다고 인식될수록 탈남의사를 가질 승산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 불평등 중에서 승진기회나 법 집행의 기회의 공정성이 탈남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분석결과는 이제 탈북민 사회도 20여 년이 되어가면서 상승의 기회에 대한 욕구가 커져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남북한 요인이 탈남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북한 요인의 영향이 남한요인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북한의 계층이나 당원도 여전히 탈남의사를 갖는데 주요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북한의 정치적 신분계층과 새로이 재계층화되는 경제적 계층이 탈남의사에서 서로 상충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북한의 당원, 경제적 계층과 정치신분의 영향이 서로 상반되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적어도 탈남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북한 요인군의 역할이 남한요인보다 훨씬 더 유의하게 나타났다. 북한의 정치신분이 하층일수록, 탈남의사를 가질 승산은 증가하고, 북한에서 경제적 계층이 하층일수록 탈남의사를 가질 승산은 감소하는 현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적어도 탈북민 사회에서 높은 정치신분은 대한민국 안착의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는 한편, 경제적 하층들이 경제적 상층에 비해 대한민국 정착에서

I

II

III

IV

V

VI

VII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현실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한국의 정착지원 정책 측면에서 주는 함의는 그 동안 남한에서 탈북민에게 무상 대학교육과 특별전형을 통한 특례입학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대학교육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사실이다. 정착정책 측면에서 남한요인에서 소득수준 외에는 탈남의사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 분석결과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그 함의가 크다.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탈북민에게 무상 대학교육과 특별전형을 통한 특례입학이라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대학교육의 영향력은 전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것이다. 현재의 교육지원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숙고를 요구하는 지점이다. 오로지 남한요인 중 탈남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신의 '소득수준'이며 제3국 체류기간도 약간의 영향을 미쳤다. 제3국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탈남의사도 높았는데 이는 탈북여성들이 장기간의 중국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형성해온 사실에 비추어 한국을 다시 떠나 중국에 돌아가는 것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인정보다는 소득 불평등 인식과 기회 불평등 인식이 탈남의사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컸다는 분석결과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중 가장 큰 불평등이라고 말해지는 소득 불평등이 탈북민의 탈남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한다. 또한 남한 거주기간이 아니라 식량난민 세대일 경우 탈남의사를 가질 승산이 높았다는 분석결과는 입국 세대의 '코호트 효과'가 남한 거주기간이 갖는 시간의 효과보다 더 유의미하다는 점에서 정착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쉬운 점은 대한민국 정부가 그 동안 탈북민을 대상으로 여러 지원 정책을 비롯해서 파격적인 무상대학 지원정책 등 통합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의 소득수준'만이 탈북민의 탈남의사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변수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노동시장에서 학력의 의미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한국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정책적 함의가 크며 탈북민의 정착을 위해서는 단지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소득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탈북민, 나아가 북한주민이 자본주의 제도를 수용하도록 돕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개혁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사실을 실증분석을 통해 입증한 데에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I

II

III

IV

V

VI

VII

표 V-14 ▶ 불평등 모형비교

	남북한 이주요인			
	B	S.E.	유의확률	Exp(B)
성	.506	.434	.244	1.658
연령	-.045	.023	.047*	.956
지역	.979	.564	.083 ⁺	2.661
공식일	-.421	.662	.525	.656
이종일	.506	.668	.449	1.658
비공식일	.077	.647	.906	1.080
당원	1.152	.552	.037*	3.165
정치신분	.290	.167	.083 ⁺	1.336
경제계층	-.520	.186	.005*	.595
학력	.133	.194	.494	1.142
남한계층	.117	.216	.589	1.124
대졸더미	-.226	.639	.724	.798
정규교육 무	-.158	.507	.754	.853
소득수준	-.169	.106	.110	.844
거주기간	.002	.010	.809	1.002
체류기간	.004	.006	.520	1.004
식량난 세대	1.582	.719	.028*	4.863
김정은 세대	-.485	.869	.577	.616
부당대우				
일터 괴롭힘				
편견				
이등국민				
교육기회				
취업기회				
승진기회				
법기회				
여성				
소득				
남북출신				
경제 만족도				
보수 적정성				
소득격차				
정부책임				
빈자지원				
상수항	-1.753	2.226	.431	.173

사회적 인정				
	B	S.E.	유의확률	Exp(B)
성	.392	.473	.408	1.480
연령	-.054	.026	.035*	.947
지역	.540	.621	.385	1.716
공식일	-1.063	.720	.140	.345
이종일	.275	.717	.702	1.316
비공식일	-.445	.715	.534	.641
당원	1.117	.619	.071 ⁺	3.057
정치신분	.234	.191	.220	1.264
경제계층	-.516	.210	.014*	.597
학력	.203	.218	.353	1.225
남한계층	-.057	.259	.827	.945
대졸더미	-.450	.738	.542	.637
정규교육 무	.128	.585	.826	1.137
소득수준	-.160	.120	.182	.852
거주기간	-.008	.012	.472	.992
체류기간	.003	.007	.655	1.003
식량난 세대	2.249	.851	.008**	9.478
김정은 세대	-.845	.994	.395	.430
부당대우	.113	.082	.169	1.120
일터 괴롭힘	-.126	.105	.230	.882
편견	.825	.590	.162	2.282
이등국민	.867	.489	.077 ⁺	2.380
교육기회				
취업기회				
승진기회				
법기회				
여성				
소득				
남북출신				
경제 만족도				
보수 적정성				
소득격차				
정부책임				
빈자지원				
상수항	.141	2.644	.957	1.152

I
II
III
IV
V
VI
VII

기회 불평등				
	B	S.E.	유의확률	Exp(B)
성	.250	.479	.602	1.284
연령	-.053	.024	.030*	.949
지역	1.010	.615	.100	2.745
공식일	-.685	.693	.323	.504
이종일	.375	.691	.587	1.455
비공식일	.183	.663	.783	1.201
당원	1.055	.584	.071 ⁺	2.871
정치신분	.308	.180	.088 ⁺	1.361
경제계층	-.600	.207	.004**	.549
학력	.134	.205	.513	1.143
남한계층	.027	.238	.911	1.027
대졸더미	-.246	.679	.717	.782
정규교육 무	-.071	.549	.897	.932
소득수준	-.255	.118	.031*	.775
거주기간	.006	.011	.614	1.006
체류기간	.000	.007	.963	1.000
식량난 세대	1.707	.777	.028*	5.513
김정은 세대	-.420	.906	.643	.657
부당대우				
일터 괴롭힘				
편견				
이등국민				
교육기회	.056	.190	.768	1.058
취업기회	-.142	.225	.529	.868
승진기회	-.565	.264	.032*	.568
법기회	-.356	.175	.042*	.700
여성	.230	.201	.252	1.259
소득	-.085	.228	.711	.919
남북출신	-.045	.121	.708	.956
경제 만족도				
보수 적정성				
소득격차				
정부책임				
빈자지원				
상수항	1.980	2.769	.475	7.239

소득 불평등				
	B	S.E.	유의확률	Exp(B)
성	1.210	.607	.046*	3.354
연령	-.063	.032	.054 ⁺	.939
지역	.844	.793	.287	2.325
공식일	.719	.997	.470	2.053
이종일	2.194	1.026	.033*	8.970
비공식일	1.365	.969	.159	3.917
당원	1.675	.717	.019*	5.339
정치신분	.538	.226	.017*	1.713
경제계층	-.830	.250	.001**	.436
학력	.207	.252	.411	1.230
남한계층	.235	.323	.466	1.265
대졸더미	-1.058	.934	.257	.347
정규교육 무	.004	.674	.995	1.004
소득수준	-.213	.147	.148	.808
거주기간	-.004	.013	.761	.996
체류기간	.013	.008	.075 ⁺	1.014
식량난 세대	2.772	.932	.003**	15.986
김정은 세대	-1.306	1.164	.262	.271
부당대우				
일터 괴롭힘				
편견				
이등국민				
교육기회				
취업기회				
승진기회				
법기회				
여성				
소득				
남북출신				
경제 만족도	-.804	.338	.018*	.448
보수 적정성	-1.347	.383	.000***	.260
소득격차	-.382	.222	.086 ⁺	.682
정부책임	.535	.273	.050*	1.708
빈자지원	-.081	.262	.758	.922
상수항	1.078	3.888	.782	2.938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VI
VII

VI. 심층분석(3): 탈북민의 문화적응 유형, 삶의 만족도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한 갈등문제는 남북한 주민들의 심리적 갈등으로 귀결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심리적 통합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⁴⁷⁾ 남북한 이질성은 정치, 경제, 사법 등 제도의 측면, 삶과 일의 우선순위, 전통에 대한 관심 등 문화의 측면, 그리고 사고와 인식 방식 등 심리적 측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관찰되고 있다. 미래는 현재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통일 한반도 국가는 현재 남한과 북한의 상황이 투영될 것이며, 남한과 북한의 이질화 수준을 고려한다면 통일 한반도 국가는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 동서독의 통일 이후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제도와 문화의 갈등은 궁극적으로 동독출신 주민과 서독출신 주민들의 심리적 갈등과 분열로 연결되고 있다.

독일이 통일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동독출신 주민(이하 동독주민)과 서독출신 주민(이하 서독주민) 간 심리적 대립은 지속되고 있다. 동독주민과 서독주민의 2/3 이상은 통일이 성공했으며, 통일이 사회 전반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미쳤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서로의 심리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인의 74%는 동독주민과 서독주민 사이에 정신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⁴⁸⁾ 서독인 45%는 동독인들은 불만이 가득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동독인의 79%는 서독인들은 거만하고 돈만 밝힌다고 응답하였다. 더 나아가 동독인의 42%는 동독인 스스로 2등 시민이라고 느끼고 있으며, 1/3은 동독이 서독의 식민지라고 생각하였다.⁴⁹⁾

47) 채정민·김종남, “사람중심의 통일교육 모델의 제안: 통일 단계에 따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제14권 1호 (2008), pp. 523~524.

48) Online Focus, “Nach 22 Jahren Deutsche Einheit: Jeder fünfte Westdeutsche war noch nie imOsten,” <http://www.focus.de/politik/deutschland/nach-22-jahren-deutsche-einheit-jeder-fuenfte-westdeutsche-war-noch-nie-im-osten_aid_830662.html>. (검색일: 2016.5.30.).

I
II
III
IV
V
VI
VII

남한과 북한의 역사적 경험은 독일보다 더욱 심각한 심리적 갈등을 예고한다. 남한과 북한은 전쟁을 경험하였으며 그 결과 상호 적대적 인식이 동서독 간 적대적 인식보다 훨씬 강하다. 경제적 격차 역시 통일 이전 동서독의 격차보다 크며, 남북한 민간인 차원의 교류 및 접촉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통일 이후 남북한주민 간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갈등과 대립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은 통일비용의 문제를 넘어 통일 한반도 국가의 번영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통일 후의 심리적 통합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북한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로 대변되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예측하는 것이다. 물론 북한주민 뿐만 아니라 남한주민 역시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며 이에 대한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주민들이 통일 이전에 공유하고 있던 가치, 태도, 신념, 그리고 생활방식 등으로 대변되는 북한문화 정체성과 남한주민들이 공유하는 남한문화 정체성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북한주민의 경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회적 구조와 제도, 정치, 사법체계를 접하기 때문에 문화적 충격은 더욱 클 것이다. 또한 독일 통일 과정을 고려한다면 통일 한반도 국가에서 북한주민은 소수자가 될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북한문화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문화 정체성의 충돌은 자기 정체성의 문제와 직결된다. 남한 정체성과 북한 정체성의 충돌은 단순히 사회 적응의 차원을 넘어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자기 개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앞서

49) “동·서독인 80% “통일 대체로 만족…그러나 마음의 벽은 여전,” 『영남일보』, 2015.1 0.8.,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51008.010320837210001>>. (검색일: 2016.6.3.).

언급한 독일의 경우 독일국민은 독일문화 정체성이 아닌 서독의 문화 정체성 또는 동독의 문화 정체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제도적으로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구별되는 두 개의 민족, 또는 국가인 것이다. 통일 후 문화 정체성의 충돌에 대한 효과적 대처는 자기 정체성, 특히 북한주민 또는 남한주민이 아닌 통일 한반도 국민이라는 정체성 형성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이 어떤 방식으로 정체성 충돌에 대처할 것인지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지식의 저주(the curse of knowledge)⁵⁰⁾와 ‘소박한 실재론(naive realism)⁵¹⁾은 이러한 예측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식의 저주’는 간단해 말해 민주주의를 경험한 사람은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행동과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북한주민들의 삶을 예측하며,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 ‘소박한 실재론’의 주장이다. 물론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겠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국가의 분단과 성장과정을 고려한다면 그 효용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북한주민의 행동과 심리를 이해, 또는 예측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은 탈북민을 이용하는 것이다. 물론 탈북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북한주민 전체에 적용시키는 일반화를 어렵게 한다. 하지만 북한주민 연구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현실적 제약을 넘어 탈북민이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⁵⁰⁾ Colin Camerer, George Loewenstein and Martin Weber, “The Curse of Knowledge in Economic Settings: An Experimental Analysis,”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7, no. 5 (1989), pp. 1232~1254.

⁵¹⁾ Andrew Ward, et al, “Naive Realism in Everyday Life: Implications for Social Conflict and Misunderstanding,” in *Values and Knowledge*, eds. Reed E. Turiel and T. Brown Hillsdale (N.J.: Erlbaum, 1997), pp. 103~135.

I
II
III
IV
V
VI
VII

통일 한반도 국가에 미치는 함의를 고려한다면 이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탈북민은 남한의 제도와 문화, 그 속에서 생활하는 남한 주민들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북한 잔류 가족에게 전달하는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통일 이후 먼저 온 통일을 경험한 탈북민은 북한주민의 문화적, 제도적 적응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다.⁵²⁾

본 연구는 탈북민의 문화 정체성 관리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북한문화 정체성과 남한문화 정체성의 충돌과 관리 전략을 Berry⁵³⁾의 문화적응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Berry의 4군집 모형

문화적응은 개인이 다른 문화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기존 문화가 치 체계를 선택 또는 수용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통합하고 차별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⁵⁴⁾ 문화적응의 고전적 이론으로 문화충격(culture shock)이론을 들 수 있다.⁵⁵⁾ 이주자들이 주류문화권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을 연구한 문화충격이론에 따르면, 이주자들은 주류문화에 대해 우호적 단계(honeymoon)로 시작해, 현실적 문제로 인한 좌절

⁵²⁾ 한나·이승연.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심리학 연구의 방향성.”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4권 2호 (2015), pp. 485~512.

⁵³⁾ John W. Berry, “Marginality, Stress and Ethnic Identification in an Acculturated Aboriginal Communit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1, no. 3 (1970), pp. 239~252.

⁵⁴⁾ John W. Berry,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Acculturation: Theory Models and Some New Findings*, ed. Padilla A. M. (Boulder: Westview Press, 1980), pp. 9~25; John W. Berry,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vol. 46, no. 2 (1997), pp. 5~68.

⁵⁵⁾ Kalervo Oberg, “Cultural Shock: Adjustment to New Cultural Environment,” *Practical Anthropology*, vol. 23 (1960), pp. 337~350.

및 분노를 느끼는 위기 단계(crisis), 그리고 주류문화를 학습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는 회복 단계(recovery), 마지막으로 주류문화 속에서 유능감을 가지는 통합 단계(integration)를 거친다. 문화충격이론은 자신의 원래 문화를 포기하고 새로운 사회의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단 일차원 모형(unidimensional model)이다. 이러한 단일차원 모형에서 는 문화적응은 곧 새로운 문화로의 동화를 의미한다.

반면 양차원 모형(bi-dimensional model)은 원래 문화와 새로운 문화 또는 주류문화의 정체성이 개별적으로 변화, 통합되는 과정에 관심을 가진다. 예를 들어 소수민족 정체성 형성 모형(Minority identity development model)⁵⁶⁾은 이주자들의 모국문화와 주류문화에 대한 태도에 관심을 가졌다. 소수민족 정체성 형성 모형에 따르면, 이주자들이 주류문화에 긍정적, 모국문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순응 단계’, 차별 인식과 적응 스트레스로 주류문화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는 ‘저항과 몰입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문화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두 문화를 통합하는 ‘통합적 자각 단계’를 거친다.

인종, 정체성, 이주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응 모델이 제안되고 있지만⁵⁷⁾ 한국의 문화적응 연구는 대부분 Berry⁵⁸⁾의 문화적응 모델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Berry는 이주자의 고유문화와 적응해야 할

⁵⁶⁾ 자세한 이론적 틀은 다음을 참고하면 된다. Donald R. Atkinson, George Ed Morten, and Derald Wing Ed Sue, *Counseling American Minorities* (Boston: McGraw Hill, 1998).

⁵⁷⁾ 새로운 시각의 문화적응 연구들은 다음 연구를 참고하면 된다. A. Gupta, Leong F. and Valentine J. C., “A Meta-Analytic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and Depression among Asian American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 83, no. 2 (2013), p. 372.

⁵⁸⁾ John W. Berry and Uichol Kim,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in *Health and Cross-Cultural Psychology: Toward Applications*, eds. Pierre Dasen R., Berry John W. and Sartorius Norman (London: Sage, 1998), pp. 207~236.

I
II
III
IV
V
VI
VII

문화인 주류문화가 만나는 접촉 단계, 주류사회가 이주자에게 변화를 강요하는 갈등 단계를 거쳐 4가지 적응 유형으로 진화하는 해결 단계를 거친다고 주장한다. Berry는 이주자의 적응 유형을 이주자 고유문화와 정체성 유지 여부와 주류문화의 정체성 수용 여부의 두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표 VI-1〉 참조). 모국의 고유문화(탈북민의 경우: 북한문화)를 유지하면서 주류문화(탈북민의 경우: 남한문화)를 수용하는 ‘통합(integration)’ 유형, 고유문화를 버리고 주류문화를 수용하는 ‘동화(assimilation)’ 유형, 고유문화를 유지하면서 주류문화를 거부하는 ‘분리(separation)’ 유형, 마지막으로 두 문화 모두 거부하는 ‘주변화(marginalization)’ 유형이다. Berry는 통합 유형, 즉 자신의 고유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에서 유능감과 안정감을 획득하는 유형이 가장 성공적인 적응 유형이라고 주장하였다.

표 VI-1 >> Berry의 문화적응 유형

		고유문화 유지	
		유지	거부
주류문화 수용	수용	통합	동화
	거부	분리	주변화

출처: Berry,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p. 296. (필자가 재구성).

가. Berry의 4군집 모형의 적용: 한국 내 이주민 vs. 탈북민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적응 연구의 결과는 Berry의 주장과 일치한다. 통합 유형을 보이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타유형의 이주여성보다 더 낮았다.⁵⁹⁾ 통합 유형과

⁵⁹⁾ 진애경,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경험과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

동화 유형을 보이는 중국인 유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낮았다.⁶⁰⁾ 통합 유형의 이주자와 유학생들은 심리적 안녕감과 주관적 행복감도 높았다.⁶¹⁾

상대적으로 Berry의 문화적응 유형을 탈북민에게 적용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탈북민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적응도가 다른 이주민과 유학생들과 다르다는 것이다. 채정민과 이종환⁶²⁾의 연구에서 북한문화만을 고수하는 분리 유형의 탈북민의 일반적 자기 효능감이 가장 높았다. 반면, 북한문화를 버리고 남한문화를 수용한 동화 유형을 보이는 탈북민이 가장 높은 사회적 자기 효능감을 보였다. 자기 효능감은 심리적 적응 수준과 관련이 있다는 면에서 채정민과 이종환의 연구는 Berry의 주장과 배치된다.

이은선의 연구 역시 통합 유형의 탈북민이 가장 낮은 스트레스 수준, 가장 높은 적응 수준을 보일 것이라는 Berry의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예를들어 심리적 안녕감의 경우 동화와 통합 유형이 가장 높았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경우 동화 유형이 가장 낮았다.

레스,”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⁶⁰⁾ 김재우, “재한 중국 유학생이 느끼는 차별과 대처방식이 문화적응 유형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리첸첸·오인수·이수경,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기본심리욕구 및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제17권 1호 (2016), pp. 101~120; 이예슬·김은하,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에 따른 군집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12권 3호 (2015), pp. 295~316.

⁶¹⁾ 김현옥 외, “유학생의 문화적응 전략, 민족유형과 심리적 안녕감, 우울의 관계,” 『한국 심리학회지』, 제20권 1호 (2014), pp. 1~18; 송원영·리난,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유학 초기 심리적 적응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제5권 2호 (2008), pp. 159~173.

⁶²⁾ 채정민·이종환,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남북한문화 이질성: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제10권 2호 (2004), pp. 79~101.

나. 연구문제

탈북민이 유학생, 또는 외국인 이주민과 다른 문화적응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가능성은 탈북민의 특수성을 들 수 있다. 특히 탈북민은 외국인 이주민 또는 유학생과는 달리 남한주민과 같은 민족이라는 민족 정체성이 높다. 따라서 남한문화를 수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으며, 따라서 동화 유형에서 가장 높은 적응도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남한문화를 거부하는 분리 유형에서 자기 효능감이 가장 높다는 채정민과 이종환의 결과를 설명하지 못한다.

두 번째 가능성으로 남한사회의 특수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Berry는 주류사회의 구성원이 이주자에게 변화를 강제하는 갈등 단계를 상정하고 있다. 남한주민이 탈북민에게 통합적 적응보다는 분리 또는 동화적 적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동화 또는 분리 유형에서 적응력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외국인 이주자와 유학생이 통합 유형에서 가장 성공적인 남한사회 문화 적응을 보이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설명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의 연구 방법론의 제한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연구에 참여한 탈북민의 거주기간이 짧다. 채정민과 이종환(2004)의 경우 연구에 참여한 탈북민의 80% 이상이 남한에 거주한지 4년 이하였다. 이은선(2015)의 경우 3년 이하가 62%였으며, 7년 이상이 15%였다. 금명자, 권해수, 이희우(2004)⁶³⁾는 탈북민 청소년의 적응 유형을 조사하였다. 4개월 이하 거주자는 '통합과 동화 유형', 이후 1년까지는 '분리 유형', 1년과 2년 사이에는 '주변화 유형', 2년 이후에

⁶³⁾ 금명자 외, "탈북 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6권 2호 (2004), pp. 295~308.

는 ‘통합 유형’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정착지 거주기간은 적응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⁶⁴⁾ 선행연구들은 탈북민의 경우 남한거주 후 5년 전후로 남한사회에 익숙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⁶⁵⁾ 이런 점에서 5년 미만 거주자를 주로 사용한 연구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익숙해진다는 것의 의미가 적응이 완료되었다는 것인지 남한사회에 친숙성이 증가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또한 5년이 지난 이후에도 부적응의 문제를 보고한 연구⁶⁶⁾가 많으며, 삶의 만족도가 10년을 기준으로 감소한다는 연구⁶⁷⁾를 고려한다면 거주기간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Berry의 4 군집 모형이 탈북민에게 적용이 되는지 근본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이예슬과 김은하(2015)는 Berry의 네 유형이 중국인 유학생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예슬과 김은하(2015)는 중국인 유학생은 동화 유형이 빠진 주변화, 통합, 분리의 세 유형으로 분류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탈북민의 문화적응 유형 역시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탈북민의 문화적응 전략(북한문화 유지전략과 남한문화 수용전략)을 통해 Berry의 4군집모형이 탈북

64) C. Ward, "Acculturation," in *Handbook of Intercultural Training*, eds. Dan, Landis and Rabi Bhagat, 2nd edition (Thousand Oaks: Sage, 1996), pp. 124~147.

65) 이장호, "통일의 심리학적 기초," 『사회과학 연구』, 제13권 1호 (1996), pp. 5~21; 서재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통일정책 연구』, 제11권 1호 (2002), pp. 229~264; 이우영·이훈환,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p. 447~486은 2년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66) 이기영·엄태완, "북한이탈 주민의 무망감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16권 (2003), pp. 5~8.

67) 김수암 외,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p. 231.

I
II
III
IV
V
VI
VII

민에게도 적용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둘째, 탈북민의 문화적응 유형의 특징을 인구통계적 배경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문화적응 유형이 성별, 남한 거주기간,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지 아니면 큰 변화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탈북민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사회·심리적 변수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심리적 변수는 삶의 만족도, 경제적 만족도와 같은 남한생활의 만족도와 더불어 남한사회의 이미지, 권위주의 의식, 차별에 대한 탈북민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탈북민과 남한주민의 통합, 장기적으로는 북한주민과 남한주민의 통합을 준비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문화적응 유형 분석

가. 측정도구

Berry의 4군집모형이 탈북민에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채정민⁶⁸⁾이 개발한 심리적 문화적응 전략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⁶⁸⁾ 채정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재와 적응 행태,” p. 137.

표 VI-2 >> 심리적 문화적응 전략 척도 문항

심리적 문화적응 전략 척도	
북한문화 유지전략	1) 남한에서 살고 있지만 나의 정신적 뿌리는 북한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2) 나는 북한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이 가치있다고 생각한다.
	4) 나는 자식들이 (여기에서 같이 산다면) 북한의 풍습을 잊지 않도록 가르치겠다.
	5) 나는 북한출신 사람들과 계속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7) 북한에 남아 있는 전통적인 미풍양속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8) 나는 북한에서의 삶을 종종 떠올리며 그리워한다.
	9) 나는 북한출신 사람들만 있는 모임에서는 북한식 말투를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12) 북한출신 사람들의 모임에 나가면(나간다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 것이다.
남한문화 수용전략	3) 나는 진정한 남한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6) 나는 남한에서 경험한 새로운 생활이 매우 유익하고 재미있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내려고 한다.
	10) 나는 남한사회에서 고유하게 발전된 생활양식을 받아들일 것이다.
	11) 나는 일상생활에서 남한식 말투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겠다.)
	13) 나는 남한에서 잘 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보겠다.
	14) 나는 자녀들이(여기에서 같이 살거나 산다면), 남한사회의 문물을 잘 받아들일도록 해주겠다.
	15) 나는 남한사회에 대한 지식들을 즐거운 기분으로 배우려고 한다.
	16) 나는 새롭게 사귀 남한사람들과 허물 없이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한다.

출처: 채정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재와 적응 행태,” p. 137. (필자가 재구성).

I
II
III
IV
V
VI
VII

나. 문화적응 전략 분석

(1) 북한문화 유지전략

북한문화 유지전략을 측정하는 8개 문항의 crombach's α 는 .74로 만족할만한 수준의 내적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문화 유지전략의 평균은 3.1, 표준오차는 0.04였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북한문화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20대보다 60대가 북한문화 유지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북한에서 내륙지역에 거주했던 응답자가 국경지역에 거주했던 응답자에 비해 북한문화 유지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거주기간, 북한에서의 학력, 당원 여부, 직장 유형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표 VI-3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북한문화 유지전략 평균과 표준오차

전체	성별		연령대별				
	남성 ^{b69)}	여성 ^a	20대 ^a	30대 ^{a,b}	40대 ^{a,b}	50대 ^{a,b}	60대 ^b
3.1(.04)	3.2(.05)	2.9(.05)	2.9(.10)	3.0(.08)	3.0(.06)	3.1(.09)	3.3(.09)
거주기간별			학력별				
5년 이하	6~10년	11년 이상	인민학교 이하	고졸	전문학교 졸	대재 이상	
3.0(.07)	3.1(.07)	3.1(.06)	3.0(.22)	3.0(.05)	3.2(.09)	3.2(.08)	
당원 여부		직장 유형			북한에서 거주지역		
당원	비당원	공식일	이종일	비공식일	국경	내륙	
3.1(.07)	3.0(.05)	3.1(.05)	3.1(.08)	3.0(.08)	3.0(.04) ^a	3.2(.08) ^b	

() : 평균의 표준오차

출처: 필자 작성

⁶⁹⁾ 첨자는 일원변량분석 후 사후 검증(Tukey test)의 결과를 표시한 것이다. 변수의 수준별 첨자가 같은 경우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연령대의 경우 20대, 30대, 40대, 50대는 모두 a가 표시되어 있다. 이는 20~50대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30대, 40대, 50대, 60대는 모두 b가 표시되어 있다. 이는 30대~60대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이다. 첨자가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20대와 60대이며, 이는 20대와 60대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첨자 표시가 없는 변수는 평균 차이가 관찰되지 않는 변수이다.

(2) 남한문화 수용전략

남한문화 수용전략을 측정하는 8개 문항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 는 .82로 높은 수준의 내적 신뢰도를 보였다. 남한문화 수용전략의 전체 평균은 4.3점으로 북한문화 수용전략의 평균인 3.1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 결과는 탈북민의 북한문화를 유지하려는 노력보다 남한문화를 수용하려는 경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의미한다.

주요변수별 평균과 표준오차, 변수의 수준별 평균 검증 결과는 <표 VI-4>에 제시하였다. 남한문화를 수용하려는 경향성은 60대가 가장 낮았으며, 50대가 가장 높았다. 두 집단의 평균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성별, 거주기간, 북한에서의 학력, 북한에서의 당원 여부, 직장 유형, 북한에서의 거주지역의 각 수준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VI-4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남한문화 수용전략 평균과 표준오차

전체	성별		연령대별				
	남성	여성	20대 ^{a,b}	30대 ^{a,b}	40대 ^{a,b}	50대 ^b	60대 ^a
4.3(.03)	4.3(.04)	4.3(.04)	4.2(.09)	4.3(.06)	4.3(.05)	4.4(.06)	4.1(.10)
거주기간별			학력별				
5년 이하	6~10년	11년 이상	인민학교 이하	고졸	전문학교 졸	대재 이상	
4.3(.05)	4.3(.06)	4.2(.05)	4.0(.17)	4.3(.04)	4.3(.08)	4.3(.08)	
당원 여부		직장 유형			북한에서 거주지역		
당원	비당원	공식일	이종일	비공식일	국경	내륙	
4.2(.07)	4.3(.04)	4.3(.05)	4.4(.06)	4.4(.06)	4.3(.03)	4.2(.07)	

() : 평균의 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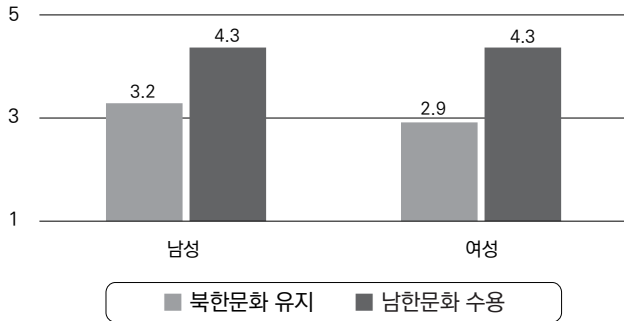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VI
VII

(3) 북한문화 유지전략과 남한문화 수용전략의 비교

북한문화 유지에 대한 8개 문항의 평균, 남한문화 수용에 관한 8개 문항의 평균을 성별, 연령, 남한 거주기간, 북한에서의 직업 유형에 따라 살펴보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북한문화 유지 경향성보다 남한문화 수용 경향성이 높은점은 공통적이었다. 하지만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북한문화 유지 경향성이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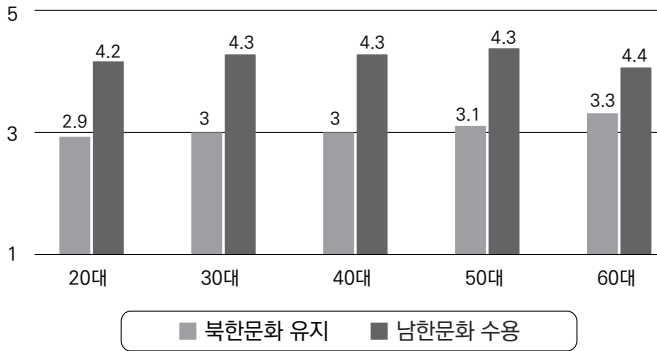
그림 VI-1 >> 성별에 따른 문화적응 전략



출처: 필자 작성

모든 연령대에서 북한문화 유지 경향성이 남한문화 수용 경향성보다 낮았다. 북한문화 유지 경향성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감소할수록 북한문화 유지 경향성이 낮아지는 패턴이 관찰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젊은 탈북민의 북한문화에 대한 자긍심 유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 남한문화 수용 경향성은 60대 이상이 가장 낮았다.

그림 VI-2 연령에 따른 문화적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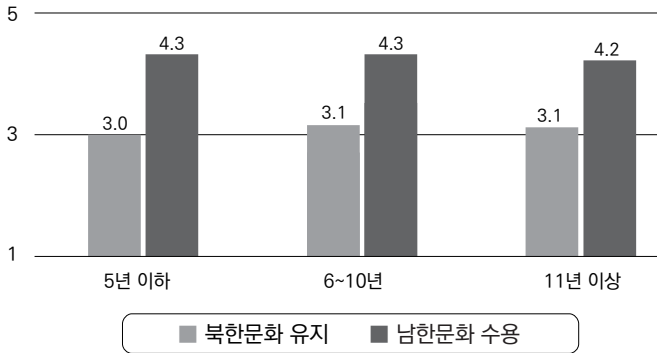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모든 거주기간 구간에서 북한문화 유지 경향성이 남한문화 수용 경향성보다 낮았다는 점은 성별과 연령대의 결과와 유사하다. 하지만 거주기간에 따른 북한문화 유지 경향성, 그리고 남한문화 수용 경향성에 차이가 없었다는 점은 성별과 연령대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모든 직업 유형에서 북한문화 유지 경향성이 남한문화 수용 경향성보다 낮았다. 북한에서의 직업 유형은 북한문화 유지 경향성 및 남한문화 수용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소위 말하는 장마당 효과, 북한에서의 시장활동 경험이 남한사회 적응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 적어도 남한문화를 수용하려는 태도에 있어서는 북한에서의 시장경험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I
II
III
IV
V
VI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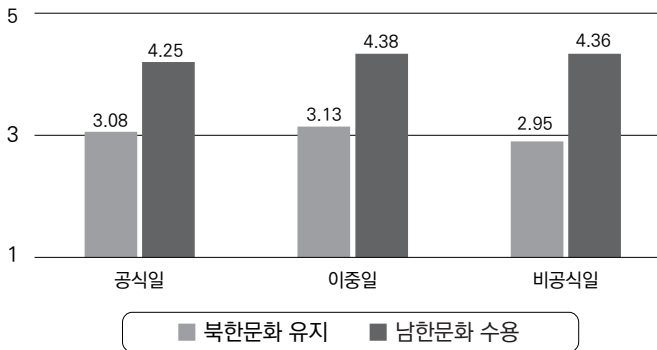
그림 VI-3 ▶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문화적응 전략



출처: 필자 작성

그 외 북한에서 당원이었는지의 여부는 남한문화 수용전략과 북한문화 유지전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북한에서 내륙지역에 거주했던 응답자들이 국경지역에 거주했던 응답자에 비해 북한문화 유지에 보다 적극적이었다. 반면 남한문화 수용전략에 북한에서의 거주지역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림 VI-4 ▶ 북한에서의 직업 유형에 따른 문화적응 전략



출처: 필자 작성

(4) 요약

탈북민은 북한문화 유지보다는 남한문화 수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성차, 연령차, 남한 거주 기간 등 대부분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수준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된다. 남한문화 수용전략에 있어 젊은 세대와 노령 세대보다 중간 세대가 적극적인 반면 북한문화 유지전략에 있어서는 노령 세대가 더 적극적이었다. 두 가지 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남한 거주기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이다. 남한문화 수용전략의 경우 천장 효과(ceiling effect)로 향상의 여지가 다소 없을 수 있다. 반면 북한문화 유지전략의 경우 중앙치인 3점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북한문화 유지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시장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장마당으로 대표되는 시장화 효과가 적어도 본 연구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북한에서의 시장 활동이 자본주의, 즉 남한사회에서의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다. 군집분석 결과

남한문화 수용전략과 북한문화 유지전략을 군집 변인으로 하여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Wards 방법을 사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화 일정표 계수와 해석 가능성을 토대로 4개의 군집을 확인하였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확인한 4군집의 평균점을 중심점으로 투입하여 K-means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화적응 유형별 분포는 <표 VI-5>에 제시하였다.

I

II

III

IV

V

VI

VII

군집분석 결과 탈북민은 4가지 문화적응 유형 중 주류문화(남한)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기울이는 동화 유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탈북민 중 31.1%(93명)이 동화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남한문화 적응보다는 북한문화를 고수하는 분리 유형(28.1%, 84명)과 두 문화를 모두 수용하는 통합 유형(19.41%, 58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문화와 남한문화를 모두 거부하는 주변화 유형은 응답자 중 21.4%(64명)로 관찰되었다. 본 결과는 Berry의 4 군집 모형이 탈북민에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표 VI-5 ▶ 탈북민의 유형별 문화적응 유형

		남한문화	
		수용	거부
북한문화	유지	64(21.4)	84(28.1)
	거부	93(31.1)	58(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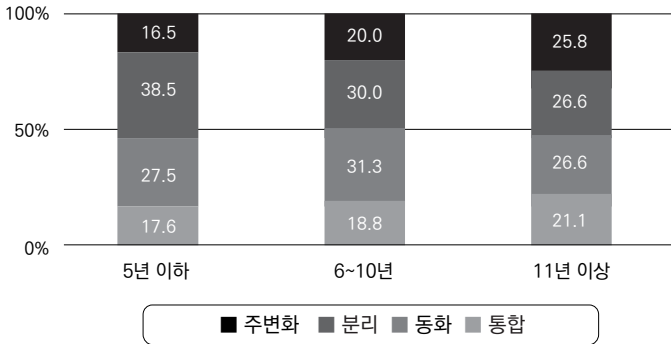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라. 문화적응 유형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 거주기간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

거주기간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그림 VI-5〉 참조). 남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통합 유형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주변화 유형의 비중이 유지 또는 소폭 증가되는 것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VI-5 ▶ 거주기간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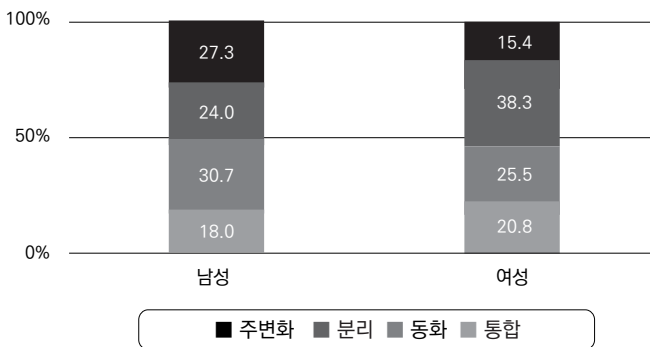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2) 성별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

남성의 경우 분리전략이 가장 우세한 문화적응 유형이었으며, 통합 유형, 동화 유형, 주변화 유형 순으로 구분되었다. 반면 여성의 경우 동화 유형이 가장 우세한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분리, 주변화, 통합 유형 순으로 구분되었다.

그림 VI-6 ▶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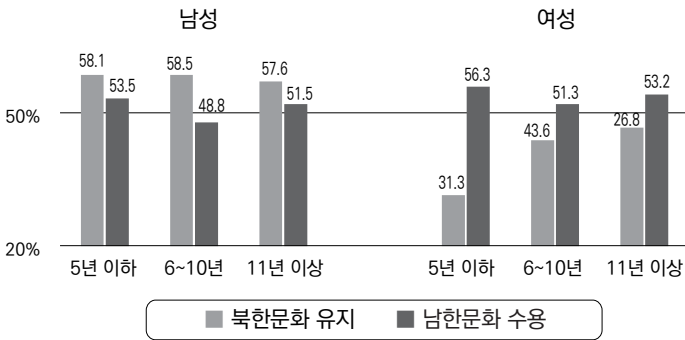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VI
VII

거주기간과 성별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문화적응 전략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군집분석 결과 북한문화 유지성향이 강한 집단(통합 유형 + 분리 유형, 이하 북한문화 유지전략)과 남한문화 수용성향이 강한 집단(통합 + 동화, 이하 북한문화 수용전략)⁷⁰⁾의 비율을 <그림 VI-7>에 제시하였다.

그림 VI-7 남한 거주기간과 성별에 따른 문화적응 전략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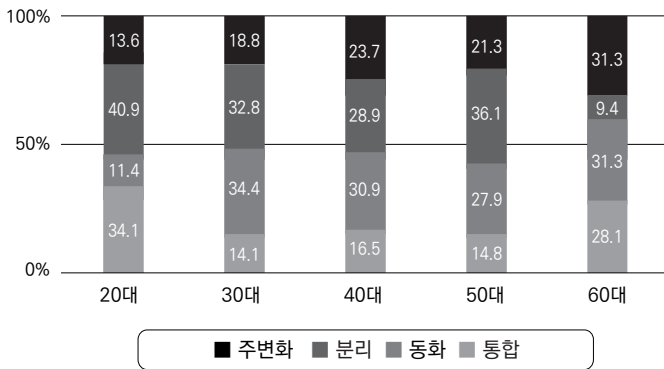
남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북한문화 유지전략이 남한문화 수용전략보다 강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거주기간에 따른 변화는 미미하였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남한문화 수용경향이 북한문화 유지성향보다 강한 편이며 최초 5년 이하에 이러한 차이가 가장 심했다. 긍정적인 부분은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여성의 북한문화 유지성향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남성의 경우 남한문화 수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성의 경우 정착 초기에 북한문화 유지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⁷⁰⁾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전략 구분으로 문화적응 전략 척도로 측정된 북한문화 유지전략과 남한문화 수용전략과 분석결과가 다를 수 있다.

(3) 연령별 문화적응 유형

전반적으로 동화 유형이 60대 이상 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가장 우세한 문화적응 유형이었다. 30대, 40대, 50대의 경우 동화 유형, 통합 유형, 분리 유형, 주변화 유형 순이었다는 점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VI-8 ▶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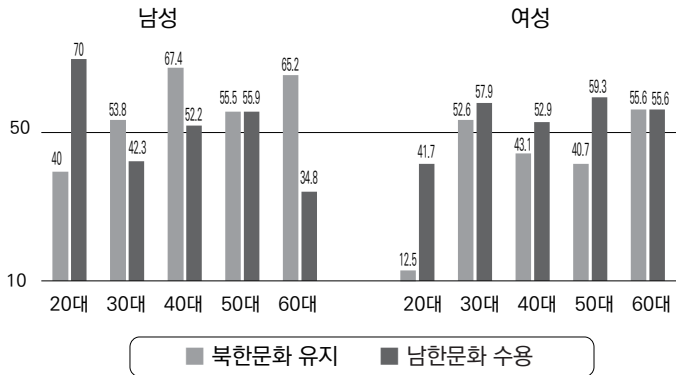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연령별 문화적응 유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60대 이상 응답자 중 9.4%만이 동화형이라는 것이다. 60대 이상 응답자의 31.3%가 통합형이라는 점에서 60% 가량의 60대 이상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남한문화 수용에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다. 남한문화 수용에 소극적인 응답자의 절반 가량은 분리 유형, 나머지 절반 가량은 주변화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20대 응답자의 34%가 주변화 유형으로 구분된 것 역시 주목해야 할 것이다. 20대의 경우 다른 연령에 비해 동화 유형과 주변화 유형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문화적응 유형의 양극화가 뚜렷하다.

- I
- II
- III
- IV
- V
- VI
- VII

그림 VI-9 연령과 성별에 따른 문화적응 전략



출처: 필자 작성

연령대와 성별에 따른 문화적응 전략 분석결과는 <그림 VI-9>에 제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에 따르면 남성이 남한문화 수용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연령과 성별에 따른 문화적응 전략 분석결과는 이러한 결론이 모든 연령대에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20대의 경우 모든 연령과 성별의 조합에서 가장 높은 남한문화 수용 경향성을 보여준다. 즉 20대 남성이 남한문화 수용에 가장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북한문화 수용경향은 남성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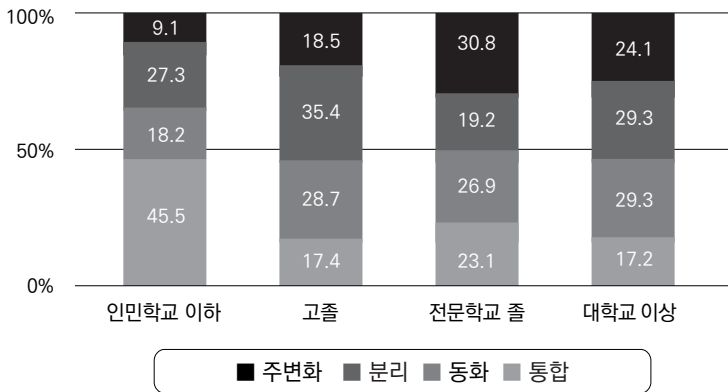
여성의 경우 20대 여성의 북한문화 유지경향이 심각하게 낮은 수준으로 받아들여질 만하다. 20대 여성의 12.5%만이 북한문화 유지에 적극적이었다. 상대적으로 남한문화 수용성이 북한문화 유지 경향성보다 높지만, 이마저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다. 60대의 남한문화 수용 경향이 낮은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20대 남성의 경우 북한문화 유지, 60대 남성의 경우 남한문화 수용, 20대 여성의 경우 북한문화 유지를 고양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아쉬운 점은 보다 세밀한 분석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성별, 거주기간, 연령대를 모두 고려한 교차분석은 보다 정교한 정책적 대안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모두 30개의 조건을 형성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의 수 만으로는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 향후 표본의 수를 늘린다면 보다 엄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4) 북한에서의 학력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

북한에서의 학력이 전문학교 졸업자인 응답자를 제외한 모든 학력수준에서 동화 유형이 가장 우세하였다. 전문학교 졸업자의 경우 통합 유형이 가장 우세한 문화적응 유형이었다.

그림 VI-10 학력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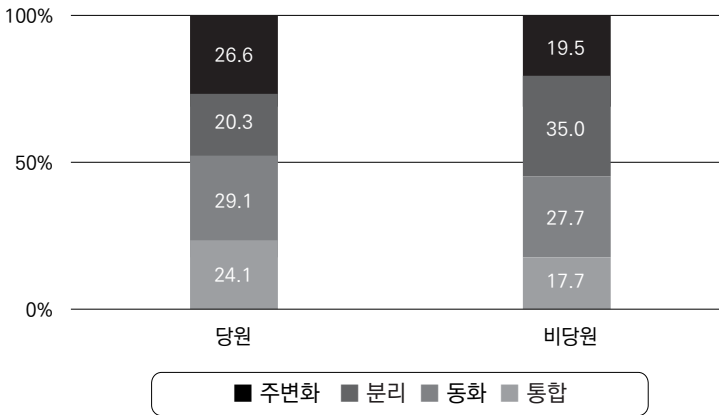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VI
VII

(5) 북한에서 당원 여부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

북한에서 당원이었던 응답자가 북한에서 당원이 아니었던 응답자에 비해 통합 및 동화 유형의 비율이 낮다(46.9% vs. 54.5%)는 점에서 남한문화 수용에 소극적이었다. 반면 북한문화를 유지하려는 전략(통합 + 분리)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당원이었던 응답자가 더 적극적이었다. 결과적으로 북한에서 당원이었던 응답자의 지배적인 문화적응 유형은 분리 유형이며 북한에서 당원이 아니었던 응답자의 지배적인 문화적응 유형은 동화 유형이었다. 당원이었던 응답자의 통합 유형 및 주변화 유형의 비율이 높은 것도 특징적이다.

그림 VI-11 당원 여부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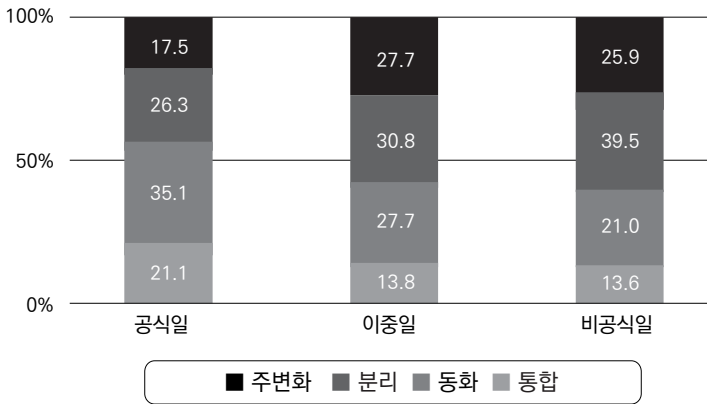
북한에서 당원이 되기란 쉽지 않다. 자기 자신과 북한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던 경험이 북한문화를 유지하려는 경향성을 강화했을 수 있다. 그리고 북한문화에 대한 자부심에 비추어봤을 때 남한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추론이

맞다고 가정한다면 북한문화에 대한 자부심 고양에 자칫 남한문화에 대한 배척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문화와 남한문화의 비교가 문화 우월성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과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6) 북한에서 가졌던 직업 유형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

북한에서 공식일만을 했던 응답자의 우세 유형은 분리 유형인 반면 이중일과 비공식일을 했던 응답자의 우세 유형은 동화 유형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림 VI-12 >> 북한에서의 직업 유형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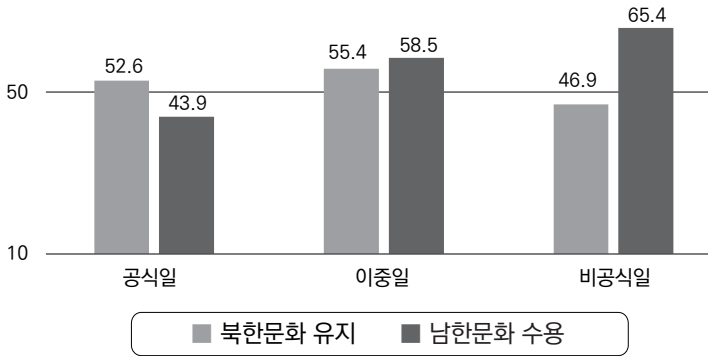
북한에서의 일 유형에 따른 남한문화 수용전략과 북한문화 유지전략의 우세성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공식일을 한 응답자에 비해 이중일을 한 응답자, 이중일을 한 응답자보다 비공식일을 한 응답자가 남한문화 수용에 적극적인 문화적응 유형에 포함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 I
- II
- III
- IV
- V
- VI
- VII

결과는 장마당으로 대표되는 시장화 경험이 자본주의적 구조에 적응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⁷¹⁾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더 면밀한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시장화 경험이 증가할수록 남한문화 수용에 더 적극적인 경향은 여성에게만 적용된다. 또한 여성의 시장화 경험이 많을수록 북한문화 수용에 소극적이 되는 경향은 시장화 경험이 부정적으로 작동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VI-13 북한에서의 직업 유형에 따른 문화적응 전략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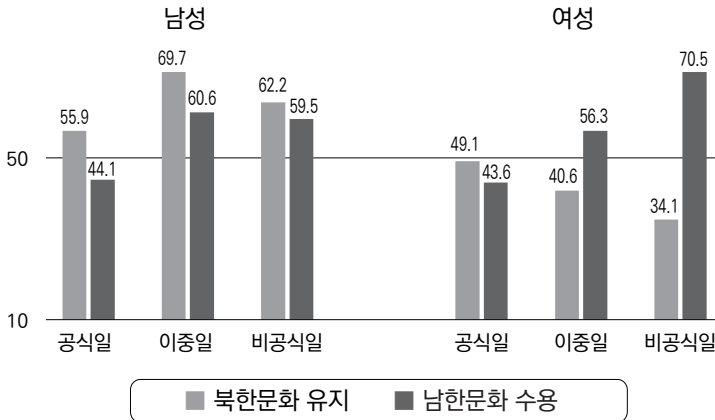
또한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북한에서의 직업 유형의 효과는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남한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일 경우 공식일 경험을 한 응답자의 남한문화 수용태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5년 이하 응답자의 경우 비공식일을 한 응답자가 북한문화 유지 경향이 강했지만 6~10년 거주자는 비공식일 경험이 많을수록 북한문화 유지에 소극적이었다.

⁷¹⁾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응 전략 척도를 근거로한 결과와는 상충된다. 유형에 근거한 문화적응 전략과 8개 척도의 평균에 근거한 문화적응 전략이 차이를 보이는 점은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되지만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11년 이상 응답자의 경우 이중일을 한 응답자가 북한문화 유지에 적극적이었고 비공식일을 한 응답자가 가장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마당 효과로 대변되는 시장화의 영향력이 장마당 자체의 효과인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조사 결과는 시장화의 효과가 남한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뿐만 아니라 북한문화 유지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원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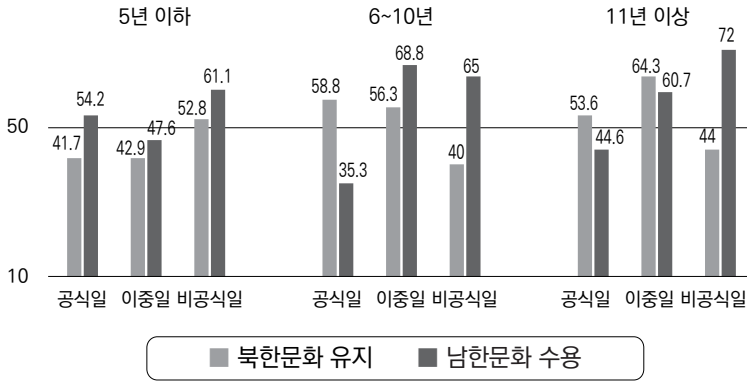
그림 VI-14 성별과 북한에서의 직업유형에 따른 문화적응 전략



출처: 필자 작성

- I
- II
- III
- IV
- V
- VI**
- VII

그림 VI-15 ▶ 남한 거주기간과 북한에서의 직업 유형에 따른 문화적응 전략



출처: 필자 작성

(7) 요약

탈북민의 문화적응 유형은 동화 유형, 분리 유형, 통합 유형, 주변화 유형 순으로 구분되었다. 남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동화 유형의 비율은 줄어들고 통합 유형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주변화 유형의 비율은 다소 증가한 반면 분리 유형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었다. 남성의 경우 분리 유형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여성은 동화 유형이 가장 우세하였다. 20대의 경우 동화 유형과 주변화 유형의 양극화가, 60대의 경우 북한문화 유지를 중요시하는 분리 유형 및 주변화 유형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하지만 문화적응 유형은 변수들이 조합되면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북한문화 수용에 소극적인 여성의 경우 거주기간에 따라, 연령에 따라 북한문화 수용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 남한거주 초기 여성이 북한문화 수용에 가장 소극적이며 20대 여성이 타 연령대의 여성보다 북한문화 수용에 소극적이었다. 남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남한문화

수용에 소극적이지만 20대 남성은 남한문화 수용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북한에서 당원이었던 응답자는 북한문화 유지에 적극적이었다. 북한에서 당원이었던 응답자의 문화적응 유형은 북한문화 유지에 적극적인 태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보여준다. 북한에서 당원이었던 응답자가 북한에서 당원이 아니었던 응답자에 비해 통합 유형의 비율이 높았다. 동시에 주변화 유형 및 분리 유형의 비율 역시 북한에서 당원이 아니었던 응답자에 비해 높았다.

북한에서의 직업 유형과 문화적응 유형 역시 복잡한 형태로 나타난다. 북한에서 공식일을 했던 응답자는 주변화 유형과 분리 유형이 우세한 반면, 북한에서 비공식일을 했던 응답자는 동화 및 통합 유형이 우세하였다. 북한에서 시장 경험을 한 응답자가 남한문화 수용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문화적응 유형에 포함된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시장경험이 많을수록 남한문화 수용에 적극적인 경향은 여성에게만 나타나며, 남한거주 초기 남성은 남한문화 수용에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시장경험이 북한문화 수용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적이지 않았다.

마.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사회·심리적 변수 분석

본 절에서는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다양한 심리·사회 변수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남한생활 만족도, 권위주의, 자본주의적 가치, 남한사회에 대한 견해, 지각된 편견과 차별감을 측정하고 이를 문화적응 유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남한생활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와 경제적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권위주의는 권력과 강함에 대한 믿음, 권위주의적 복종, 인습주의와 냉소주의를 측정하였다. 자본주의적 가치에 대해서는 능력위주 사회에 대한 믿음을 측정하였다. 남한사회에 대한 견해

I

II

III

IV

V

VI

VII

는 남한사회에 대한 이미지, 남한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견해, 국외이주 의사, 그리고 정착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편견과 차별은 직접적 차별 경험, 출신에 따른 차별 경험, 보수에 대한 견해, 그리고 탈북민에 대한 지각된 편견을 측정하였다.

(1) 남한생활 만족도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5개 문항의 내적 신뢰도는 .82였으며,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평균과 표준오차, 그리고 수준별 평균 차이 검증 결과는 〈표 VI-6〉에 제시하였다. 탈북민의 삶의 만족도는 4.8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남북통합의식조사'에서 조사한 남한 주민의 삶의 만족도 4.2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치이다. 전반적으로 탈북민이 남한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에서 당원이었던 응답자의 삶의 만족도가 당원이 아니었던 응답자의 삶의 만족도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 외 변수들의 수준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VI-6 변수별 삶의 만족도 평균과 표준오차

전체	성별		연령대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4.8(.07)	4.9(.09)	4.8(.09)	4.8(.17)	4.8(.14)	4.7(.12)	4.9(.14)	5.1(.21)
거주기간별			학력별				
5년 이하	6~10년	11년 이상	인민학교 이하	고졸	전문학교 졸	대재 이상	
5.0(.11)	4.9(.13)	4.7(.10)	5.3(.38)	4.7(.09)	5.0(.15)	5.1(.14)	
당원 여부		직장 유형			북한에서 거주지역		
당원	비당원	공식일	이종일	비공식일	국경	내륙	
5.0(.11) ^b	4.8(.08) ^a	4.8(.10)	5.0(.13)	4.8(.12)	4.8(.07)	4.9(.16)	

() : 평균의 표준오차

출처: 필자 작성

문화적응 유형별로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네 집단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네 집단의 차이가 유의한 경우 사후검증으로 Tukey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VI-7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 일원변량분석 결과

	주변화	분리	동화	통합
삶의 만족도(7) ⁷²⁾	4.3(.13) ^{a73)}	4.7(.12) ^{a,b}	5.0(.12) ^b	5.2(.14) ^b

(): 평균의 표준오차
출처: 필자 작성

주변화 유형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통합 유형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두 집단의 삶의 만족도 간 평균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또한 동화 유형과 주변화 유형의 삶의 만족도의 평균 차이도 유의미하였다. 반면 주변화와 분리 유형의 삶의 만족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분리 유형과 동화 유형, 그리고 통합 유형의 삶의 만족도 평균 차이 역시 유의미하지 않았다.

남한문화 수용전략과 북한문화 유지전략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두 변수를 독립변인으로 하는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⁷⁴⁾ 남한문화 수용전략의 주 효과, 북한문화 수용전략의 주효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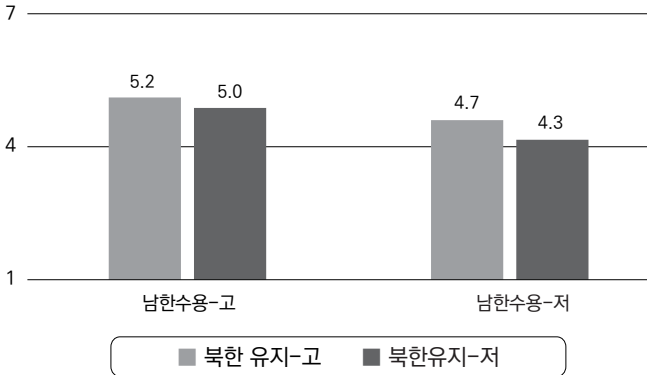
72) 척도의 측정 수준

73) Tukey Test의 결과를 표시하였다. 첨자가 같은 경우는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삶의 만족의 경우 주변화 유형과 분리 유형의 평균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 두 유형은 a를 포함하고 있다. 같은 논리로 분리 유형, 동화 유형, 통합 유형의 평균 차이 역시 유의미하지 않다. 세 유형은 b를 포함하고 있다. 네 유형 중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경우, 즉 첨자의 중복이 없는 경우는 주변화 유형과 통합 유형, 그리고 주변화 유형과 동화 유형이다.

74) 문화적응 유형이 남한문화 수용전략과 북한문화 유지전략을 근거로 분류되었다는 점에서 적응 유형별 일원 변량 분석과 적응전략에 따른 이원 변량 분석이 중첩이 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유형별 분석은 유형에 따른 차이에 초점을 두었다면, 전략 별 분석은 이러한 차이가 전략의 차이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원

유의하였다. 두 변수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즉 남한문화 수용에 적극적일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았고, 북한문화 유지에 적극적일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았다.

그림 VI-16 문화적응 전략에 따른 삶의 만족도



출처: 필자 작성

〈경제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 삶의 만족도 외에 현재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를 4점 척도(1: 매우 불만족, 4: 매우 만족) 상에서 측정하였다. 경제적 만족도의 평균은 2.6점(표준오차: .04)이며, 거주기간의 효과와 학력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다. 경제적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집단은 6~10년 이하 거주자였으며 가장 높은 집단은 11년 이상 거주자였다. 두 집단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였다. 북한에서 고졸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인민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변량분석의 통계치는 간명성을 위해 생략하였다. 구체적 통계치에 대해서는 저자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표 VI-8 변수별 경제적 만족도 평균과 표준오차

전체	성별		연령대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6(.04)	2.7(.06)	2.6(.06)	2.6(.13)	2.5(.10)	2.6(.07)	2.8(.10)	2.9(.10)
거주기간별			학력별				
5년 이하	6~10년	11년 이상	인민학교 이하	고졸	전문학교 졸	대재 이상	
2.7(.08) ^{a,b}	2.4(.08) ^a	2.7(.06) ^b	3.1(.21) ^b	2.6(.06) ^a	2.7(.10) ^{a,b}		2.7(.09) ^{a,b}
당원 여부		직장 유형			북한에서 거주지역		
당원	비당원	공식일	이종일	비공식일	국경	내륙	
2.7(.08)	2.6(.05)	2.6(.07)	2.7(.09)	2.6(.09)	2.6(.05)	2.8(.09)	

() : 평균의 표준오차
출처: 필자 작성

표 VI-9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 일원변량분석 결과

	주변화	분리	동화	통합
경제상황 만족도(4)	2.4(.10)	2.6(.08)	2.7(.08)	2.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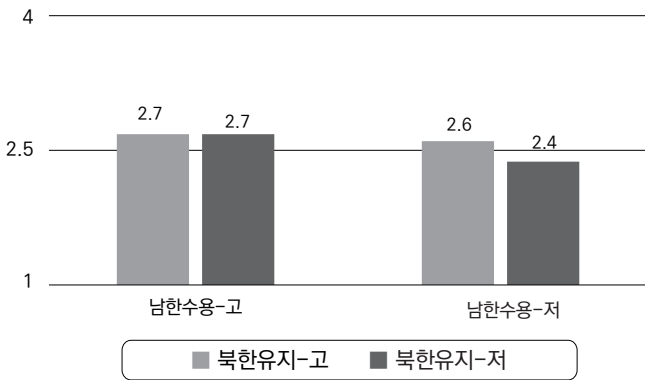
() : 평균의 표준오차
출처: 필자 작성

문화적응 유형 간 경제적 만족도의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전략에 따른 이원변량분석 결과 남한문화 수용전략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즉 남한문화 수용에 적극적인 응답자가 남한문화 수용에 소극적인 응답자에 비해 경제적 만족도가 높았다. 삶의 만족도에는 두 전략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적 만족도에는 남한문화 수용전략만이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한사회의 경제활동이나 크게 봐서는 남한사회 적응에는 남한문화를 수용하는 노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에는 북한문화를 유지하는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의 삶은 탈북민 삶에 중요한 부분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북한에서의 삶은 탈북민의 자아 정

I
II
III
IV
V
VI
VII

체성의 기반이며 북한의 전통과 문화는 탈북민의 사회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문화는 과거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문제로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탈북민 정착지원이 남한문화 수용에 초점이 있었다면, 남한문화 수용이 북한 문화 유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VI-17 문화적응 전략에 따른 경제적 만족도



출처: 필자 작성

(2) 권위주의

권위주의를 측정한 11개 문항에 대해 주축분해, 베리막스 회전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4개의 요인을 얻을 수 있었다(〈표 VI-10〉 참조). 구분된 4개 요인에 대해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 ‘권위주의적 복종’, ‘인습주의’, ‘냉소주의’로 명명하였다. 4개 요인은 전체 변량의 61.6%를 설명하였다.

탈북민의 경우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평균: 4.0, 표준오차: .04)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인습주의(평균: 3.4, 표준오차: .08), 권위주의적 복종(평균: 3.2, 표준오차: .05), 냉소주의(평균: 2.9, 표준오차: .07)가 따랐다. 권위주의의 4가지 요인 간 평균 차이는 모두 유의하였다. 즉 탈북민은 권위주의 요인 중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이 가장 높았으며 냉소주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0 권위주의를 측정한 11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및 내적 신뢰도 분석결과

구분	문항 요약	로딩값	내적 신뢰도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	젊은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 결단력, 의지력	0.624	.73
	사회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선 비상조치라도 사용해야 함	0.665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엄격한 통제와 질서가 필요함	0.715	
	위대한 지도자가 시대를 만듦	0.425	
	남한에 필요한 것은 강력한 법 질서	0.438	
권위주의적 복종	상사의 말에 잘 따르는 직원이 좋은 직원	0.682	.64
	남한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 지도자를 잘 따르는 국민	0.567	
	남자 아이는 반드시 있어야 함	0.368	
	정부 권력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듦	0.362	
인습주의	여자의 음주, 흡연은 꼴사납다고 생각함	0.744	N.A.
냉소주의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노력보다 배경이 좋았기 때문임	0.603	N.A.

출처: 필자 작성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 남성이 여성에 비해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이 높았으며, 북한에서 당원이었던 응답자가 당원이 아니었던 응답자보다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이 강했다. 학력별 차이도 나타났다. 인민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가 지닌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이 고졸, 전문학교졸, 대학재학 이상의 응답자의 믿음보다 낮았다.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이 약했다. 연령대별 평균 차이는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대와 30대의 평균 차이, 30대와 40대의 평균 차이, 40대와 50대의 평균 차이, 50대와 60대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20대는 40대 이상보다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이 낮았으며, 30대는 50대 이상과, 40대는 60대 이상과 차이를 보였다.

표 VI-11 변수별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 평균과 표준오차

전체	성별		연령대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4.0(.04)	4.2(.06) ^b	3.9(.06) ^a	3.6(.12) ^a	3.9(.10) ^{a,b}	4.0(.06) ^{b,c}	4.3(.09) ^{c,d}	4.5(.10) ^d
거주기간별			학력별				
5년 이하	6~10년	11년 이상	인민학교 이하	고졸	전문학교 졸	대재 이상	
4.0(.07)	4.2(.08)	4.0(.07)	3.5(.25) ^a	4.0(.06) ^b	4.2(.08) ^b	4.1(.09) ^b	
당원 여부		직장 유형			북한에서 거주지역		
당원	비당원	공식일	이종일	비공식일	국경	내륙	
4.3(.06) ^b	3.9(.05) ^a	4.2(.06)	4.2(.07)	4.1(.08)	4.0(.05)	4.1(.09)	

() : 평균의 표준오차

출처: 필자 작성

권위주의의 첫 번째 요인인 권력에 대한 믿음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5점 기준으로 4점대의 평균은 중앙치인 3점보다 유의미하게 높다. 유형별 분석결과와 주변화 유형의 믿음이 가장 낮은 반면 통합 유형의 믿음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통계적 분석결과 분리 유형, 동화 유형, 통합 유형의 권력에 대한 믿음의 평균은 차이가 없었다.

표 VI-12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
일원변량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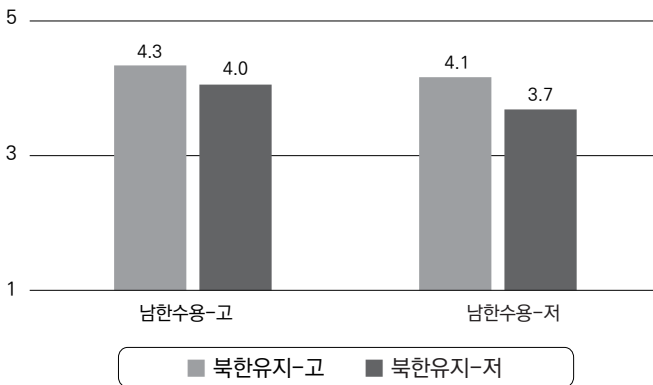
	주변화	분리	동화	통합
권력의 강인함에 대한 믿음(5)	3.7(.10) ^a	4.1(.07) ^b	4.0(.08) ^b	4.3(.08) ^b

() : 평균의 표준오차

출처: 필자 작성

남한문화 수용전략과 북한문화 유지전략을 독립변인으로 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두 문화적응 전략의 주 효과만 유의하였다. 즉 남한문화 수용력이 높은 집단이 남한문화 수용력이 낮은 집단보다 권위주의 의식이 높았으며 북한문화 유지경향이 높은 집단 역시 북한문화 유지경향이 낮은 집단보다 권위주의 의식이 높았다.

그림 VI-18 문화적응 전략에 따른 권력에 대한 믿음



출처: 필자 작성

북한의 전체주의적 정치구조와 '출신성분'으로 대변되는 신분제를 고려한다면 북한문화에 권위주의적 의식이 녹아들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남한문화 수용력이 높은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가장

I
II
III
IV
V
VI
VII

높은 권위주의 의식을 보이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한가지 가능한 설명은 남한사회의 다양성이 획일적 사회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탈북민에게는 무질서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러한 무질서에 대한 반감으로 권위주의 의식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보다 면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가) 권위주의적 복종

남성이 여성에 비해 권위주의적 복종심이 더 강했으며, 20대부터 50대까지의 복종심은 차이가 없었다. 20대~50대의 복종심은 60대의 복종심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당원이었던 응답자의 복종심이 당원이 아니었던 응답자의 복종심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도 특징이다.

표 VI-13 변수별 권위주의적 복종 평균과 표준오차

전체	성별		연령대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3.2(.05)	3.3(.07) ^b	3.1(.06) ^a	3.1(.12) ^a	3.0(.09) ^a	3.2(.07) ^a	3.3(.12) ^a	3.8(.12) ^b
거주기간별			학력별				
5년 이하	6~10년	11년 이상	인민학교 이하	고졸	전문학교 졸	대재 이상	
3.3(.07)	3.3(.09)	3.1(.08)	2.9(.30)	3.2(.06)	3.3(.11)	3.2(.11)	
당원 여부		직장 유형			북한에서 거주지역		
당원	비당원	공식일	이종일	비공식일	국경	내륙	
3.4(.09) ^b	3.1(.05) ^a	3.2(.08)	3.2(.09)	3.3(.08)	3.2(.05)	3.1(.12)	

() : 평균의 표준오차

출처: 필자 작성

주변화 유형의 복종 경향이 가장 낮았으며, 통합 유형의 복종 유형이 가장 높았다. 두 집단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였다. 주변화, 분리, 동화

유형의 복종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분리, 동화, 통합 유형의 복종 평균 차이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I-14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권위주의적 복종 일원변량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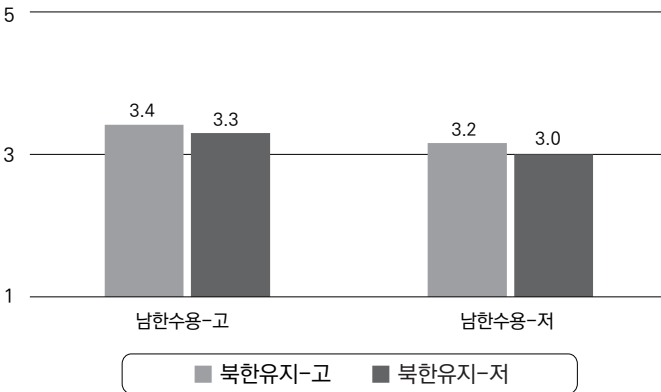
	주변화	분리	동화	통합
권위주의적 복종(5)	3.0(.11) ^a	3.2(.09) ^{a,b}	3.3(.09) ^{a,b}	3.4(.10) ^b

() : 평균의 표준오차

출처: 필자 작성

문화적응 전략에 따른 이원변량분석 결과 남한문화 수용전략의 주요 과만 유의하였다. 남한문화 수용력이 높은 사람의 복종 경향이 남한문화 수용력이 낮은 사람의 복종 경향보다 유의하게 높다. 남한문화 수용 전략이 권력에 대한 믿음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설명과 유사한 설명이 가능해 보인다. 무질서한 사회에 대한 거부감이 권력에 대한 복종 경향을 강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VI-19 문화적응 전략에 따른 복종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VI
VII

(나) 인습주의와 냉소주의

인습주의(〈표 VI-15〉 참조)와 냉소주의(〈표 VI-16〉 참조)의 경우 주요 변수의 수준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표 VI-15 변수별 인습주의 평균과 표준오차

전체	성별		연령대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3.4(.08)	3.3(.11)	3.5(.12)	3.4(.18)	3.3(.17)	3.5(.13)	3.3(.20)	3.7(.28)
거주기간별			학력별				
5년 이하	6~10년	11년 이상	인민학교 이하	고졸	전문학교 졸	대재 이상	
3.5(.14)	3.5(.15)	3.3(.12)	3.5(.51)	3.4(.10)	3.4(.20)	3.5(.18)	
당원 여부		직장 유형			북한에서 거주지역		
당원	비당원	공식일	이종일	비공식일	국경	내륙	
3.5(.16)	3.4(.09)	3.5(.13)	3.4(.18)	3.4(.14)	3.5(.09)	3.3(.18)	

() : 평균의 표준오차

출처: 필자 작성

표 VI-16 변수별 냉소주의 평균과 표준오차

전체	성별		연령대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9(.07)	2.9(.09)	2.9(.09)	3.0(.16)	2.8(.15)	2.9(.12)	2.9(.15)	2.8(.16)
거주기간별			학력별				
5년 이하	6~10년	11년 이상	인민학교 이하	고졸	전문학교 졸	대재 이상	
2.9(.13)	2.8(.11)	2.9(.10)	3.1(.31)	2.9(.09)	2.8(.16)	2.7(.15)	
당원 여부		직장 유형			북한에서 거주지역		
당원	비당원	공식일	이종일	비공식일	국경	내륙	
2.8(.14)	2.9(.07)	2.8(.10)	3.0(.15)	2.8(.13)	2.8(.07)	3.0(.15)	

() : 평균의 표준오차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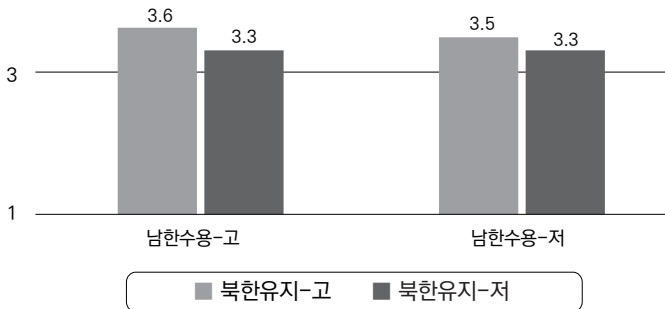
권위주의의 요인으로 구분된 인습주의와 냉소주의는 문화적응 유형 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문화적응 전략에 따른 효과 역시 관찰 되지 않았다.

표 VI-17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인습주의 그리고 냉소주의 일원변량분석 결과

	주변화	분리	동화	통합
인습주의(5)	3.3(.15)	3.5(.16)	3.3(.15)	3.6(.17)
냉소주의(5)	3.0(.12)	2.9(.11)	2.8(.13)	2.8(.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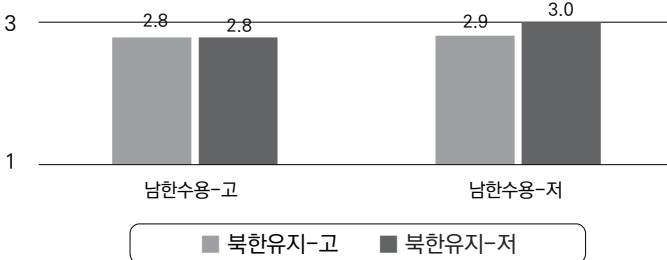
() : 평균의 표준오차
출처: 필자 작성

그림 VI-20 문화적응 전략에 따른 인습주의



출처: 필자 작성

그림 VI-21 문화적응 전략에 따른 냉소주의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VI
VII

(3) 자본주의-능력위주의 사회에 대한 믿음

능력위주사회에 대한 믿음을 측정한 3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3개 문항은 단일 요인으로 묶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능력사회에 대한 믿음을 구성한 3개 문항은 전체 변량의 50%를 설명하였다. 하지만 3개 문항의 내적 신뢰도는 .50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표 VI-18 ▶ 능력위주사회 측정한 3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및 내적 신뢰도 분석결과

구분	문항 요약	로딩값	내적 신뢰도
능력사회	생계 어려움에 대한 견해: 개인문제(1점) - 사회문제(10점)	0.476	.50
	보상에 대한 견해: 성과기반(1점) - 필요기반(10점)	0.592	
	경쟁에 대한 견해: 긍정적(1점) - 부정적(10점)	0.436	

출처: 필자 작성

능력위주사회에 대한 믿음의 평균은 3.6(표준오차: .11)이었다.⁷⁵⁾ 주요변수의 수준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만 유의하였다. 남한 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전통적 자본주의 의식이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5년 이하 거주자의 평균과 6~10년 거주자의 평균은 차이가 없고, 6년~10년 거주자의 평균과 11년 이상 거주자의 평균은 차이가 없다. 하지만 5년 이하 거주자의 평균과 11년 이상 거주자의 평균은 유의미하게 달랐다. 자본주의적 경쟁을 경험하는 기간이 늘어나지만 탈북민의 적응은 순조롭지 않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또한 시장화를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⁷⁵⁾ 점수가 낮을수록 전통적 자본주의적 가치에 부합한다.

않다는 것 역시 주목할만하다. 북한에서의 시장 경험이 남한사회, 특히 경쟁이 심한 자본주의적 문화적응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표 VI-19 변수별 능력위주에 대한 믿음 평균과 표준오차

전체	성별		연령대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3.6(.11)	3.8(.16)	3.5(.14)	3.9(.26)	3.5(.23)	3.4(.19)	3.8(.27)	3.7(.31)
거주기간별			학력별				
5년 이하	6~10년	11년 이상	인민학교 이하	고졸	전문학교 졸	대재 이상	
3.2(.20) ^a	3.7(.23) ^{a,b}	3.9(.15) ^b	4.6(.59)	3.6(.14)	3.5(.26)	3.6(.24)	
당원 여부		직장 유형			북한에서 거주지역		
당원	비당원	공식일	이종일	비공식일	국경	내륙	
3.7(.24)	3.6(.12)	3.5(.18)	3.6(.22)	3.7(.24)	3.6(.12)	3.7(.23)	

() : 평균의 표준오차

출처: 필자 작성

문화적응 유형 간 능력위주사회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없었다. 문화적응 전략에 따른 효과도 관찰되지 않았다.

표 VI-20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능력위주사회 일원변량분석 결과

	주변화	분리	동화	통합
능력위주사회(10)	3.7(.24)	3.5(.18)	3.5(.20)	3.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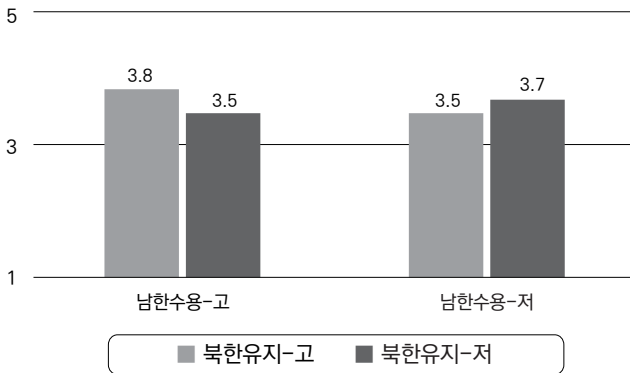
() : 평균의 표준오차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VI
VII

자본주의 의식과 관련이 있는 요소로 북한에서의 직업, 즉 시장화 경험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문화적응 전략 외에 북한에서의 직업, 성별, 연령대,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4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지만 유의한 변수는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경제적 만족도, 남한에서의 수입과 자본주의 의식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지만 유의한 상관은 관찰되지 않았다. 즉 자본주의 의식 학습 통계적 관련성이 관찰된 변수는 없었다.

그림 VI-22 문화적응 전략에 따른 자본주의 인식



출처: 필자 작성

탈북민은 자본주의 가치 학습에 실패한 것인가? 한 가지 가능성은 천장 효과(ceiling effect)이다. 즉 탈북민은 이미 남한국민 수준의 자본주의 가치를 학습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탈북민이 평균 이상(5.5점 이하)의 평균점을 보이고 있다. 남한주민들의 자본주의 인식과의 비교를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4) 남한사회에 대한 견해

(가) 남한사회에 대한 이미지

남한사회에 대한 이미지를 3문항을 사용하여, 10점 척도 상에서 측정하였다. 3문항은 전체 변량의 49%를 설명하였으며 요인분석 및 내적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VI-21>에 제시하였다.

표 VI-21 남한사회 이미지를 측정한 3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및 내적 신뢰도 분석결과

구분	문항 요약 ⁷⁾	로딩값	내적 신뢰도
능력 사회	성공 요인: 개인 능력(1점) - 부모 배경(10점)	0.641	.48
	계층 이동: 가능(1점) - 불가능(10점)	0.514	
	근로자에 대한 대우: 부당함(1점) - 공정함(10점)	0.328	

출처: 필자 작성

세 문항의 평균값에 대해 변수별 수준에 따라 분석하였다(<표 VI-22> 참조). 전체적으로 남한사회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이라기 보다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남한사회에 대한 이미지가 다소 부정적으로 변한다. 5년 이하 거주자보다 5~10년 거주자 그리고 11년 이상 거주자가 가지고 있는 남한사회 이미지가 더 부정적이었다. 한 가지 해석에 주의할 것은 11년 이상 거주자의 응답이 5.1점으로 10점 척도의 중앙치 5.5점보다 낮다는 것이다. 즉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남한사회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남한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남한사회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⁷⁾ 낮은 점수는 남한사회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근로자에 대한 대우는 1점을 공정함, 10점을 부당함으로 역채점하여 분석하였다.

표 VI-22 변수별 남한사회 이미지 사회평균과 표준오차

전체	성별		연령대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4.7(.10)	4.6(.14)	4.9(.15)	4.6(.27)	4.5(.24)	4.9(.18)	4.6(.24)	4.7(.28)
거주기간별			학력별				
5년 이하	6~10년	11년 이상	인민학교 이하	고졸	전문학교 졸	대재 이상	
4.0(.20) ^a	4.9(.19) ^b	5.1(.14) ^b	5.2(.50)	4.7(.13)	4.8(.25)	4.4(.25)	
당원 여부		직장 유형			북한에서 거주지역		
당원	비당원	공식일	이중일	비공식일	국경	내륙	
4.5(.19)	4.8(.12)	4.9(.17)	4.4(.25)	4.6(.19)	4.7(.12)	4.7(.23)	

() : 평균의 표준오차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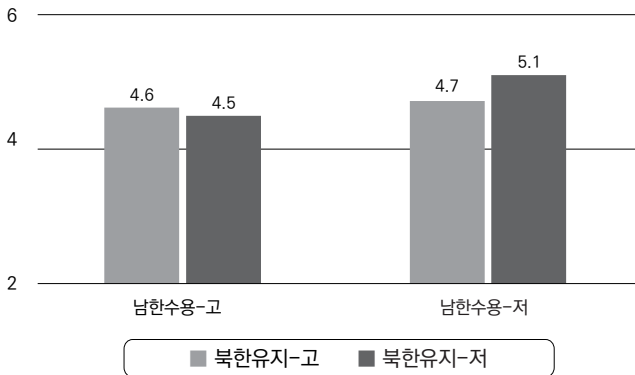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남한사회에 대한 이미지는 차이가 없었다. 문화적응 전략에 따른 차이 역시 관찰되지 않았다.

표 VI-23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남한사회 이미지 일원변량분석 결과

	주변화	분리	동화	통합
남한 이미지(10)	5.1(.18)	4.7(.19)	4.5(.20)	4.6(.24)

() : 평균의 표준오차
출처: 필자 작성

그림 VI-23 문화적응 전략에 따른 남한사회 이미지



출처: 필자 작성

〈남한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견해〉 남한사회의 불평등에 대해 6개 문항을 사용하여 5점 척도(1: 매우 불평등, 5: 매우 평등) 상에서 질문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단일한 요인으로 묶였으며, 전체 변량의 39%를 설명하였다. 내적 일관성은 .69였다.

표 VI-24 ▶ 남한사회의 불평등을 측정한 6문항 요인분석 및 내적 신뢰도 분석결과

구분	문항 요약	로딩값	내적 신뢰도
남한사회 불평등	교육기회의 불평등 심화 정도	0.440	.69
	취업기회의 불평등 심화 정도	0.693	
	승진, 승급기회의 불평등 심화 정도	0.576	
	법의 집행의 불평등 심화 정도	0.485	
	여성의 대우에 대한 불평등 심화 정도	0.427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 심화 정도	0.504	

출처: 필자 작성

탈북민이 느끼는 남한사회의 불평등 정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전체 평균: 3.1, 표준오차: .04).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남한 거주 기간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5년 이하 거주자가 느끼는 남한사회의 불평등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다는 것이다.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남한사회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가 이러한 응답을 이끌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수준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I
II
III
IV
V
VI
VII

표 VI-25 ▶ 변수별 남한사회의 지각된 불평등 평균과 표준오차

전체	성별		연령대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3.1(.04)	3.0(.05)	3.1(.06)	3.0(.11)	3.1(.09)	3.0(.07)	3.1(.09)	3.0(.11)
거주기간별			학력별				
5년 이하	6~10년	11년 이상	인민학교 이하	고졸	전문학교 졸	대재 이상	
3.2(.09) ^b	2.9(.07) ^a	3.0(.05) ^{ab}	3.0(.27)	3.0(.05)	3.1(.10)	3.1(.09)	
당원 여부		직장 유형			북한에서 거주지역		
당원	비당원	공식일	이종일	비공식일	국경	내륙	
3.0(.07)	3.1(.05)	3.0(.06)	3.2(.09)	3.1(.08)	3.0(.05)	3.1(.08)	

() : 평균의 표준오차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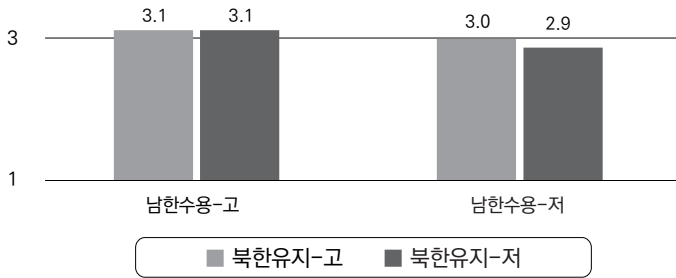
문화적응 유형 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남한문화 수용전략과 북한문화 유지전략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한문화 수용전략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남한문화 수용에 적극적인 사람일수록 남한사회의 사회적 차별이 심하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남한문화 수용에 적극적인 사람일수록 남한사회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험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문화 유지전략과 두 전략 간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표 VI-26 ▶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남한사회의 불평등 일원변량분석 결과

	주변화	분리	동화	통합
불평등(5)	2.9(.07)	3.0(.07)	3.1(.08)	3.1(.09)

() : 평균의 표준오차
출처: 필자 작성

그림 VI-24 문화적응 전략에 따른 남한사회 이미지: 전반적 불평등



출처: 필자 작성

〈국외이주 의사〉 “나는 남한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고 싶다”라는 질문을 하였다. 전반적으로 이주의사는 매우 낮은 편이지만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상대적으로 이주의사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VI-27 변수별 탈북민의 국외이주 의사 평균과 표준오차

전체	성별		연령대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7(.05)	1.6(.07)	1.7(.08)	1.7(.13)	1.7(.11)	1.8(.10)	1.8(.14)	1.3(.09)
거주기간별			학력별				
5년 이하	6~10년	11년 이상	인민학교 이하	고졸	전문학교 졸	대재 이상	
1.5(.08) ^a	1.6(.11) ^{a,b}	1.9(.09) ^b	1.9(.28)	1.7(.07)	1.8(.12)	1.6(.12)	
당원 여부		직장 유형			북한에서 거주지역		
당원	비당원	공식일	이종일	비공식일	국경	내륙	
1.7(.11)	1.7(.06)	1.7(.08)	1.7(.12)	1.6(.10)	1.7(.06)	1.6(.10)	

() : 평균의 표준오차

출처: 필자 작성

모든 유형의 외국이주 의도의 평균은 4점 척도의 중앙치인 2.5점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문화적응 유형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주변화 유형의 외국이주 의도가 가장 낮았으며 분리, 동화, 통합 유형의

평균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분리, 동화, 통합 유형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VI-28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해외이주 의도 일원변량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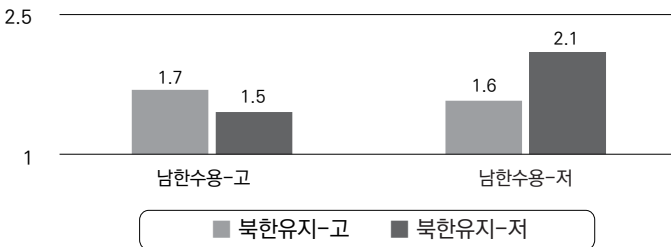
	주변화	분리	동화	통합
해외이주 의도(4)	2.1(.14)b	1.6(.09) ^a	1.5(.08) ^a	1.7(.12) ^a

() : 평균의 표준오차

출처: 필자 작성

문화적응 전략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한문화 수용전략의 주효과, 남한문화 수용전략과 북한문화 유지전략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남한문화 수용력이 낮은 응답자들이 남한문화 수용력이 높은 응답자들에 비해 남한 이외의 국가로의 이주의도가 높았다. 하지만 이러한 남한문화 수용전략의 영향력은 북한문화 유지전략의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남한문화 수용력이 높은 집단에서는 북한문화 유지전략에 따른 해외이주 의도는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남한문화 수용력이 낮은 집단 중 북한문화 수용력이 높은 집단에 비해 북한문화 수용력이 낮은 집단이 해외이주 의도가 높았다.

그림 VI-25 문화적응 전략에 따른 해외이주 의도



출처: 필자 작성

(나) 정착지원에 대한 만족도

남한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4점 척도 상에서 물어보았다. 전체 평균은 2.9(표준오차: .08)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주요변수의 수준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표 VI-29 변수별 정착지원 만족도 평균과 표준오차

전체	성별		연령대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9(.08)	2.9(.12)	2.9(.10)	2.7(.14)	2.8(.15)	2.9(.16)	3.0(.19)	3.4(.28)
거주기간별			학력별				
5년 이하	6~10년	11년 이상	인민학교 이하	고졸	전문학교 졸	대재 이상	
3.2(.15)	2.9(.19)	2.7(.11)	3.4(.61)	2.8(.11)	3.1(.21)	3.0(.14)	
당원 여부		직장 유형			북한에서 거주지역		
당원	비당원	공식일	이종일	비공식일	국경	내륙	
3.1(.20)	2.8(.08)	2.9(.13)	3.0(.20)	2.9(.15)	3.0(.10)	2.6(.11)	

() : 평균의 표준오차
출처: 필자 작성

표 VI-30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정착지원 만족도 일원변량분석 결과

	주변화	분리	동화	통합
정착지원 만족도(4)	2.7(.11)	2.7(.10)	2.7(.11)	2.7(.11)

() : 평균의 표준오차
출처: 필자 작성

문화적응 유형, 문화적응 전략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모든 유형에서 정착지원 제도에 대해 중앙치(2.5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I
II
III
IV
V
VI
VII

(5) 차별과 편견

(가) 직접적 차별 경험

남한거주 중 직접적으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10점 척도로 물어보았다. 탈북민 응답의 평균은 4.6점(표준오차: .17)으로 중앙치인 5.5점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차별 경험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VI-31 변수별 직접적 차별 경험 평균과 표준오차

전체	성별		연령대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4.6(.17)	4.8(.24)	4.3(.23)	3.6(.33)	4.4(.37)	4.6(.28)	5.1(.40)	4.8(.57)
거주기간별			학력별				
5년 이하	6~10년	11년 이상	인민학교 이하	고졸	전문학교 졸	대재 이상	
4.0(.30) ^a	4.5(.32) ^{a,b}	5.0(.25) ^b	3.9(.93)	4.5(.21)	5.4(.42)	4.0(.38)	
당원 여부		직장 유형			북한에서 거주지역		
당원	비당원	공식일	이종일	비공식일	국경	내륙	
5.2(.34) ^b	4.3(.19) ^a	4.7(.29)	4.5(.36)	4.2(.32)	4.6(.19)	4.4(.36)	

() : 평균의 표준오차

출처: 필자 작성

분리 유형의 평균이 가장 낮았으며, 통합 유형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두 유형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VI-32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직접적 차별 경험 일원변량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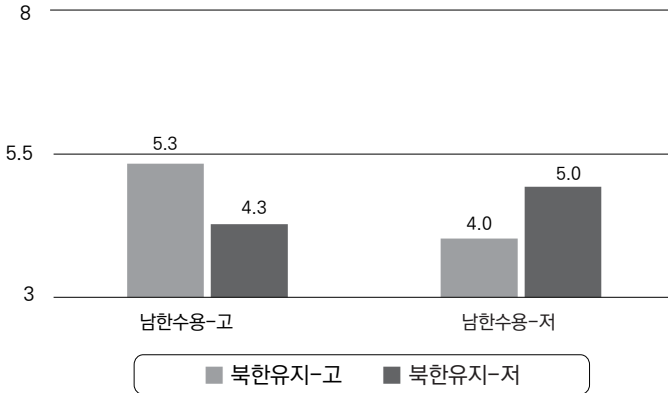
	주변화	분리	동화	통합
부당한 경험(10)	5.0(.37) ^{a,b}	4.0(.28) ^a	4.3(.31) ^{a,b}	5.3(.38) ^b

() : 평균의 표준오차

출처: 필자 작성

문화적응 전략별 효과를 살펴보면 북한문화 유지전략의 주효과, 남한문화 수용전략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전략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단순 주효과 분석결과 남한문화의 수용력이 높은 집단의 경우 북한문화 유지 경향이 높은 집단이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다고 응답한 반면 남한문화 수용력이 낮은 집단의 경우 북한문화 유지 경향이 낮은 집단이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VI-26 문화적응 전략에 따른 부당한 대우 경험



출처: 필자 작성

- I
- II
- III
- IV
- V
- VI**
- VII

(나) 출신에 따른 차별 경험

북한출신이라는 점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5점 척도 상에서 물어보았다. 탈북민의 응답은 보통수준이었으며 주요변수의 수준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표 VI-33 변수별 탈북민에 대한 불평등 평균과 표준오차

전체	성별		연령대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5(.07)	2.5(.10)	2.5(.11)	2.5(.19)	2.4(.14)	2.5(.14)	2.5(.17)	2.8(.23)
거주기간별			학력별				
5년 이하	6~10년	11년 이상	인민학교 이하	고졸	전문학교 졸	대재 이상	
2.4(.14)	2.3(.15)	2.6(.11)	2.5(.28)	2.4(.09)	2.5(.17)	2.9(.19)	
당원 여부		직장 유형			북한에서 거주지역		
당원	비당원	공식일	이종일	비공식일	국경	내륙	
2.4(.14)	2.5(.09)	2.4(.13)	2.5(.15)	2.6(.14)	2.5(.08)	2.6(.17)	

() : 평균의 표준오차

출처: 필자 작성

문화적응 유형 간 차이는 없었으며 문화적응 전략에 따른 효과도 관찰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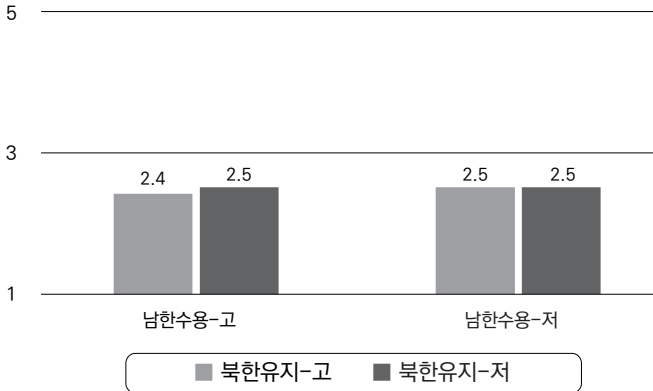
표 VI-34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출신 차별 경험 일원변량분석 결과

	주변화	분리	동화	통합
출신 차별 경험(5)	2.5(.15)	2.5(.14)	2.5(.15)	2.4(.16)

() : 평균의 표준오차

출처: 필자 작성

그림 VI-27 문화적응 전략에 따른 출신 차별 경험



출처: 필자 작성

- I
- II
- III
- IV
- V
- VI
- VII

(다) 보수에 대한 견해

탈북민에게 자신이 받는 보수 수준에 대해 5점 척도(1점: 내가 받아야 할 보수보다 훨씬 적게 받는다. 3점: 내가 받아야 하는 것만큼 받고 있다. 5점: 내가 받아야 할 보수보다 훨씬 더 많다)를 사용하여 질문하였다. 전반적 차별 경험, 출신에 따른 차별 경험이 크지 않다고 응답하였지만 보수에 대해서는 차별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평균은 2.6점(표준오차: .05)으로 중앙치인 3점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주요변수의 수준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표 VI-35 변수별 보수에 대한 견해 평균과 표준오차

전체	성별		연령대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6(.05)	2.6(.07)	2.7(.06)	2.7(.10)	2.6(.10)	2.6(.09)	2.6(.11)	2.9(.14)
거주기간별			학력별				
5년 이하	6~10년	11년 이상	인민학교 이하	고졸	전문학교 졸	대재 이상	
2.7(.09)	2.6(.08)	2.6(.07)	2.4(.20)	2.6(.06)	2.7(.11)	2.8(.11)	
당원 여부		직장 유형			북한에서 거주지역		
당원	비당원	공식일	이종일	비공식일	국경	내륙	
2.6(.10)	2.6(.05)	2.6(.08)	2.8(.11)	2.7(.09)	2.6(.05)	2.8(.11)	

() : 평균의 표준오차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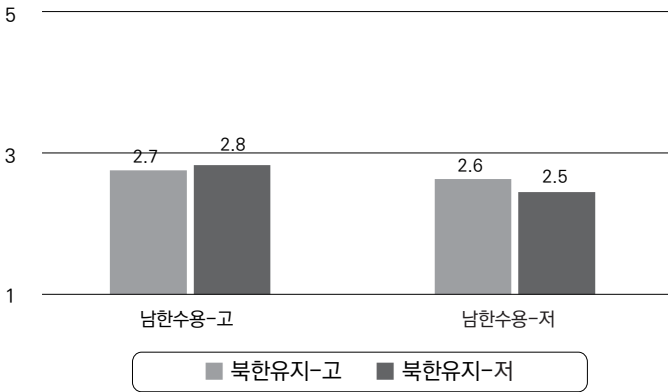
탈북민은 자신의 보수 수준에 대해 자신이 받아야 할 수준보다 다소 적게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모든 유형의 평균점은 중앙치인 3점(내가 받아야 할 만큼 받고 있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유형 간 차이, 문화적응 전략의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표 VI-36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능력위주사회 일원변량분석 결과

	주변화	분리	동화	통합
보수 수준(5)	2.5(.11)	2.6(.09)	2.8(.08)	2.7(.11)

() : 평균의 표준오차
출처: 필자 작성

그림 VI-28 문화적응 전략에 따른 보수 수준



출처: 필자 작성

- I
- II
- III
- IV
- V
- VI
- VII

앞선 차별에 대한 질문에서 탈북민은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비교적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남한사회 역시 북한출신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보수에 대해서는 다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보수에 대한 불만족이 탈북민에 대한 차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남한사회 전반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가능성은 선행 질문에서는 차별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반면 보수에 대해서는 차별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지 않았다. 소수자 집단으로서 다수 집단이 차별을 한다는 응답을 쉽게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인 반면 ‘보수’는 매우 구체적인 영역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추상화 수준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류 사회의 부정적 측면, 특히 본인이 속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주류 집단의 부정적 태도에 대한 질문은 보다 신중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라) 탈북민에 대한 편견

탈북민에 대한 지각된 편견은 ‘남한사회는 탈북민을 편견에 찬 시선으로 바라본다’와 ‘탈북민은 이등국민이다’의 두 문항으로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 상에서 측정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단일문항으로 묶였다. 전체 변량의 71%를 설명하였으며, 문항의 로딩값은 .651, 두 문항의 내적 신뢰도는 .59였다.

탈북민이 느끼는 편견의 평균은 2.6으로 척도의 중앙치인 2.5에 근접하였다. 주요변수의 수준별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와 북한에서의 일 유형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다. 남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탈북민이 느끼는 편견은 증가하였다. 5년 이하 거주자의 평균과 6~10년 거주자의 평균은 차이가 없고, 6년~10년 거주자의 평균과 11년 이상 거주자의 평균은 차이가 없다. 하지만 5년 이하

거주자의 평균은 11년 이상 거주자의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또한 공식일을 했던 응답자가 느끼는 편견이 비공식일을 했던 응답자가 느끼는 편견보다 높았다.

표 VI-37 변수별 지각된 차별감 평균과 표준오차

전체	성별		연령대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6(.04)	2.5(.06)	2.6(.06)	2.4(.11)	2.5(.10)	2.7(.07)	2.6(.10)	2.5(.14)
거주기간별			학력별				
5년 이하	6~10년	11년 이상	인민학교 이하	고졸	전문학교 졸	대재 이상	
2.3(.09) ^a	2.5(.07) ^{a,b}	2.7(.06) ^b	2.2(.16)	2.6(.05)	2.7(.12)	2.4(.10)	
당원 여부		직장 유형			북한에서 거주지역		
당원	비당원	공식일	이종일	비공식일	국경	내륙	
2.6(.09)	2.6(.05)	2.7(.07)	2.6(.10)	2.4(.08)	2.6(.05)	2.6(.09)	

() : 평균의 표준오차
출처: 필자 작성

남한주민들이 탈북민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동화 유형의 평균이 가장 낮은 반면 통합 유형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두 유형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변화 유형, 분리 유형, 동화 유형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주변화 유형, 분리 유형, 통합 유형의 평균 차이도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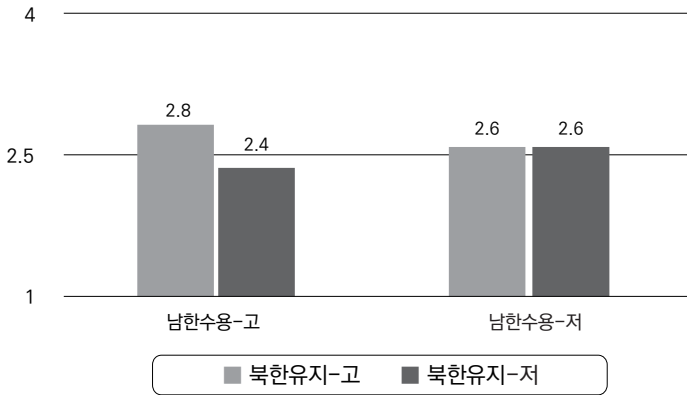
표 VI-38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능력위주사회 일원변량분석 결과

	주변화	분리	동화	통합
편견(4)	2.6(.10) ^{a,b}	2.6(.07) ^{a,b}	2.4(.08) ^a	2.8(.09) ^b

() : 평균의 표준오차
출처: 필자 작성

I
II
III
IV
V
VI
VII

그림 VI-29 문화적응 전략에 따른 편견 지각



출처: 필자 작성

북한문화 유지전략의 주효과, 북한문화 유지전략과 남한문화 수용전략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남한문화 수용전략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북한문화 유지성향이 강한 집단일수록 편견에 대한 지각이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남한문화 수용력이 높은 집단에서 두드러졌다. 남한문화 수용력이 높은 집단에서 북한문화 유지경향이 높은 집단이 느끼는 남한사회의 편견이 강했다. 반면 남한문화 수용력이 낮은 집단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북한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유지하려는 집단은 북한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높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부정적 사회 비교 과정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6) 요약

통합 유형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주변화 유형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통합 유형, 동화 유형, 분리 유형의 삶의 만족도는 차이가 없었다. 문화적응 유형 간 경제적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북한문화 유지전략과 남한문화 수용전략 모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적 만족도에는 남한문화 수용전략 뿐이었다. 권위주의 의식 중 권력과 강함에 대한 믿음과 권위주의적 복종은 통합 유형에서 가장 우세하였다. 남한문화 수용경향이 강할수록 권위주의적 가치관이 강화되는 것이다. 획일적 사고와 가치를 강요받았던 탈북민에게 한국사회의 다양성은 무질서로 비춰질 수 있으며 무질서한 사회에 대한 반감이 권위주의 의식의 강화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계층 이동의 유연성,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성공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에 대한 대우, 사회전반의 불평등 정도, 남한적응제도의 만족도 등 탈북민의 남한사회에 대한 이미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남한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다소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인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남한사회 이미지는 차이가 없었다. 남한사회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남한문화 수용에 적극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 상충되는 결과이다. 한 가지 가능성은 남한사회 문화수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다. 즉 정서적으로는 남한사회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인지적으로나 행동적으로는 남한사회 문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탈북민의 현실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주변화 유형이 다른 세 문화적응 유형에 비해 남한을 떠나 외국으로 이주하고 싶다는 응답이 높은 것은 남한에 대한 이미지가 문화적응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화적응 유형과 문화적응 전략의 결정요인에 대한 후속

I
II
III
IV
V
VI
VII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과 북한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탈북민은 차별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다소 우세하였다. 하지만 보수에 대해서는 본인이 받아야할 정도보다 덜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모순적인 응답이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것인지, 질문의 추상성에 의한 것인지, 탈북민에 대한 차별과 사회 일반의 차별 문제를 구분한 것인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통합 유형 응답자들이 느끼는 차별감이 가장 컸다. 통합 유형 응답자들은 부당한 경험을 받은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남한주민들이 탈북민에게 차별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남한사회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수록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3. 정책적 시사점

분단 이후 남북한주민들은 전혀 다른 체제를 경험하고 있다. 한민족이라는 공통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문화적 배경과 삶의 방식 또한 다르다. 통일로 인한 제도의 충돌과 문화의 충돌은 불가피하며 현재 남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갈등과 전혀 다른 새로운 양상과 수준의 갈등이 예상된다. 제도의 통합은 법률로 강제할 수 있지만 문화와 마음의 통합은 강제할 수 없다. 문화와 마음의 통합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서로에 대한 이해 그리고 관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한 체제의 통일은 협상에 의한 것이든 돌발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든 특정한 시간에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남북한주민들의 문화·사회·심리적 통합의 시작과 끝은 알 수 없다. 체제 통합과 문화·사회·심리적 통합은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이다. 예를 들어 정치

제도에 대한 통합이 이루어졌는지는 정치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수준으로 결정된다.⁷⁷⁾ 결국 제도의 통합은 문화와 마음의 통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주민 간 문화와 마음의 통합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극히 드물다. 남한 문화를 중심으로 북한문화를 흡수하는 동화형 모형, 문화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남북한문화의 공존을 강조하는 통합형 모형 등 문화·사회·심리적 통합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남북한 통합의 방식은 도덕적·규범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가변적이다. 결국 문화·사회·심리적 통합의 방향과 목표는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문화·사회·심리적 통합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재는 문화·사회·심리적 통합에 대한 연구와 정책 개발의 가장 큰 난관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문화·사회·심리적 통합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가치판단을 유보하고 탈북민의 문화적응 전략을 기술적인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한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통일, 그리고 남북한의 사회·경제·인구의 격차, 그리고 독일의 사례를 고려한다면 통일 이후 남한문화가 주류문화, 북한문화가 소수문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탈북민의 문화적응 전략은 통일 이후 북한주민의 문화적응 전략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탈북민의 삶은 우리 사회의 소수 구성원으로서, 또한 통일 이후 북한주민의 삶에 대한 시급적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영역이다.

⁷⁷⁾ 박종철 외,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42.

I
II
III
IV
V
VI
VII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탈북민의 문화적응 유형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이론적 틀로서 Berry의 4군집 문화적응 유형의 타당성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두 번째 목표는 탈북민의 문화적응 유형의 특징을 인구통계학적 변수, 특히 남한 거주기간에 따라 살펴보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응 유형의 특징을 심리·사회적 변수의 수준에서 탐색하는 것이었다.

첫째, 탈북민의 문화적응 유형은 Berry의 4군집 모형의 예측과 일치하였다. 북한문화 유지보다는 남한문화 수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군집분석 결과 탈북민의 문화적응 유형, 동화, 통합, 분리, 그리고 주변화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Berry의 4군집 모형은 이민자들의 문화적응 전략연구에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해 왔다. 본 연구 결과는 Berry의 4군집 모형이 탈북민의 문화적응 전략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젊은 세대와 노령 세대보다 중간 세대가 남한문화 수용에 적극적이었지만 노령 세대는 북한문화 유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북한에서의 시장경험이 남한문화 수용전략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장마당 효과'에 대한 추상적 기대보다는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남한 거주기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거주 초기의 문화적응 유형은 10년 이상 거주 후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남한문화 수용 노력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문화적응 유형의 변화는 북한문화를 유지하는 노력이 증가했을 때 가능하다. 탈북민의 북한문화 유지 노력이 부족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북한문화 유지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정착 초기의 20대

여성의 경우 북한문화 유지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남한문화 수용력이 높은점은 긍정적이지만 정책적 개입의 요소는 존재한다. 특히 30대 이상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남한문화 수용에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남한사회, 남한문화 적응에 초점을 두고 있는 탈북민에 대한 정책의 변화를 요구한다. 탈북민이 북한문화를 유지하는 것이 문화·사회·심리적 통합에 긍정적인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민의 북한문화 유지를 장려해야 하는 이유는 북한문화를 유지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남한문화를 수용하는 것은 경제적 만족도와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반면 북한문화를 유지하는 것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의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분류된다는 면에서 삶의 만족도는 남한문화 수용 역량과 북한문화 유지 역량의 함수로 봐야 할 것이다. 통일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남북한주민의 행복이다. 탈북민, 더 나아가 통일 후 북한주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본인들의 문화를 유지하며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북한문화 속에 녹아있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발굴하고 북한주민 뿐만 아니라 남한주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남한문화 수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 탈북민 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남한문화에 대한 수용력이 강할수록 권위주의 의식이 강하며 차별감도 강했으며 차별 경험도 높았다. 획일적 사고, 수동적 사고를 강요받았던 탈북민에게 남한사회의 다양성은 혼란과 무질서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적응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 가치, 특히 정치사회적 다양성을 장려하는 정책적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VII. 결론



그 동안 우리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당위적 측면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런데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표현은 다분히 현실 이해적 관점이 강하다. 현실적 관점에서 통일준비가 구체화되면서 현실이해 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인식이 복잡하게 분기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통일의 필요성’이라는 개념에 분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남한주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통일의지를 가지고 있는 탈북민조차도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평화적 분단고착을 반대하지 않는 응답이 중복되고 있으며 중복의 비율 역시 유사하다. 이번 탈북민 대상 인식조사에서 분단고착에 대해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까지 더한다면 남한주민의 경우 47.10%, 탈북민의 경우 42.5%였다. 다시 말해서 남한주민 및 탈북민 모두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분단고착에 대한 명확한 반대를 표명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의 필요성’이라는 인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며, 남한주민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탈북민에게서도 관찰된다는 면에서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반의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현실 이해적 관점에서 통일에 대한 인식의 분화를 보다 면밀하게 지속적으로 추적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의 편익에 대해서도 국가(남한사회), 남한주민, 북한주민 등 수혜의 주체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산출해야 한다. 국가뿐만 아니라 남북한주민이 통일로부터 어떠한 수혜를 받게 될 것인지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야 할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본인의 이익에 대해 탈북민은 통일이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남한주민의 경우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국가와 개인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통일담론을 적극적으로 형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이 북한주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부분에서는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탈북민과 남한주민 모두 동의하였다. 그렇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통일의 이유에 대해 남한주민과 탈북민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통일이 남북한주민 모두의 공감과 지지 속에 추진되기 위해서는 탈북민과 남한주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두 집단의 간극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인식조사에서 탈북민들은 우리 사회의 통일준비 역량의 강화가 통일을 준비하는 주요 요건이라는 인식을 표출하였다. 이러한 탈북민들의 인식과 관련하여 남한주민들도 우리의 통일준비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통일을 순조롭게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배가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통일준비 역량 강화 과정에서 탈북민들의 인식은 중요한 정책적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의 인식은 북한주민의 인식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한 제도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 정책자산이 될 것이다.

이번 탈북민 인식조사를 통해 통일을 위한 긍정적 환경으로 탈북민은 북한경제 건설과 민주화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탈북민의 인식조사 결과는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를 통일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대북정책과 통일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북한경제 건설과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단순한 교류·협력을 넘어 북한주민의 인식 제고와 권능 강화(empowerment)를 위한 다양한 교류·협력 방안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주민의 권리 인식과 민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전달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인식조사를 통하여 자본주의 제도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탈북민, 나아가 북한주민의 수용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향후 통일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계적인 제도통합을 넘어 제도통합 이후 실질적인 사회통합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수용역량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남북한 제도통합을 추진하되,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탈북민 인식조사를 통해 통일 이후의 정치 체제에 대해 남한식 체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남북한 체제공존과 제3의 체제를 선호하는 비율을 합산할 경우 남한식 체제 선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식조사 결과를 볼 때 통일 이후 제도통합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 제도에서 보완할 점은 없는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통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탈북민들이 민주시민으로 남한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통일의 한 과정이다. 더욱이 통일준비 과정과 통일 후 탈북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우리와 북한주민과의 사이에서 주요한 교량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정치화 과정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통일한국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북한주민을 민주시민으로 적응하도록 하는 정책이 통일준비 과정에서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이 민주시민이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금년도에는 이러한 인식의 일환으로 탈북민의 정당일체감에 대한 조사를 전문적으로 실시하였다. 탈북민의 정당일체감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 어떻게 적응하고 어떠한 정치적

선택을 하는지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이러한 이해는 통일시대에 북한 주민들이 통일한국의 다양한 정치행위를 예상하고 관련 준비를 하는데 필수적이다. 또한 탈북민의 정당일체감에 대한 이해는 통일 이후 안정적 민주사회를 구현할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자유로운 정치참여의 경험이 없는 북한주민에게 민주사회의 이러한 시민의 역할은 새로이 학습되고 체화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의 민주시민으로 정착해 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정치에 대한 지식, 경험, 신뢰 혹은 정치에 대한 관심 등이 많아지면서 정당일체감을 갖는 비율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탈북민의 경우도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한에서의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정당일체감을 갖는 탈북민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한국사회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정치사회화 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탈북민의 정당일체감을 북한에서의 당원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당원이었던 사람이 남한에서도 정당일체감을 갖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정치적 경험이 남한에서의 정치적 경험으로 이전(transfer)된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남한에서 거주기간이 길고 북한에서 당원으로서의 경험이 있을 때 정당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당일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이 함께 고려되었을 때도 한국의 거주기간과 북한의 정치적 경험이 여전히 유효한지는 경험적 분석을 통해 보다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나이가 많아진다고 해서 남한에 대한 정치지식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남한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다고 해서 정치지식 수준이 더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남한에서 보낸 기간이 길다고 해서 정치정보를 더 많이 습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볼 때 앞으로 탈북민 정착지원 과정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탈북민의 정책선호는 정당일체감을 발전시키는데 의미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민의 경우 직접적인 정책적 입장보다 정치지식이 보다 중요한 정당일체감 형성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주의 제도 운용과정에서 주요 행위자인 정당에 대한 탈북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제도와 운영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해준다. 즉 탈북민을 우리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하도록 하는데 정치사회 조직들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정치·사회 조직들이 적극적으로 북한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당일체감은 투표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정당일체감이 있는 탈북민이 투표에 더 참여한다는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할 결과는 남한에서의 교육여부가 투표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남한에서 공부한 탈북민이 투표에 더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민이 남한사회에서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적응하는데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탈북민의 정당일체감 형성을 위해 이들의 남한정치 전반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통일 후 북한주민을 민주사회 시민으로 배양하는데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향상시키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탈북민의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이 향후 시장경제로 제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책적 자산이 될 것이다. 특히 북한 내부의 시장화 확산이라는 변화를 고려할 때 북한 내 변화된 상황이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면밀하게 추적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번 인식조사에서는 탈북 시점을 기준으로 세 집단으로 나누어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경쟁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쟁이 좋은 세상을 만드는지, 혹은 살기 어려운 세상을 만드는지에 대해 김정은 정권 이후 입국 세대들과 나머지 과도기, 식량난민 세대 집단들 사이에는 유의할 만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입국 세대가 세 집단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세대부터 그 이전 세대와 차별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김정은 세대 탈북민들이 2000년 초반에 입국해서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온 시장화 이전 입국자들에 비해 자본주의 지향성이 높게 나타났다. 경쟁에 대한 태도에서 세 집단 모두 긍정적이었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하여 입국한 세대들의 긍정적 태도가 8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에 북한에서 온 입국 세대들이 오히려 십 수년 간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온 입국 세대보다 경쟁에 대해 강한 선호를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경향은 시장화 이후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점차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의식도 이에 조용하여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세대별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여 정착 지원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인식조사에서 지난해 조사와 마찬가지로 탈북민은 강한 ‘평등주의 정서 지향성’을 보였다. 2016년도의 조사에서 자본주의 제도 원리인 성과 지향적 보상이나 경쟁에 대해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평등주의 지향성’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경쟁’과 ‘성과’를 중심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나원 교육내용을 일부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동안 다양한 조사결과를 통해 탈북민의 객관적 생활수준은 남한 주민과 비교할 때 낮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탈북민 역시 이를 지각하고 있다. 그런데 인식조사에서 탈북민의 만족도는 이러한 객관적인 생활수준과 달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의 생활과 비교하는 사고의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고에 젖어있을 경우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기 보다는 북한에서의 삶과 비교를 통해 현실에 안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탈북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특히 사회비교 과정과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와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통일 후의 심리적 갈등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로 대변되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이다. 북한주민의 행동과 심리를 이해, 또는 예측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며 유일한 방법은 탈북민을 활용하는 것이다. 물론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북한주민 전체에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탈북민이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통일 한반도 국가에 미치는 함의를 고려한다면 이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탈북민은 남한의 제도와 문화, 그 속에서 생활하는 남한주민들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북한 잔류 가족에게 전달하는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통일 이후 먼저 온 통일을 경험한 탈북민은 북한주민의 문화적, 제도적 적응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먼저 온 통일'로서의 탈북민 문제에 대해 단순히 성공적인 정착을 넘어 이러한 정착 과정에서의 경험과 탈북민의 인식을 통일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정책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첫째, 남북통일에 대한 의지는 탈북민이 남한주민에 비해 높다. 이번 조사 모든 문항에서 탈북민은 남한주민에 비해 통일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탈북민의 통일에 대한 높은 의지는 우리 사회의 통일논의 촉진과

통일준비 과정에서 유용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번 조사에서 탈북민들은 남북한 출신에 따른 불평등(2.49) > 승진기회(2.76) > 취업기회(2.82)의 순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노동차별 문항 즉, 근로자 대우, 보수, 일터의 괴롭힘 문항에서 차별 경험을 한 경우가 모두가 30.0% 안팎의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조사에서 보듯이 탈북민들은 노동시장 진입시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고등교육을 통한 사회적 상승이동이 가능한가'의 질문에 대해 탈북민 응답자들은 이동 가능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평균점수 3.92점/10점). 그리고 응답자의 60.0%는 '교육을 통한 상승이동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앞으로 남한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남한사회에 대한 탈북민의 불평등 및 기회 인식을 보다 전문적인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추적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향후 제도통합을 넘어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자산이 될 것이다.

셋째, 통일 후 사회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베리의 4군집 모형에서 보듯이 다양한 유형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통합과 문화·사회·심리적 통합은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이다. 예를 들어 정치 제도에 대한 통합이 이루어졌는지는 정치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으로 결정된다. 결국 제도의 통합은 문화와 마음의 통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남북한주민 간 문화와 마음의 통합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 못하다. 베리의 4군집 모형은 이민자들의 문화적응 전략 연구에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해 왔다. 본 연구 결과는 베리의 4군집 모형이 탈북민의 문화적응 전략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통일 이후 바람직한 문화통합은 북한문화의 남한화가 아니다. 북한

문화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의 일부로서 계승·발전되어야 하며 통일국가를 구성하는 다양성으로 존중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인식조사에서 탈북민은 북한문화 유지보다 남한문화 수용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탈북민이 남한문화 수용에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거의 모든 탈북민이 남한문화 수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남북한사회 전체가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 북한문화에 대한 유지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탈북민이 북한문화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며, 북한문화 전승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넷째, 문화적응 유형이 성별, 남한 거주기간,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지 아니면 큰 변화가 없는지 보다 정교하고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삶의 만족도, 경제적 만족도와 같은 남한생활의 만족도와 더불어 남한사회의 이미지, 권위주의 의식, 차별에 대한 탈북민의 인식 등 사회 심리적 변수가 탈북민의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번 인식조사에서 탈북민의 문화적응 유형은 동화 유형, 분리 유형, 통합 유형, 주변화 유형 순으로 구분되었다. 그런데 문화적응 유형은 변수들이 조합되면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남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동화 유형의 비율은 줄어들고 통합 유형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북한문화 수용에 소극적인 여성의 경우 거주기간과 연령에 따라 북한문화 수용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 특히 2015년도에 이어 남성과 여성의 성별인식의 차이가 재확인되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에 관계없이 북한문화 유지 경향성보다 남한문화 수용 경향성이 높았다. 하지만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북한문화 유지 경향성이 높다는

I
II
III
IV
V
VI
VII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연령적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연령대에서 북한문화 유지 경향성이 남한문화 수용 경향성보다 낮았다. 그리고 북한에서 당원이었던 응답자의 지배적인 문화적응 유형은 분리 유형이며 북한에서 당원이 아니었던 응답자의 지배적인 문화적응 유형은 동화 유형이었다. 이러한 인식조사 결과를 볼 때 성별, 연령별, 거주기간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정책을 다양화 해나갈 필요가 있다.

삶의 만족도에는 두 전략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적 만족도에는 남한문화 수용전략만이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한사회의 경제활동, 크게 보서는 남한사회 적응에 남한문화를 수용하는 노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에는 북한문화를 유지하는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문화는 과거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문제로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남한문화 수용에 초점을 둔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은 경제적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지만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권위주의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탈북민은 권위주의 요인 중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이 가장 높았으며 냉소주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이 높았으며, 북한에서 당원이었던 응답자가 당원이 아니었던 응답자보다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이 강했다.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이 약했다. 남한문화 수용력이 높은 집단이 남한문화 수용력이 낮은 집단보다 권위주의 의식이 높았으며 북한문화 유지 경향이 높은 집단 역시 북한문화 유지 경향이 낮은 집단보다 권위주의 의식이 높았다. 무질서한 사회에 대한 거부감이 권력에 대한 복종 경향을 강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권위주의 의식 중 권력과 강함에 대한 믿음과 권위주의적 복종은 통합 유형에서 가장

우세하였다. 남한문화 수용 경향이 강할수록 권위주의적 가치관이 강화되는 것이다. 획일적 사고와 가치를 강요받았던 탈북민에게 한국사회의 다양성은 무질서로 비춰질 수 있으며 무질서한 사회에 대한 반감이 권위주의 의식의 강화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 적응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 가치, 특히 정치사회적 다양성을 장려하는 정책적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탈북민 인식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먼저 온 통일’이 실질적인 통합의 자산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통일부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남북통합에 대비하여 통일부가 탈북민 지원업무를 주관하고 있는데, 남북통합 대비라는 관점에서 볼 때 통일부의 역할이 여전히 약하다고 판단된다. 정착지원법에 따르면 탈북민의 보호기간은 5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5년 이후 통일부가 일부 관여하기는 하지만 일반국민으로 편입되어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런데 5년 보호기간과 보호기간 종료 후의 연속선상에서 통일부의 역할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연결 과정에서 통일부가 총괄 조정을 통해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활성화하고 기능도 재조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착지원과 체계에서 정착지원국 단위로 확대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부가 탈북민 정착경험을 통합의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탈북민 인식조사도 이러한 방향으로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하나재단에서 실시하는 전수조사에서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의 인식을 전문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식

문 1. 아래에는 선생님이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16개 문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 동의 또는 반대하는 정도를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다소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2	3	4	5

항 목	응답칸
1) 남한에서 살고 있지만 나의 정신적 뿌리는 북한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2) 나는 북한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이 가치있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진정한 남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4) 나는 자식들이(여기에서 같이 산다면) 북한의 풍습을 잊지 않도록 가르치겠다.	
5) 나는 북한출신 사람들과 계속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6) 나는 남한에서 경험한 새로운 생활이 매우 유익하고 재미있다고(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내려고 한다.	
7) 북한에 남아 있는 전통적인 미풍양속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8) 나는 북한에서의 삶을 종종 떠올리며 그리워한다.	
9) 나는 북한출신 사람들만 있는 모임에서는 북한식 말투를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10) 나는 남한사회에서 고유하게 발전된 생활양식을 받아들일 것이다.	
11) 나는 일상생활에서 남한식 말투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하겠다)	
12) 북한출신 사람들의 모임에 나가면(나간다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 것이다.	
13) 나는 남한에서 잘 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보겠다.	
14) 나는 자녀들이(여기에서 같이 살거나 산다면), 남한사회의 문물을 잘 받아들일도록 해주겠다.	
15) 나는 남한사회의 대한 지식들을 즐거운 기분으로 배우려고 한다.	
16) 나는 새롭게 사귀 남한 사람들과 허물없이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한다.	

문2. 아래에는 선생님이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5개 문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 동의 또는 반대하는 정도를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2	3	4
				5	6
							7

항 목	응답칸
1)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	
2) 내 인생의 여건은 아주 좋은 편이다.	
3)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4)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냈다.	
5)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지금처럼 살아갈 것이다.	

문3. 아래에는 선생님이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11개 문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 동의 또는 반대하는 정도를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다소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2	3
				4
					5

항 목	응답칸
1) 젊은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엄격한 교육과 강인한 결단력, 그리고 가족과 나라를 위한 의지력이다	
2) 사회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법이 충분치 못하다면 비상조치라도 사용되어야 한다.	
3)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엄격한 통제와 질서가 필요하다	
4) 위대한 지도자가 시대를 만든다.	
5) 상사의 말에 잘 따르는 사람이 좋은 사원이다.	
6) 남한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좀 더 강력한 법 질서이다.	
7) 여자가 술 마시고 담배피우는 것은 꼴 사남다.	
8) 아이가 몇 명이 되더라도 남자 아이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9)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그가 노력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배경이 좋았기 때문이다.	
10) 남한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 지도자를 잘 따르는 국민들이다.	
11) 정부 권력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국민들을 쓸데없이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경제의식

문4. 선생님은 '자본주의'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보기 중에서 두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조사원 보기카드 제시하고 설명해주세요)

- 보기
- ①물질적 풍요 ② 부정부패 ③경쟁 ④효율성 ⑤빈부격차 ⑥ 풍부한 기회 ⑦착취

- 1) 북한에 있을 때 첫 번째로 떠오른 것: _____ 99. 모르겠다.
- 2) 북한에 있을 때 두 번째로 떠오르는 것: _____ 99. 모르겠다.
- 3) 남한에서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 _____ 99. 모르겠다.
- 4) 남한에서 두 번째로 떠오르는 것: _____ 99. 모르겠다.

문5. 다음의 다섯 가지 그림은 서로 다른 사회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그림의 설명을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해주세요. (※조사원 보기카드 제시하고 설명해주세요)

①		소수의 부자, 많은 가난한 사람이 있고 중간층은 없는 사회
②		부자가 극소수인 사회
③		가난한 사람이 중간층보다 적고, 부자가 극소수인 사회
④		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
⑤		부자가 많고 하층으로 갈수록 인구가 줄어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

문5-1. 선생님은 현재의 북한사회가 어떤 유형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문5-2. 선생님은 현재의 남한사회가 어떤 유형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문5-3. 선생님은 통일한국이 어떤 유형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문6. 선생님은 다음의 두 주장 중 어느 쪽에 동의하십니까? 점수를 매겨주세요(1점~ 10점).

정치외교

문14. 현재 남한의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골라 주십시오.

- 1) 비례대표 2) 지역구 3) 비례대표 및 지역구 4) 지방자치제 5) 모르겠다

문15. 현재 남한의 대통령 임기는 몇 년입니까?

- 1) 4년 2) 5년 3) 6년 4) 7년 5) 모르겠다

문16. 현재 대한민국/남한의 국회의 다수당은 어느 정당입니까?

- 1) 국민의당 2) 더불어민주당 3) 새누리당 4) 정의당 5) 모르겠다

문17. 현재 남한의 통일부장관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 1) 김무성 2) 홍용표 3) 윤병세 4) 이병호 5) 모르겠다

문18. 현재 대한민국/남한의 국회의 의원 총수는 몇 명입니까?

- 1) 200명 2) 250명 3) 300명 4) 350 5) 모르겠다

문19. 남한의 특정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곳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 1) 대법원 2) 청와대 3) 헌법재판소 4) 국회 5) 모르겠다

문20. 대한민국/남한의 선거에서 투표 가능한 나이가 만 몇 세인지 알고 계십니까?

- 1) 만 18세 2) 만 19세 3) 만 20세 4) 만 21세 5) 모르겠다

문21. 선생님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중단되어야 한다.
 2)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축소되어야 한다.
 3)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확대되어야 한다.

문22. 선생님은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보기	1	2	3	4

문23. 탈북민의 남한정착을 위한 현재의 각종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보기	1	2	3	4

문24. 남한에 있는 정당 중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습니까?
 1) 있다 ☞ 문25로 가시오 2)없다 ☞ 건너뛰어 문29부터 하시오

문25. (문24에서 지지정당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만) 그렇다면, 그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
 1) 국민의당 2) 더불어민주당 3) 새누리당 4) 정의당 5) 기타 정당

문26. (문24와 25에서 지지 및 선호 정당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만) 그 정당을 지지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정당의 지도부가 마음에 든다.
 2) 정당의 정책을 지지한다.
 3)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마음에 든다.
 4) 특별한 이유 없다.
 5) 모르겠다.

문27. (문24에서 1번을 선택한 응답자만) 그렇다면 그 정당의 어떤 정책을 지지하십니까?
 1) 경제정책 2) 대북 및 통일 정책 3) 탈북민 지원 정책
 4) 외교 정책 5) 모르겠다

문28. (문 27에서 2번을 선택한 응답자만) 그 정당의 대북 및 통일정책의 어떠한 면이 귀하의 정책선호와 일치하십니까?
 1) 다른 당보다 대북지원정책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2) 다른 당보다 통일정책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3) 다른 당보다 탈북자정착 지원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4) 다른 당보다 강경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5) 모르겠다.

문29. (문24에서 지지정당이 없음을 선택한 응답자만) 그렇다고 해도 조금이라도 더 선호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1) 국민의당 2) 더불어민주당 3) 새누리당 4) 정의당 5) 기타 정당

문30. 제20대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를 선택하셨습니다?
 1) 국민의당 2) 더불어민주당 3) 새누리당
 4) 정의당 5) 기타 정당() 6) 투표하지 않았다

문31.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어느 정당을 선택하셨습니다?
 1) 국민의당 2) 더불어민주당 3) 새누리당
 4) 정의당 5) 기타 정당() 6) 투표하지 않았다

문32. 선생님은 현재 **남한의** 경제상황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한다	다소 불만족한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보기	1	2	3	4

문33. 선생님은 현재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보기	매우 불만족한다	다소 불만족한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2	3	4

문34. 아래에는 선생님이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문항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 동의 또는 반대하는 정도를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2	3	4

항 목	응답칸
1) 나 같은 사람들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말을 하는 것은 큰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2) 정치와 정부는 너무 복잡해서 나 같은 사람들은 때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	
3) 공무원들은 나와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에 신경을 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40. 선생님은 통일이 **북한주민**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의 의견을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 2)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 3)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 4)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문41. 통일 시기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것은 무엇인지, 선생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 1)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 2) 속도조절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 3) 가능한 한 빨리 통일해야 한다

문42. 통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까? 선생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 1) 협상에 의한 점진적 통일
- 2) 돌발 상황에 의한 급진적 통일
- 3)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42-1.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할 경우 어떻게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남한식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
- 2) 북한식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
- 3)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방식으로 통일해야 한다
- 4) 남한식도 북한식도 아닌 제3의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

문43. 선생님이 생각할 때 다음 중 통일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1) 북한의 경제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
- 2) 남한의 도움 없이 북한의 자생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 3) 평화적인 국가 관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 4) 북한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5) 중국과 미국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6) 남한의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문44. 통일이 된다면, 통일국가는 어떤 나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된 다음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의 의견과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항 목	응답칸
1) 통일국가는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어울리는 다문화사회가 되어야 한다	
2) 통일국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복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3) 통일국가는 자유롭게 경쟁이 보장되는 철저한 자본주의 체제가 되어야 한다	
4) 통일국가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하나의 중앙 정부만을 가져야 한다	
5) 통일 이후 기존의 남북한의 정치 및 사회제도를 그대로 상당기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6) 통일국가에서는 개인의 권리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7) 통일국가에서는 집회나 선전활동이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문45. 통일 이후, 진정한 통일한국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귀하는 다음 사항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약간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2	3	4

항 목	응답칸
1) 통일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2) 통일한국의 국적을 유지하는 것	
3) 생애 대부분을 통일한국에서 사는 것	
4) 통일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따르는 것	
5) 한민족의 혈통을 가지는 것	
6)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	
7) 통일국가의 역사를 이해하고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 것	

문46. 선생님은 속한 아래 조직이나 집단에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십니까?

보기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약간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2	3	4

항 목	응답칸
1) 북한인	
2) 남한 국민	
3) 한민족	
4) 아시아인	
5) 세계인	

인적 사항

문47. 선생님의 출생년도는?

()년도

문48. 북한에서 어디에서 사셨습니까?

북한 거주지: _____도 _____도시 / 농촌 도시인 경우는 _____

문49. 선생님은 북한을 언제 떠나셨습니까?

()년 ()월

문50. 선생님은 대한민국에 언제 도착하셨습니까?

()년 ()월

문51. 선생님이 북한을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	-----	--

- 1) 북한당국의 탄압을 받아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 2)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식량난 등)
- 3) 남한 혹은 제 3국에 있는 가족을 찾아서
- 4) 북한사회보다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서
- 5) 기타(※조사원이 직접 기입하세요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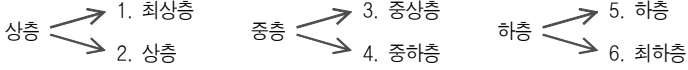
문52. 북한에 계실 때 선생님의 직업은?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동자(일반노동자/작업반장) 2) 농민(농장원, 선전원, 작업반장) 3) 사무원, 판매원(봉사) 4) 관리직(국가, 당기관 간부, 행정간부) 5) 군인, 보위부 등 6) 학생 |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지식인(교원, 의사, 예술가, 체육, 연구원) 8) 기술자(기업소 간부) 9) 장사 10) 하루벌이 11) 기타 _____ <p style="text-align: center;">(기타는 조사원이 직접 기입하세요.)</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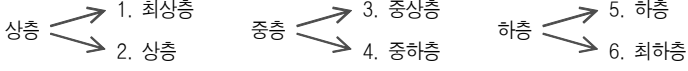
문53. 북한에서 선생님의 주된 직장생활은 아래 보기 중 어디에 속합니까?

- 1) 직장을 매일같이 다녔고 어느 정도 배급도 받았다.
- 2) 직장을 매일같이 다녔고 배급과 직위에서 생기는 부수입이 있었다.
- 3) 직장을 다녔지만, 생기는 게 없어 다른 경제활동(장사, 경작 등)을 병행해야 했다.
- 4) 직장에는 적만 두고 8.3비를 내고 다른 경제활동(장사, 경작 등)을 했다(8.3노동자).
- 5) 소속 직장 없이 개인 장사를 했다.
- 6) 기타 _____ (기타는 조사원이 직접 기입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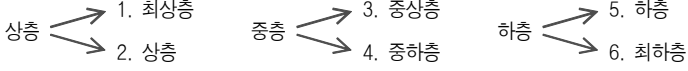
문54. 북한에 살 때 선생님과 가족의 정치신분은 아래 보기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보기카드 제시하고 설명해주세요



문55. 북한에 살 때 선생님의 경제적 계층은 아래 보기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56. 남한사회에서 현재 선생님의 계층은 아래 보기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57. 선생님은 북한에서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 | | |
|-------------|---------------------|
| 1) 인민학교 졸업 | 2) 고등중학교 졸업 |
| 3) 전문학교 졸업 | 4) 대학교 종퇴 |
| 5) 대학교 졸업이상 | 6) 북한에서 학교에 다닌 적 없음 |

문58. 선생님은 북한에서 당원이셨습니까?

- | | |
|----------|-------------|
| 1) 당원이다. | 2) 당원이 아니다. |
|----------|-------------|

문59. 선생님은 남한에 온 후 어떤 정규학교를 졸업했습니까?

- | | |
|------------------------|----------------|
| 1) 중학교 졸업 | 2) 고등학교 졸업 |
| 3) 전문학교/기능대학 졸업(1~3년제) | 4) 대학교 졸업(4년제) |
| 5) 정규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음 | |

문60. 남한에서 현재 선생님은 어떤 직업을 가졌습니까?(무직이면 과거 직업)

- 1) 농업, 어업, 임업 종사자(가족 종사자 포함)
- 2) 자영업(종업원이 9명 이하인 소규모 장사 및 가족 종사자, 택시 기사 등)
- 3) 서비스직 종사자 및 판매, 영업직 종사자(판매원, 세일즈맨 등)
- 4) 기능직 및 생산직 근로자(운전자, 선반, 목공 숙련공 등)
- 5) 단순노무자(단순 노무, 수위 등)
- 6) 고위 공직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4급이상 공무원/교장/기업체 부장 이상)
- 7) 전문직(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가, 연구원 등)
- 8) 기술직 및 준전문직(기술직, 초/중/고 교사, 5급 공무원 등)
- 9) 일반 사무직(일반회사 사무직, 6급 이하 공무원, 기타 사무직 등)
- 10) 주부(가사에만 전념하는 주부)
- 11) 학생
- 12) 남한에서 한 번도 직업가진 적 없음

문61. 선생님은 북한에 계실 때 남한에 있는 사람들과 연계가 있었습니까?

- 1) 남한에 있는 가족, 친척, 친구와 직접, 간접적으로 연계를 맺고 있었다.
- 2) 남한에 가족 친척이 있는 것을 알았지만 연계는 없었다.
- 3) 연계가 전혀 없었다.

문62. 남한에서 선생님의 현재 소득은 얼마입니까?

- 1) 50만 원 미만
- 2) 50~99만 원
- 3) 100만 원~149만 원
- 4) 150~199만 원
- 5) 200~249만 원
- 6) 250~299만 원
- 7) 300~349만 원
- 8) 350만 원 이상
- 9) 소득이 없음

문63. 선생님은 자신을 진보 혹은 보수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10점 사이 점수를 주세요.

보기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강한 진보 ←————— 보 통 —————→ 강한 보수 </div>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수암 외.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서울: 통일연구원, 2015.

박종철 외.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3.

_____.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14.

박주화 외. 『2016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출판 예정.

_____.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14.

선한승 외.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5.

윤인진 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 및 차별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4.

이우영·이종훈.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0.

전태국. 『사회통합과 한국 통일의 길 내적 장벽을 넘어서』.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3.

Atkinson, Donald R., George Ed Morten, and Derald Wing Ed Sue. *Counseling American minorities*. Boston: McGraw Hill, 1998.

- Berry, John W.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Acculturation: Theory Models and Some New Findings*. edited by. Padilla, A. M. Boulder: Westview Press, 1980.
- Berry, John W. and Uichol Kim.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In *Health and Cross-Cultural Psychology: Toward Applications*. edited by Pierre Dasen R., Berry John W., and Sartorius Norman. London: Sage, 1998.
- Campbell, Angus. *The American Vot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 Carpini, M. Delli and Scott Keeter. *What Americans Know about Politics and Why it Matter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96.
-
- _____ . "The Internet and an Informed Citizenry." In *The Civic Web: Online Politics and Democratic Values*. edited by D. M. Anderson and M. Cornfield.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03.
- Dalton, Russell and Martin Wattenberg. *Parties without Partisa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Erikson, S. Robert, Michael B. Machuen and James A. Stimson. *The Macro Pol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Fiorina, P. Morris.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81.
- Hair Jr, J. F. and Black, W.C. "Cluster Analysis." In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edited by Bryant, F. B., L. G. Grimm, and P. R. Yarnold. Washington

-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0.
- Honneth, Axel. *Cultural-Political Interventions in the Unfinished Project of Enlightenment*. Cambridge: MIT Press, 1992.
- Jennings, M. Kent and Richard G. Niemi. *The Political Character of Adolescence: The Influence of Families and School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4.
-
- _____. *Generations and Politics: A Panel Study of Young Adults and their Parent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 Lewis-Beck, Michael S. et al. *The American Voter Revisited*.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8.
- Lien, Pei-te, Margaret Conway and Janell Wong. *The Politics of Asian Americans: Diversity and Community*. New York: Routledge, 2004.
- Lowe, Lisa. *Immigration Acts: On Asian American Cultural Politics*.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1996.
- Putnam, Robert.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2000.
- Putnam, Robert, Robert Leonardi, and Raffaella Y. Nanetti.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 Rosenstone, Steven and John M. Hansen. *Mobilization,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Macmillan, 1993.
- Skocpol, Theda and Morris P. Fiorina. *Civic Engagement in American Democracy*. Washington D.C.: Brookings

- Institution Press, 1999.
- Verba, Sidney, Kay L. Schlozman and Henry E. Brady.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 Verba, Sidney and Norman H. Nie. *Participation America*. New York: Academic Press, 1972.
- Verba, Sidney and Norman H. Nie and Jae-on Kim.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quality: A Seven-Nation Comparis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 Ward, C. "Acculturation." In *Handbook of Intercultural Training*, edited by Dan Landis and Rabi Bhagat. Thousand Oaks: Sage, 1996.
- Ward, Andrew, et al. "Naive Realism in Everyday life: Implications for Social Conflict and Misunderstanding." In *Values and knowledge*, edited by Reed, E. Turiel, and T. Brown. Hillsdale, N.J.: Erlbaum, 1997.

2. 논문

- 강원택. "투표 참여,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의 기권자 분석." 『현대정치연구』. 제1권 2호, 2008.
- 김명자 외.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과정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6권 2호, 2004.
- 김재우. "재한 중국 유학생이 느끼는 차별과 대처방식이 문화적응유형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현옥 외. “유학생의 문화적응전략, 민족유형과 심리적 안녕감, 우울의 관계.” 『한국 심리학회지』. 제20권 1호, 2014.
- 김화순. “고학력 북한이탈주민이 인지하는 차별과 직업계층 변화의 인식.” 『통일과 평화』. 제2권 2호, 2010.
- 김화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에 미치는 요인 연구: 인적자본 및 노동시장구조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력개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리첸첸·오인수·이수경.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기본심리욕구 및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제17권 1호, 2016.
- 마릿 바리타. “EU의 직장내 괴롭힘.” 『국제노동브리프』. 제 12권 9호, 2014.
- 민경환.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제4권 2호, 1989.
- 박원호·신화용. “정당선호의 감정적 기반: 세월호 사건과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8집 5호, 2015.
- 박찬욱. “한국인 정치참여의 특징과 결정요인: 2004년 조사결과 분석.” 『한국정치연구』. 제14집 1호, 2005.
- 서재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 2002.
- 송원영·리난.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유학 초기 심리적 적응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제5권 2호, 2008.
- 오원환. “탈북 청년의 정체성 연구: 탈북에서 탈남까지.”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이기영·엄태완. “북한이탈 주민의 무망감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16권, 2003.
- 이양호 외. “불평등과 행복.” 『한국정치학회보』. 제47권 3호, 2013.

- 이예슬·김은하.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에 따른 군집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12권 3호, 2015.
- 이은선.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정체성적응유형에 따른 자기 효능감, 대인관계의 어려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 이장호. “통일의 심리학적 기초.” 『사회과학 연구』, 제13권 1호, 1996.
- 이희영.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구성에 대한 구술 사례연구.” 『한국사회학』, 제44권 1호, 2010.
- 정진경·김재우. “차별지각, 차별에 대한 대처전략과 문화적응 유형의 관계.” 『사회과학연구』, 제 22권 2호, 2005.
- 진애경.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경험과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채정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재와 적응 행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 채정민·이종한.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남북한문화 이질성: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 문제』, 제10권 2호, 2004.
- 채정민·김종남. “사람중심의 통일교육 모델의 제안: 통일 단계에 따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제14권 1호, 2008.
- 채정민·이종한.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남북한 문화 이질성: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 문제』, 제10권 2호, 2004.
- 한나·이승연.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심리학 연구의 방향성.”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4권 2호, 2015.

Achen, H. Christopher. “Social Psychology, Demographic

- Variables and Linear Regression: Breaking the Iron Triangle in Voting Research.” *Political Behavior*. vol. 14, no. 3. 1992.
- Albright, Jeremy. “Does Political Knowledge Erode Party Attachments?: A Review of the Cognitive Mobilization Thesis.” *Electoral Studies*. vol. 28, no. 2, 2008.
- Berry, John W. “Marginality, Stress and Ethnic Identification in an Acculturated Aboriginal Communit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1, no. 3, 1970.
- _____.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vol. 46, no. 2, 1997.
- Camerer, Colin, George Loewenstein and Martin Weber. “The Curse of Knowledge in Economic Settings: An Experimental Analysis.”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7, no. 5, 1989.
- Converse, Philips E. and Greg B. Markus. “Plus? a Change...The New CPS Election Study Panel.”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3, 1979.
- Diener, E. et al.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49, no. 1, 1979.
- Gupta, A., Leong F. and Valentine J. C. “A Meta-analytic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and Depression among Asian American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 83, no. 2, 2013.
- Johnston, Richard. “Party Identification: Unmoved Mover or Sum of Preferenc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9, no. 1, 2006.

Kent, M. Jennings and Gregory B. Markus. "Partisan Orientation over the Long Haul: Results from the Three Wave Political Socialization Stud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8, no. 4, 1984.

Manganelli, Rattazzi, et al. "A Short Version of the Right-Wing Authoritarianism (RWA)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43, no. 5, 2007.

Niemi, Richard G. and M. Kent Jennings. "Issues and Inheritance in the Formation of Party 28."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45, no. 6, 1991.

_____ . "Issues and Inheritance in the Formation of Party Identific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4, 1991.

Oberg, Kalervo. "Cultural Shock: Adjustment to New Cultural Environment." *Practical Anthropology*. vol. 23, 1960.

Lee, Ross and Ward L. Andrew. "Naive Realism in Everyday Life: Implications for Social Conflict and Misunderstanding." In *Values and knowledge*. edited by Reed, E. Turiel and Brown T. Hillsdale. N.J.: Erlbaum, 1997.

Sears, David O. and Carolyn L. Funk. "Evidence of the Long-Term Persistence of Adults Political Predispositions." *The Journal of Politics*. vol. 61, no. 1, 1995.

Schiller, Nina Glick, Linda Basch and Cristina Szanton Blanc. "From Immigrant to Transmigrant: Theorizing Transnational Migration." *Anthropological Quarterly*. vol. 68, 1995.

3. 기타자료

『영남일보』.

『오마이뉴스』.

민태은·오혜진. “한국의 다문화 정치와 전망: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를 중심으로.” 2015년 한국정당학회 연례학술회의 자료집, 2015.6.12.

설동훈·전진영. “한국의 다문화 정치와 정당.” 2013년 한국정당학회 연례학술회의 자료집, 2013.11.22.

양문수. “북한주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 성향에 대한 정량적 연구.” 2015년 북한대학원대학교 SSK 남북한 마음통합연구단 학술회의 자료집, 2015.8.19.

Online Focus. <<http://www.focus.de>>.

새터민들의 쉼터. <<http://blog.ohmynews.com>>.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최근 발간자료 안내

KINU 통일포럼 시리즈

2014-01 제1차 KINU 통일포럼: 「드레스덴 구상」과 '행복한 통일'	통일연구원
2014-02 제2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보유 및 대남정책	통일연구원
2014-03 제3차 KINU 통일포럼: 독일 스톡홀름 합의와 동북아정세	통일연구원
2014-04 제4차 KINU 통일포럼: 통일준비를 위한 과제와 전략	통일연구원
2014-05 제5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통일연구원
2014-06 제6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	통일연구원
2015-01 제7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국제질서 전환기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와 통일·외교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2015-03 제9차 KINU 통일포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업그레이드 전략 - 8·25남북합의 평가와 박근혜정부 후반기 대북 통일정책 방향 -	통일연구원
2015-04 제10차 KINU 통일포럼: 통일담론 3.0과 북한 변화 전략	통일연구원
2015-05 제11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
2016-01 제12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방향	통일연구원
2016-02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2016-03 제14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통일나침반(통일정세분석)

통일정세분석

2014-01 2014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박형중 외
2014-02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결과 분석과 전망	박영자 외
2014-03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통일나침반

2015-01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2015-02 최근 2년 간 미·일·중·러 4개국 정상외교 분석 및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김진하 외
2015-03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한동호, 도경욱
2015-04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김석진
2015-05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이애리아, 이창호
2016-01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이 석
20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갑식 외
2016-03 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4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5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2016-06 4차 북핵실험 이후 미중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대외협력팀

통일플러스

2015-01 KINU 통일 플러스 Vol. 1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5-02 KINU 통일 플러스 Vol. 1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5-03 KINU 통일 플러스 Vol. 1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2015-04 KINU 통일 플러스 Vol. 1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2016-01 KINU 통일 + Vol. 2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6-02 KINU 통일 + Vol. 2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6-03 KINU 통일 + Vol. 2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4	한동호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4</i>	한동호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5	도경옥 외	19,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i>	도경옥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옥 외	18,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i>	도경옥 외	22,500원

연구보고서

2014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4-01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이교덕 외	7,500원
2014-02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 이론발굴과 적용모색	박형중, 박영자	7,500원
2014-03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김석진, 양문수	9,000원
2014-04 신동북아질서 시대의 중장기 통일전략	성기영 외	7,000원
2014-05 ‘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EC/EU 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손기웅 외	6,000원
2014-06 탈북청소년의 경제 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조정아, 홍민, 이희영, 이향규, 조영주	14,000원
2014-07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연구	한동호	6,000원
2014-08 법치지원과 인권 증진: 이론과 실제	이금순, 도경옥	8,000원
2014-09 신뢰정책의 과제와 추진전략	박영호, 정성철 외	11,000원
2014-10 대미(對美)·대중(對中) 조화외교: 국내 및 해외 사례연구	김규륜 외	10,500원
2014-11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정영태, 홍우택 외	12,000원
2014-12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이기현, 김애경, 이영학	7,000원
2014-13 한반도에 있어서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김수암 외	

2014	The Trust-building Process and Korean Unification (통일대계연구 13-03)	최진욱 편저	8,000원
2014	중국 권력엘리트와 한중교류 네트워크 분석 및 DB화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 정책협력방안 2014)	전병근, 홍우택, 신종호 외	9,000원
2014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북한인권정책연구 2014)	북한인권연구센터	11,000원
2014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봉영식, 한석희 외	9,500원
2014	2014년 통일에측시계	박영호, 김형기	9,500원
2014	통일한국의 국가상과 한중협력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2014-01)	배정호 외	15,500원
2014	China's Strategic Environment and External Relations in the Transition Period (A Comprehensive Strategic Study on China in Prepa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2014-02)	Bae, Jung-Ho et al.	18,000원
2014	Global Expect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1)	Kyuryoon Kim et al.	19,000원
2014	Lessons of Transformation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2)	Kyuryoon Kim et al.	15,500원
2014	한반도 통일의 효과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4-3)	김규륜 외	4,500원
2014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종철, 허문영, 송영훈, 김갑식, 이상신, 조원빈	12,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1)	조정아 외	7,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2)	조정아 외	22,000원
2014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	허문영 외	12,000원
2014	Law and Policy on Korean Unification: Analysis and Implications	박종철 외	11,000원
2014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형성과 접경지역-DMZ 평화생태적 이용방안	손기웅 외	17,0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4-01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대북지원 및 남북 협력방안 모색	임강택, 권태진
---------	-------------------------------	----------

■ Study Series ■

2014-01	Korea's FTA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oon et al.
2014-02	The Perceptions of Northeast Asia's Four States on Korean Unification	Bae, Jung-Ho et al.
2014-03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The Generational Experience and Characteristics of Young North Koreans	Cho, Jeong-ah et al.
2014-04	Geopolitics of the Russo-Korean Gas Pipeline Project and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e, Kihyun et al.
2014-05	Fiscal Segmentation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Park Hyeong Jung, Choi Sahyun
2014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9권 1호	이금순 외

2015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5-01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김갑식 외	9,000원
2015-02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홍민	13,000원
2015-03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교육과정·교과서	조정아 외	13,500원
2015-04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박종철 외	16,500원
2015-05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추진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현승수 외	8,000원
2015-06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박영자 외	10,500원
2015-08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한동호 외	6,500원
2015-09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북정책: 사례와 적용	이기현 외	7,500원
2015-10	한반도 중장기 정세 변동 및 정책 도전 관련 요인의 식별(2015~2030)	박형중 외	16,500원
2015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동시 형성방안	손기웅 외	10,500원
2015	2015년 통일에측시계	홍석훈 외	10,000원
2015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김수암 외	15,500원
2015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0,000원
2015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이규창 외	8,000원
2015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김진하 외	9,000원
2015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박종철 외	10,000원
2015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김석진 외	8,000원
2015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사회·경제분야	조한범 외	11,500원
2015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역할: 주변 4국과 G20	조한범 외	14,000원
2015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종합요약보고서)	전병곤 외	10,000원
2015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배중렬 외	13,0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5-01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	박영자 외
---------	-----------------------	-------

■ Study Series ■

2015-01	Tasks and Implementing Strategies of the "Trust-Building" Policy	Park, Young-Ho
2015-02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Kim, Suk-Jin
2015-03	The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dentities	Cho, Jeong-ah et al.
2015-04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2016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6-01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정성윤 외	14,000원
---------	-------------------------	-------	---------

2016-02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이기태, 김두승	6,500원
2016-04	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정구연, 이기태	6,000원
2016-05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오경섭, 이경화	8,000원
2016-06	남북통일과 국가재산: 채무·양허권의 승계	이규창	8,000원
2016-0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6-08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홍우택 외	7,000원
2016-09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김석진, 홍제환	8,000원
2016-10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박영자 외	13,000원
2016-11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한범 외	9,500원
2016-12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임예준 외	8,500원
2016-13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김진하 외	7,000원
2016-14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7,000원
2016-15	Pathways to a Peaceful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도경욱 외	
2016-16	한중수교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이기현 외	8,000원
2016-17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방안	김수암 외	8,500원
2016-18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김수암 외	15,000원
2016-19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16,500원
2016-20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이규창 외	12,000원
2016-21	2016년 통일에측시계	홍우택 외	7,000원
2016-22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박종철 외	19,000원
2016-23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홍민 외	13,000원
2016-24	북한 전국 시장 정보	홍민 외	17,0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6-01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정구연, 민태은
---------	--------------------------------------	----------

■ Study Series ■

2016-01	Identifying Driving Forces for Changes and Polic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2015-2030)	Park, Hyeong Jung et al.
2016-02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Policies on North Korea: Cases and Application	Lee, Ki-Hyun et al.
2016-03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reas	Cho, Han-Bum et al.
2016-04	Development of Unification Diplomacy Contents	Kim, Jin-Ha
2016-05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and North Korea's Adaptability: From the Perceptive Point of View	Kim, Soo-Am et al.

연례정세보고서

201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4~2015	6,000원
201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5~2016	8,000원

논문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1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2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1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2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3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1 (2016)	10,000원

기타

2014 북핵일지 1955~2014	조민, 김진하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성 명*		입 금 일 자*	
소 속*		입 금 자 (신청자와 다를 경우)	
간 행 물* 받 을 주 소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 락 처*	전 화		이메일
	핸드폰		F A X
이메일서비스	수신 ()		수신거부 ()
회 원 구 분*	학생회원 ()	일반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사항: 성명, 입금일자,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 선택사항: 입금자, 이메일서비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시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신동일대계 (3/4년차)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